

남북한 통일문화 형성의 방향	이서행 · 1
통일 한국군의 근대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	박균열 · 25
남북경협 확대와 대북 노동정책	김영윤 · 53
인간중심철학: 주체사상에 대한 '내재적 비판'의 척도	선우현 · 89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현상과 인식	곽승지 · 115
사회주의국가의 경제행위에 대한 이론정립을 위한 시론: 북한의 경제정책 결정메카니즘을 중심으로	이영훈 · 147
북한의 여성교육과 여성상: 「교과서」와 「조선녀성」에 나타난 여성상을 중심으로	김병로·장인숙·황애리 · 173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중관계	김승채 · 211

남북한 통일문화 형성의 방향

이 서 행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I. 머리말
- II. 통일문화의 개념 설정
- III. 남북한 가치체계의 이질화와 문화 인식의 차이
- IV. 통일문화 형성의 가능성 탐색
- V. 맺음말

I. 머리말

지난 6·15 남북정상회담과 발표된 남북 공동선언문은 반세기 분단 민족사에 커다란 획을 그은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도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대립과 갈등의 남북관계를 말 그대로 교류와 화합 그리고 협력의 시대로 진입하게 만든 역사적인 이정표가 되었다.

그러한 만큼 이제는 민족통일의 문제를 둘러싸고도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과 접근방식의 전환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라고 하겠다. 반만년의 유구한 민족사를 이어오는 동안 견고하게 축적된 민족적 동질성과 공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사적 냉전의 시기에 남북한은 그 어느 곳에서도 보기 어려운 이념적 갈등과 대립의 역사를 기록해왔고, 그것은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상잔의 전쟁을 통하여 더욱 구조화되고 견고화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같은 분단 반세기의 역사는 개개 민족구성원들에게 깃들어 있는 민족적 동질성과 공통성을 억압하고 외생적 이질성과 차별성을 구조적으로 확대 재생산해 온 과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남북에서 진행된 사회변동의 양상은 그러한 과정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

로 작용했음에 틀림없다. 남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자본주의적 근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북에서는 집단주의와 계획경제를 바탕으로 한 공산주의적 근대화가 진행되었다. 그 같은 근대화의 기본성격은 각기 그 사회의 문화과정 속에 그대로 투영되게 마련이어서 남북한간의 문화적 이질성 역시 확대 재생산되어 왔다고 보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남북이산가족상봉을 비롯한 최근의 남북간 교류에서 민족적 동질성이 자연스럽게 부각되기도 했지만 그것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전체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 일뿐 반세기동안 진행된 문화적 이질화 자체를 무로 돌릴 만한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교류와 왕래가 빈번해지면 질수록 삶의 양식이나 가치체계와 관련된 문화과정의 이질성이 점점 커다랗게 드러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교류와 협력의 시대를 맞이한 남북관계에서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간 경제공동체의 형성이나 군사·정치적 교류와 협력을 통한 신뢰 회복의 과정도 물론 중요한 과정이 아닐 수 없지만, 남북한 주민들 각자에게 다가오는 통일의 의미가 보다 확연한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문화통합의 과제를 설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리가 통일문화의 개념과 그 형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민족공동체형성의 당위성이 주장되어 오는 가운데 통일문화와 관련된 논의, 또는 통일에 대한 문화적 접근의 논의들이 과거에도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뜻 있는 학자들과 기관들에서 선구적인 업적을 남겨두고 있어 다행이긴 하지만, 남북한간에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전개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를 새롭게 검토해보고 실천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것도 뜻깊은 일이라 생각된다.

통일문화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에서는 '통일문화 개념이 다양하고 다차원적이어서 개념 사용의 추상성에 따라 지칭하는 바가 상이한 점이 발견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우선 통일문화의 개념에 대한 검토와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과거 냉전시기, 따라서 남북대결의 시기에는 특정 이데올로기의 우월성을 전제로 한 체제 및 이념 중심의 통일문화 논의가 주종을 이루어 왔다고 하겠는 바, 남북화합의 전기가 된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비추어 통일문화 논의는 민족공동체형성을 위한 진전은 물론 통일문화 형성의 방향 모색에 있어서도 일대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통일문화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도출해보고자 시도하며, 이어서 남북한 가치체계의 이질화의 배경과 내

용을 살펴봄으로써 통일문화 형성의 방향을 탐색하는 순으로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다.

II. 통일문화의 개념 설정

1. 체제정당성 주장으로서의 통일논의

남북 분단 직후에는 통일 문제가 외세에 의해 강요된 38선 획정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태의 정상화를 뜻하는 의미에서 민족의식의 동질성에 기초한 민족해방 또는 자주권 회복이라는 기본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통일논의가 다루어졌다.¹⁾ 그러다가 1948년 남북에 각기 별개의 정부가 수립될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외세에 의해 주어진 분단 위에 민족적 분열이 겹치는 과정이 현실화되고 있었지만 통일의 당위에 집착하는 양상은 지속되고 있었다. 김구를 위시한 이상주의자는 물론이고 이승만의 무력통일론도 역으로 민족의식의 동질성을 믿는 낙관적 인식의 소산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민족의식의 동질성에 기반한 낙관적 인식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일변하게 되었다. 국제적으로 미국과 소련이 서로 한반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확인하게 됨으로써 한반도의 분단이 국제적으로 제도화되었고, 남북한의 두 체제는 각기 그에 적응하는 방향을 취하게 됨으로써 남북간의 민족이질화를 구조적으로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한 배경에서 통일논의와 연구 역시 민족적 당위에 기초한 연구는 엄격히 제약되었고, 반공정책에 기여하는 범위 안에서만 통일문제를 다루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공산주의의 본질, 공산집단의 혁명 전략과 전술, 국제연합을 통한 통일방안 등이 당시 통일논의의 주류를 이룰 수밖에 없었다.

4·19이후 제2공화국 당시에는 자유화의 흐름 속에서 종전에 금기시 되어 온 통일논의 역시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북한의 남북연방제 제기, 오스트리아식 중립화 모델 제시 등으로 통일논의가 더욱 가열되기도 했다. 그러던 것이 5·16 이후 60년대에는 남북한 2체제가 각기 다른 방향에서 체제건설에 주력한 시기이기도 했다. 북한 역시 전후 복구와 경제건설에 몰두했고, 남한 역시 선건설 후 통일의 기치 아래 조국근대화 과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러한 체제건설 작업이

진척되면서 통일문제 역시 민족적 상징과 의식에 대한 막연한 의존으로부터 벗어나 실제의 생활환경이 되는 사회성에 주목하게 되고 이에 대한 사회과학적 인식이 대두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 들어와 남북대화가 이루어지고 이른바 조국통일 3원칙이 포함된 남북공동성명 발표로 통일의 당위적 명제가 확인되었지만 통일원칙의 해석을 둘러싼 남북간에 심각한 차이가 드러나기도 했다. 남북의 체제지향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면서 양 체제의 정통성에 대한 논의가 통일논의와 연구의 주된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후 1970년대 말 이후 체제 정당성의 문제에 초점을 둔 연구 관심이 통일 이후의 사회상을 모색하는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통일사회상을 모색하는 문제는 한편으로 대북한체제 우월성에 기초하여 현존체제를 명분화하는 측면을 지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현존체제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지표로서 통일사회상에 접근하는 연구관심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통일문화 창조'라는 문제의식도 그러한 연구관심과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통일문화에 대한 관심과 그 개념화

통일문화라는 개념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이었다.²⁾ 분단과 전쟁을 겪으면서 통일논의가 남북한에 존재하는 체제의 정당성 문제에 초점을 둔 다소 대립적이고 경직된 것이었던 반면, 80년대 중반에 이르러 통일문화에 대한 관심이 대두하게 된 연구관심의 변화과정은 통일논의의 흐름에 있어서 하나의 성숙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목에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1985년에 발간한 『통일문화 창조를 위한 연구』는 선구적 작업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다. 강광식 교수는 '통일문화'의 '문화' 개념은 문화 일반에 대한 하위문화를 뜻하는 문화개념과도 구별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알몬드(G. A. Almond)의 '정치문화' 개념의 맥락에서 '통일문화'의 개념을 "통일문제에 대한 가치정향 내지 통일지향적 가치정향"을 지칭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그것이 통일이데올로기와 동의어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만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합리화 내지 정당화하는 상징체계로서 작용하는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로 이해한다. 따라서 '통일문화'의 개념은 통일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을 지니게 되며, ①통일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국민의 의지와 에너지를 동원하는 정신적 지주로서의 기능, ②통일논의와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지도이념으로서의 기능, ③통일을 위한 제반 노력의 내용과 정격 및 그 방향을 분석 평가하는데 필요한 평가기준으로서의 기능을 들 수 있다고 한다. 나아가서 '통일문화 창조'라는 명제가 ①통일문제를 분단현실의 틀 속에서만 한정시켜 보지 않고 민족사의 당위적 진행방향에 비추어 봄으로써 왜곡된 분단현실의 광정(匡正)방향을 모색하며, ②이를 위하여 정치·군사적 및 냉전 이데올로기적 요인을 일단 상대화시켜 민족의 통합과 민족문화의 창조라는 근원적 각도에서 분단현실을 재조명함으로써 통일을 위한 문화적·사상적 기반의 재구성을 꾀하자는 것을 문제의식으로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³⁾

통일문화에 대한 그같은 논의의 연장선에서 황성모 교수는 통일의 문제를 단순히 정치적 문제이기 이전에 어떤 문화사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⁴⁾ 그 경우 문화사적 전환이란 유교적 중화의 가치관을 극복하고 근대 자유법적 보편가치관으로의 발전과정을 겪지 못했던 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통일의 문제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인관관계의 원리로서 '계약'이라는 형태를 확립하는 것과 직결된다. 그런 관점에서 통일은 사실성과 당위성이 사회계약의 원리에서 조화롭게 타결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간주된다고 본다. 분단된 민족의 재결합이 폭력적, 강제적, 음모적 방법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때, 통일의 문제는 결국 문화적 창조의 길로 통하게 되며, 남과 북의 경우에 서로 다른 근대화의 길을 걸어왔다는 점에서 민족적 문화혁명으로서 통일문화의 형성은 결국 진정한 의미에서의 근대화 밖에는 있을 수 없고, 그것은 다시 각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생활구조, 정치구조, 시민생활구조의 선택을 의미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⁵⁾

통일문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90년대에 들어와 더욱 활발해졌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은 냉전구도의 급격한 와해에 따라 새로운 차원의 인식과 조치가 불가피 하게되어 대북문화정책 차원에서 「남북문화교류 5대원칙」이 발표되었고 1993년 문민정부는 통일문화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통일문화에 대한 연구가 급증하게 되었고⁶⁾ 1994년 12월 민족통일연구원이 주최한 "통일문화와 민족공동체 건설"이라는 주제의 국내학술회의를 기초로 펴낸 『통일문화 연구』(上, 下)는 그러한 시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윤덕희 박사는 "통일문화의 개념정립과 형성방향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통일문화' 개념의 정립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문화'개념의 복합성과 추상성으로 인해 연구별로 개념정의 및 연구의 초점이 다양하다"⁷⁾고 지적하고, "통일문화 형성을 통해 통일문제에 접근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통일성취의 외향적 측면보다는 그것의 실질적

기반이 되는 내면적 측면에 주목하여 사회 통합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을 뜻한다”⁸⁾고 주장한다.

나아가 '통일'의 복합적 의미는 '통일문화' 개념의 내용상 복합성을 설명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하고, 통일문화'의 개념이 ①통일한국의 사회구성원이 다 같이 지향해야 할 신념, 가치체계, 행동양식 체계로서 통일한국의 이념에 부합되는 민족문화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의미한다는 점, ②통일과정을 통해 분단된 사회문화구조에서 파생되는 남북한간 이질화 및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통일을 앞당기고 민족통합을 이루게 하는 실천적 기능을 지닌 문화체계를 의미한다는 점의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고 지적하고 있다.⁹⁾

이렇게 볼 때, 통일문화란 어느 시점인가 통일이 이루어질 때 통일국가의 구성원들이 성취해야 할 '삶의 양식'과 '가치체계'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 그 경우 통일문화의 구성요소로서 삶의 양식과 가치체계가 남과 북에 현존하는 체제의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남과 북 모두가 사회변동의 과정을 통하여 지향해야 할 이념형 또는 원리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며, 통일한국의 문화적 미래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미래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조건에 바탕을 둬으로써 실현가능성을 갖는 동시에 현재의 부정적 여건을 변화시키고 또 재구성하는 이념적 지표로서 실천적 의의를 함께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⁰⁾ 그리고 통일문화의 형성은 현재의 남과 북의 어느 한쪽의 가치체계나 삶의 양식에 다른 한쪽이 흡수되거나 수렴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남과 북 양쪽의 현재상태를 지양하면서 힘을 합쳐 창조해내야 할 역사적 과제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는 어느 한 쪽의 문화적 현실의 정당성이나 우월성을 확인하는 문제라기보다는 남과 북이 각기 현실 속에 지니고 있는 가치체계의 이질화 과정과 그 결과 생겨난 문화인식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서 출발하여, 새로운 지향점으로서 남과 북의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가치체계와 삶의 양식을 새로운 민족문화의 구현양식으로 내재화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 경우 통일문화의 구성요소들이 민족문화의 특수성을 담고 있으면서도 인류역사의 발전방향과 상응하는 보편성을 담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민족통일의 과제가 단순히 분단이전의 민족사의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새로운 사회개혁의 실현이다.

Ⅲ. 남북한 가치체계의 이질화와 문화 인식의 차이

앞서 언급했듯이, 민족화합시대의 통일문화 형성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한 가치체계의 이질화를 해소하는 문제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남북한 가치체계의 이질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제 식민통치와 독립운동, 분단과 전쟁 및 냉전적 대결시대를 거치면서 남북한의 가치체계가 어떠한 이질화 과정을 밟았으며, 이질화의 현 상황이 어떠한가를 먼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1. 가치체계 이질화의 배경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조국에 해방의 구호가 메아리쳤을 때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경계로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함으로써 생긴 민족의 분열이 이후 반세기가 넘는 기간동안 민족의 분열로 장구화 되리라 여겼던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해방을 맞이하여 정치적 독립과 사회경제적 근대화를 통한 근대적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과제를 38선을 경계로 남북이 공통으로 지니고 있었다면, 그 과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론을 미국과 소련이 규정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었지만, 주어진 방법론에 따라서 과제를 수행할 세력마저도 이미 분열되어 있었다는 데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해방 자체가 우리 민족역량의 독자적 힘이나 적어도 연합국과의 대등한 자격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연합국의 승전의 결과로 주어졌다는 사실과, 항일독립투쟁에 있어서 방법론과 이념에 따라 독립운동세력이 나뉘어져 있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에 있어서 좌우합작의 민족통일전선으로서 신간회의 해체가 국제공산주의 코민테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독립투쟁에서 민족주의세력과 공산주의세력이 분열하게 되고, 해방 이후 건국 노선의 분열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은 외세에 의한 해방과 외국 군대의 주둔 못지 않은 결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당시 상황으로 보아 미·소를 정점으로 하는 냉전체제가 굳어져 가는 것과 동시에 남북에서의 상이한 체제 역시 견고화 되어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민족의 사상적 전통과의 철저한 단절 속에서 전개된 사태였다는 점에서 우리 민족은 이중의 민족적 자기소외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전통적 민족주의의 흐름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소비에트

공산주의의 사고유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한번 자기소외를 경험했고, 이식된 이데올로기를 철저하게 추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이중의 사상적 자기소외를 경험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본질적으로 사상에 있어서의 주체성의 상실을 의미한다.¹¹⁾

그러한 주체성의 상실 위에서 6·25라는 동족상잔의 전쟁은 그 누가 아무리 민족해방전쟁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당시로서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구소련의 세계적화계획의 일환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 국제전으로 변해버린 한국전쟁은 그 기원과 과정 및 결과에 있어서 반민족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로 인해 38선이라는 잠정적 분단상태가 휴전선이라는 구조적 분열상태로 악화된 것을 비롯해서 이념과 체제의 대립이 더욱 심화되고 남과 북의 문화적 이질화가 비로소 시작되게 되었다.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을 겪은 후에 민주주의는 남한에서 반공산주의를 뜻하는 것으로, 북한에서는 반자본주의를 뜻하는 것으로 이중구조화 되고 말았다.

민주화과정에서 남한의 경우에 60년대 이후의 근대화의 물결 속에 급속히 사회구조면에서의 근대화 나아가 의식구조면의 민주화를 촉진시킬 수밖에 없는 사회변동을 이끌어냈다고 한다면, 북한의 경우에 집단적 군사주의와 군왕적 일인지배체제의 공고화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근대화에 상응하는 사회변화를 이끌어냈다고보다는 주민들의 의식구조나 사회구조의 면에서 전근대적 수준으로 응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그같이 상호 대칭적인 방향에서의 사회변동의 지속, 그것도 장구한 시간에 걸친 지속이 가져온 결과는 남북한 주민들의 의식구조와 사회구조에 내면화되고 고착화된 가치체계의 이질화라고 밖에는 칭할 수 없는 결과였던 것이다.

2. 문화인식과 가치체계 : 그 차이의 생산

다음으로 이러한 가치체계의 이질화에 대한 상황인식이 바람직한 통일문화의 형성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에 존재하는 문화인식의 차이, 즉 가치체계의 구조적 차이를 설명하고 그것의 불식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 역시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분단 이후 반세기간에 걸친 양체제의 특성 및 전개과정, 특히 남북한의 상이한 사회발전 전략 및 그에 기저하는 이데올로기적 배경을 통하여 남북한 간에 문화와 그것을 지탱하는 가치체계의 어떠한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였는가를 진단·분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문화가 흔히 '삶의 총체적 방법체계'¹²⁾를 의미한다면, 비록 한민족으로 오랜 기간 동일한 문화를 공유해 온 남북한 민중들이라고 할지라도 이질적인 국가형태와 사회체제에서 생활하는 한 동일한 문화를 유지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특정한 사회의 문화는 사회체제의 성격에 따라 규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보통 대중에 대한 권력엘리트들의 의도에 따라서 문화의 짜임새가 규정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권력엘리트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이념을 문화를 통하여 확산함으로써 특정한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한의 문화는 권력엘리트의 의도적인 대중지배 정책에 영향을 받아 왔다고 볼 수 있으며 문화가 권력엘리트의 의도된 사회발전 전략의 연속성 상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남북한의 문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우선 그 문화개념의 지위에서 그리고 문화의 사회적 기능화를 표현하는 문화정책에서 드러난다

먼저 문화에 대한 남북한의 개념적 또는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북한에서 문화는 "력사발전의 행정에서 인류가 창조한 물질적 및 정신적 부의 총체인 문화는 사회발전의 매단계에서 이룩된 과학과 기술, 문학과 예술, 도덕과 풍습, 등의 발전수준을 반영한다. 문화는 사회생활의 어떤 영역을 반영하는가에 따라 물질문화와 정신문화로 구분된다. 매개 나라의 문화는 자기의 고유한 민족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계급사회에서 문화는 계급적 성격을 띤다."¹³⁾고 한다. 남한에서, 문화란 "인류가 모든 시대를 통하여,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 놓은 정신적·물질적 일체의 성과로서 의식주를 비롯하여 기술·학문·예술·도덕·종교 따위 물질양면에 걸치는 생활형성의 양식과 내용을 포함한다."¹⁴⁾

이렇게 볼 때, 남북한 모두 사람들이 생활을 가능케 하는 삶의 총체적인 방법체계로 문화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상적 문화개념'¹⁵⁾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으나,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의 문화개념은 다음과 같이 남한의 그것과 차이를 보인다.¹⁶⁾

남한이 문화를 정치, 경제, 사회를 지탱하는 가치체계에 내재하는 기본 개념이자 그 자체가 목적인 목표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문화를 정치, 경제, 사회의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개념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문화의 개념화는 문화의 보편적 특성보다는 개별사회가 가지고 있는 민족적 특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문화의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고 문화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계급문화를 인정함에 따라 "로동계급의 문화가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문화"¹⁷⁾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좋은' 문화

와 '나쁜' 문화가 존재하며, '좋은'(바람직한) 문화를 유도하는 억압적인 문화정책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문화가 계급적 성격을 띤다고 말하는 것은 문화가 계급에 종속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주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키우고 고상한 정신도덕적 풍모를 갖추며 다양한 문화정서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생활"¹⁸⁾이 부각되면서 한편 문화와 윤리문제가 결합됨에 따라 문화적 교양은 윤리교육, 즉 주체사상 교육 또는 사회주의정치 교육과 동일시된다.

이로부터 북한의 문화개념은 범주적으로 그 외연이 남한의 그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의 문화개념은 문학예술뿐만 아니라 교육, 학술, 언어, 체육, 환경 그리고 의료 및 건강사업까지 포함하고 있다.¹⁹⁾ 이렇게 문화의 개념적 외연이 확장됨에 따라 북한에서는 문화가 '전체로서의 사회'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개념화가 잘 드러나는 것이 문화혁명의 경우이다. 문화혁명은 사상혁명, 기술혁명과 함께 북한의 3대 혁명의 일부분이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예술 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텔리화'²⁰⁾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개념의 사회적 구현을 위한 정책적 수준은 문학예술 분야에서 분명히 드러나는데, 따라서 북한에서 문화정책이라고 지칭할 때 그것은 주체사상의 이데올로기로 해석된 문화의 일부분으로서 문예활동의 방침을 의미한다. 곧 실질적으로 문학예술이 문화의 기본 속성으로 인식되며, 문학예술과 문화를 구별없이 동일체로 간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문학예술 작품의 창작과 향유가 문화의 핵심이고, 이를 대중적으로 구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문화정책인 셈이다.²¹⁾ 결국 문화정책은 문예활동을 통해서 정치이념을 전달하는 매개체의 역할-주체사상 교육 등을 떠맡게 된다.

북한과는 대립적으로 남한에서는 일상적 문화개념에 더 충실하여, 문학예술은 문화의 하위범주로서 수많은 문화형태들 중의 하나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문화에서 문학예술이 차지하는 비율은 적지 않으나 문학예술이 곧 문화는 아니다. 그리고 개념적 지위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화와 문학예술은 명확히 분리되어 있다. 이를테면 남한에서 '문화인'은 정한 수준의 교양과 도덕을 가진 지성인을 의미하지만, 문학예술인은 창작활동을 하는 직업적 전문가를 말한다. 그리고 남한의 문예활동에서 특징적인 것은 그 활동의 일정한 조건과 다양성을 강조한다는 점에 있다. 이것은 문학예술의 활동방법뿐만 아니라 활동목

적에서도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다양한 문학예술 작품이 공존할 수 있고 획일적이거나 지배적인 문화형태가 상존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문화의 개념화 상의 차이는 그것을 지탱하는 가치체계의 차이를 구조화한다. 북한에서 가치체계는 문화정책의 방향과 관련하여 근본적으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산물로 인식한다. 따라서 남한과는 달리 사회정치적 구조로부터 상대적으로 벗어난 개인적 가치의 다양성 또는 자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북한의 가치체계가 지니는 정치적 의미와 사회적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문예활동의 기본 속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문예활동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세가지 원칙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²²⁾ 당성이란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서 '당의 노선과 결정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바쳐 투쟁하는 혁명정신'을 의미한다. 그리고 당성은 '로동계급의 혁명적 당과 그 창건자이며 령도자인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 이해함으로써, 김일성 개인숭배와 연관시킨다.²³⁾ 그리고 로동계급성은 '로동계급의 의향과 요구를 반영하고 로동계급의 리익을 견결히 옹호하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적극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본성과 자본가 계급의 착취적 본성'에 대한 비판을 강조하고 반남한·반미적인 문예활동을 유도하고 있다.²⁴⁾ 인민성은 "문학예술이 철저하게 인민들의 사상과 감정에 맞도록" 창작하는 것을 의미한다.²⁵⁾ 인민성의 부각을 통하여 일반 대중과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대중들이 흥미있는 작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이념성과 예술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문예활동의 속성을 검토해 본 결과, 북한에서 가치체계는 대중지배의 이데올로기를 확산하는 중요한 정치적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문예활동을 정치사회화의 매체로 활용하기 때문에 사상교육과 문예활동이 밀접히 결합하여 문화적 가치체계의 핵심은 이데올로기적 지향성에 물들어 있다. 즉 어떻게 개별적인 문화형태나 문예작품들이 당의 이념을 잘 표현하고 주민을 잘 설득할 것인가의 문제가 가치체계의 핵심인 셈이다.²⁶⁾

이와는 반대로, 남한에서 문화정책과 관련하여 가치체계의 정치적 차원은 부차적이거나 상대적으로 경시된다. 정치적 목적이 강한 가치지향을 보이는 문예활동이나 문화형태는 항상 그 '텍스트성' 또는 '예술성'이 의심받는 실정이다. 문예활동의 사회성이나 정치성이 주목받는 경우는 그것이 특정 이데올로기의 내용을 전파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남한사회의 단면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치적인 것이 문예활동에 대하여 갖는 일정한 영향력

을 인정하지만, 그 역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²⁷⁾

남한에 있어서의 많은 역사소설은 그 서사적인 구조나 인물의 제시에 있어서 주로 가족사 연대기적 성격을 띠거나 개체적인 인간의 제시를 주로 하는데 비해서(그만큼 개성주의적이다), 북한의 역사소설은 이와 같은 가족사적 성격을 별로 갖지 않는 반면에, 계급적으로 동일한 사람들의 집단성(집단주의) 내지는 정치적인 공동의 연대성을 가진 공동체에 대한 집단사적 관심이 뚜렷하게 드러난다.²⁸⁾

남한 사전의 뜻풀이는 되도록 어휘 내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하는 반면, 북한의 사전에서는 그 어휘의 역사적, 사회적 '요인'을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면서 어휘 내적인 의미는 부차적으로 다룬다는 점이 그 본질적 차이로 드러난다.²⁹⁾

위의 인용문에서 남과 북을 비교하고 있는 가치체계의 대립적 구조는 자연스러움 대 작위성, 비정치성 대 정치성, 자율성 대 타율성, 학문과 예술의 순수성 대 학문과 예술의 당성의 대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남북한 간 가치체계의 이질화는 문화의 개념적 차원에서 그리고 문화정책적 방향에서 전반적으로 차이가 드러나지만, 이를 단순화시켜서 말할 경우 일정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치체계의 이질화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이러한 이질화는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특정한 이미지, 즉 정치에 의해 과잉 규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질화를 통해 문화의 순수성 또는 가치체계의 비정치성이라는 관념은 하나의 환상으로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기반한다. 왜냐하면 이 관념이 거짓을 진술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범주화 그 자체가 가치체계는 어떠해야 한다는 당위적 기준을 이미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⁰⁾

따라서 남북한 문화의 개념적 차이나 가치체계의 사회적 기능화의 차이를 단순히 열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차이에 대한 기술적 이해는 일차적으로 남북한 문화가 서로 공존의 길을 걷기 위해서, 나아가 문화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지표로서 통일문화 형성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인식의 준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할 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남북한간의 의사소통은 왜곡되고 문화적 갈등이 빈번해질 것이며 어느 한쪽에 의해 다른 한쪽에 대한 문화적 지배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준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첫째로 남한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문화와 가치체계를 이야기하는 주체마다 차이가 난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남한에서도 문예활동의 사회성 또는 정치성을 강조하는 관점이 엄연히 존재하고, 반대로 개인적 또는 심미적 차원에 몰두하는 관점 역시 공

존한다.³¹⁾ 또한 1990년대 이후 극단적인 상업성을 강조하는 조류도 있고, 대중 문화나 가치체계의 몰역사성을 비판하는 부류도 존재한다.³²⁾

둘째로, 북한의 문화는 남한의 그것보다 동질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각 시기별로 문화가 수행하는 정치사회적 역할이 변해 왔으며, 가치체계의 구체적인 성향 및 요소는 부분적이거나 변천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북한이 지향하는 문화정책은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 적지 않게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³³⁾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한 민중이 문화를 이해하는 가치지향적 태도나 취향도 역사적으로 변해왔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한의 경우, 급격한 산업화와 정보화 과정에서 문화가 갖는 예술성 및 정치성보다 상품성이 강조되었으며, 문화산업이 본격적으로 융성하다보니 이제 '좋은' 작품이 예술적 잣대로만 가름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민중도 남한 민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완만하기는 하지만, 문화적 취향이 변해가고 있으며 더 이상 '항일 혁명문학'을 절대절명의 가치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³⁴⁾ 문화를 실질적으로 향유하는 민중의 가치지향적 태도나 취향의 차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문화의 개념적 지위를 변화시키거나 문화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IV. 통일문화 형성의 가능성 탐색

이러한 원칙들에 입각하여, 새로운 통일문화의 가능성은 남북한 가치체계의 이질화 극복이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열린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가능성이 현실성으로 전화되기 위해서 그 과제의 해결은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새로운 관점의 정립으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한다.

1. 통일문화 형성의 기본관점

따라서 우선 통일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요구된다. 반공주의적 입장이나 규범적이고 낭만적인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나 탈이데올로기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통일문화를 사고해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일문화의

형성, 즉 남북한 문화통합을 남한의 '흡수통일' 또는 북한의 '적화통일'이 아니면 통합이란 어떤 형태이며, 어떤 방법론을 통해 이루어낼 수 있을 지를 탐색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현재 남한에서 일고 있는 문화통합의 논리를 살펴보면, 주로 분단 이전에 존재한 전통문화를 강조하면서 낙관론을 펼치든지 아니면 단절로 인한 이질성을 강조하면서 비관론을 펼친다. 그러나 두 입장 모두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것은 막연하게 '동질성의 확대'라든지 '이질화의 극복'이라는 문구로 축약된다.³⁵⁾ 사실상 매우 관념적으로 이질성을 제거하자는 식의 주장만을 반복할 뿐이다. 여기서 동질성이란 '오 천년 역사'라든지 '한 핏줄'이라는 등의 상징이나 가족주의적 문화원리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단편적인 문화적 공통점이 있다고 해서 문화통합이 용이한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동질성-이질성 논의는 추상적이고 단편적이어서 그 동안의 이질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될 뿐이다. 특히 전통문화의 변질된 부분을 없애고 그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면 된다고나 깨어진 문화질서를 복구하면 된다는 식의 단순하고 정태적인 관점은 역동적이고 다면적인 문화통합의 동태성을 파악하는데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문화란 역동적인 삶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구성되고 다시 쓰여진 사회적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통일을 이루어내려면 실제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상호성의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려는 '포용의 정치'³⁶⁾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바,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회갈등을 회피하기보다는 그 갈등을 풀어나가는 정치적 능력을 요구하며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의 가치체계를 전제로 한다.

다음으로, 통일문화가 정치, 경제, 군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적인 차원을 넘어서 일상적 삶의 영역을 포괄하고 그 영역이 새로운 통일담론구성의 진원지가 되게끔 해야 한다. 이제 통일을 현재적 과정으로 바라보면서 현실적으로 통일을 이루어가는 문화적 주체(즉, 통일주체)의 형성, 즉 민주주의적 민족공동체-남북한 모두를 망라한-를 건설해가는 실천적 차원으로 발전해 가야한다. 더 이상 통일문화의 형성은 기존의 통일논의의 관점과 방법론에 입각해서는 안되고, 특히 이분법적 대립구도로 상대방을 파악하는 관성을 버려야 할 것이다 통일을 위한 남북의 문화적 실천은 이러한 이분법적 가치체계를 지양하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까지 정치에서 소외되어 왔던 대중의 담론구성의 능력이 재고됨으로써 가능하리라고 본다. 실제로 바람직한 통일문화의 형성은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반드시 남한사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수반해야 하고, 대중 속에서 통일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담론적 실천을 고민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통일

담론의 재구성이며 그것은 통일에 관한 어떤 새로운 주제를 생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일과 연관된 억압적 가치체계를 근원적으로 해체-재구성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통일을 위한 담론적 실천은 분단이라는 외적 규정성을 단순히 해체하는 것으로 실행될 수 없으며, 우리의 삶의 각 부분에 스며들어 있는 분단 논리를 해체하고 통일논리로 이끌어 내야할 것이다.

2. 통일지향적 가치체계 : 그 원리와 기제

이 대목에서 남북의 민족구성원이 만들어내야 할 새천년 한국인상(인성구조)의 정립과 관련된 통일지향적 가치체계가 문제시되는 것이다. 그러면 통일지향적 가치체계란 무엇인가? 문용린 교수는 그것을 "통일을 성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통일 이후의 남북 주민들 간의 생겨날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도 소용이 닿는 새로운 가치체계를 뜻한다"³⁷⁾고 말한다. 나아가 그는 가치체계의 내용과 형식을 구분하면서, 이 양자를 고찰해 보면 남북한간에 심각한 분열 또는 차이를 목도한다고 지적하고, 결국 이러한 차이의 극복은 '끝없는 논쟁'으로 귀결되기 십상인 내용적 측면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형식적 절차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³⁸⁾ 그도 그럴 것이 이질화된 가치판단의 내용을 합의에 의해서 동질화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지난한 작업일 뿐만 아니라 꽤 오랜 시간을 요구하는 과정의 문제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치체계 형성의 기본 원칙과 실험적 절차를 통일문화의 형성 속에서 확인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이에 필자는 주로 심리적 차원에서 그 원리와 기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990년 통일된 독일이 선례를 남겼듯이, 남북의 통일과정, 심지어 정치적 통합 이후에 남북한 사회는 주기적으로 개인적 또는 집단적 분열과 퇴행의 소용돌이에 이끌리게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정치제도적 통합 - 남북연합제이든 소위 '낮은 단계의 연방제'이든 간에 - 이후, 증오와 이익주장으로 가득 차 있는 분열된 사회적 행위자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우리는 정치적 권위의 옹호자이자, '만인은 만인에 대한 투쟁'을 상기시키는 은밀한 홉스주의자로서 우리의 형상을 그려야 하는가?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통일문화의 형성을 위한 포용의 정치원리는 분열과 퇴행에 반대하여 스스로를 방어할 것이다.³⁹⁾ 그리고 상호적이고 관용적인 틀을 포함한 '집합표상'(collective representation)으로서의 가치체계는 개인들이 '건강한' 발달을 이루도록 사회에서 작동한다. 그리고 중

계자 또는 매개자로서 '이행대상(transitional objects)⁴⁰⁾의 중요성은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포용의 효과(사회심리적 불안의 해소와 문화의 통합적 발전)를 유발하여 민족공동체의 건설에 심리적 기초를 제공한다.

하나의 개념으로서 이행대상은 가치체계의 근원을 설명할 수 있고, 그것의 형성에서 병리적인 '열광주의'로부터 건강한 신념구조를 구분하게 된다. 이행대상이 개인심리에서 자아와 타자의 가교(架橋)라면, 그 대상은 자폐증적인 이데올로기에 대립하는 공유된 가치체계의 투사를 통해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스스로를 드러낸다. 정치적으로 이러한 이행대상 개념에 대한 고려는 동의 또는 합의의 심리적 기초를 중시하는 것이며 포용의 정치에서 권리, 자유, 그리고 개인성을 존중하는 인성구조는 분열되고 양극화된 심리를 포용하고 변형시킬 수 있는 사회적 행위자를 구성하는 것이다.⁴¹⁾ 그것은 '치료하는 통일문화'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 개인과 집단의 관계는 치료의 문제가 아니라 대인관계적 동태성이 감정과 사고에 미치는 영향의 문제이다. 개인의 일차적 고립을 지탱하고, 집단적 타자들 속에서 살아가다가, 상호성의 영역에서 만족을 얻는 것이다. 상호성의 쾌락을 경험하고, 절망을 초극하며, 그리고 자율적인 존재로서 타자를 간주하는 것, 즉 집단적 경험의 유독한 측면을 포용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심리내적 세계에서 외부의 세계로 이행하는 이러한 심리적 적응은 통일문화의 형성에서 요구되는 본질적 인성이다.

이러한 인성은 자아의 타자에 대한 인정과 그들의 상호성을 중시하고 합의적 현실을 수용하는 심리적 기제들을 창출하며, 그것들에 입각한 정치원리는 자아와 타자 사이의 매개 또는 의사소통을 발달시키는 경험영역을 확장시킨다. 그 심리적 기제들을 세부적으로 열거하면, ①공유된 가치체계의 중재 ②동의와 자율성의 존중, ③타협으로의 의지와 상보적 권력행사 실제로 통일문화의 형성과정에서 이러한 심리적 기제들 또는 조건에 입각한 정치원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면, 통일한국의 정치사회화의 모습은 억압적 지배자가 피지배자의 기능과 잠재성을 구조적으로 배제하는 '조증적 가해자(manic persecutor)⁴²⁾의 잔치로 얼룩질 것이고, 그 가해자들 간의 국가제도를 장악하기 위한 끊임없는 권력투쟁이 발생하여, 문화적으로 무제한적 권력추구의 경쟁적 정치문화를 지속시킬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통일국가의 구성원들이 성취해야 할 삶의 양식과 가치체계로 정의된 통일문화는 포용의 정치원리에 근거하여 짜임새가 형성되고, 통일한국의 인성구조를 '조증적 가해자로부터 '상호적 포용차로 전화시키는 규범체계라고 재개념화될 수 있다.

V. 맺음말

실제 '상호적 포용자'의 인성이 확대되어 남북한의 의사소통의 환경을 마련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문화통합의 지름길이 직접적으로 열리는 것은 아니다. 상호성과 차이에 입각한 포용의 정치원리는 사회적 행위자들이 통일문화의 형성을 위해 상호성과 변화, 및 관용을 지탱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 행위자들은 주위 세계와 연계되어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가장하기 마련이다. 즉 모든 주체들은 어느 정도 분열되어 있고 갈등으로 충만하며 그리고 철저하게 지각과 행위에 영향을 주는 무의식적 가치체계에 의해 이끌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진정한 통일의 정치원리는 포용된 것-행위자들 간의 갈등-을 고려하는 것이고, 정치사회화의 도구에 대한 신념 때문에 상호성과 타자성을 관념화 또는 신비화하지 않고, 즉 통일비용의 현존을 부인함이 없이 포용행위를 성취하는 것이다.

얼핏 생각하면, 통일문화의 형성을 위해서는 통일주도 세력의 권력독점을 향한 파괴적 충동을 동화하고, 길들여 보상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고, 문화통합을 향한 통일운동은 치료, 보상, 및 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통일을 추동하는 것'을 신비화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억압적 권력표상⁴³⁾이 단순히 해체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남북한 서로에 대한 우리의 권력표상은 이미 서로에 대해 '위험한 타자(uncanny other)'⁴⁴⁾ 또는 '내적인 이방인(internal foreigner)' 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들은 억압적 권력작용을 활성화하여 대중에 대한 지배를 구조화하는 심리적 동인이다. 이러한 권력표상의 위상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곳에 바로 상호주의의 '순진함'이 있다.

즉 자기가 완전하게 될 수 있고 관념화된 통일에 기초한 타자성을 자리매김함으로써 우리 자신으로부터 '위험한 타자'를 어느 정도 일소할 수 있다는 생각은 신화이거나 오류이다. 사실상 인간존재의 정신분석적 의미인 분리, 배제, 자기에 적요소들은 단순히 통일문화에 동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들은 우리에게 너무도 무거운 실재적 '하중'이다.

확실히 남북한 관계에서 상호주의를 '경작'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상호성과 관용에 대한 믿음에 사로잡혀 '위험한 타자'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오히려 상호주의를 무색케 할 것이며 '위험한 타자'를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신념과 포용이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고 표상하며 그것으로부터의 위험을 벗어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정치과정에서 그 타자를 포용함으로써 갈등을 이해하고 관용해야 하며 외부의 개인이나 집단을 희생시키고 박해하는 것을 제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필자가 주장하는 것의 요점은 '완전함'의 민족공동체 의식을 두고 형성된다. 통일문화의 형성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집단적 경험의 갈등과 분열된 속성을 무시하는 완전함으로 민족공동체를 인지할 필요는 없다. 통일문화의 민주적 제도화는 이러한 '위험한 타자'의 혐오스러운 투사물에, 그리고 그 문화에 내재한 그 투사물의 위험에 대한 예민한 감성을 요구할 뿐이다.

우리는 분열과 갈등, 그리고 그것들이 이성의 이면에서 인지되고 자연적임을 의미할 때만 통일문화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문화는 완전함의 공동체성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에 대한 감성을 요구한다. 문제는 어떻게 갈등을 유지하고 다루며, 어떤 개인, 집단 또는 프로젝트를 희생함으로써 경험을 전체화하지 않고 통일문화 프로젝트의 일부분으로서 갈등을 받아들이는가이다. 의사소통의 일 형태로서의 갈등은 제거될 필요가 없다. 갈등이 통일주체의 행위를 동기화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한에서, 갈등은 잠재적으로 창조적이고 상호성과 관용의 목적을 지탱할 수 있지만 남북갈등이 완전함의 이름으로 치료될 수 없고, 그 상대가 포용되는 장소는 공적 정치과정이어야만 한다. 따라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화해, 합의 및 타협은 민족통합이나 통일문화에 있어 인성구조의 한 측면만을 이룰 뿐이며 또 다른 측면은 권력표상을 동반하는 분열과 갈등 속에서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 문화통합에 대한 환상적 신화를 대체하는 열망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이다.

주석 1) 통일논의의 추세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강광식, "통일문화 창조를 위한 연구의 의의," 『통일문화 창조를 위한 연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pp. 6-13을 참조

주석 2) 통일문화에 관한 시발점은 국토통일원(1984.1)에서 주최한 통일문제학술회의에서 황성모교수의 "민족화합과 통일문화창조를 위한 접근"을 비롯하여 한국공연예술평론가협회가 주최한(1985.2) "통일문화지향과 예술교류",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1985.6) 『통일문화창조를 위한 연구』 등이 있다.

주석 3) 위의 책, pp. 13-15.

주석 4) 황성모, "남북한 사회변화와 통일문화 창조" 위의 책, pp. 48-49.

주석 5) 김문환 교수는 1990년대 중반 당시 '통일문화'라는 용어를 "통일을 지향하는 문화" 또는 "통일 이후 민족적 동질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문화"로 이해하는 것이 지배적이었다고 지적하면서, 통일문화를 위한 방안으로 ①역사적 전통에 의존하여 동질성을 확보해 보려는 노력, ②예술창조 및 향수에서 독창성과 참신성, 즉 개성이라는 가치평가의 존중을 들고, 당시까지의 남북문화 교류 실적을 열거하고 있다(김문환, 『분단조국과 통일문화』(서울:서울대출판부, 1994), pp. 3-23). 이 경우 문화 개념은 다소 하위 수준의 문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앞서의 논의와는 논의의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문화는 단지 남북교류를 촉진하는 하나의 당위적차원에 불과하게 되고, 통일문화라는 하나의 통합된 개념으로 이해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주석 6) 문화발전연구소가 주최한 "북방문화교류와 정책의 방향" (1990), "북한의 문화정책과 남북문화교류의 방향" (19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삶의 양식』(1991), 『통일한국의 삶의양식과 가치체계탐색』(1993) 등이 있다.

주석 7) 윤덕희, "통일문화의 개념 정립과 형성방향 연구," 『통일문화 연구(上)』(서울:민족통일연구원, 1994), p. 7.

주석 8) 위의 글, p 9.

주석 9) 위의 글, pp.22-5.

주석 10) 그러한 문제의식에서의 논의를 위해서는, 강광식·고범서·정범모 외, 『통일한국의 삶의 양식과 가치체계 탐색』(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참조

주석 11) 황성모 "현대 한국사회의 정신적 상황," 『한국사회사론』(서울:심설당, 1984), p.131

주석 12) Jeffrey C. Alexander and Steven Seidman Culture and Society: Contemporary Debates(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 28-30

주석 13)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편, 『조선말 대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1185.

주석 14) 신기철·신용철 편, 『새 우리말 큰 사전』(서울:삼성출판사, 1992), p.

주석 15) 문화에 대한 다양한 인류학적 정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Clifford Geertz, *After the Fact: Two Countries, Four Decades One Anthropologist*(Cambridge, MA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pp. 42-63

주석 16) 이우영, "남북한 사회의 문학예술", 『탈분단시대를 열라 남과 북, 문화공존을 위한 모색』 (삼인, 2000), pp. 207-209.

주석 17) 사회과학원 문화예술연구소 편, 『문화예술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3), p. 808

주석 18) 위의 책, 같은 쪽

주석 19) 1992년 수정된 헌법의 제3장 문화조항 참조

주석 20) 김일성, 『3대혁명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1980), p.38

주석 21) 문화와 문학예술을 혼용하는 것을 북한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몰락한 현실사회주의 사회에서 문화는 어떤 경우 문화인류학적 차원의 개념을 받아들이기도 하나, 기본적으로 문학예술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인식된다. 실제로 문화현상이나 문화정책과 같이 현상적인 수준에서 문화를 개념화하는 경우에 늘 문화를 문화예술과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인다(Tom Bottomore, *A Dictionary of Marxist Thought*, Worcester: Blackwell Reference, 1983; 임석진 역, 『마르크스 思想事典』, 청아출판사, 1988, p. 193-195).

주석 22) 박승덕, 『사회주의문화건설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169

주석 23) 한중모, 『주체적 문예리론의 기본I: 사회주의공산주의 문학예술의 건설』 (평양: 문예출판사, 1992), p. 114

주석 24) 위의 책, p. 116-117.

주석 25) 위의 책, p. 120-130

주석 26) 물론 인민성이라는 문화정책의 방향에서 볼 때, 문예활동이 갖는 대중성이나 오락성도 증시된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은 이데올로기적 정치이념에 비해서는 부차적일 수 밖에 없다.

주석 27)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남한의 문화정책에 기저하는 가치체계 역시

그것의 정치적 의미가 부각될 때도 있다. 예를 들어, 90년대 이후 대중문화에서 성담론의 급증과 이에 대한 공론화는 권위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비판을 희석화시키고 집단연대의 의식을 해소키는 사회적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주석 28) 이재선, 『사회주의 역사소설과 그 한계』, 권영민 편, 『북한의 문학』 (서울:을유문화사, 1989), p. 183.

주석 29) 남기심·김하수, 『북한의 문화어』, 고영근 편, 『북한의 말과 글』 (서울:을유문화사, 1990), p.94.

주석 30) 가치평가적 범주화는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예를 들어, 남북한 모두는 정치담론의 이원적 대립(인민성/퇴폐성, 진보성/반동성, 순수성/정치성)을 설정한다. 이와 같은 범주화는 구분 그 자체가 선악을 준별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주석 31) 일제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문예활동의 사회적 참여문제는 중요한 논쟁거리였다. '순수' 또는 심미성을 강조하는 집단은 문예활동의 상대적 자율성에 집착하였고, '참여' 또는 민중민주주의적 활동을 강조하는 집단은 문예활동의 사회적 책임과 정치적 임무에 주목하였다.

주석 32) 이정호, "X세대 문화의 특징", 『포스트모던 문화읽기』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p. 216-223

주석 33) 김문환 『북한의 예술』 (서울:을유문화사, 1990) 참조

주석 34) 이우영, "북조선 영화읽기", 『통일된 땅에서 더불어 사는 연습』 (서울:또 하나의 문화, 1996), p. 154

주석 35) 이러한 논의는 주로 전국대학의 '국민윤리학과' 또는 통일관계 연구원의 '통일정책학'을 통해 생산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오기성, 『문화의 구조분석에 의한 남북한문화통합 연구』 (서울대학교 국민윤리학과대학원, 1998), 이인창,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전통문화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민윤리학과대학원, 1997), 그리고 이우영,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 (민족통일연구원, 1994) 등이 있다.

주석 36) 이러한 '포용의 정치'와 관련된 정책적 또는 이론적 논의는 다음을 참조, Kim Dae-Jung, The Sunshine Policy(Seoul: Millennium Books, 1999) 및 Anthony Giddens, The Third Way: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London: Polity Press, 2000)

주석 37) 문용린, "통일지향적 가치체계 형성방안 모선", 『통일한국의 삶의 양식과 가치체계 탐색』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p. 161

주석 38) 위의 책, pp. 167-169

주석 39) 포용(Containing)은 클라인 학파의 정신분석적 치료에서 핵심적인 개념이다. 그 개념은 한 사람이 타자의 일부분을 포용한다는 '투사적 동일시(projective identification)의 비병리적 측면을 기술하는 것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클라인 학파의 대표주자격인 비온(Bion)은 치료자와 환자의 상호작용을 연구함으로써 이 개념을 발전시켰다. (R. D. Hinshelwood, A Dictionary of Kleinian Thought, London: Free Association Books, 1989, pp. 244-9). 이러한 개념을 정치과정에 도입하여 이해하면, 그 포용은 사회갈등이나 사회심리적 불안 및 그로 인한 문화적 병리현상을 해소하는 기제와 절차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이만우, 「민주주의적 정치의 정신역동적 조건들 - 윈니코트(Winnicott)의 심리발달 이론과 그 비판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21권, 제3호(1998)

주석 40) 윈니코트는 유아에게서 자기관련성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이행대상'이라는 개념을 중요시 하였다. 즉 이행대상은 아이가 일차적 자기애로부터 세계와 관련된 존재로 이행하게끔 도와주는 대상이다. (Donald Winnicott, "Transitional Objects and Transitional Phenomena", Through Paediatrics to Psycho-Analysis, New York: BRUNNER/MAZEL, Publisher, 1992, pp. 229-242). 이행대상을 정치사회화에 원용하면, 집단과 권력표상들에 대한 자아의 관계를 성립시키고, 자아가 자기애적 과장(왜곡된 '자아이상')으로서가 아니라, 차이와 타자의 존중을 강화하는 상호적 교환과 인정으로서 권력을 행사하게끔 한다. 이행대상은 문화 속에서 자아가 상호적 의무와 책임성을 자각케하여 공동체를 묶어 세우고 권위주의적 독재에 대항하여 방어하는 것이다.

주석 41) 윌프레드 비온(Wilfred Bion)의 포용자/피포용자(container/contained) 이론을 참조, Wilfred Bion, Elements of Psycho-Analysis(Northvale, NJ: Jason Aronson INC, 1995)④자기규제와 그것의 사회적 조직화를 위한 균형, ⑤인간적 교환의 가능성과 공감의 변증법(관용과 동정 및 의무의 실행), ⑥분열되고 양극화된 감정을 담보하고 변형할 수 있는 자아의 능력배양 등등이라고 할 수 있다.

주석 42) 이 용어는 지배의 권력관계로 구조화된 정치제도와 문화형태에 순응하여, 집단적 이상화와 구조적 배제라는 이분법적 가치체계에 입각하여 행위하

는 사회적 행위자들 또는 인성을 의미한다.

주석 43) 정신분석적으로 권력표상이란 우리가 주위 타자 또는 대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심리적 '내사물'(introjects), 즉 자기 또는 대상표상으로서 이것은 심적 현실을 장악하기 마련이다(R. D. B. Hinshelwood, A Dictionary of Kleinian Thought, London: Free Association Books, 1989, p. 327)

주석 44) Julia Kristeva, The Powers of Horror: An Essay on Abjection, Trans. By R. Diaz(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2), p. 1.

통일 한국군의 군대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 *

박균열(육군 제3사관학교)

- I. 문제의 제기
-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설계
- III. 남북한 군대문화와 통일 한국군의 군대문화에 대한 인식
- IV. 요약 및 결론

I. 문제의 제기

분단국의 군사통합은 바로 분단 당사국의 군대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공감대의 회복, 확산, 창출의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군사통합은 사회통합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기는 하지만, 남북한 간의 군사통합 문제는 분단의 원인 및 고착화와 관련하여 군대가 가지는 부정적 상징성 때문에 다른 분야의 통합보다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주석 * 본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統一 韓國의 軍 統合과 軍隊文化"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0. 2)을 위해 1999년 7월 중에 수집한 설문자료 중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토대로 이를 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설문 대상은 총 854명으로서 남한의 통일 예비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대학생(434명), 사관생도(258명), 장교후보생(57명), 훈련병(105명)들이다.

이와 같이 기존의 군대가 갖는 상징성으로 인해, 외형적이고 제도적인 유형의 군사력의 통합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문화적 정체성의 형성에 대해서는 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즉 기존의 남북한 군사통합 논의는 주로 외형적인 측면-무기체계, 통신시설, 교리 및 전술체계, 군정 및 군령체계, 통합

이후 병력의 감축에 따른 예산소요, 과잉방산업체의 민수화, 잉여군사시설의 처리, 그리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투자된 위협시설 처리 등의 문제점들-에 주된 관심이 모아졌다.

반면에 각각의 체제 속에서 그 군대가 차지하는 고유한 위상의 정립과 같은 내적인 통일(innere Einheit)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은 과소평가되었던 것이 사실이다.1)

독일 통일의 경우 통일 후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내적 통합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독일은 통일이전부터 쌍방의 합의하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에서 내적 통합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점은 내적 통합의 문제가 외적 통합의 문제 만큼이나 중요하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남북한의 경우 이러한 내적 통합의 문제는 독일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남북한의 군사통합 환경은 독일보다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이다. 우선 서독은 시민교육프로그램이 잘 정착되어있었다. 즉 서독의 군인을 '제복입은 시민(Staatsburger in Uniform)'이라는 슬로건 하에 국민의 지원과 사랑 속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요인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2) 또한 동독의 경우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종교가 존재하고 있었다.3) 이와 같이 통일 이전의 동서독은 내적 통합의 문제가 현재의 남북한 상황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남북한의 경우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환경에 처해 있다. 남북한의 군사통합 논의가 독일의 통합 방식으로 전개된다할지라도 남북한의 통일 수준에 걸맞는 내적 군사통합의 조건이 적어도 통일이전에 형성되어야만할 것이다. 이는 곧 완전한 군사통합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통일 한국군의 완전군사통합을 위해 현재의 남북한 군대문화가 매우 중요한 자산임을 강조하고, 또한 기존의 문화적 접근법(cultural approach)이 취하고 있는 「이질성 극복·동질성 제고」라고 하는 논리구조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설계

1. 이론적 배경

남북한의 군사통합 문제는 세계의 어느 다른 분단국의 상황보다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남북한 군사통합에 대한 연구도 매우 복합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있다.

남북한의 군사통합에 대한 이러한 당위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연구는 이러한 요청에 대해 흡족한 해답을 제시해주지 못했다. 대체로 남북한의 군사통합에 대한 논의는 외형적·제도적인 선결과제에 국한하여 이루어졌다.⁴⁾ 또한 분단국의 사례분석을 통한 교훈 도출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기도 했다.⁵⁾

한편 거시적인 통일전략 및 국방정책 속에서 군사통합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 연구도 있었지만,⁶⁾ 이러한 가운데서도 주제와 범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군의 외형적인 부문과 내면적인 부문을 동시에 강조하고 군사통합을 논의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⁷⁾

윤정원은 선행 군사통합론을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하였다. 즉 ①지휘구조의 특징, ②군사통합에 의한 군사력 변화, ③군사통합의 평등성, ④군사통합의 속도, 그리고 ⑤군사통합의 성패 등이다. 그리하여 그는 한반도의 군사통합 방안에 적실성이 있을 것으로 제안하고 있는 과정중심적(process-oriented) 유형과 이상주의적(idealistic) 유형으로 나누어, 여기서 다시 계획된 집행과 적응적 집행의 변수를 두어 네 가지의 모형을 설정하였다.⁸⁾

그의 연구는 선행연구에 비해 군사통합에 대한 분석적 시도에 있어서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한반도 상황에 맞는 군사통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점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군사통합의 유형 분류는 다양하게 시도될 수 있다. 우선 방법면에서 볼 때 의사소통이 쌍방의 군대간에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일방형 군사통합과 쌍방형 군사통합이 있고, 통합의 요소면에서 군대자산을 기준으로

로 외적인 군사통합과 내적 군사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군사통합은 그 관계면에 있어서 군 내부의 통합뿐만 아니라 군대의 상징과 그 구성원들의 계속적인 충원 과정 속에서 사회통합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 남북한의 군사통합은 통일 한국의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질성과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9)

첫째, 내부적 측면으로 남북한 출신 장병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제도적 조치를 통해 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거나, 갈등의 발생을 미연에 억제하여 그들간의 이질감 극복을 원활하게 한다. 둘째, 외부적 측면으로 통일 한국군이 대국민, 남북한 주민에 대하여 바람직한 군의 역할을 수행해 줌으로서 통일 후 사회의 통합과정에 기여한다.

류재갑은 군대의 사회적 통합에 대해 두 나라의 군 구성원을 하나의 군대로 통합하는 작업으로서 그 요점은 두 군대간의 이질성을 극복하여 하나의 새로운 국군을 만드는 것으로서, 군사분야의 제반기능과 조직체를 하나의 공동기능·조직체로 통합시키는 것이며 군사활동을 일원화시키는 조직적 결합이라고 말했는데,10) 이는 일견 의미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는 군사통합을 정치적 통일을 전제로 해서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군사통합을 정치적 논리에 맡기고 있다. 또한 통일이전의 군사통합에 대한 논의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설정하여 결국 군의 통합은 통일이후의 논의이고, 그것도 정치적 논리에 따라 해야만 된다는 기존의 군사통합 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군사통합이 사회통합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사회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군사통합이 의미를 가진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군사통합도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고려될 때 그 효과는 더욱 증대된다.

그런데 군대는 사회의 다른 조직과는 달리 그 조직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 문화적 정체성은 객관적인 실체이기도 하지만 일반사회와의 부단한 상호작용 속에서 지속적인 의미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카이어(E. Kier)의 연구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프랑스 군대의 전략수립과정을 문화적인 시각에서 분석하면서 '관계 또는 맥락으로서의 문화(culture as relation or context)'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그는 내부적인 문화적 정체성의 형성은 일반사회의 문화적 맥락(context of culture)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11)

또한 카이어는 군대문화는 단순한 군인정신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하면서, 물질적·정신적, 외형적·내면적인 모든 생활양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정치·경제·군사 등의 제반 분야의 통합에서 문화적인 접근전략을 주장한다.12)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군사통합 및 군대문화에 대한 기존의 정치적·군사전략적 접근 중심에서 벗어나서, 카이어가 지적한 바와 같이 문화적 맥락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이론적 배경하에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 연구설계

1)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통일 한국군의 군대문화 형성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통일이라고 하는 미래의 상황, 공간적으로는 군대라고 하는 상황, 그 군대의 구성원으로서 당장 충원될 예비자원과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충원될 자원 등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특히 인적 고려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해 남한의 현재 일반대학생과 군의 예비장병들(사관생도, 장교후보생, 훈련병)을 대상으로 지역별, 전공별(문·이과), 성별로 구분하여 제한표본추출에 의한 유층군집(流層群集)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설문대상은 일반과 군대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일반대학생은 각 도별 1개 학교씩 선정하였고. 군대의 경우 계층별 대표성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일반대학생은 각 대학의 특정학과에 의뢰하여. 문 이과의 비율, 남녀학생의 성비, 학년의 비율 등을 균등하게 하도록 협조하여 실시하였다. 군대의 경우 특히 사관생도는 학년별, 문·이과별로 균등한 비율이 되도록 협조하여 실시하였다. 사관후보생 및 훈련병들은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고 단지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만을 고려하여, 교육기간의 종료에 임박해서 그들의 자율의지를 최대한 표출할 수 있도록 시기를 선정하였다.

사관후보생(남·여)은 총 교육기간의 3분의 2선에서, 훈련병의 경우 5분의 4선에서 실시하였다.

질문서는 해당 기관의 담당관 및 지인을 통해 1,247명에게 발송되었는데, 회수된 질문서는 총 977매였다. 이 중에서 분석이 곤란한 일부 자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실제 통계에 활용한 대상자는 일반대학생 434명, 사관생도 258명, 장교후보생 57명, 그리고 훈련병 105명으로서 총 854명이다.

질문서의 발송 및 회수 현황은 [부록 II]에 명기한 바와 같다.

2) 척도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모든 기술과 탐구, 또한 모든 행동과 추구는 어떤 선을 목표로 삼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그는 모든 선에 공통된 이데아란 있을 수 없으며, 선은 존재만큼이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모든 경우에 한결같이 들어맞는 어떤 단일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다.¹³⁾ 이는 이데아 또는 선의 상대성을 말하는 것이다. 남북한의 관계에 있어서 통일의 문제는 적어도 남북한 당사국의 당위적 요청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일종의 선(善)'이다.

통일 담론에 대한 다양한 접근은 분명히 통일을 위해 보탬이 되는 대안이라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당성의 확보는 현재적 남북한의 군대문화에 대한 개별적 평가단계에서 머무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남북한 통일 군대문화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현재적 문화에 대한 비교 평가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과거 없는 현재가 없듯이 현재 없는 미래도 없다 남북한의 과거 및 현재의 군대문화는 그것이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모두 미래의 통일 한국의 군대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작용인(作用因)이 된다.

남북한의 군대문화에 대한 평가기준은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설정하였다.¹⁴⁾ 이렇게 하여 군대문화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설정한 20개는 다음과 같다. 즉 ①

개인주의, ②권위주의, ③단기성과주의, ④명예주의, ⑤무사안일주의, ⑥물질만능주의, ⑦보수주의, ⑧실적주의, ⑨연고주의, ⑩완전무결주의, ⑪진취성, ⑫집단책임성, ⑬출세지향주의, ⑭특권의식, ⑮합리주의, <16>향락주의, <17>형식주의, <18>확실성, <19>효율성, 그리고 <20>희생·봉사정신이다.

구성 변수들의 남북한 군대문화에 대한 각각의 내적 일관성 정도(Cronbach α)는 다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한의 군대문화는 0.6744이었으며, 북한의 군대문화는 0.7044로써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표 1] 질문서의 내용 및 내적 일관성 정도

주 제	내 용	α
남한의 군대문화	개인주의, 권위주의, 단기성과주의, 명예주의, 무사안일주의, 물질만능주의, 보수주의, 실적주의, 연고주의, 완전무결주의,	.6744
북한의 군대문화	진취성, 집단책임성, 출세지향주의, 특권의식, 합리주의, 향락주의, 형식주의, 확실성, 효율성, 희생·봉사정신	.7044

이렇게 하여 작성한 질문서는 (부록 1)에 명기한 바와 같다. 이들 항목들은 리커트(Likert-type)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3) 분석방법과 통계적 절차

자료의 분석은 SPSS-WIN 8.0 version을 사용하였다. 주요 통계치는 백분율(%)과 평균값(M)이며, T & F-test와 ANOVA등의 분석도구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평균값은 "매우 강함"은 100점으로 "대체로 강함"은 75점으로 "보통"은 50점으로 "별로 강하지 않음"은 25점으로 "전혀 강하지 않음" 0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정하였다.

4) 기초통계 자료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자료는 [부록 III]과 같고,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남북한 군대문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 검증 결과는 [부록 IV]와 같다.

Ⅲ. 남북한 군대문화와 통일 한국군의 군대문화에 대한 인식

1. 남북한 군대문화에 대한 인식 비교

남북한의 군대문화에 대한 인식의 비교는 동일군대의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 주체 중의 하나인 군인 및 군대의 상호 특징의 차이점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여기서는 위에서 남북한 군대문화의 20개의 분석기준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 각각 구분하여 그 인식을 비교할 것이다.

남북한의 군대문화를 20개의 척도에 의해 비교 분석해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남북한 군대문화의 인식 비교

N=854

구 분	남한 군대	북한 군대	T
전체 평균	64.66	59.92	
출세지향주의	76.23 ①	66.15 ⑩	9.22**
명예주의	75.99 ②	69.70 ⑦	-6.14**
권위주의	74.88 ③	82.50 ①	-7.96**
실적주의	73.48 ④	71.03 ⑥	-2.40*
특권의식	72.37 ⑤	79.00 ③	-6.28**
단기성과주의	71.94 ⑥	67.80 ⑨	-3.98**
형식주의	70.95 ⑦	65.30 ⑪	5.46**
연고주의	70.07 ⑧	58.52 ⑫	-10.32**
획일성	67.27 ⑨	78.07 ④	-10.77**
무사안일주의	66.51 ⑩	46.47 ⑭	-20.07**
보수주의	65.98 ⑪	79.29 ②	12.78**
물질만능주의	65.90 ⑫	42.74 ⑮	-19.96**
집단책임주의	62.30 ⑬	74.77 ⑤	-10.64**
개인주의	59.10 ⑭	33.25 ⑳	23.68**
진취성	56.62 ⑮	53.12 ⑬	3.25**
합리주의	54.14 ⑯	36.55 ⑰	18.28**
향락주의	53.93 ⑰	39.39 ⑱	12.24**
완전무결주의	52.65 ⑱	68.88 ⑧	-16.05**
효율성	51.72 ⑲	42.65 ⑰	8.02**
희생·봉사정신	51.22 ⑳	43.28 ⑮	6.64**

주: 1) *: $p < .05$, **: $p < .001$.

2) 평균값은 “매우 강함”(100점), “대체로 강함”(75점), “보통”(50점), “별로 강하지 않음”(25점), “전혀 강하지 않음”(0점)을 평균하여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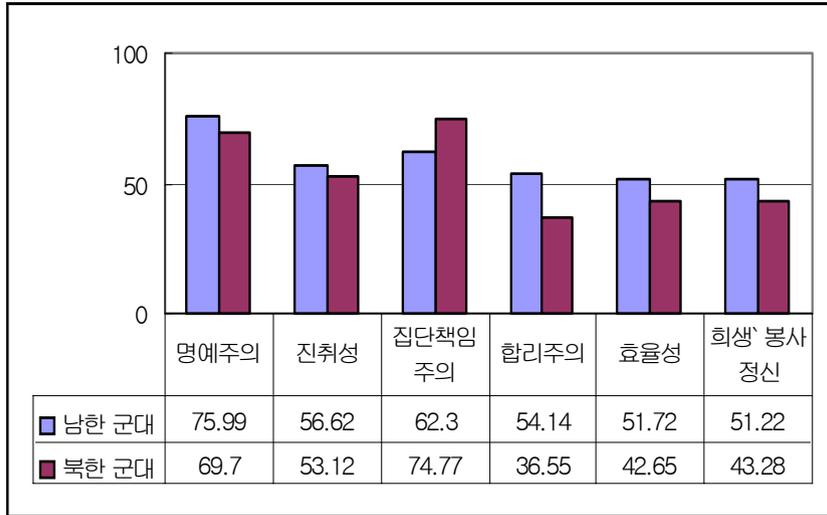
3) 원 안의 숫자는 평균값의 우선 순위를 표시한 것임.

위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한 군대문화의 전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다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우선 긍정적인 요소는 다음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2] 남북한 군대문화의 긍정적 요소에 대한 인식 비교

N=8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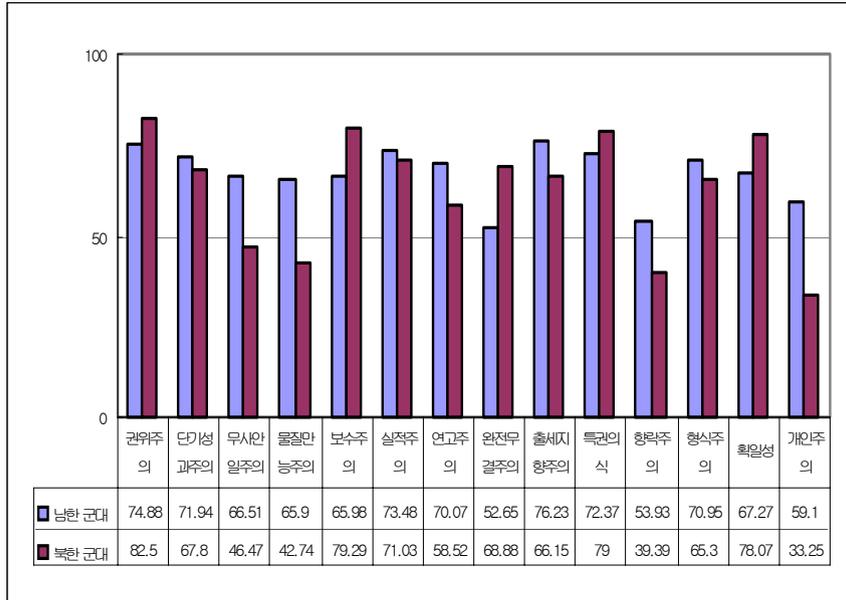
주: 수치는 “매우 강함”(100점), “대체로 강함”(75점), “보통”(50점), “별로 강하지 않음”(25점), “전혀 강하지 않음”(0점)을 가중 평균한 결과임.

긍정적 요소에 있어서 집단책임성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은 모두 남한의 군대문화가 북한의 군대문화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한의 군대문화에 있어서 합리주의(36.55), 희생·봉사정신(43.28), 그리고 효율성(42.65) 등은 남한에 비해서도 뒤질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평균값 면에 있어서도 보통 이하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점은 바로 통일 군대에 있어서 내적인 군사통합을 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다음으로 남북한 군대문화의 부정적인 요소에 대한 비교이다. 그 결과는 다음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3] 남북한 군대문화의 부정적 요소에 대한 인식 비교

N=854



주: 수치는 “매우 강함”(100점), “대체로 강함”(75점), “보통”(50점), “별로 강하지 않음”(25점), “전혀 강하지 않음”(0점)을 가중 평균한 결과임.

위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한 군대문화의 부정적 요소 중에서 남한의 부정적 요소가 북한의 것에 비해 더 좋지 않게 인식되고 있는 것은 출세지향주의, 실적주의, 연고주의, 물질만능주의, 무사안일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향락주의 등이다. 여기서 북한의 물질만능주의(42.74), 개인주의(33.25), 그리고 향락주의(39.39)는 보통 이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점들은 군사통합 과정에 있어서 남한만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북한의 부정적인 요소로는 권위주의, 특권의식, 단기성과주의, 형식주의, 확실성, 보수주의, 그리고 완전무결주의 등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남한 군대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이 공히 개선해 나가야 할 요소들이다. 특히 북한 군대는 개선해야 할 요소를 더 많이 갖고 있다.

2. 통일 한국군의 군대문화 형성 논의

앞선 논의에서 통일 한국군의 군대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현실진단을 해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진단의 기초는 기존의 소위 『이질성 극복·동질성 회복』의 틀 속에서 보다 세련된 해석상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동질성 제고와 이질성 극복의 논의가 타당성이 있는지 또는 부당한지, 아니면 제3의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이질성 극복·동질성 제고’ 논의의 타당성

남북한이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모든 문화적 요소들간의 조화와 이를 토대로 한 현재적 토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북한 군대문화의 이질성을 찾아내어 이것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그러나 문화가 가지고 있는 변화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으면, 문화의 변화에 대한 측면을 간과해서 실패로 끝이 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통합 문제에 대한 관심이 남북통일문제를 논의하는데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남북한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정치체제의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분단사에서 6.25 한국전쟁이 워낙 치명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측면, 군사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통일 문제 논의에 있어서 언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다. 그러나 여기에 1990년대 초에 이루어진 동서독의 갑작스러운 통일은 남북한 사이의 사회문화적 통합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켰다. 왜냐하면 동서독의 통일은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변화의 산물이라고만 말할 수 없고, 동서독 사이의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를 바탕으로 한 사회문화적 동질성의 확보에 힘입은 바 크기 때문이다.¹⁾

1) 백승대, “남북한 사회·문화 통합에 관한 연구 성과와 전망,”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 제19집, 1997: 4.

남북 분단 이후 남북한 사이에 벌어진 사회문화적 이질화의 내용과 정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작업은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한 첫 걸음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일부 연구의 경우 북한 사회에 대한 남한 사회의 문화적 정통성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로서 기능한 점도 없지 않았다. 사회문화적 이질성에 대한 연구가 남한 사회의 문화적 정통성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을 추구할 경우 남북한의 사회문화 통합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통합을 저해할 개연성이 있다.²⁾

특히 이러한 논의는 통일군대문화의 형성에 적용될 때, 일반사회에 비해 군대사회가 가지게 되는 특수성으로 인해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한의 분단은 군사적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또한 군사적 대치가 남북한의 분단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顯示的인 예로써 남북한의 주민들에게 인식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군대문화 형성에 있어서의 이질성 극복과 동질성 제고의 논의는 남북한 군대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우위를 비교하기 위한 자료로 직접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북한 군대문화에 대한 비교 그 자체는 현실태 분석 그 이상의 의미를 나타내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

2). 『이질성 극복·동질성 제고』 논의의 부당성

앞선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통일한국군의 군대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써 이질성 극복과 동질성 제고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문화적 이질성 극복과 동질성 제고의 틀이 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모두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논의의 명제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중구조적 요소(이질성·동질성)와 여러 가지 의미의 함축성으로 인해 흑백논리로 해석되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대체로 이질성 극복과 동질성 제고의 논의가 부당하다고 보는 입장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보다는 공상적이면서 극단적인 통일지상주의 또

2) *ibid.*, p. 7.

는 미래의 통일한국상 제시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주장들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이러한 입장은 기존의 통일논의가 과거중심적이고, 문화적 요소중심적이라고 보고, 현재의 남북한 문화 자체가 낮은 수준임을 고려하여 이상적인 목표나 원리를 제시하는 데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과거의 전통 중에서 초월적인 공통의 이데올로기를 통일의 이상으로 삼고자 주장하고 있다. 그 명칭으로는 ‘한민족 공동체’ 등이 있다. 그 명칭의 다양성과 무관하게 이는 일종의 민족주의 범주에 포함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민족주의 이념은 남북한의 이질적인 두 하위문화를 동시에 포섭할 수 있는 상위개념으로 ‘한민족문화’라는 공통의 문화를 설정할 수 있게 해준다. 분단되어 살아 온 역사보다 단일 민족으로서 살아 온 역사가 더 긴 한민족에게 우선하는 민족주의 이념이 남북한간의 사회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는 중요한 바탕이 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동의할 수 있다.³⁾

그런데 이러한 주장도 네덜란드의 철학자 반 퍼슨(van Peursen)이 말한 바와 같이 “문화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말한 바,⁴⁾ 즉 문화의 동태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즉 과거의 전통과 현재의 상황이 토대가 되지 않고, 초월적인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은 실현불가능한 이상향에 그칠 수 있다.

3). 제3의 길

앞선 논의에서 이질성 극복과 동질성의 제고라는 단일선적 논의의 타당성과 부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런데 전자의 입장은 그것이 분단상황이전으로 회귀함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문화는 그 시대와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는 현실론의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반면에 후자의 입장은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 대한 집착보다는 통일한국이라고 하는 미래상을 제시해 줌으로써 장기적인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3) *ibid.*, p. 9.

4) van Peursen, C. A., 강영안 역, 급변하는 흐름 속의 문화, 서광사, 1994: 21, 132.

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질성 극복과 동질성 제고의 타당성과 부당성 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제3의 길을 찾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대체로 양비론(兩批論), 양시론(兩是論), 일방우선선택론(一方優先選擇論)으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이다. 말 그대로 양비론은 타당성과 부당성의 논의를 모두 부정하는 것이고, 양시론은 둘 다 수용하는 것이고, 일방선택론은 어느 한 입장을 중심으로 다른 한 입장을 선택하여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학자는 양비론의 입장에서 문화의 동질성이나 이질성을 그 형태에서 찾는 차원을 넘어서 실제로 작용하는 맥락(context) 속에서 비교하는 작업과 그것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⁵⁾

본 논문에서는 양시론의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두 개 문화사이의 접변(acculturation) 과정은 문화요소들간의 갈등과 수렴도 중요하고, 새로운 문화요소 창조와 그 방향의 제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새롭게 창조해 나갈 통일군대문화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생활양식이므로, 생존성(viability)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경험적 요소가 전혀 배제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러한 동질성 제고와 이질성 극복 논의에 대한 타당성과 부당성 논의의 양시론은 다음 [표 3]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3] 동질성과 이질성 논의의 새로운 접근

구 분		동질성	이질성
긍정적 문화요소	평균이하	상호 약점	일방의 상대적 우월
	평균이상	상호 강점	문화의 다양성 측면, 상호 이익
부정적 문화요소	평균이하	상호 강점	상호 강점
	평균이상	상호 약점	쌍방의 약점

주: ■ 표시 부분은 통일군대문화 형성에 있어서 남북한 군대가 상호 도움을

5) 김광영, “문화소통과 문화통합-통일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 서울대학교 발표논문집, 1999: 5-8.

받을 수 있거나 일방이 타방의 장점을 수용,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임.

위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동질성과 이질성의 논의 자체가 무의미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잘 알 수가 있다.

따라서 동질성은 무조건 제고해야 하고, 이질성은 무조건 극복해야 한다는 단일선적 논의 자체에 대한 비판적 수용이 필요하다. 또한 미래의 통일한국상과 미래의 통일한국 군대상, 그리고 그 문화상을 제시하고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⁶⁾

IV. 요약 및 결론

남북한의 통일문화는 현체제의 이질성의 극복과 동질성의 확보,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생명력을 가진 미래문화 창출의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군대문화는 보편과 특수이 문제가 또 하나 더 추가되는 문제이다. 특히나 군대문화는 정치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은 더욱 어려울 수가 있다.

통일 군대문화의 형성은 아무런 선행 조건이 없이 형성될 수는 없다. 남북한의 과거 및 현재의 군대문화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통일군대가 지향해야 할 군대문화의 형성에 대한 원리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완전한 군사통합은 단일한 통일 군대문화를 형성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군사통합과정에서의 군대문화에 대한 현실적 인식의 검토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주된 통일이예비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남한의 대학생과 예비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남북한의 군사통합은 사실 군사제도와 무기체계 등의 정치적인 사안의 문제는 정책적 결단에 의해 비교적 쉽게 해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군대문화의 문제는 깊은 고려없이 그 성공은 보장받을 수 없

6) 이러한 이질성 극복과 동질성 제고의 타당성과 부당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앞선 논의에서의 [그림 1]과 [그림 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은 맥락이다.

다. 문화의 속성이 공동체 속에서 자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없는 현실이 없듯이 정확한 현실진단이 없으면 그 미래의 성공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본 논문은 남한의 통일예비세대들이 현재의 남북한 군대문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시사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남한의 통일예비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군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닐 수 있으며, 필자 개인의 순수 학술연구 목적으로 작성된 것임.

[부록 I]

질문서

※ 다음 항목에 있어서 현재의 남북한 군대는 어느 정도 그 성향이 강하다고 보십니까?

<남한 군대>

<북한 군대>

①	②	③	④	⑤
매우강함	대체로강함	보통	별로강하지않음	전혀강하지않음

①	②	③	④	⑤
매우강함	대체로강함	보통	별로강하지않음	전혀강하지않음

					개인주의					
					권위주의					
					단기성과주의					
					명예주의					
					무사안일주의					
					물질만능주의					
					보수주의					
					실적주의					
					연고주의					
					완전무결주의					
					진취성					
					집단책임성					
					출세지향주의					
					특권의식					
					합리주의					
					향락주의					
					형식주의					
					획일성					
					효율성					
					희생·봉사 정신					

[부록 Ⅱ]

질문서 발송 및 회수

구 분	대상 학교	발송	회수	
일반 대학	소 계	550	467	
	서울대학교	50	50	
	인천대학교	50	41	
	부산대학교	50	45	
	경상대학교	50	54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50	49	
	광주교육대학	50	55	
	전북대학교	50	50	
	공주대학교	50	39	
	서원대학교	50	54	
	강원대학교	50	46	
	제주교육대학	50	39	
	군 대	소 계	690	510
사관생도		육군사관학교	100	0
		해군사관학교	100	0
		공군사관학교	100	109
		국군간호사관학교	55	56
		육군 제 3사관학교	150	150
장교 후보생		육군 제 3사관학교 (학사장교과정)	50	50
		육군여군학교	35	35
훈련병		육군 훈련소	100	110

주: 질문서의 회수분 중에서 일부 발송한 것보다 많이 회수된 것은 협조자가 예비분까지 포함하여 수거하였기 때문이다. 육군여군학교의 경우 자료가 지연 도착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회수된 자료 중 분석이 곤란한 자료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렇게 하여 실제 통계에 활용한 대상자 수는 854명이다.

[부록 Ⅲ]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자료

배경 변인	N	%	배경 변인	N	%
성별			사관학교별		
남자	600	70.3	공군사관학교	106	41.1
여자	254	29.7	국군간호사관학교	52	20.2
			육군 제 3사관학교	100	38.8
출신지역별			병역필한 종류별		
서울-경기	211	24.7	병사(전경/공익근무 포함)	151	97.4
강원	34	4.0	하사관	1	.6
부산-경남	161	18.9	장교	3	1.9
대구-경북	132	15.5			
광주-전남	86	10.1	성장지별		
전북	81	9.5	읍-면단위	185	21.7
대전-충남	74	8.7	중소도시	277	32.4
충북	34	4.0	대도시	391	45.8
제주	40	4.7	외국	1	.1
기타	1	.1			
종교별			아버지의 최종학력별		
기독교	259	30.3	초등학교	119	14.0
천주교	97	11.4	중학교	148	17.4
불교	154	18.0	고등학교	358	42.0
기타종교	13	1.5	2~3년제 대학	20	2.3
무종교	331	38.8	4년제 대학	165	19.4
신분별			대학원	42	4.9
일반대학생	434	50.4			
사관생도	258	30.2			
장교후보생	57	6.7			
훈련병	105	12.3			

[부록 IV]

응답자의 특성변수에 따른 남북한 군대문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

남북한 군대문화의 20개의 가치에 분석을 위해 우선 먼저 요인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요인은 Eigen value 1.0 이상을 기준으로 4가지로 구분되었으나, 그 분석을 위한 개념적 틀을 명확히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모호한 점이 있어 요인분석을 통한 방법은 동원하지 않고, 단지 설문대상자들의 배경변인, 즉 성별, 종교별, 신분별, 사관학교별, 병역관계별, 성장지별, 아버지의 학력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문항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남한의 군대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평균값은 ①출세지향주의(76.15점), ②명예주의(75.91점), ③권위주의(74.94점), ④실적주의(73.47점), ⑤특권의식(72.39점), ⑥단기성과주의(72.13점), ⑦형식주의(71.16점), ⑧연고주의(70.05점), ⑨확일성(67.40점), ⑩무사안일주의(66.60점), ⑪보수주의(66.19점), ⑫물질만능주의(65.85점), ⑬집단책임성(62.40점), ⑭개인주의(59.02점), ⑮진취성(56.53점), ⑯합리주의(53.94점), ⑰향락주의(53.84점), ⑱완전무결주의(52.58점), ⑲효율성(51.59점), 그리고 ⑳희생·봉사정신(51.17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한의 군대문화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을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는 보면 다음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 남한의 군대문화에 대한 성별 인식의 차이

구 분	M		F
	남	여	
개인주의	60.08	56.50	4.377*
명예주의	74.71	78.74	7.518**
무사안일주의	65.59	68.97	4.186*
물질만능주의	63.53	71.34	19.241***
연고주의	67.92	75.10	20.463***
집단책임성	64.42	57.57	14.957***
출세지향주의	74.62	79.76	10.367***
특권의식	70.92	75.89	9.185**
향락주의	52.01	58.17	10.074**
효율성	52.88	48.52	5.972*
희생·봉사정신	53.17	46.46	14.937***

주: *: <.05, **: <.01, ***: <.001

<표 2> 남한의 군대문화에 대한 종교별 인식의 차이

구 분	M					F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종교	무종교	
집단책임성	61.92	64.58	66.99	71.15	59.67	3.232*
특권의식	74.61	68.56	71.75	96.15	71.14	5.617***
향락주의	52.80	50.77	55.72	86.54	53.41	5.909***
효율성	51.74	50.00	55.19	65.38	49.70	2.604*
희생·봉사정신	51.16	45.62	56.01	40.38	50.98	3.759**

주: *: <.05, **: <.01, ***: <.001

<표 3> 남한의 군대문화에 대한 신분별 인식의 차이

구 분	M				F
	일반대학생	사관생도	장교후보생	병사	
개인주의	58.12	62.69	58.33	54.05	4.130**
권위주의	77.55	74.71	74.56	65.00	14.826***
단기성과주의	73.85	73.45	76.32	59.38	17.607***
명예주의	78.86	69.67	78.51	77.64	12.974***
무사안일주의	69.46	66.47	64.47	56.07	10.786***
물질만능주의	70.68	62.26	59.65	57.84	13.379***
보수주의	69.03	66.86	68.42	51.67	17.787***
실적주의	74.02	74.61	78.95	65.38	7.473***
연고주의	73.79	69.57	73.25	54.05	26.590***
완전무결주의	50.92	55.33	57.46	50.00	3.647*
진취성	52.19	59.50	55.70	67.62	18.566***
집단책임성	57.85	65.33	64.47	72.86	14.158***
출세지향주의	78.70	75.19	77.68	66.99	8.868***
특권의식	75.64	70.82	69.30	64.52	8.673***
합리주의	51.33	56.01	48.25	62.86	9.652***
향락주의	59.16	49.61	45.98	46.39	13.374***
형식주의	72.75	72.00	71.49	62.38	7.689***
획일성	66.94	70.91	69.74	59.38	7.384***
효율성	49.60	51.75	42.11	64.66	15.094***
희생·봉사정신	46.37	52.62	56.58	64.52	20.125***

주: *: <.05, **: <.01, ***: <.001

<표 4> 남한의 군대문화에 대한 사관생도별 인식의 차이

구 분	M			F
	공군사관 생도	간호사관 생도	3사관 생도	
완전무결주의	52.12	52.88	60.00	3.590*
진취성	57.31	55.29	64.00	4.371*
획일성	71.23	77.94	67.00	4.568*

주: *: <.05

한편 북한의 군대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평균값은 ①권위주의(82.50점), ②보수주의(79.29점), ③특권의식(79.00점), ④획일성(78.07점), ⑤집단책임주의(74.77점), ⑥실적주의(71.03점), ⑦명예주의(69.70점), ⑧완전무결주의(68.88점), ⑨단기성과주의(67.80점), ⑩출세지향주의(66.15점), ⑪형식주의(65.30점), ⑫연고주의(58.52점), ⑬진취성(53.12점), ⑭무사안일주의(46.47점), ⑮희생·봉사정신(43.28점), ⑯물질만능주의(42.74점), ⑰효율성(42.65점), ⑱향락주의(39.39점), ⑲합리주의(36.55점) 그리고 ⑳개인주의(33.2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군대문화에 대한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에 따른 차이는 다음 <표 5~9>와 같다.

<표 5> 북한의 군대문화에 대한 성별 인식의 차이

구 분	M		F
	남	여	
개인주의	35.54	27.26	18.415***
권위주의	81.34	85.63	6.270*
명예주의	66.96	75.89	6.012*
실적주의	68.77	76.58	16.425***
연고주의	56.98	62.06	6.732**
완전무결주의	67.65	72.13	5.221*
진취성	50.75	58.94	16.308***
집단책임성	73.41	77.87	5.295*
합리주의	35.54	38.93	4.295*
향락주의	40.69	36.02	5.501*
획일성	74.62	86.26	44.688***
효율성	41.03	46.26	7.48**
희생·봉사정신	41.04	48.52	13.195***

주: *: <.05, **: <.01, ***: <.001

<표 6> 북한의 군대문화에 대한 종교별 인식의 차이

구 분	M					F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종교	종교없음	
개인주의	36.39	30.41	34.58	65.38	83.26	3.114*
단기성과주의	69.57	73.20	67.05	44.23	66.16	4.994***
명예주의	68.05	68.81	68.02	48.08	72.66	3.588**
물질만능주의	42.93	49.74	41.23	40.38	40.98	2.400*
보수주의	79.63	85.31	80.68	60.42	77.50	4.386**
실적주의	71.51	76.55	72.39	44.23	69.62	5.033***
진취성	53.59	51.29	58.50	61.54	50.46	2.764*
집단책임성	76.26	72.94	73.20	51.92	75.68	3.145*
특권의식	79.73	80.41	80.23	48.08	78.71	5.834***
형식주의	67.86	65.98	63.96	44.23	64.55	3.153*
획일성	78.67	81.77	77.11	50.00	78.11	5.305***

주: *: <.05, **: <.01, ***: <.001

<표 7> 북한의 군대문화에 대한 신분별 인식의 차이

구 분	M				F
	일반대학생	사관생도	장교후보생	병사	
개인주의	28.69	37.40	36.40	38.81	8.729***
명예주의	74.88	59.59	71.49	71.43	19.003***
물질만능주의	40.82	43.39	37.72	50.71	5.108**
실적주의	71.88	72.18	73.25	63.94	3.074*
연고주의	56.83	62.69	56.14	56.25	3.234*
완전무결주의	70.96	69.09	72.37	58.65	6.650***
진취성	58.35	49.12	45.18	46.19	11.550***
집단책임성	79.39	71.89	78.07	60.71	17.244***
합리주의	39.03	34.69	29.82	34.52	4.634**
향락주의	35.77	42.34	35.71	48.33	8.216***
획일성	81.35	81.69	77.19	56.01	39.142***
효율성	47.12	38.86	39.47	34.62	10.231***
희생·봉사정신	47.93	41.96	36.84	30.71	13.012***

주: *: <.05, **: <.01, ***: <.001

<표 8> 북한의 군대문화에 대한 성별 인식의 차이

구 분	M			F
	공군사관생도	간호사관생도	3사관생도	
개인주의	32.78	28.37	47.00	12.461***
명예주의	61.79	66.83	53.50	4.957**
무사안일주의	46.93	39.90	49.50	3.184*
완전무결주의	71.93	74.04	63.50	4.252*
형식주의	70.52	73.56	63.75	3.213*
획일성	82.78	93.27	74.50	14.643***
희생·봉사정신	44.58	48.08	36.00	4.37*

주: *: <.05, **: <.01, ***: <.001

<표 9> 북한의 군대문화에 대한 아버지의 학력별 인식의 차이

구 분	M						F
	초등학교졸	중학교졸	고등학교졸	2-3년제 대학졸	4년제 대학졸	대학원졸	
명예주의	64.08	66.89	70.81	67.50	73.79	68.45	2.321*
무사안일주의	51.89	42.18	45.67	48.75	47.42	44.05	2.610*
완전무결주의	63.77	70.75	69.76	53.75	69.70	75.00	2.981*
특권의식	75.00	82.60	79.35	76.25	76.36	86.31	2.618*
합리주의	34.03	34.01	36.87	30.00	37.27	50.60	4.676***
획일성	72.90	77.38	80.45	86.25	76.83	77.38	2.456*
효율성	39.41	39.19	41.48	37.50	48.03	54.17	4.426***
희생·봉사정신	39.08	39.36	43.99	48.75	45.30	52.38	2.442*

주: *: <.05, ***: <.001.

남북경제협 확대와 대북 노동정책

- 북한 노동법제 분석 중심 -

김영윤(통일연구원)

- I. 서론
- II. 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교류협력 동향
- III. 북한 노동력 실태와 문제점
- IV. 대북 노동정책 방향
- V. 결론 및 정책사항

I. 서론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제협력 사업이 급진전되고 있다. 개성지역에 대한 공단 및 관광사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가 하면 경의선 철도 복원공사도 착공되었으며, 그 밖의 다양한 경제협력사업도 전개될 전망이다. 향후 전개될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기존의 형식과 범위를 벗어나 보다 많은 분야에서 대규모 북한 노동력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북한 진출 남한기업으로서는 북한 노동력 활용과 노동력을 통한 경제적 실익이 큰 관심의 대상이자, 대북 투자진출의 중요한 동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남북경제협이 활성화됨으로써 북한 노동력 활용을 겨냥한 대북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는 전망되지만 현재 북한이 적용하고 있는 노동조건과 제도적 장치로는 외국투자기업이 경제적 실익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이 이익을 담보한다고 하더라도 특정분야에 한정될 가능성이 많으며, 그것이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노동분야의 대북 정책이 기업의 실질적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남북경제가 6·15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민족경제로서 상호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노동분야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 노동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동정책의 목표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제성장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동분야의 남북한 제도적 이질성을 해소하려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는 새로운 대북 노동정책을 통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대북 관계에서의 새로운 노동정책 추진은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북한에서 노동개념과 함께 노동자의 노동 참여, 노동조직, 생산활동, 분배구조 및 노동보호에 이르기까지 노동과 관련된 전 부문에 걸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연구된 북한 노동력 실태를 문제점 위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노동력 활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에서의 임금 및 노동조건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노동분야의 남북한 동질성을 추구해 나갈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목적이다.

연구에 앞서 지적해야 할 점은 대북 노동정책은 단지 방향을 제시하는 데만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정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의 심층적인 연구는 남북 정치적인 관계개선 및 통일환경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과제의 몫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노동 관련 실태는 북한이 제공하고 있는 법규정과 지금까지 연구된 남한 문헌을 통해 파악했다.

II. 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교류협력 동향

1. 남북교역

2000년 6월 이후 남북교역이 크게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 2000년 10월말을 기준으로 남북교역은 총 3억6,576만 달러를 기록, 이미 지금까지 최고에 달했던 1999년의 남북 교역규모 3억3,344만달러를 돌파, 2000년에는

1) 남북 교역과 관련된 통계수치는 통일부 발행, 남북교류협력동향 인터넷 자료를 참고하였다. www.unikorea.go.kr.

사상 처음으로 4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남북 교역은 남한이 IMF 금융위기를 겪었던 지난 1998년을 제외하고 1996년 2억5,204만 달러, 1997년 3억834만달러, 1999년 3억3,344만달러로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2000년 10월까지의 교역액은 반입 1억2,495만달러, 반출 2억4,081만달러로 반출이 월등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전년동기 대비 각각 32.4%, 24.6%씩 증가했다. 2000년 8월까지만 해도 반입액은 8,810만달러, 반출은 2억764만달러로 반출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으나, 2000년 8월 이후 2개월 사이에 41.8%의 증가세를 시현했다. 이는 6월의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개선에 따른 교역여건이 호전된 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교역량의 큰 증가에도 불구하고 남북 교역은 상당부분 비거래성 교역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 10월까지 교역액 중 상업적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위탁가공교역 1억1,126만 달러를 포함, 총 2억350만 달러로 전체 교역의 55.6%를 차지했다.

반면, 무상지원 및 협력사업용 물자반출 등 비거래성 교역은 총 1억6,225만달러를 차지함으로써 전체교역의 44.4%를 차지했다. 비거래성 교역은 주로 경수로 사업물자와 금강산 관광사업,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 중유 지원, 그 외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이 2000년 10월 기준 9,472만 달러를 기록, 전체 비거래성 거래의 58.4%를 차지했다.

한편, 위탁가공교역은 1993년 이후 급신장 하여 1998년에 전체교역의 32%, 1999년에는 다소 하락하여 29.9%를 기록했으나, 2000년 1~10월까지의 1999년 동기 대비 34.5%가 늘어났으나, 전체 비중은 30.4%를 유지했다.

남북교역에서 주목되는 점은 농수산물 반입, 의류 등 단순 임가공 부문이 지속되는 가운데 임가공 분야에서 전기·전자제품 등 고부가치 분야의 교역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반입기준 위탁가공교역 품목구조를 보면 1999년의 경우 섬유류가 전체의 88.3%, 전기·전자 기타 제품이 각각 5.3%와 4.1%를 차지했으나, 2000년 1~8월 동안에는 섬유류의 비중이 전체의 67.2%로 하락한 반면, 농림수산물 가공품과 전기·전자제품의 비중이 각각 12.3%와 10.7%로 상승했다. 이와 같이 전기·전자분야에서 위탁가공교역 비중이 증대된 것은 삼성전자가 지난 2000년 2월 컬러TV 2만대, 유선전화기 24만대, 라디오 카세트 12만대를 생산하기 위해 5억530만원 상당의 위탁가공 생산설비를 북한으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0년 7월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산하 한성전기, 한국코아, 기라정보통신, 제일물산, 삼흥사 등 5개 중소기업체가 대북임가공사업에 진출하고, 하나로통

신도 북한의 삼천리총회사와 ADSL신호분배기 임가공 계약을 평양에서 체결한 데 힘입은 바 크다.

총체적으로 보아 2000년 남북교역은 위탁가공교역 및 상업적 거래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인도적 지원물자반출 등 비거래성 교역의 증가도 예상되고 있어 전년도에 비해 큰 폭의 증가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2. 남북경협

2000년 6월 13일에서 15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은 분단이후 55년만에 남북 최고 당국자가 만나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의 폭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간에 제기되는 문제를 당국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민간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어온 경제협력분야도 당국간 협의를 통해 제도적 안전장치를 갖출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으며, 이를 통해 남북 경제협력은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분야 협력을 위한 2000년 12월 12일~16일 평양에서 제4차 장관급당국간 협의에서는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청산결제·분쟁조정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정식 서명하였으며, 기 합의한 경의선 철도와 도로연결 문제, 개성공업단지 건설문제, 임진강 유역 수해방지사업 추진문제 및 전력협력 문제 등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협의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이후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합의된 중요 남북경제협력사업으로는 우선 현대의 금강산 일대 경제특구 개발(6.30)과 개성공단개발(8.23 서명) 및 서울에서 개성까지 육로를 이용한 관광사업의 추진을 들 수 있다.

먼저 남북 당국자간에는 지난 7월 31일 제1차 서울 장관급 회담에서 경의선 복원에 합의하고 8월 29일부터 열린 제2차 평양 장관급 회담에서 이에 대한 실무회담 개최에 합의한 후 연결사업(남한:2000.9.18)에 착공, 빠른 시일내 준공할 계획에 있다. 경의선이 연결될 경우에는 경원선 연결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 김대중 대통령은 이미 지난 8월 1일 러시아에 남북과 러시아를 잇는 철도를 연결을 제안해 놓은 상태다. 경의선, 경원선이 연결되면 머지않아 한반도가 대륙진출 발판의 구실을 함으로써 경의선을 통한 중국, 몽골, 유럽으로의 연결, 경원선을 통해서는 연해주, 시베리아, 유럽으로 이어지는, 한반도가 그야말로 '철의 실크로드' 시대를 개막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민간차원에서 현대는 금강산 일대를 '특별경제지구'로 지정, 공동개발하고, 금강산 벨리를 조성키로 했으며,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동해항에서

장전항까지 연안 5마일 직항로(기존 12마일)의 관광선 항로 개설과 함께 온정각을 중심으로 장전항에서 금강산호텔까지 자유통행로를 연내 설치하기로 했으며, 일본인과 해외동포의 금강산 관광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현대는 북한과 공동으로 북한지역에 시내·외 전화망 사업 등 유무선 통신서비스 사업에도 참여기로 했다. 판문군 평화리에 특별경제지구로서 지정되어 건설될 개성공단은 그 규모가 2천만평 달하며, 사업진척에 따라 2천만평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에 있다. 현대는 이에 대한 공단종합개발 계획을 북측과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밖에도 현재 남북간에는 다양한 경제협력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하나로통신은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산하 삼천리총회사와 초고속인터넷(ADSL)망에 필요한 장비를 임가공하는 계약을 체결(2000.8.3)했다. 하나로통신은 약 45만달러를 투자해 시설과 설비를 마련하고 삼천리총회사는 생산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제공, 월5만 가입자 분량의 ADSL 신호분배기 부품인 스플리터 5만개와 마이크로 필터 10만개를 내년 1월부터 생산·공급할 예정이다.

<표 1> 남북 경제협력 사업현황

2000년 10월 30일 현재

기업	사업상대자	사업내용(지역)	금액	승인일
대우 (합영)	삼천리 총회사	남포공단 셔츠, 가방, 자켓등 3개사업(남포공단) ※'96.1.26 민족산업총회사 설립 ※'96. 6월 투자자금 송금	512만불	'95. 5.17
태창 (합영)	릉라888 무역총회사	금강산 샘플 개발 (강원도고성군온정리)	580만불	'97. 5.22
한국통신	체신부	북한 경수로 건설을 위한 통신지원사업(신포·금호지구)	.	'97. 8. 1
한국전력	원자력총국	경수로 건설 지원사업(PWC)	4,500만불→11 ,430.8만불	'97. 8.16→ '99. 8.10 (변경승인)
한국외환 은행	경수로사업 대상국	경수로 사업부지내 은행점포 개설	.	'97. 11.6
녹십자 (합작)	광명성 총회사	혈전증 치료제(유로키나제) 제조사업(평양)	311만불	'97.11.14
(주)아자커 뮤니케이션 (합영)	금강산국제 관광총회사	북한풍경 인쇄·TV광고 및 기업 홍보용 영상물 제작	편당 25만불	'98. 2.18
미홍식품 산업사(합영)	조선철산 무역총회사	북한수산물 채취·가공·양식 및 판매(평 양, 원산, 남포, 해주, 청진)	47만불	'98. 3.13
국제옥수수 재단(조사·연구)	농업과학 연구원→농 업과학원	새품종 생산력 검증시험 및 재배적지 확정, 신품종 슈퍼옥수수개발을 위한 공동연구(평 양, 각도별 10개지역)	30.9억원 →110억원	'98. 6.18 '99. 3.25 (변경승인)
두레마을 영농조합 법인(합작)	라선경제협 조회사	합작농장 운영 및 계약재배사업 (나진·선봉)	200만불	'98. 7.27
태영수산/ LG상사 (합영)	광명성 총회사	가리비 양식·생산(나진·원산)	65만불	'98. 8.28
(주)코리아 랜드(합영)	묘향경제 연합체	북한부동산 개발(임대·분양) 및 컨설팅 업(평양)	60만불	'98. 8.28

기 업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지 역)	금 액 (투자실적)	승인일
(주)현대상선, 현대건설,금 강개발산업, 현대아산 (‘99.2.25) (단독및BOT)	조 선 아 시 아 태 평 양 평 화 위 원 회	o 금강산 관광사업(‘98.9.7) o 금강산 관광개발사업으로 확대 (‘99.1.15) - 제1단계(‘98~‘99. 6) - 부두, 휴게소, 공연장, 식당, 매점, 온천장 등 설치 o 관광선 1척 추가(풍악호), 운항횟수 조정 (매일운행)(‘99.4.16)	9,583만불→ 1억33만불 (‘99.1.15) 1억4,867만불 (‘99. 4.16) *북측투자분 450만불 인수 (합영→단독 투자)	‘98. 9. 7 ‘99. 1. 15 (변경승인) ‘99. 4. 16 (변경승인)
백산실업 (합영)	선봉군 온실농장	버섯배지 생산 및 국내농가 보급, 표고·느 타리·진주 등 버섯류 생산·수출(선봉군)	20.8만불 (남북한총투자 액: 81만불)	‘98.10.28
현대전자산업 ,한국통신,온 세통신	금 강 산 국 체 관 광 총 회사	금강산 관광을 위한 통신협력사업 (1단계 : 온정리~장전간 통신선로 매설, 제 3국 경유 남북간 통신망 구축 및 운영)	13만불 (1단계)	‘98.11.11
한국전력공사		대북경수로 건설사업 본공사(TKC)	40.8억불 (PWC금액 포함)	‘99.12.15
평화자동차 (합영)	조선련봉 총회사	자동차 수리·개조 및 조립공장 건설	666만불	2000.1.7
삼성전자	조 선 컴 퓨 터 센터	남북 S/W 공동개발	72.7만불	2000.3.13

자료: 통일부, www.unikorea.go.kr/cgi-kr/body.cgi?14A14/A14425.htm

개성공단 개발이 확정된 이후 본 공단에 참여하려는 재계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전경련은 남북경협위원회를 업종별 단체 등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확대·개편하였으며, 전자·섬유·신발업체 등이 개성공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전자공업협동조합, 섬유산업연합회 등 각 업종별 단체들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공단 참여의사를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900여 회원사를 가진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측은 50여 회원사가 약 50만평 규모의 공단을 필요로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섬유산업연합회는 9월 개성공단 투자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으며, 참여 희망업체는 현재 100여개 회사지만 공단조성 사업이 진전되면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산신발지식산업조합과 라이터조합 등도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성공단 조성 등 대북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성공단에서의 남북협력사업은 대규모 북한 노동력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현대의 공단개발계획에 의하면 공단이 조성될 경우 2008년까지 1,200여 업체가 가동하면 16만명의 북한 인력이 상주해 생산에 임할 것으로 추정된다.²⁾ 이렇게 될 경우, 지금까지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노동력을 관장했던 기존의 북한 외국인 투자법 및 합영법, 특히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 등은 적어도 개성공단 투자기업에 대해서만은 개편·조정되거나, 남북한이 별도의 규정을 채택해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 10월 말 현재 남북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협력사업은 총 18개(표 1 참조)에 달하고 있다. 2000년 들어 10월말까지 승인된 경제협력사업은 평화자동차와 삼성전자의 남북 소프트웨어 공동개발사업 2개뿐이다. 평화자동차는 지난 1월 666만 달러를 투자, 남포시 항구동에 '평화자동차'란 합영회사를 설립했으며, 오는 2006년까지 연산 10만대 규모의 자동차 조립생산공장을 건립할 계획에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2000년 3월 72만7천달러를 들여 북한의 조선컴퓨터 센터와 공동으로 중국 베이징(北京)에 '남북합영프로그램센터'를 설립하여 가동 중에 있다.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금액면에서 분석하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은 총 공사경비 40.8억달러의 경수로 공사에 대한 투자이며, 전체 투자의 96.0%를 차지하고 있다. 경수로 공사를 제외하면 현대의 금강산 지역 개발 관련 공사가 1억4,880만달러로 경수로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예정 총액 1억 7,138만달러의 86.8%를 차지,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어 남한의 대기업 하나가 대북 투자를 거의 압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경수로 공사관련 4개 기업과 현대의 금강산 지역개발 관련 2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협력사업 중 절반에 해당하는 6개사가 농수산업 분야의 1차 산업 분야에 치우쳐 있으며, 나머지 사업도 광고, 부동산 개발 및 임대 등 북한 산업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는 거리가 먼 편이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실제 북한 경제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협력사업은 대우의 의류생산 합영사업, (주)녹십자사의 혈진증 치료제 제조사업을 비롯하여 삼성전자의 남북S/W 공동개발 사업 등 3개사를 들 수 있으며, 금액 면으로는 895만7천달러로 경수로 사업을 제외한 전체 투자액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수로 사업이 그나마 향후 북한 경제, 특히 전력분야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으나, 공사 완공시까지의 많은 시간이 남아있어 당장 경제적

2) 『중앙일보』 2000.9.22.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사업이 남북 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남한기업으로부터의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의 남포공단 셔츠·가방·자켓공장 등의 사업을 포함한 미홍식품의 북한 수산물 채취·가공·양식 및 판매, 태영수산과 LG상사의 가리비 양식사업 등 총 624만달러는 북한의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사업추진 및 투자원금 회수가 난관에 부딪혀 있는 형편이다.

Ⅲ. 북한 노동력 실태와 문제점

북한 노동력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한국노동연구원 및 한국개발연구원 등의 임금, 노동력 질적 수준 및 탈북자를 통한 분석을 통해 다각도로 이루어져 왔기³⁾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문제점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논의에 앞서 북한 지역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노동규정에 대해 잠시 언급한다.

북한에는 북한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의 노동관계를 규제하는 법규로서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이 있다. 본 규정은 「사회주의노동법」과 함께 북한의 이원적 노동법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두 규정은 국가의 감독·통제하에 기업소와 근로자들이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단적 생산질서를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과업수행적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은 1993년 12월 정무원(현 내각) 결정 제80호로 제정, 기존의 「외국인투자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합영법 시행세칙」 등에서 단편적으로 규율되어 온 노동관련규정을 체계화한 것으로, 북한은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노력을 보장하며 종업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되었

3) 선한승, 「남북한 노동제도의 비교와 노동정책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1998), 선한승, “남북경제교류와 노동제도의 비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주최 「남북경제 협력과 노동정책에 관한 세미나」 1998.6.10 발표논문; 조동호, 「북한의 노동생산성과 적정임금-북한 노동력의 질에 관한 고찰」, 「계간 한국개발연구」, 제15권 제4호, 1993 및 조동호, “대북투자시 효율적 임금관리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주최 「남북경제 협력과 노동정책에 관한 세미나」(1998.6.10) 발표논문.

다고 밝히고 있다(본 규정 제1조).⁴⁾ 본 규정은 지난 1999년 5월 8일 내각 결정 제40호에 의해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다.

이하에서는 변경된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내용을 중심으로 실태파악과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임금수준

북한 지역 투자진출에 있어 결정적인 동기를 제공하는 것은 임금이다. 북한 지역 외국인투자기업의 임금은 기본적으로 중앙노동기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중앙노동기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업원 월노임 기준을 종업원들이 근로과정에서 소모된 육체적 및 정신적 힘을 보상하고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제25조). 그러나 조업준비기간중의 노임, 견습공, 무기능공의 노임은 해당기관의 승인하에 결정된 월노임기준 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임금을 고려할 경우에는 북한이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저임금액(월 220원,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160원)에 추가비용을 포함시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북한 지역 투자하는 기업은 기준임금 이외 계약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이윤의 일부로 상급기금을 마련한다거나 탁아소와 유치원을 운영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를 비롯하여 노동보호용구, 작업필수품, 영양식료품과 같은 노동보호물자를 공급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⁵⁾ 또한 1년에 100%의 보너스를 지급하거나, 임금의 7%를 사회보험료로 회사가 납부⁶⁾하는 것을 비롯하여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자금으

4) 총 제8장 제48조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노동력의 사용, 근로조건, 노동보수 및 노동보호 등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며, ‘노임’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직업동맹에 노동조합적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원리를 일부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법 제정의 원래 목적은 경제사정의 악화에 따른 자구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대우 남포공장의 경우 노동자 임금은 월 110달러이나 담배값 등 부수적인 지불이 임금의 20% 정도에 이르고 있어 실제 임금수준은 130달러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노동력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의 입장에서는 130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동호, “대북투자시 효율적 임금관리 방향,” 노동연구원 주최 「남북경제협력과 노동정책에 관한 세미나」 1998, p. 74.

6) 합영법 시행세칙 제71조.

로 종업원 500인 미만의 기업에서는 총 종업원 월 임금의 2%를 지급⁷⁾해야 한다. 그 밖에도 종업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물론, 자진 사직하는 경우에도 일한 기간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주어야 하며, 노동일수에 비례한 휴가비 지급도 명시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사항들을 임금 부대비용으로 감안할 경우,⁸⁾ 북한 노동자 1인당 평균적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은 직접 지불임금 수준을 크게 상회한다.

실제 경수로 건설사업의 경우 현장 미숙련공의 최저임금은 110달러이나, 중식 제공(월 50달러), 시간외 근로수당, 기타 부대비용(목욕시설사용)등 종업원 1인당 실제 지급되는 월평균 액수는 200달러에까지 근접하고 있다.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역 노동자 임금수준에 대한 평가는 북한 임금을 제3국의 절대임금수준과 비교하기보다는 남한기업이 제3국에서 채용하는 현지 인력의 임금수준과 비교할 때, 보다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경제협력 초기 북한 인력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분야를 대상으로 북한의 임금수준과 제3국의 임금수준을 비교할 때 북한의 임금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해외건설기업이 중동시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제3국 인력의 임금을 보면 베트남 인력의 평균임금(비숙련 노동자 및 숙련노동자 포함)이 264달러로 가장 낮다. 그 다음은 미얀마 인력으로 266달러다. 반면, 임금이 가장 높은 외국인력은 필리핀 인력으로 612달러에 달한다. 중국 조선족의 임금은 이의 중간인 447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¹⁰⁾ 북한 인력의 임금을 200~300달러 안팎으로 가정할 경우, 이는 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베트남 인력과 비슷한 수준이며 중국(조선족)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임금은 노동력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절대액 기준으로만 볼 때에는 적어도 여타 투자유망지역에 못지 않은 경제적 유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노동생산성을 감안한 임금수준을 평가할 경우,

7)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62조.

8)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제25조~31조 참조.

9) 북한 임금은 대북 경수로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경우 최저 임금이 110달러, 북한 숙련공의 임금은 월 150~200달러, 공사관리책임자의 경우에는 월 300달러 정도다.

10) 중동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건설회사 3개사의 전체 직급(보통인부에서부터 전문기사까지) 임금을 산술 평균한 수치임. 미화달러로의 환산은 1996년 연평균 환율 804원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음. 허경신, “해외 건설 시장에서 북한 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통일경제」 1999년 3월 통권 제51호, p. 73.

북한의 임금수준은 다른 투자지역과 비교해서 오히려 높을 수도 있다.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 기업의 대북 진출은 임금수준만이 아니라 언어의 동질성, 민족적 일체감, 지리적 근접성 등까지도 고려하기 때문에 이들 요인들이 고임금을 상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고임금은 남한 또는 북한으로부터의 자본장비율 증가를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임금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점은 북한이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 수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북한 지역 투자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지난 2000년 4월 경수로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인상 요구를 들 수 있다. 당시 북한은 경수로 근무 노동력에 대한 임금을 1백10달러(비숙련공)에서 6백달러로 이상시켜 줄 것을 요구하면서 200명에 달했던 인력의 절반을 철수시켰다.¹²⁾ 그러나 KEDO측은 1997년 7월 합의한 「노무양해각서」 합의대로 연간 2.5% 이상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북측 요구를 들어주면 공사비가 크게 상승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북경협에 기준이 될 임금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 대신 KEDO측은 북한 근로자에 대한 통근버스 제공 등 현물제공을 제안했지만 북측은 이를 거부하면서 요구 수준을 낮춰 3백60달러를 제시했지만 남북간의 입장차이는 여전히 큰 상태다. 이 문제는 2000년 11월 현재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

2. 교육수준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교육수준은 중국, 베트남 등과 같은 북한과 경쟁관계에 있는 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며, 남한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북한 15세 이상 인구 중 문자해독률은 99%로 1991년 기준, 남한의 96% 보다 높다. 또한 취학률(6~16세 인구 중 취학자 비율)에 있어서도 97.9%를 기록, 남한의 97.3%와 같다. 의무교육기간만 해도

11) 조동호는 북한 지역에서의 단순 노동자 평균 임금을 대내임금과 대외요구 임금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어, 대외 요구 임금수준이 대체로 대내 임금수준에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북 투자시 기업이 지급해야 하는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을 150달러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이 계산한 북한 노동력 한계생산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판단, 북한 임금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조동호, “북한 노동력 수준의 평가와 실제사례에 대한 연구,” 앞의 책, p. 95 및 p. 115.

12) 『중앙일보』 2000.11.10.

11년으로 남한의 9년보다 훨씬 길며, 전체 인구중 학생비율도 1990년 기준 24.1%를 나타내고 있다(남한 24.6%). 전체인구중 대학교 및 전문대학 등록자 비율, 즉 고등교육기관 등록자 비율은 2.6%로 남한의3.2%에 비해 낮지만, 전체 인구 중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은 10.0%로서 남한의 10.2%와 거의 같다.

2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 년수는 6.0년으로 남한 8.8년에 비해 다소 낮지만, 전체 고등교육기관 재학자 중 과학분야 전공자의 비율(1987~1988년 동안 연평균 기준)은 34%로서 남한의 31%보다 높다.¹³⁾ 이런 점에서 보면 남북한 노동력의 교육수준 차이는 거의 없는 편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상의 북한 노동자 교육수준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우선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 남북한을 동등하게 볼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노동을 통해 얻는 지식과 숙련 정도에서도 남북한간의 차이를 무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남한의 생산시설 및 경영기법은 현대화되어 있는 반면, 북한의 그것은 대부분 노후화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에 입각한 기업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상호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북한에는 사교육이 없기 때문에 인적자본 형성의 폭이 크지 않으며, 기술훈련 및 직업능력 교육에 있어서도 낙후된 훈련시설 및 강의인력 부족, 각가지 노력동원에 따른 훈련시간의 부족 등노동력의 질적 수준 향상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가 많다.¹⁴⁾ 더구나 식량난으로 학생들이 정규 학교교육에 임하기보다는 식량구입 등 생활고 해결을 위해 교육의 장으로부터 이탈해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학교교육 또한 그 내용 면에서 크게 부실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북한 교육수준과 환경이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에 반드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과는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임가공을 비롯한 북한 노동력을 사용하는 경험 현장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이 실제 생산에 요구되는 교육을 얼마나 원만하게 수용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 특히 단순·반복 작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생산공정에 있어서의 노동력은 작업에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인지해 작업공정 및 기술과정을 잘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 있어서 북한의 노동력은 전반적으로 경쟁국가에 비해 절대로 불리하지 않는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언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생산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제대로 소화해 낼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져 있다는

13) 이상의 수치는 각각 다른 연도와 평가기관을 통해 취합한 것으로 제한적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남궁영,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p. 52.

14) 조동호, “북한 노동력 수준의 평가와 실제사례에 대한 연구,” 앞의 책, p. 108.

장점이 있다. 실제 대북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도 남한의 기술인력이 북한 노동자에게 개인별(북한 관리자) 또는 집단별(기능자)로 실기와 이론을 병행하여 진행한 결과, 북한 노동자의 수용 능력 및 열의는 남한의 동등 인력보다 더 우수한 편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육에 임하는 열의와 동일언어 사용이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물론이다.¹⁵⁾

이는 중국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자해독률, 취학률, 평균교육년수 등에 있어 북한에 훨씬 못 미치지만 이것이 노동력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데 결정적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보다는 오히려 산업인력 양성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선진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요점적으로 말해 교육수준과 관련 남북경협에 참가하는 남한 기업은 언어의 동일성, 민족적 유대감 등에 힘입어 다른 투자지역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생산 관련 교육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3. 노동생산성

북한의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의 노동생산성은 임금수준에 비해 2분의 1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남한에 비해서는 10분의 1수준 또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그 이하¹⁶⁾라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 경수로 사업장의 북한 노동력의 노동생산성도 남한 노동력의 약 1/3 정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⁷⁾

이와 같은 북한의 낮은 노동생산성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비효율성을 비롯하여, 각종 의무노동과 함께 해마다 높아지는 노동기준량의 증가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에는 우선 북한 노동력의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즉 능률에 따른 노동보상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종업원을 대표하는 직업동맹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근로자 개개인이 아닌 단

15) 북한 지역에서 컴퓨터용 모니터를 생산하고 있는 (주)아이엠알아이 조봉현 이사와의 2000. 8. 30 직접 면담.

16) 조동호, 앞의 논문, p. 117 및 남궁영, 앞의 책, p. 66.

17) 통일부 경수로 기획단 홍양호 기획정책부장(1999. 9. 2) 면담.

체계약 체결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개개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를 띠고 있다.

근로자의 시간외 노동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간외 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 직업동맹조직과 합의한 후, 월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 평균 2시간 미만의 시간외 노동으로 노동생산성을 제고시키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이와 함께 물질적 인센티브제의 결여로 작업장에서의 적극적·능동적 노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생산성 제고를 크게 가로막는 요인이다. 다수 외국투자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그들이 받는 임금이 다른 북한 자체 공장·기업소와 비교, 별 차이가 없지만 노동 강도는 훨씬 셀 뿐만 아니라 임의적인 행동을 할 수 없어 외국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오히려 싫어하는 측면도 있다.¹⁸⁾ 근무를 하더라도 사보타지를 통해 무임편승자(free rider)로서의 이익을 확보하려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이다.¹⁹⁾

북한의 노동생산성 문제는 당장 능력 및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의 적용이 아니더라도, 외국투자기업에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가 투자기업으로부터 임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상황만이라도 된다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력알선기관을 통하지 않는 직접 임금지급은 성과에 따른 개별 인센티브제의 도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언급은 노동정책 방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4. 노무관리

1). 인력채용 및 해고

북한 진출 외국 기업은 원칙적으로 북한의 노력알선기관이 지정해 주는 근로자를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채용해야 한다.²⁰⁾ 이는 노동의 질이 떨어지거나

18) 조동호, “북한 노동력 수준의 평가와 실제 사례에 대한 연구,” 선한승·조명철 외, 『남북협력과 노동정책』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1999), p. 98. 그러면서도 외국과 임가공이나 수출하는 외화벌이 직종에는 종사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 이와 같은 현상이 농업분야에서 만연, 결국 북한의 식량난을 초래하게 한 가장 큰 원인임을 탈북 농업전문가 이민복은 주장하고 있다.

20) 북한에서의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노동력 채용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당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성이 미흡하더라도 계약조건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채용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나 베트남에서는 기업이 근로자의 직접 고용 및 선별 채용이 가능하나,²¹⁾ 북한에서는 직접 고용 및 선별 채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은 고용과 관련된 협상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노동력을 공급해 줄 우려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남북한간 분쟁도 일어날 수 있다.²²⁾

해고의 경우에도 채용기간 만료전이라도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기업의 자체적 판단으로 가능하나, 북한에서는 노력알선기관 및 직업동맹과 합의해야 하며 만약 노정규정을 어기고 해고할 경우에는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²³⁾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먼저 현지인 채용원칙이다. 외국투자기업은 원칙적으로 북한 노동자를 채용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북한 중앙무역기관과 합의해야 한다(『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제3조). 그 다음으로는 직접채용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외국투자기업은 북한 노동자를 직접 선발하여 그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반드시 북한 노력알선기관이 제공하는 노동력을 채용해야 한다(제10조). 노력알선기관은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노력을 기업소재지 안의 노력으로 보장해야 하며, 만약 기업소재지에서 노력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노동력으로라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제11조).

- 21) 전홍택·오강수, 『북한의 외국인 투자제도와 대북투자 추진방안』,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5), p. 149.
- 22) 선한승, 남북한 노동제도의 비교와 노동정책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1998) p. 64.
- 23) 다음과 같은 경우 직업동맹조직, 해당 노동자알선기관과 합의하에 채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첫째, 종업원이 직업병이나 공상이 아닌 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이미 하던 일 또는 다른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둘째 기업의 생산경영 또는 기술조건의 변동으로 인원이 남는 경우, 셋째, 기업이 파산에 직면, 부득이 하게 노력을 축소하거나 해산을 선포하는 경우, 넷째 종업원이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거나 노동규율을 엄중히 어긴 경우 등이다(『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제15조). 그리고 외국투자기업이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사직시키려는 경우에는 1개월 전 해당 직업동맹조직과 합의한 다음 기업소재지의 노력알선기관에 그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제18조). 그러나 외국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종업원을 임의 해고할 수 없다. 첫째, 직업병을 앓거나 일하다가 부상당해 치료받는 경우, 둘째, 병으로 6개월까지의 기간에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셋째, 여성종업원이 결혼한 경우와 임신, 산전산후휴가, 젓먹이는 기간 등의 경우다(제14조). 해고하거나 사직을 승인한 경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에게 일한 년한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은 남한의 퇴직금과 같은 성격을 가진 것으로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법으로 그 지급액을 정하고 있는

2). 노동관련 법규정상의 제약

노동관련 법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첫째, 북한의 직업동맹은 기업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해 기업문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 정확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과거 합영계약 표준양식 제18조에 의하면 직맹 대표를 이사회와 기타 회의에 참가시키도록 하고 있는 바, 이것이 북한 당국에 의한 불필요한 간섭을 초래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직업동맹은 북한에서 준국가기구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기업활동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개입 가능성도 존재한다.

둘째, 노동관련 법규상 근로자의 파업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으며, 파업시 인력대치에도 규정간 불명한 해석이 존재하고 있다.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제11조에는 “노력알선기관이 노동력을 기업 소재지 안에 있는 노동력으로 보장해 주고, 부족할 때 타 지역 노력알선기관이 이를 보장해 준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동 규정 제13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기업소재지 노력알선기관이 보내주는 노동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항 사이의 불명확성에 의한 외국투자기업의 선택의 폭이 제한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술자나 제3국 기술자를 고용할 때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이 필요하고 채용과 관련된 행정상의 복잡성이 나타나고 있어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임금 및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지급방식 및 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한 언급이 없다.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제25조에는 장려금과 상금의 지급기준을 기업이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외국투자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받는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이 사회보험기금에 의해 보장되며, 사회보험기금은 종업원에게서 받아들이는 사회보험료로 적립된다고 규정²⁴⁾되어있으나 어떻게 적립되는지가 불명확하다.

데,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1개월분, 1년 이상의 경우 최근 3개월 평균노임액을 일한 연도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제17조).

24)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제7조 및 제39조. 구합영법 시행 세칙에는 사회보험에 의한 사회보장이 먼저 기업이 종업원에 대한 급여 지급약의 7%를 그리고 종업원은 자기 급여의 1%를 사회보험 기관에 내어 사회보험기금으로 적립된다고 명기되어 있으나, 신합영법 시행규정에는 이 조항이 삭제되었다.

넷째, 외국투자기업의 노동관련 법규에서 규정되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북한 사회주의노동법의 내용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 가운데는 북한 진출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불합리적인 요소들도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 사회보험제도에는 ①연금 및 보조금 ②정·휴양 및 치료제도 ③장례보조를 비롯하여 ④문화후생기금규정이 있으나, 「사회주의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 식량, 교육, 보훈 등의 여러 사회보장 혜택들 역시 외국투자기업이 근로자에게 보장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노동법」과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에 언급된 사회보장제도와의 차이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분쟁

북한 지역 외국투자기업이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의 원활한 해결방안이 미흡하다. 이는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대외경제계약법 등 관련 법규 및 하부규정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해석 및 적용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1999년 8월 2일 북한이 중앙방송을 통해 총 4장 42조로 구성·제정한 「대외경제중재법」²⁵⁾도 중재비용, 중재제기시 필요문건, 재결원 자격, 중재제기 및 심리절차 등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공정한 분쟁해결을 담보할 장치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법, 합영법을 비롯하여 KEDO 경수로 의정서상 합의하고 있는 제3국 중재기관을 통한 중재여부가 빠져 있어 분쟁해결의 공정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있다. 북한은 동 법 제7조에서 국제조약 및 관례를 존중한다고 천명하고 있으나 아직 ‘국가와 타국가 국민간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워싱턴협약)’의 미가입국이기에 때문에 법집행상 구속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5. 노동의식과 이질적 思考

북한에서의 노동은 필수적이고 강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노동으로

25) 본 법은 외국투자기업과의 분쟁 발생시 이의 해결을 위한 통일된 기본법 규로서 외국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본 법에서 북한은 국제조약 및 국제적 관례준수에 대한 의지를 표명(동법 제7조)하고 있으며, 분쟁해결원칙으로 공정성·신속성(접수결정여부 10일내, 중재심리기간을 5개월로 제한) 명시하고 있다.

부터 진정한 자아 실현이나 성취감을 얻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노동을 통한 보람이나 긍지는 당의 과업을 열심히 수행, 수령으로부터 감사나 표창을 받는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²⁶⁾ 노동의 결과로서 얻을 수 있는 입당, 출세 등은 출신 성분이 좋은 극히 일부 계층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내 일반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노동에 형식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이와 같은 노동의식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1970년대 후반 들어 만연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회주의 공업화 실현과 천리마 운동과 같은 대중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 주민들의 대부분은 열심히 일하고 당과 국가를 위해 노동하는 것에 보람과 긍지를 느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들어 사상적 통제와 사회적인 불신, 생활수준의 하락, 출신성분에 의한 계급형성이 이루어지면서부터는 외형적으로는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도 노동에 불성실하고 개인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직장에서는 계획달성보다는 사적으로 필요한 부품 가공이나 텃밭 일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편, 조직에 의한 통제와 학습, 각종, 투쟁, 운동, 전투 등에서는 조건반사적으로 임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²⁷⁾

그러나 이와 같은 의식구조가 반드시 자신의 과업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완전히 회피하는 것으로는 보지 않아야 할 것이다.²⁸⁾ 예를 들어 장기간 배급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불평은 있을 수 있으나 북한 노동자들은 직장에 출근하여 일하고, 언행에 조심하고 조직생활에 참가하려고 하는 자세도 가지고 있다. 불평·불만이 있으나 그것이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갖는 불만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김일성·김정일에게는 더 충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 주민이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대한 충성심은 남북경협사업에서 사상적이질성으로 나타남으로써 적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몇가지 예로는 멀게 1997년 가을 금호지구 경수로 건설현장의 우리 근로자 숙소에서 김정일 사진이 담긴 노동신문이 찢어진 상태로 휴지통에서 발견돼 북한당국이 관련자 색출과 우리측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바람에 작업이 중단됐던 일이 있

26) 김승철, “북한 주민의 노동 의식에 관한 연구,”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 통권 제43호 1998.7, p. 60.

27) 김승철, 위의 논문, p. 62.

28) 앞의 논문, p. 63.

있으며, 가깝게는 지난 2000년 8월 20일 서울에 온 북한 국립교향악단의 한 단원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이 담긴 포스트가 비를 맞고 있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김정일 위원장님이 비를 맞고 계신다.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연주를 하지 않겠다”고 한 사례를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북한 김부자 우상화와 관련된 사례²⁹⁾는 얼마든지 있으나, 문제는 그와 같은 우상화가 북한 사회에서는 “우리식 사회주의에서만 있을 수 있는 아름답고 고상한 공산주의 미풍”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며 주민들이 적극 따라 배우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남북 경제협력사업이 확대되고 남북한 접촉이 심화될 수록 이와 같은 김부자 우상화 관련된 이질성은 더 크게 부각되어 이에 따른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

IV. 대북 노동정책방향

1. 기본방향

남북관계진전과 함께 전개될 경제협력사업 확대 및 이에 따른 대북 노동정책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방향 하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 노동관련 여건을 남북협력사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서도 궁극적으로 남북한 노동제도 통합에 대비한 북한 노동부문의 시장화에 기본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북한 노동부문의 시장화란 노동력 수급을 비

29) 북한의 모든 가정에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초상화가 비치돼 있다. 안방의 정면 벽 상단에 나란히 부착돼 있는 이 초상화는 액자에 담겨져 정중히 관리되고 있다. 액자에 먼지나 티끌이 묻어서는 안되므로 매일 정성스레 솔로 털고 깨끗한 천으로 닦는다. 액자에 묻은 먼지를 털거나 닦는 솔과 천조차도 특별히 만든 나무상자에 따로 보관하는데 이를 ‘정성함’이라고 한다. 또한 1995년 여름 북한 전역에 엄청난 홍수가 발생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던 날 함남 장진군 신포고등학교의 두 처녀교사가 갑자기 불어난 물이 학교 건물을 덮치는 것을 목격하고 교실에 뛰어들어 먼저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고 한다. 그러나 교실마다 부착돼 있는 초상화를 모두 옮기려다보니 거의 탈진상태에 이르렀고 마지막 한 개 교실에서 초상화를 마저 구하려다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고 말았다. 북한 당기관지 노동신문은 이 두 처녀교사의 ‘위훈’을 소개하면서 이들의 행위를 두고 “진정 값 높은 삶이었다”고 추켜세웠던 적이 있다.

못하여 노동보수, 노무관리 등 노동문제와 관련된 제도가 자유경쟁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 경제협력의 확대·발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북한 경제가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 노동력을 사용하는 남북한 협력사업에 반드시 시장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에는 북한 노동자의 고용이나 현장배치, 임금 지급 등에 대한 결정을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투자기업이 자체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왜냐 하면 남북협력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첩경은 바로 노동력 고용과 같은 부문에서 기업 결정권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남한기업이 북한 지역 투자에서 당면하고 있는 노동분야의 문제점들은 남북관계개선과 함께 총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남북간 이중과세방지합의서나 투자보장합의서 체결과 같이 노동문제도 남북 당사간의 합의서 또는 협정을 체결하는 형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투자보장협정은 북한이 정해놓은 합작투자계약이나 외자유치관련 법령만으로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없으며,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북한의 과세규정이나 세법만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자의적 법 적용이나 일방적인 입법 및 정책변경으로 투자자가 위협 당할 수 있다. 특히 협력사업의 확대에 따라 남한 노동력의 북한 지역내 근무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북한 노동력의 남한 지역내 근무 등을 통해 발생하는 노동소득에 대한 원천과세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노동분야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노동관련 규정은 남북한이 상호 합의를 체결하는 형태로 적용될 수 있도록 대북 노동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동관련 합의서는 북한 지역내의 영향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남북한 합작기업이나 협력사업장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남한 전용공단 및 경제특별지구로 확대·적용하고, 궁극적으로는 대북 투자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세부 정책 추진방향

1). 근로계약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경제적 실리를 보장하기 위해선 북한 노

동력 및 노동관리와 관련된 결정에 있어 최대한 기업의 자율권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에서는 생산수단이 국가와 협동단체 내지 전체 인민 소유하에 있으며, 노동이 사회주의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방침에 따라 전인민경제적 범위에서 계획적으로 조직되기 때문에 모든 노동자들은 국가노동행정기관의 파견절차에 의해 관할지역 안의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에 파견된다. 그리고 일자리가 정해지고 취업이 성립되면 근로자들은 기업소 등의 종업원으로 등록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투자기업에 있어서는 노력알선기관과 노력채용계약을 맺고 그에 따른 노력을 받아들여야 한다(『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제10조, 제13조).

그러나 남북 경제협력사업에서의 노동력 채용은 기존의 방식을 탈피, 투자기업의 자율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력알선기관과 노동계약을 체결하되, 노력알선기관은 항상 노동력 제공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면서도 채용대상 노동자의 인적 사항을 미리 제시, 채용여부를 투자기업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채용전 최소한 면접을 거치는 방법으로 노동력 채용방법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채용이 확정된 노동자는 개별적으로 수행해야 할 임무, 노동시간과 휴식, 노동보수와 보험후생, 노동보호와 노동규율, 상벌, 사직조항 등의 근로조건을 규정한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노동력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북한 기업소를 모체로 하여 창설하는 합작기업, 합영기업은 필요한 노동력을 그 기업소의 종업원들 가운데에서 먼저 받아들여야 함을 규정하고(『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제12조) 있으며, 만약 노동력 채용계약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력 알선기관이 보내주는 노동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동 규정 제13조)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인력채용에 대한 투자기업의 보다 강화된 자율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노동계약 체결에 있어 불필요인력의 고용을 방지하고 북한 노력알선당국에 의한 근로자의 잦은 교체, 근로행정감시를 위한 노동자를 고용시키는 상황을 탈피, 노동력의 적정규모가 유지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국투자기업의 기술자나 제3국 기술자를 고용할 때 까다로운 대외 경제기관의 승인이 요구되는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외국투자기업의 경영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노동력 고용에 대한 자율적 권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경우 노동력의 해고와 사직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외국투자기업에 고용된 인력의 해고 및 사직 조건을 비교적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사항을 전반적으로 그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북한 노동자와

투자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또는 사직을 통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임금지급

임금지급과 관련 가장 중요한 점은 노동자의 작업성과가 반영된 임금이 투자기업으로부터 직접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에서의 임금은 임금관련 제반사항을 국가가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 배치에 따라 결정된다. 근로자들은 일단 배치되고 나면 변동이 어려우므로 평생 고정된 신분에 따른 고정된 부를 유지(수동적 임금)하게 된다.³⁰⁾ 앞서 언급한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적용되고 있는 임금지급의 강제성, 최저임금제의 원칙, 추가보수제 원칙 및 임금수준의 상향조정원칙³¹⁾ 등은 나름대로 당위성을 띠고 있다. 북한은 외국투자기업이 정한 임금기준에 따라 직종, 직제별 노임기준, 노임 지불 형태와 방법, 가급금, 장려금, 상금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데, 이와 같은 내용에 부합하는 임금지급은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추가 임금의 지급이나 임금지급형태에 있어서는 투자기업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 당국의 개입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이 노동자에 대한 개별 또는 집단 인센티브제도를 도입, 성과에 기초한 물질적 포상을 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당국자와 충분한 협상과 함께 북한 당국의 결정, 결정에 필요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 바, 이를 위한 정책당국의 노력이 요구된다.

30) 북한에서의 임금은 사회주의적 분배원칙, 다시 말해 국가가 1년간 생산된 사회적 생산물을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지급된다. 북한 사회주의 노동법 제37조에도 임금(노동보수)이 “노동의 양과 질에 의해 분배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법칙이며, 근로자들의 생산의욕과 기능기술 수준을 높이고 생산적 발전을 다그치는 힘있는 수단”이며, “국가는 노동의 양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관철한다”라고 밝히고 있어 노동의 양과 질만이 분배의 유일한 척도임을 명시하고 있다. 사회주의 노동법 제37조.

31)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제26조에는 외국투자기업이 생산수준, 종업원의 기술·기능 숙련정도와 노동생산물의 제고에 따라 노임수준을 점차 높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3). 기업운영

기업운영에 있어서도 남한의 제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책임경영이 중요하다.

북한에서의 기업운영은 대안의 사업체계상 당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공장 당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이 되며 그 아래 실무차원의 업무를 맡고 있는 지배인과 당조직으로서의 당책임비서가 기업운영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기업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며, 오로지 정부와 당의 지시에 따라 사업소를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책임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경협과 관련된 노동계약 체결시 계약의 주체가 기업소를 대표하여 책임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북한측과 협상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기업운영의 실질적인 책임을 나누어 갖고 공동으로 생산량을 결정하고, 경영전략 및 기술개발계획, 투자계획을 세우고 경쟁시장에 부합할 수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 운영 결과에 대해서는 상호 분석·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노동보호

<노동시간>

북한 외국투자기업 종업원의 노동일수는 주 6일, 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노동시간을 이보다 더 짧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절적 제한을 받는 부문에 있어서는 연간 노동시간 범위에서 노동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제22조). 시간외 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간외 노동이 요구될 경우에는 직업동맹조직과 합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23조).³²⁾ 그리고 명절일³³⁾과 공휴일 휴식, 정기 및 보충 휴가³⁴⁾와 산전·산후휴가³⁵⁾의 제공을 규정(제24조)하고 있

32) 기존의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에는 월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조문에는 이를 삭제하여 초과근무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33) 북한에는 국경일, 민족명절을 포함 '8대 명절'을 일컫고 있다. 노동량이 부과되지 않는 날은 국경일만이고 민족명절은 당일 노동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동량은 부과되어 추후 보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으며, 관혼상제시에는 1~5일간의 특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왕복 여행일수는 포함시키지 않는다(제24조).

이상의 규정은 남북협력기업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되, 사안의 시급성으로 필요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임금지불조건으로 규정시간의 노동시간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과후 독보회와 학습회와 강평 등을 대폭 줄이거나 없애 개인적으로 협력사업에 관한 일을 준비할 수 있거나 협력사업과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의 규정 마련이 요구된다.

<작업환경>

북한은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산업안전시설 설치 및 산업위생조건의 보장, 노동안전기술 교육, 사고심의회와 관련된 사항을 마련해 놓고 있다(『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제32~36조).³⁶⁾ 외국투자기업은 노동안전시설을 갖추고 이를 개선·완비하여 작업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고열, 가스, 먼지를 막고, 채광, 조명, 통풍과 같은 산업위생조건을 보장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업원들이 문화·위생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며, 이들에게 노동안전기술을 교육한 다음 일을 시키되, 기술교육 기간은 업종과 직종에 따라 1~2주일로 정해놓고 있다(제33조). 만약 작업도중 종업원이 사망하였거나 부상, 중독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노동보호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관계기관의 사고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제36조), 이 때 사용기업의 과실이 인정될 때는 배상과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
- 34) 노동자·사무원·협동농장들은 해마다 14일간의 정기휴가와 직종에 따라서 7일 내지 21일간의 보충휴가를 받는다(노동법 제65조). 그러나 직장의 계획과 제 완수 및 노력 등으로 대부분 휴가를 반납하거나 관혼 상제나 김장철 때 주로 활용함. 휴가를 반납하고 출근하면 3개월 평균임금을 일자로 나누어 14일간의 임금을 가산해 준다. 법정 휴가 외에 사결이라 하여 각자의 사정에 따라 상사의 허락을 받고 쉴 수는 있으나 노임과 배급량은 쉬는 날 만큼 공제된다.
- 35) 여성근로자들의 경우 정기 및 보충휴가 외에 근속연한에 관계없이 산전 35일, 산후 42일간의 산전산후휴가를 받는다(사회주의 노동법 제66조).
- 36) 북한은 합영회사의 노동력의 관리 및 이용에 있어서도 북한 노동법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하는 노동규정에 의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합영법 제27조)하고 있으며, 합작기업에서도 해당법에 따라 노동보호, 사회보험,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는 것을 규정(합작법 시행규칙 제77조)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투자기업 종사 노동자들은 「사회주의로동법」상의 노동자 보호규정이 적용되며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규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규정들은 그 내용상 점진적으로 남한의 작업환경과 같은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노동보호제도는 우리의 근로자 보호제도와 비교하면 지극히 형식적이고 프로그램적인 규정의 나열에 그치고 있다. 개별근로자의 권익보장이나 권리설정 등 적극적 의미의 노동보호가 아니라 안전·위생 등 노동력 관리를 위한 소극적 노동보호로서 노동자체의 보호 규정 즉 노동력 상실방지를 위한 성격이 강하다.

<청소년 및 부녀노동>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에는 청소년 및 부녀노동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북한은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도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여성 근로자들이 사회적 노동에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조건을 보장하고 있다.³⁷⁾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³⁸⁾ 산원·탁아소와 유치원의 확장을 통해 어머니와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여성들에게는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작업을 시킬 수 없으며, 젖먹이 아이를 가졌거나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는 야간노동을 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다.³⁹⁾ 여성근로자들의 건강에 필요한 조치를 제때에 취해야 하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노동보호 위생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하는 동시에 여성들이 일하는 데 편리하도록 탁아소, 유치원, 아동병동,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기 및 보충휴가 외에 근속연한에 관계없이 산전 35일, 산후 42일간의 산전·산후휴가 제공(사회주의로동법 제66조)하며, 여성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작업필수품 및 영양제까지도 무상으로 공급해야 함을 규정해 놓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여성근로자의 보호에 있어서는 북한이 남한에 비해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참여가 여성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라기보다는 북한 당국의 주민동원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한다면 규정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여성노동자들의 자발적 사회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7) 사회주의로동법 제31조.

38) 3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일일 노동시간은 6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사회주의로동법 제16조).

39) 사회주의로동법 제59조.

3. 노동계약 대안으로서의 KEDO-북한간 노무계약

이상에 제시한 정책적 방향이 현실화되기까지 남북 경제협력사업에 있어 노동계약은 1997년 7월 2일 서명한 경수로 공급을 위한 KEDO-북한간의 노무계약 내용⁴⁰⁾이 하나의 대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남북 당국자간 노동계약 전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북한 진출 남한기업이나 집단기업(예: 공단입주기업)은 북한과의 임금 및 근로계약 체결시 KEDO-북한간 체결된 노동규약을 표준으로 삼아 계약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KEDO-북한간 체결된 노동계약 관련 중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노동력의 채용 및 사용

노동력의 채용 및 해고와 관련, 규정되어 있는 북한측 권리와 책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인력이 북한에 의해 항시 고용되어 있거나 확보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노동력 공급과 관련된 차질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둘째, 경수로 공사에 고용된 북한 인력에 대한 숙식(중식 제외), 노무인력의 이전비용, 노동자에 대한 보상보험, 노무인력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 부과금 및 수수료에 대한 지불책임은 모두 북한이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셋째, 노무인력의 적합성(신체적 및 기타), 기술 및 작업적성 등을 북한이 보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노무자의 건강진단서 발급을 포함, 노무인력의 적합성, 기술 및 작업적성 등을 보증하는 절차에 대해 합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넷째, 근로자가 작업장의 안전규칙 및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 보증하도록 하고 있으며, 북한 노동자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북한이 전적으로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노동력에 대한 KEDO측의 권리 및 책임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인력의 요건목록을 북한측에 서면으로 제시, 북한은 7일 이내 적격 노무인력에 대한 개인별 신상명세와 함께 노무인력명세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제공된 노무인력의 접수를 북한과 협의를 통해 거부할 수 있다. 추가적인 노무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북한측에 통고하며 북한은 가능한 한 요청된 적격

40)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노무, 물자, 시설 및 기타 서비스에 관한 계약채결을 위한 일반원칙 및 지침에 관한 양해각서』,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대북 경수로사업 관련 각종 합의서』, 1998.12 참조.

노무인력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KEDO 측은 노무인력의 수를 감축하거나 노동인력을 돌려보낼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측과 협의를 거쳐 인력감축의 시기와 수를 결정한다. 또한 필요시 특정 노무인력에 대한 교체신청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북한은 KEDO와 협의를 거쳐 적격 요건에 부합하는 노무인력으로 교체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2). 노동 및 작업관리

작업 및 노동관리와 관계되는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첫째, 작업할당은 원칙적으로 북한 관리자나 작업반장을 통해 이루어지나 필요한 경우 KEDO가 직접 작업을 할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KEDO의 요청이 있을 때는 언제라도 조정할 수 있다.

둘째, KEDO 측은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물자 및 안전교육을 비롯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북한은 이에 대해 협조할 것을 명시해 놓고 있다.

셋째, 북한 노동인력에 대해서는 현장 작업일에 한해 중식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효율적인 작업수행과 노무인력 관리를 위해 적절한 수의 관리자 및 작업반장을 상호 협의를 통해 노무인력 중에서 지정·임명하되, 북한은 사전에 관리자 및 작업반장 대상자에 대한 과거 작업경험을 포함한 신상자료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3). 작업조건

작업을 위한 정상근무일은 1시간의 중식시간과 현장·숙소간의 이동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기준으로 주 6일로 하고 있으며, 일요일 및 공휴일의 작업에 대해서는 시간외 작업으로 간주하여 추가수당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함께 12개월 이상 근무 노동자에 대해서는 14일간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며, 휴가에 대한 대가는 기본임금을 기준하고 있다.

4). 노동보호

KEDO는 노무인력의 현장내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무상의 응급조치를 취하며, 응급조치 외 추가적인 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지 외부의 의료기관으로 해당 근로자를 즉시 수송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자의 질병이나 사고 또는 구매자의 응급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이나 의료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나 응급조치에 대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5). 임금

임금은 기본임금, 간접비(보험료, 세금 및 기타)를 포함하여 중식비 및 시간외 수당 등으로 구성되며, 월정임금은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비숙련공의 경우 간접비 포함 110달러로 책정해 놓고 있다. 1개월 미만의 비숙련공에 대해서는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 0.4달러의 기본임금과 30%의 간접비 지분을 규정해 놓고 실제 작업에 참여한 시간에 따라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KEDO측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노무인력이 작업을 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임금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에 따라 1년 단위로 조정되나, 그 조정율은 2.5%를 상회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 밖의 숙련공에 대한 임금은 계약 단계에서 북한과 KEDO간의 협의에 따라 조정·결정한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작업시간 및 일요일 또는 공휴일 작업시간은 시간외 작업으로 간주하여 1개월 미만 작업자에 적용되는 시간당 기본임금에 50%를 가산한 시간외 수당을 지불한다.

6). 분쟁해결

개별계약에 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첫 번째 단계에서 KEDO와 북한은 분쟁해결을 위해 협의를 거치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계약 당사자들이 제1 분쟁해결단계에서 30일 이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어느 일방의 요청에 의해 KEDO현장사무소와 북한 경수로대상사업국의 2명씩을 대표로 분쟁해결위원회를 구성, 이를 통해 30일 이내 분쟁해결을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하게 되어 있다. 제 3단계에서는 분쟁해결위원회가 30일 이내 분쟁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법

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계약당사자 일방이 분쟁해결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사항이 부적절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동의하에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국제상업회의소의 국제분쟁심판실 주관하에 분쟁해결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국제상업회의소에 의한 중재법정의 결정은 최종판결로서 개별 계약당사자들은 반드시 그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V. 결론 및 정책사항

본 연구에서는 남북경제협력 확대에 따라 남한의 대북 투자기업이 당면하게 될 노동관련 문제를 살펴보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논의를 바탕으로 얻을 수 있는 결론 및 정책사항을 정리하면 우선 남북협력이 활성화됨으로써 북한 노동력 활용을 겨냥한 대북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는 전망되지만 현재 북한이 적용하고 있는 노동조건과 제도적 장치로서는 외국투자기업이 경제적 실익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북한이 이익을 담보한다고 하더라도 특정분야에 한정될 가능성이 많으며, 그것이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노동분야의 대북 정책이 기업의 실질적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노동계약 및 규정(작업관리, 임금 및 생산성 등) 측면에서 시장차원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북한 노동관련 여건을 남북협력사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서도 궁극적으로 남북한 노동제도 통합에 대비한 북한 노동부문의 시장화에 기본목표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노동부문의 시장화란 노동력 수급을 비롯하여 노동보수, 노무관리 등 노동문제와 관련된 제도가 자유경쟁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으로써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로는 북한 노동자의 고용이나 현장배치, 임금지급 등에 대한 결정을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투자기업이 자체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북한 경제와 근로자의 소득 향상을 위한 인식전환, 수출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무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현재 남한기업이 북한 지역 투자에서 당면하고 있는 노동분야의 문제점들이 남북관계개선과 함께 총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이는 남북간 이중과세방지합의서나 투자보장합의서 체결과 같이 노동문제

도 남북 당사간의 합의서 또는 협정을 체결하는 형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일반 개별기업이 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당국 책임자간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야 할 사안이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노동관련 합의서는 북한 지역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남북한 합작기업이나 협력사업장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남한 전용공단 및 경제특별지구로 확대·적용하고, 궁극적으로는 대북 투자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상에 제시한 정책적 방향이 현실화되기까지 남북 경제협력사업에 있어서의 노동계약은 1997년 7월 2일 서명한 경수로 공급을 위한 KEDO-북한간의 노무계약 내용이 기업 차원의 노동계약 체결시 하나의 대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남북 당국자간 노동계약 전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북한 진출 남한기업이나 집단기업(예: 공단입주기업)은 북한과의 임금 및 근로계약 체결시 KEDO-북한간 체결된 노동규약을 표준으로 삼아 계약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상의 정책적 방향 정립과 함께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노동분야 정책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조적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첫 번째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지향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당 및 직맹, 사로청 조직의 간섭과 노동력이 수급되는 상황을 탈피하고 기능과 숙련을 요하는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는 노동분야의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향후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통해 북한 지역에 과급될 자본주의적 가치개념의 노동생산성이나 이윤개념은 사회주의 노동 가치관의 북한 노동분야에 많은 충격을 가져다 줄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체제와 이데올로기에 기인한 이질감 극복을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노동자의 공동작업 및 공동생활의 범위를 넓혀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계약 체결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분야 공동협력의 일환으로 해외건설 시장에서의 북한 인력 활용한다든지, 북한 인력에 대해 안전 및 기술교육과 함께 시장경제에 대해서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동질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에 진출하는 남한 기업의 인력에 대해서도 동질화를 위한 철저한 사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나 전문인력양성이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⁴¹⁾

세 번째로는 남북협력기업의 북한 노동자로 하여금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동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 노동자들에게 직업의 의미와 노동윤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노동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고 희망과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는 북한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요망된다. 인력채용 및 활용에 있어 현 상태에서는 기업의 노동력 채용시 노동력의 기능수준과 교육정도를 파악하기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업별, 기관별 노동 인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화할 필요가 있으며,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노동력 수요에 대한 조사도 산업부문별 또는 협력 단계별로 추진하고 노동인력관리체계도입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인력센터의 설립도 검토해 볼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노동문제 관련 분쟁해결 장치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규정의 불명확성과 관련된 문제는 KEDO 또는 현대 금강산 지역 관광개발 계약내용 및 방식 준용, 귀책 조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규정의 해석에 따른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근로조건 관련 계약 체결시 경수로 사업을 위한 KEDO-북한간 3단계 분쟁해결 의정서 내용을 토대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41) 선한승, “남북경제교류와 노동제도의 비교분석,” 노동연구원 주최 「남북경제협력과 노동정책에 관한 세미나」 1998, p. 41.

인간중심철학: 주체사상¹⁾에 대한 ‘내재적 비판’의 척도

선우현(통일정책연구소)

- I. 들어가는 말
- II. 인간중심철학의 정립 동기
- III. 인간중심철학의 기본 특성
- IV. 맺는 말

I. 들어가는 말

이 글의 일차적 목적은 황장엽의 ‘인간중심철학’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이러한 소개 작업에서 곧바로 직면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인간중심철학의 정립자인 황장엽은 다름 아닌 주체사상을 ‘철학적으로’ 정초한 장본인이며 동시에 두 철학체계는 동일한 사상적 원천을 지닌 ‘사상적 쌍생아’라는 사실이다. 이 점은 인간중심철학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두 사상체계간의 본질적 차이점을 인식하는 데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다. 실제로 두 철학적 서술 체계를 비교해 보면 외견상 동일한 개

1) 주지하다시피, ‘좁은 의미’의 주체사상은 ‘철학적 원리/사회·역사적 원리/영도적 원리’로 구성된 사상체계를 가리키며, ‘넓은 의미’의 주체사상은 좁은 의미의 주체사상 그리고 그것에 기초한 이론과 방법을 포함하는 이른바 ‘김일성주의’를 의미한다. 이 글에서 언급되는 주체사상은 잠정적으로, ‘좁은 의미’의 주체사상을 가리키며, 이것이 인간중심철학과 대비되는 것으로 파악코자 한다. 적어도 인간중심철학은 단지 좁은 의미의 주체사상의 구성요소 가운데 ‘철학적 원리’만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민대중이 사회공동의 주인이자 역사발전의 주체라는 관점에 입각한 ‘사회·역사적 원리’와 ‘통치원리’를 또한 그 주요 내용으로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체사상의 내용과 그 이원적 구조에 관한 대략적인 윤곽은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pp.127-141 참조.

념이나 표현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두 입장 사이에 존재하는 명확한 차이점을 간과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중심철학을 파악하는 경우 여기에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세심한 독해가 요구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인간중심철학은 기존의 주체사상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거나 그것의 아류 정도로 해석하는 경박한 독해로 귀착되기 쉽다.²⁾

바로 이런 이유로 해서, 인간중심철학에 대한 대략적인 검토작업도 ‘현재로서는’ 불가피하게 ‘주체사상’과의 비교 작업을 수반하게 된다. 즉 이러한 비교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내용적으로 서로 중첩되어 얽혀 있는 두 입장을 분리하여 파악할 수 있으며, 두 입장의 경계선을 분명히 설정함으로써 인간중심철학이 지니는 이론적 독창성과 철학적 의의를 개략적이나 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비록 두 철학체계에서 쓰이고 있는 개념이나 용어가 중복되고 유사성을 띠고 있다고 해도, 추구하는 목표나 이념적 지향점 등에서 두 입장은 본질적으로 구분되고 있기 때문이다. 황장엽에 의하면, 우리가 흔히 주체사상이라고 일컫고 있는 사상체계는 사실 하나의 사상이 아니라, 전체주의와 계급주의 그리고 봉건주의에 터하여 1인 지배체제를 정당화하는데 기여하는 통치이데올로기로서의 주체사상과 반계급주의적 인본주의에 입각하여 ‘개인 뿐 아니라 집단으로서의 인간’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보편적인 길을 밝히려는 철학체계로서의 인간중심철학, 이 두 입장으로 갈라져 있다.³⁾ 다시 말해 본래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구현을 위해 제시되었던 지도사상이자 군중노선으로서의 주체사상은, 그것이 철학적으로 정초 지워지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1인 수령지배 체제를 정당화하는 논리체계로서의 주체사상과 다른 한편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결합시킨 새로운 인본주의 사회를 건립하려는 철학체계로서의 인간중심철학, 이 두 입장으로 나뉘어져 현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인간중심철학을 반성적으로 고찰해 보는 작업은 인간중심철학의 사상적 독창성과 고유한 특성을 살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2) 인간중심철학이 이처럼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주체사상의 주요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로 인간중심철학이 수용되어 있으며 북한통치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왜곡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 황장엽은 “우리가 개척한 인간중심사상을 왜곡한 부분”이 주체사상의 세 축 가운데 하나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한다. 황장엽, 『북한의 진실과 허위』 (서울: 통일정책연구소, 1998), p.106.

3) 황장엽, 『북한의 진실과 허위』, p.102.

것이 주체사상과는 질적으로 다를 뿐 아니라 이념적 지향성에 비추어 ‘대립적인’ 철학체계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동시에 두 입장 가운데 어느 것이 이론적·실천적으로 보다 큰 타당성과 논리적 설득력을 지니고 있으며, 나아가 보다 정의롭고 인간다운 사회를 구현하는데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주체사상이 안고 있는 한계와 난점이 무엇인가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을 염두에 두면서 이 글은 인간중심철학의 개괄적인 윤곽을 제시해 볼 것이며, 이는 몇 가지 이론적 중점사항을 중심으로 주체사상과의 차이점을 논하는 가운데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중심철학에 의거해 주체사상의 본질적인 난점을 드러내는 비판적 작업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정당한 것임을 보여줄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비판의 객관적 타당성은 인간중심철학을 비판의 척도로 삼아 개선된 ‘내재적 비판’에서 확보된 것임을 보여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작업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종착점은, 북한의 통치이념인 주체사상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남북한 사이의 사상적 차이성과 대립성의 정도를 명확히 드러내어 밝힘으로써, 민족통합을 이루기 위한 ‘사상적 공통의 토대’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해 보려는데 있다. 적어도 이러한 성격의 작업은 남북한 사이에 가로 놓여 있는 사상적 단절과 이질성의 폭을 좁히고 최소화하는 가운데, 사상적 동질성과 의식적 유대감을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통합방안을 강구하는데 미력하나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II. 인간중심철학의 정립 동기

인간중심철학을 구상하고 정립할 수 있도록 확장업을 자극시킨 인식상의 계기는, 맑스주의의 철학적 토대인 ‘계급주의 이론’이 갖는 본질적 한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다. 이러한 계급주의적 토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특히 ‘장구한 역사발전 과정의 일정 시점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계급이 왜 역사와 사회를 조망하고 고찰하는데 있어 중심적 범주가 되어야하는가’라는 의문과 회의로 불거져

나왔다. 동시에 특정 계급이 아니라 인간 자체를 중심에 놓고 역사와 사회의 전개과정을 파악해야 된다는 사유로 이어졌다.⁴⁾ 특히 계급주의 사회체제인 소련과 중국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 가령 스탈린주의의 개인숭배나 중국의 문화대혁명 등이 보여준 역사적 경험은 노동계급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미명하에 인류공동의 정치 경제적·문화적 유산과 성과물을 파괴하고 대다수 사회성원들을 탄압하고 통제하는 것이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황장엽이 몸담고 살아가던 북한 사회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계급주의적 횡포가 자행되고 있던 사회였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황장엽은 계급주의의 관점에 기초해 있는 맑스주의 철학으로서는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해방사회를 구현키 어렵다고 판단하기에 이른다. 적어도 그의 시각에서, 계급주의는 노동계급의 이익을 마치 전 인민의 이익인양 내세우면서 노동계급 이외의 계급 -특히 유산자 계급과 지식인 계급-에 대해 무자비한 탄압과 착취를 자행함으로써 필연적으로 계급이기주의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다시 1인 수령의 이기주의로 이어져, 결국 지배자에 대한 개인숭배와 절대권력체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인식에 기초하여 황장엽은 계급을 넘어 사회성원 전체가 공동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회를 건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철학으로서, 새로운 철학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계급성’은 결코 인간의 본성일 수 없다는 자각에서 출발한 황장엽은 새로운 인본주의에 기초한 정치철학을 모색코자 시도한다. 이로 부터 황장엽은 맑스주의 철학과 결별하고 고차원적 인본주의에로의 사상적 전환을 꾀하면서,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로 보는 대신 ‘인간의 발전적 역사’로 조망하는 입장에 선다. 모든 것은 특정 계급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인간의 모든 활동은 인간의 운명개척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인간의 운명개척의 보편적 길을 밝혀주는 데 철학의 사명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실인식과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형성·개진된 인간중심철학은, 주체사상의 이름 하에, 인민대중이 역사와 사회 발전의 주인이라는 입장을 표방하면서 새로운 인간중심사회의 구현을 위한 정치철학으로 세상에 등장했다. 하지만 곧바로 이 새로운 통치철학은 1인 지배체제를 이념적으로 옹호하는 통치 이

4)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9), p.155.

데올로기로 정립되어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황장엽이 구상하여 제시한 인간중심의 철학은 북한 통치집단에 의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들, 그들의 통치전략에 부합되는 측면들만이 선별적으로 수용되고 활용되었을 뿐⁵⁾ 나머지는 도외시하거나 폐기 처분되었다. 물론 이러한 사실 그리고 인간중심철학의 전모와 실체는 외부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채 철저히 감추어져 왔으며, 인간중심철학의 내용마저도 소수의 철학자들 사이에서만 통용되고 논의될 수 있을 뿐이었다. 이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주체사상’은 사실상, 한편으로 1인 지배체제(수령절대주의)의 정당화 논리로 전환된 주체사상과 다른 한편 인본주의적 이념을 간직한 가운데 보다 나은 인간중심사회를 건립하려는 이론체계로서의 인간중심철학, 이 두 사상체계로 나뉘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는 셈이다. 당연히 전자는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되어 북한체제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기능해 왔던 반면, 후자는 현실과 떨어져 단지 ‘이론상의’ 체계로 남을 수 밖에 없었다.

III. 인간중심철학의 기본 특성

1. 보편성과 특수성의 통일: 세 철학적 기본 원리들의 내적 연관성

인간중심철학에 의하면 철학의 사명은 “인간 운명개척의 길을 밝혀주는 가장 일반적인 진리를 해명”⁶⁾하는데 있다. 이 때 인간의 운명은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물질세계와의 상호관계를 통해 규정된다. 따라서 인간 운명개척의 길을 제대로 밝히자면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 즉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세계의 일반적 특징’과 ‘인간

5) 이와 관련하여 황장엽은, “나는 김정일이 노리는 것은 수령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것이 주체사상 이론 자체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령의 개인독재를 정당화하는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적당히 강조하면서 주된 초점은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두었다”고 밝히고 있다.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p.192.

6) 황장엽, 『인간중심철학의 몇가지 문제』 (서울: 시대정신, 2000), p.197. 이것은 “세계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히고 인간의 운명 개척을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도를 밝혀주는 것이 철학의 사명”이라고 표현되고 있기도 하다. 황장엽, 『황장엽 비밀과일』 (『월간조선』 1997년 4월호 별책부록: 조선일보사), p.146.

의 본질적 특징'을 밝혀야만 한다. 물질의 보편적 특성과 인간의 특수한 속성의 해명에 바탕해서만 비로소 인간과 세계의 상호관계를 제대로 규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세계의 변화 발전의 방향과 인간의 운명의 발전 방향을 정확하게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인간중심철학은 자체의 이론체계를 구성하는 세 기본원리를, 첫째 '세계의 일반적 특징은 무엇인가'의 문제를 해명하는 원리, 둘째, '인간의 본질적 특징은 무엇인가'의 문제를 해명하는 원리, 셋째, '인간과 세계의 상호관계의 본질적 특징은 무엇인가'의 문제를 밝혀주는 원리로 정리·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 가운데 궁극적인 원리로, 인간중심철학은 인간과 세계의 상호관계의 본질을 해명하는 원리, 즉 “인간이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자주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인간의 운명개척과 세계발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⁷⁾는 원리를 내세운다. 하지만 여기서 유념해야 할 사실은 이러한 궁극적인 원리는 앞의 두 원리와 단절되어 고립된 것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세계의 공통적인 특징을 해명하는 철학적 원리와 세계 발전의 최고봉을 대표하는 인간의 본질적 특징을 밝혀주는 철학적 원리, 이 두 원리에 기초해서만 보편적 의의를 갖을 수 있으며, 두 원리와 결합되어서만 궁극적인 철학적 원리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⁸⁾

이 점은 주체사상과 비교하여 매우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알다시피 주체사상 역시 인간중심철학이 제시한 '철학적 근본 원리'를 근본 원리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주체사상은 황장엽의 철학적 입장을 겨냥해 비판하고 있는 문헌들에서,⁹⁾ '가장 발전된 존재인 인간의 특성'을 전적으로 중시하고 이에 기초해 정립된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원리 자체만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주체의 철학적 근본 원리'인 양 내걸고 있다. 그럼으로써 주체사상은 이러한 철학의 근본 원리가 세계의 존재 및 운동의 보편적 특징을 밝혀주는 철학적 원리와 결부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¹⁰⁾ 이 점은 특히 “맑

7) 황장엽, 『인간중심철학의 몇가지 문제』, p.199.

8) 황장엽, 『개인의 생명보다 귀중한 민족의 생명』 (서울: 시대정신, 2000), p.120; 황장엽, 『맑스주의와 인간중심사상』 (미발표 원고), p.33.

9) 가령, 김정일, “주체철학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이해를 가질데 대하여”, 『김정일 전집』 1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김정일, 『주체철학은 독창적인 혁명철학이다』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10) 황장엽, 『개인의 생명보다 귀중한 민족의 생명』, p.120.

스주의 철학이 물질세계의 본질과 그 운동의 일반적 합법칙성을 밝히는 것을 중요한 철학적 과제로 내세웠다면, 주체철학은 사람의 본질적 특성과 사람의 운동인 사회적 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밝히는 것을 중요한 철학적 과제로 내세웠¹¹⁾다는 대목이나, “주체철학은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의 본질적 특성을 과학적으로 해명한데 기초하여 사람을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고 세계는 사람에게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된다는 세계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내놓았다¹²⁾는 주장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요컨대 주체사상은 주체의 철학적 원리가 세계가 지닌 보편적 특성에 대한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인간중심철학의 입장에 대해, 이를 마치 “맑스주의 철학이 밝힌 물질세계의 본질과 그 운동의 일반적 합법칙성을 가지고 이러저러하게 논의하는 식으로 주체철학의 독창성과 우월성을 론증하려”는 시도로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변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주체철학은 그 철학적 과제와 원리들이 선행철학과 근본적으로 다른 독창적인 철학“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진다.¹³⁾ 여기서 엿볼 수 있듯이 주체사상은 맑스주의 철학과의 단절을 내세우면서 그것이 철학적으로 기여한 공헌, 즉 객관적 물질세계의 보편적 속성에 대한 해명의 업적과 대비시켜 주체사상이 이룩한 성과 즉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밝힌 철학적 성과만을 강조한다. 그 결과 가장 발전된 물질적 존재인 인간의 특수한 속성만을 강조하면서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원리를 철학적 원리로 내세우게 된다. 그럼으로써 주체사상은, 인간 역시 물질이 갖는 공통적 속성을 공유한 가장 발전된 물질적 존재라는 사실에서 벗어나, 인간을 예외적으로 특수한 존재로 취급하게 되고 급기야 인간에 의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식의 ‘주관주의’나 ‘주관적 관념론’으로 귀착하게 된다.

2.탈계급주의 사회: 특정 계급이 아닌 사회성원 전체가 주인인 사회

인간중심철학은 특정 계급이나 이해집단이 아닌, 전체 사회성원이 사회의 공

11) 김정일, 『주체철학은 독창적인 혁명철학이다』, p.2.

12) 위의 책, p.2.

13) 위의 책, pp.2-3.

동주인이자 사회발전의 주체가 되는 그러한 사회를 지향한다. 이같은 ‘참다운 인간중심 사회’는 그 일차적 기반으로 온갖 특권과 계급이 사라진 상태를 전제 하며, 그러한 상태에 토대하여 성원 전체의 관점에서 공명정대하며 보편적으로 타당한 방식을 통해서 새롭게 건설될 수 있다고 본다.¹⁴⁾ 반면 계급주의적 관점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방식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는 계급주의적 발상은 그야말로 비(非)사회주의적 입장이자 비(非)사회주의적인 방식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는 발상¹⁵⁾이라고 비판한다. 이처럼 폭력적 독재를 통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사상은, 폭력적 방법으로 비폭력적 사회를, 계급적 영도권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무계급 사회를, 독재의 방법으로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자기모순적 입장¹⁶⁾에 처한다는 것이다.

인간중심철학에 따르면 계급은 사회적 집단의 한 구성 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그런 한에서 사회적 운동의 완전한 주체가 될 수 없다. 그것은 단지 계급투쟁의 한편을 대표할 수 있을 뿐이다. 더욱이 “계급투쟁이 사회발전의 동력이라면 계급이 없어진 사회에서는 사회적 운동의 주체도 없어지고 사회발전의 동력도 없어진다는 그릇된 결론에 떨어지게 되고”¹⁷⁾하는 자가당착에 처한다고 비판된다.

물론 인간중심철학도 억압과 착취가 존속하는 낡은 사회제도를 새로운 사회 제도로 바꾸기 위한 ‘정치투쟁’으로서, 맑스적 의미의 ‘계급투쟁’이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¹⁸⁾ 하지만 새로운 인간중심의 사회를 건설해 나가는 과정에서 계급투쟁은 더 이상 중심적인 방식도 유일한 방식도 될 수 없으며, 항상 역사의 진보에 기여하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회는 계급투쟁이나 폭력혁명과 같은 무력에 의한 방식이 아니라, 이성에 기초한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식, 사회성원 전체의 자발적인 협력과 사랑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통해 보다 잘 구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⁹⁾

14) 이런 이유에서 황장엽은 해방사회를 실현 여부는 “물질적 조건과 정치적 조건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는 전적으로 사람들이 사회공동의 주인으로서의 사상문화적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본다. 황장엽, 『개혁과 개방』 (서울: 통일정책연구소, 1999), p.33.

15) 황장엽, 『인간중심철학의 몇가지 문제』, p.103.

16) 위의 책, p.102.

17) 황장엽, 『황장엽 비밀파일』 p.75.

18) 위의 책, p.75.

19) 맑스주의 철학은 이러한 방식에 대해 “새로운 사회적 복음에의 길을 개척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K.Marx/F.Engels, *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 MEW

주체사상의 경우도 인간중심철학과 마찬가지로 표면상 ‘인민대중’을 역사발전의 주체로 명기하고 있다.²⁰⁾ 그러나 보다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면 여기서 말하는 인민대중은 본질상 노동계급 집단을 가리킨다. 이 점은 “주체사상은 노동계급의 요구를 반영한 노동계급의 혁명사상”²¹⁾이나 “노동계급의 혁명사상만이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하고 인민들을 혁명투쟁에 불러일으켜 사회력사의 발전을 힘있게 추동할 수 있다”²²⁾는 주장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그러나 주체사상은 이에 그치지 않고 노동계급만이 가장 선진적인 계급으로서 사회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며, 아울러 노동계급의 이익은 노동계급의 선진분자들의 부대인 공산당이 대표하며, 공산당의 이익은 가장 결출한 공산주의자인 수령이 대표한다는 주장을 제기한다.²³⁾ 이로써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결국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의 최고 표현이라는 명제로 집약되면서, 급기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모든 행위의 시비를 가리고 선악을 규정하는 유일한 절대적인 척도로 되어 버린다.²⁴⁾ 이는 결국 사회발전의 궁극적인 주체를 ‘수령’에서, 궁극 목적을 수령 이익의 증대에서 찾게되는 결과로 이어짐으로써, 주체사상이 인민 본위의 사상체계가 아니라 수령절대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이론체계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 버린다.

3. 새로운 생명관: 개인 생명과 집단 생명간의 대립물의 통일

1) 인간중심철학의 독창적인 색깔을 보다 선명히 보여주는 대목은 ‘생명에 관한 철학적 논의’이다. 인간중심철학은 기존의 철학사조들이 주로 이성을 앞 세

4(Berlin: Dietz Verlag, 1980), S.490. 한편 맑스주의 철학에서 사회주의의 구현과 건설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폭력’을 수반한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역할과 기능에 관해서는 V.I.Lenin, *The State and Revolution, Selected Works*(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76) pp.266-278 참조. 더불어 맑스주의 철학이 내건 ‘사회적 혁명’ 방식에 관한 간결한 해명으로는 A.Rakitov, *The Principles of Philosophy*(Moscow: Progress Publishers, 1989), pp.149-150 참조.

20) 김일성,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 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27(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390.

21)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헌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338.

22)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주체사상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11.

23) 황장엽, 『개혁과 개방』, p.24.

24) 위의 책, p.25.

위 인간론을 전개해 나갔던 것에 비해, 오히려 비이성적인 것, 즉 ‘생명’을 이론 체계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²⁵⁾ 물론 서구철학 중에도 이성 대신 의지나 생(生)을 앞세운 철학유형들, 가령 니체와 쇼펜하우어로 대변되는 ‘생 철학’이나 사르트르 등의 ‘실존철학’이 있다. 하지만 그것들을 대체로 개인의 생명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는 바람에 사회적 집단의 생명을 고려하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완결적 형태의 생명론을 개진하지 못했다는 것이 황장엽의 지적이다. 반면 인간중심철학은 개인의 생명을 출발점으로 삼으면서도 그것의 모체로서 사회적 집단의 생명을 도입하여, 양자간의 대립물의 통일에 초점을 맞추어 새롭게 생명론을 개진하고 있다.²⁶⁾

이에 따르면 생명은 ‘물질’이 아니라 생명체라고 불리는 고급한 물질의 ‘속성’이다. 속성은 실체가 아니므로 직접 보거나 만질 수 없으며, 단지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통해서만 그 성격과 수준이 파악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생명이 지닌 근본 특성으로, 인간중심철학은 “삶의 요구와 이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합목적적으로 작용하는 힘”²⁷⁾을 제시한다. 물론 이러한 요구와 힘은 타고난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삶의 과정을 통해 획득한 사회적 의식을 지니고 있는 까닭에, 이처럼 타고난 (본능적) 요구와 (육체적) 힘이 사회적 의식과 결합되어 자주적·창조적으로 작용하게 됨으로써,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명활동을 전개하게 된다는 것이다. 동시에 인간은 이러한 사회적 삶의 과정을 거치면서 본래 지니고 있던 육체적 생명 외에 그것에 기초한 새로운 생명, 즉 사회적 생명을 획득하게 되며, 그것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과 사회적 협조성으로 표출된다.

말할 것도 없이 고립된 개인은 결코 이러한 생명을 지닐 수 없다. 그것은 오직 사회라는 범위 내에서만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²⁸⁾ 이런 이유에서 인간중심철학은 개인들의 사회적 생명의 모체를, 개인들이 서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사회

25) ‘인간론’에 대한 해명이 이성이 아닌 ‘생명’에서 출발한다고 해서, 인간중심철학이 비합리주의나 비이성주의로 흐르는 것은 아니다. 비록 개인과 인간집단의 생명을 전면에 내걸고 그러한 생명의 속성으로 ‘요구’와 ‘힘’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요구와 힘은 ‘사회적 의식’에 의해 조절·통제되어 작용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이성주의의 입장을 견지한다.

26) 황장엽, 『인간중심철학의 몇가지 문제』, pp.126-162; 황장엽, 『황장엽 비밀파일』, pp.82-85; 황장엽, “북한 주체사상의 실체”, 『민주이념』 2호(서울: 민주이념연구소, 1998), pp.203-204 참조.

27) 황장엽, 『인간중심철학의 몇가지 문제』, p.211.

28) 위의 책, pp.129-130 참조.

적 집단의 생명에서 확보하고자 한다. 이 때 유의할 점은 인간중심철학이 가리키는 사회적 집단은 살아있는 개별 인간들 외에 ‘사회적 재부’와 ‘사회적 관계’를 포괄하는 사회공동체를 가리킨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개인들은 사회를 형성해 살아가면서 생명과 생명을 결합하여 보다 큰 생명력을 형성해나갈 뿐 아니라, 그러한 생명력을 사회적 재부와 사회적 관계의 형태로 체현시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인의 사회적 생명은 사회적 집단의 생명에 입각해서만 비로소 그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며 그런 한에서 개인의 운명은 사회적 집단의 운명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비록 개인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그러한 생명들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사회적 집단의 생명은 무한하고 그 힘의 수준이 비할 수 없이 크며, 이러한 집단의 생명에 의거해서만 인간은 세계의 주인으로 영원히 발전하고 이상적인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생명이 무조건 집단의 생명에 예속된 것은 아니며, 두 생명은 ‘대립물의 통일’을 이루고 있다. 이 점에서, 인간중심철학은 개인적 생명의 자유로운 발전을 떠나서는 사회적 집단 공동의 생명을 발전시킬 수 없으며, 동시에 사회적 집단이 지닌 공동의 생명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개인의 생명을 위대한 집단의 생명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²⁹⁾

이렇듯 인간중심철학은 생명에 대한 새로운 논의에 바탕하여, 생명을 갖춘 사회적 집단, ‘사회적 생명체론’을 전개한다. 사회적 생명체란, 인간중심철학에 따르면, 첫째 사람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어야 하며, 둘째 하나의 독립된 단위로서 생명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자주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민주적인 정치적 지도체제를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나아가 이러한 정치적 지도체제를 갖춘 사회적 생명체는 두 원칙, 즉 ‘평등의 원칙’과 ‘사랑의 원칙’에 의거하여 생명활동을 벌여나가야 한다. 다시 말해 평등의 원칙(민주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개인들간의 자유와 평등을 구현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가운데 개인적 이익을 실현하도록 해야 하며, 사랑의 원칙을 통해 성원들간의 공고한 단결력과 사회적 협조를 이끌어냄으로써 사회공동의

29) 개인의 생명과 집단의 생명간의 대립물의 통일은, 인간중심의 인생관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이에 따르면, 사회적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무조건 희생시켜서도 안되며, 반대로 사회적 집단의 이익을 훼손하면서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해서도 안된다. 선우현, 『우리시대의 북한철학』 (서울: 책세상), p.115

이익을 구현해야 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특정 계급이나 이익단체 등은 사회적 생명체의 범주에서 제외되며, 현재의 역사발전 수준에서 사회적 생명체의 기본 단위는 민족국가가 된다.³⁰⁾

사정이 이러함에도 주체사상은 인간중심철학이 제시하고 있는 생명론의 내용, 특히 사회적 생명체에 관한 논의 부분을, 생물학적 사유방식에 기초하여 ‘사회유기체론’의 관점에서 재각색하고 있다. 곧 주체사상은, 사회적 생명체를 ‘목적의식적인’ 사회적 관계로 구조지어진 사회적 존재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 생물학적 연계로 이루어진 생물학적 유기체로 해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에 기초하여 주체사상은, 개인들이 당 조직을 통해 수령과 ‘조직사상적으로’ 결합될 경우에만 비로소 영생할 수 있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닌 사회적 집단(사회정치적 생명체)이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³¹⁾

게다가 역사발전의 주체인 인민대중이 ‘실제로’ 자주적인 혁명사상을 가지고 자기 운명을 자체의 힘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영도자로서의 수령을 절대적으로 요청하게 된다고 강변한다. 즉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기 위하여서는 당과 수령의 영도 하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어야” 하며, “조직사상적으로 통일단결된 인민대중만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³²⁾ 있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자연스럽게 주체사상은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은 이 집단의 최고 뇌수인 수령이라는 사실, 그리고 인민대중은 이 뇌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생물학적 유기체의 수족이라는 사실을 사회성원들에게 보여주고자 한다.

생명체론에 대한 이러한 자의적인 해석은 결국 수령체제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이론적 변용에 지나지 않으며, 이로부터 생명론이 제시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개별 인간들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부정이 초래된다. 즉 자주성과 창조성을 갖춘 사회적 존재로서 개별 성원들은 오직 사회적 생명체의 중심인 수령과 연결되어서만 주체적인 존재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바, 이는 결국 사회성원들이 지닌 자주적인 권리와 능력을 무시하고 그들을 수령의

30) 위의 책, p.149.

31)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주체사상에 대하여』, p.154.

32) 위의 글, p.153.

의도대로 조종·통제될 수 있는 비주체적인 도구적 인간으로 폄훼하는 것이다.

4. 고차원적 인본주의: 개인주의적 인본주의와 집단주의적 인본주의의 대립물의 통일

1) 잘 알려진 것처럼 전근대적 봉건사회에 대한 투쟁을 통해 등장한 근대의 인본주의는 ‘개인’에 초점을 맞춘 사상, 다시 말해 개인의 생명과 존엄성,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인본주의이다. 그러나 이처럼 개인에 초점을 맞춘 인본주의는 그 역사적 공헌에도 불구하고, 자유 방임주의와 개인 이기주의를 확산시키고 격렬한 경쟁체제를 통해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담보하겠다는 본래의 이념이 부정되는 사태를 낳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출현한 것이 바로 집단주의적 인본주의이며, 그 대표적인 사조가 바로 맑스주의 인본주의 사상이었다. 맑스주의 사상은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면서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그에 기초해 초래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 연속관계’를 청산하고 사회전체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실현되는 평등주의적 사회를 구현코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계급주의와 연결되면서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희생할 것을 강요하고 개인과 그의 삶을 전체주의 체제에 종속 가둠으로써, 개인의 존엄성이 유린되는 사태를 낳게 되었다.³³⁾ 더욱이 집단주의적 인본주의의 경우에서도 생명은 단지 개인의 것만이 고려되었을 뿐 ‘집단의 생명’에 대한 철학적 인식은 결여되어 있었다.

기존 인본주의 유형들의 일면성과 한계를 간파하고 있는 인간중심철학은, 한편으로 근대 자유민주주의 사상으로 체현된 ‘개인주의에 기초한 인본주의’, 다른 한편 사회주의의 사상으로 대변되는 ‘집단주의적 인본주의’, 양자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변증법적으로 통일시킨 ‘고차원적 인본주의’를 새로운 인본주의로 제시코자 한다.³⁴⁾ 이는 한마디로 개인의 생명(개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중시하면

33) ‘현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집단주의적 인본주의의 이념적 목표는, 이처럼 집단이 과도하게 중시되어 개인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형태로 변질·구현됨으로써, ‘인본주의’의 정신마저 소실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특히, H.Marcuse, *Soviet Marxism: A Critical Analysis*(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9) 참조.

서 동시에 개인적 생명의 결합체인 집단의 생명(사회공동의 이익)을 존중하는 인본주의, 개인의 이익과 사회 공동의 이익이 근본적으로 일치하는 인본주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고차원적 인본주의의 밑바닥에는, 인간은 ‘개인적 존재’인 동시에 사회적으로 결합되어 사회적으로만 살 수 있는 ‘집단적 사회적 존재’³⁵⁾이며 인간의 사회적 속성 또한 이러한 인간 존재의 두 측면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놓여 있다. 이에 따르면 인간이 ‘개인적 존재’라는 사실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는 특성이 나타나며 이는 ‘민주주의를 확대 완성’하는 방식으로 현실화된다. 또한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로부터 사회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옹호하는 특성이 나타나며 이는 ‘동지적 사랑과 협조를 강화’해 나가는 방식으로 구현된다는 것이다.³⁶⁾ 이처럼 인간 존재의 두 측면이 끊임없이 구현되어 나가는 사회, 이것이 바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양자를 통일 고양시킨 킨 ‘고차원적 인본주의’ 사회이다.

2) 이러한 입장은 ‘인생관’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잘 알려진 것처럼 ‘개인주의적 인생관’은 삶의 목적과 삶을 실현해 나가는 힘이 모두 개인에게 있다고 보아 개인 각자의 요구와 이해관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집단주의적 인생관’은 삶의 목적을 사회적 집단의 생존과 번영에서 찾고 아울러 그것을 실현하는 힘도 개인이 아닌 사회적 집단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집단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개인이 헌신적으로 분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인간중심철학에 의하면 두 인생관은 인간존재의 두 차원, 즉 ‘개인적 존재’의 차원과 ‘사회적 집단적 존재’의 차원 가운데, 한 측면만을 대변하고 있으며, 그런 까닭에 둘 다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두 인생관을 통일시키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와 관련, 인간중심철학은 새로운 인생관을 규정함에 있어 그 기본적 지향점을, 사회적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무조건 희생시켜서도 안되며, 반대로 사회적 집단의 이익을 훼손하면서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해서도 안 되는 쪽으로 잡고자 한다. 왜냐하면 전자는 자신의 이익과 발전을 우선적으로 추구하

34) 황장엽, 『맑스주의와 인간중심사상』, p.413.

35) 황장엽, 『황장엽 비밀파일』, p.81; 황장엽, 『맑스주의와 인간중심사상』, p.685 참조.

36) 황장엽, 『개혁과 개방』, p.31.

는 개별 인간이 지닌 사회적 본성을 위반하는 것이며, 후자는 극단적인 개인이 기주의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인간중심철학은 ‘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적으로 존중하여 보장해 주는 가운데 사회적 집단의 이익과 운명을 중시하고 보장하는 인생관’을 추구하고자 한다.³⁷⁾

3) 인간중심철학이 개인과 집단간의 조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인본주의’와 ‘인생관’을 제시하고 있는데 비해, 주체사상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지닌 인생관은 찾아 볼 수 없으며, 개인과 집단간의 관계에서도 일방적으로 집단의 이익을 우선 시하는 입장을 고수한다. 즉 주체사상이 표방하는 집단주의는 그 본성에 있어 ‘표면상’ 사회 전체를 위한다는 구실을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개인이나 계급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포기하고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구현되어 왔다. 우리는 이러한 집단주의가 미친 부정적인 결과를 과거 소련을 비롯한 ‘현실 사회주의’ 체제의 실패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게다가 집단을 전면에 내세워 개인의 삶이 집단에 종속된 것으로 간주하는 주체사상의 입장은 ‘수령론’과 연결되어 사회전체의 이익은 수령이 대표한다는 식의 논리로까지 확장되고 있는데, 이는 주체사상이 반민주적 전체주의 사고체계의 한 유형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5. 사회적 존재의 새로운 해석: 구성요소와 결합구조의 상호 결합체

맑스주의 역사유물론은 “물질적 생활의 생산양식이 사회적·정치적·정신적 생활과정 일체를 조건”지우며,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그들의 의식을 규정”³⁸⁾한다는 명제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인간의 사회적 존재’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 어떤 물질적 조건의 제약을 받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맑스주의 철학은 인간생활의 본질을 경제생활로 파악하였으며, 이에 입각하여 인간의 삶을 제약하는 근본 물질적 조건을 생산력과 생산관계, 아울러

37) 황장엽, 『맑스주의와 인간중심사상』, pp.628-629.

38) K.Marx, *Zu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MEW 13(Berlin: Dietz Verlag, 1975), S.8-9. 『독일이데올로기』에서는 “의식이 삶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의식을 규정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K.Marx/F.Engels, *Die deutsche Ideologie*, MEW 3(Berlin: Dietz Verlag, 1969), S.27.

생산관계를 포함한 경제적 관계의 총체로서의 ‘토대’로 보았다.³⁹⁾ 이렇게 볼 때 맑스주의 철학이 내놓고 있는 ‘사회적 존재’(gesellschaftliches Sein)란 “사회의 경제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생산관계의 총체”⁴⁰⁾를 의미한다. 즉 인간의 삶을 둘러싼 외적·객관적인 사회적 조건이 사회적 존재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방식은 결국 생산력과 생산관계, 토대와 상부구조와 같은 사회적 현상이 자연현상처럼 객관화되어, 그것들이 -인간존재가 아닌- 서로 상호 작용함으로써 역사와 사회가 전개되고 발전하는 것처럼 서술하는 방식으로 귀착한다.

그러나 인간중심철학에 의하면 사회적 운동은 생산력이나 생산관계가 아니라 ‘인간’이 진행시키는 것으로서, 인간의 실천적 활동을 떠나 생산력과 생산관계, 토대와 상부구조가 상호 작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인간중심철학은 사회적 존재에 대해 이를, 인간 외부의 경제 사회적 조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 인간의 힘을 객관적으로 체현한 사회적 재부, 그리고 이 구성 요소들을 결합하는 구조로서의 사회적 관계, 이 3가지 요인들의 결합물로서 사회적 존재를 다시 규정한다. 물론 여기서 사회적 재부는 인간과 결합되어 있는 한에서 사회적 존재로 이해되며, 인간과 떨어진, 인간과 무관한 사회적 재부 그 자체만으로는 사회적 존재가 될 수 없다.

이처럼 인간중심철학은 사회의 구성요소(인간과 사회적 재부)가 결합구조(사회적 관계)에 의해 하나로 묶여진 것으로서, 사회적 존재를 재규정함으로써, 사회(사회적 존재)를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성요소와 결합구조를 발전시키는 방식을 제안하게 된다. 곧 사회를 더 나은 상태로 발전시킨다는 것은, 구성요소인 인간의 힘을 더 발전시키고(인간개조사업), 또 다른 구성요소인 사회적 재부를 더 발전시키고(자연개조사업), 끝으로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키는(사회적 관계 개조사업)것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사회와 역사가 발전하고 진보한다는 것은 한 가지 요인만 발전되어서는 어려우며, 세 가지 요인들이 균형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가능한 것이라는 주장을 편다.

39) 이는 “해당 시기의 사회경제적 구조가 실제적 토대를 이루며, 일정한 역사적 시기의 법률적·정치적 제도와 종교적·철학적 및 기타 견해의 전체 상부구조는 결국 이 토대에 의거하여 설명된다”는 대목에서 확인된다. F.Engels, *Die Entwicklung des Sozialismus von der Utopie zur Wissenschaft*, MEW 19(Berlin: Dietz Verlag, 1982), S.208.

40) K.Marx, *Zu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MEW 13, S.9-10.

상황이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주체사상은 사회적 존재를 ‘살아있는 인간’에 한정시켜 정의하고 있다. 즉 사람이 사회적 존재라고 할 때, 그것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사는 존재’라는 의미로서 자연적 존재와 구별키 위해 쓰는 말임을 내세운다. 그러면서 사람이 사회적 존재라는 것은 다른 물질적 존재가 지닐 수 없는 고유한 사회적 속성, 곧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같은 이유에서 사람이 창조한 재부를 사회적 존재라고 할 경우, 사람과 재부 간에 근본적 차이가 사라지며 마침내 “사람의 고유한 본질적 특성이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답을 줄 수 없게”⁴¹⁾된다는 논리를 편다. 여기서 엿볼 수 있듯이 주체사상은 사회 속에서 인간들이 서로 사회적 관계를 맺고 협력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사회적 존재(soziales Wesen)’⁴²⁾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오직 ‘살아있는 인간’만을 사회적 존재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사회적 존재를 정의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무엇보다 사회발전의 동력원을 오직 살아있는 사람의 정신적·육체적 힘에서 구하게 되며, 그로 인해 인간이 이룩해 놓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힘 -가령, 과학기술이나 사상체계 등- 은 진보의 원천에서 배제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알다시피 사회적 발전의 동력인 정신적 힘과 물질적 힘, 사회적 협조의 힘은 ‘살아 있는 사람’과 ‘사람이 창조한 재부’, 그리고 ‘사람이 구상하고 형성시킨 사회적 관계’의 결합체인 사회적 존재의 속성이지만 단지 살아있는 사람만의 속성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주체사상처럼 산 사람의 힘과 사상의식 수준만 높이면 당연히 발전이 보장되는 것처럼, 즉 사회발전의 동력원이 인간 자신에게만 있다고 이해하게 되면, 인간의 삶을 제약하고 있는 일체의 외적 객관적 조건, 사회적 역사적 조건들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마침내 ‘주관주의적 관념론’에 도달하게 된다.

사회적 존재에 대한 이같은 해석은 3대 개조사업의 균형적 전개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드러낸다. 곧 살아있는 인간의 물질적·정신적 힘만을 발전의 원천으로 상정할 경우, 인간의 사상의식 수준을 높이는 이른바 ‘사상론’에 역점을 둔

41) 김정일, “주체철학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이해를 가질데 대하여”, p.300.

42) 이러한 의미의 사회적 존재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언명 이후, 전통적으로 이해되어 온 것으로서 그리 새로운 해석은 아니다. 아울러 이것은 맑스주의 철학에서 제시하는 ‘사회적 존재’와도 전혀 다른 것이다.

인간개조사업에 편향되어 이를 과도하게 중시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는 인간개조사업을 중점 육성할 경우 나머지 두 사업은 ‘자동적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다는 인식에 기인한다.⁴³⁾

하지만 3가지 사업 영역은 각기 다른 사업으로 환원될 수 없는 독자적인 고유논리를 구축하고 있으며, 3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회발전은커녕 오히려 침체와 퇴보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주체사상은 간과하고 있다. 한 마디로 이는 물질적 요인을 비롯한 역사적·객관적 조건을 무시하고 의식의 측면을 중심적인 조건으로 간주함으로써, 모든 것이 인간의 의식과 사상에 의해 결정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처럼 “사상의식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상론”⁴⁴⁾은, 마치 사회발전은 물질적 재생산이라는 객관적 조건을 고려치 않고 단지 인간의 의식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양 전제하는 주관주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⁴⁵⁾ 이와 관련해 인간중심철학은, 사상의 근본적 기초는 ‘인간의 요구와 이해관계’이며, 그것은 자연과 사회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지위와 역할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제약되어 있다⁴⁶⁾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사회적 존재를 이같은 관점에서 규정하고 이해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도 그것은, 사회적 운동의 주체를 살아있는 인간에 국한시킴으로써, 단지 사상의식의 변화, 따라서 인간개조사업을 통해서도 충분히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구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논증해 보이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곧 자연개조사업이 낙후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사상의식의 개조가 추가되는 인간개조사업에 의존해서도, 물질적 부족과 경제적으로 낙후된 상황이 극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 보이려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과연 살아있는 인간이 지닌 육체적·정신적 힘만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을 타개해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현실적으로 경제적 풍요와 사회발전을 위한 원천은 과학기술을 비롯한 사회적 재부의 증대에 초점을 맞춘 자연개조사업과, 비효율적이고 경직된 사회적 관계의 개혁사업에서 확보될 수 있다고 보여지

43) 이 점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는 사상적 요인에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해야 하며 그에 의거해 모든 조건을 적극적으로 성숙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장에서 엿볼 수 있다.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p.44.

44)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 로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441.

45) 황장엽, 『황장엽 비밀파일』, p.176 참조.

46) 황장엽, 『개인의 생명보다 귀중한 민족의 생명』, p.113.

기 때문이다.

6. 역사발전의 현 단계에서 요구되는 자본주의의 역할과 기능 인정

인간중심철학은 역사의 발전과정 속에서 자본주의가 수행해야할 역할이 아직도 남아 있음을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생산력의 발전수준은 인간해방을 위한 물질적 조건이며, 그런 한에서 인류는 아직도 고도의 생산력 증대를 이루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여전히 자본주의에 부과된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다. 물론 물질적 조건이 완비되었다고 해서 인간해방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게다가 생산력의 발전 수준에 부합하는 사상문화와 정치적 상황을 목적 의식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할 경우 경제와 정치, 경제와 문화 사이에 심한 불균형이 초래되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부정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⁴⁷⁾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적 조건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인간해방의 문제만 앞세울 경우 이것 역시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인간중심철학의 입장이다. 요컨대 인간해방의 물질적 조건이 완비되었다고 해서 인간해방이 저절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해방을 위한 물질적 조건을 갖추기 전에 인간해방을 실현하고자 서두르는 것 역시 실패를 면치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반대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중심철학은 새로운 미래사회의 구현을 위해서 일차적 물질적 토대를 확보하는 사업, 곧 자연개조사업을 중시하고 있으며 그런 한에서 자본주의의 역사적 소임을 높이 평가한다. 이는 현 시점의 역사전개과정은 아직은 자본주의 시대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북한의 주체사상은 여전히 자본주의 타도와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만을 고수하는 이론적 실천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을 견지하는 이면에는 낙후되고 뒤떨어진 생산력의 발전에 대한 보완적 대안책으로, 자본주의의 발전된 생산력을 도입하기 보다 북한식 수령체제의 공고화

47) 위의 책, p.186.

를 위한 사상체계의 강화와 사상의식 수준의 고양을 통해 찾고자 하는 의도가 놓여져 있다. 하지만 사상의 발전이 물질적 재생산을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며, 사상의식의 힘과 물질적 생산의 힘은 서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한 내적논리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물질적 생산력을 사상적 힘으로 환원하려는 시도는 사상의식의 영역(인간개조사업의 영역)과 경제적 영역 간의 환원불가능성을 위배하는 오류에 처할 수밖에 없다.

IV. 맺는 말

우리 철학계나 북한관련 학계에 ‘인간중심철학’의 전체적인 윤곽조차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중심철학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평가해 보는 시도는 자칫 오류를 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남북한 철학계를 통틀어 20세기에 나온 철학적 성과물들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자생적으로 정립된, ‘독창적인 철학체계’라는 점에서 인간중심철학은 우리 학계에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줄 것이라 판단된다.⁴⁸⁾ 더욱이 분단의 아픔을 딛고 통합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간중심철학에 대한 소개와 검토 작업은 주체사상을 비롯한 북한의 정치적 이념체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과정의 하나라 생각된다.

주지하다시피 그간 주체사상에 대한 검토와 비판 작업은 상당한 수준으로 진척되어 왔다. 아울러 그러한 연구성과물들은 북한의 정치사상과 체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주체사상 비판 가운데는 애초부터 체제 우

48) 최근 들어 우리현실을 조망하고 평가해 볼 수 있는 ‘자생적인 철학체계’를 모색해 보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은 참으로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맑스주의 철학을 비판적으로 극복·재편하는 과정에서 독창적인 이론체계를 내놓게 된 황장엽의 ‘철학함’ 방식은 우리 학계에 상당한 자극과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황장엽 철학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김용옥의 경우도, 황장엽 철학의 독창성과 창조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평가하고 있다. “남한에는 박식한 학자는 있을지 몰라도 창조적인 사상가는 없다. 남한의 사상가는 사상을 오로지 기존의 사상의 연구를 통해서만 이야기하려 한다..... 남한에는 황장엽과 같은 우주적 체험의 기회를 가져본 인물이 없다”, 김용옥, “황장엽이 말하는 주체사상의 올바른 이해와 비판을 위하여”, 『전통과 현대』 1호(서울: 전통과 현대사, 1997), p.265.

위성을 담보할 목적에서 제기된, 이른바 비판을 위한 비판도 적지 않았을 뿐 더러, 대체로 그 비판이라는 것도 ‘자유민주주의 이념체계’에 의거하여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화 이데올로기로서의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대목은 주체사상에 가해진 비판의 정당성이 본질상 이미 ‘전제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이념적 정당성에서 확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서로 판이한 세계관에 입각해 정립된, 대립적인 이념체계인 자유민주주의 정치사상과 주체사상 사이에서, 전자의 우위성과 정당성을 전제한 가운데 후자의 한계를 비판 공격하는 것으로, 그 비판의 근거와 논리가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난점을 드러낸다. 따라서 설령 주체사상에 대한 자유주의적 관점의 비판이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해도, 자유주의 이념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주체사상 신봉자 측에서는, 그러한 비판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기가 어렵다. 오히려 그러한 비판을 이데올로기적 대립구도에 기인한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비판,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주관적인 비판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점은 맑스주의 철학의 관점에서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경우에도 거의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⁴⁹⁾ 다시 말해 주체사상을 이미 맑스주의 철학의 한계를 넘어선 독창적이고 고유한 철학체계로 내세우고 있는 입장에서는, 맑스주의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제기된 주체사상 비판에 대해, 이를 내적 모순과 한계로 점철된 낡은 ‘비(非)인간중심적’ 세계관에 기초한 비판으로 반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자유민주주의나 맑스주의 철학과 같이, 주체사상과 대립적이며 경쟁적인 사상체계에 기초한 주체사상 비판은 그러한 비판의 준거점이 상대방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타당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 자체의 정당성만을 일방적으로 강변하는 것에 그칠 뿐, 주체사상의 구조적 난점을 이론적·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수용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

더욱이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우위성에 입각한 주체사상 비판은 향후 예상

49) 맑스-레닌주의 관점과 비교하는 가운데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입장에 관해서는 이진경(위음), 『주체사상 비판 1』 (서울: 도서출판 새길, 1989) 참조.

되는 ‘남북한 간 사상적 통합 과정’에서, 북한 내 통치집단을 비롯하여 사상관련 이데올로그들과 학자들, 그리고 대다수 일반주민들로부터의 이념적 반발과 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대다수 북한주민들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는 해방 이후 반민족적 친일분자들에 대한 제거를 필두로 민족정기와 자주적인 역사발전의 기틀을 다져 왔다는 점에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자본주의 체제)에 비해 우월한 체제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체제를 위한 정당화 논리로 정립된 주체사상 역시 반외세적·자주적인 통치이념이라는 인식을 여전히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면 설불리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의거하여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상당한 저항을 불러일으키면서 사상적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인간중심철학에 기초한 주체사상 비판, 곧 ‘내재적 비판’은 앞에서 살펴 본 주체사상에 대한 ‘외재적 비판’이 드러내는 한계를 벗어나 객관적이고 보편 타당한 비판의 논거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주체사상 비판의 대안적 방식으로 적극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내재적 비판이란, 특정 사상에 대해 그것과는 이론구성 체계가 전혀 다른 철학적 관점에 입각하여 비판을 가하는 외재적 비판과 달리, 특정 사상 자체의 내부에서 비판의 척도를 발견하고 그것에 의거해 사상체계의 논리 전개상의 부정합성이나 이론구성 체계의 모순, 설명방식의 난점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문제점을 지적·제기하는 비판 방식으로 ‘잠정’ 규정지을 수 있다.⁵⁰⁾

이에 따를 경우 결국 주체사상에 대한 내재적 비판이란, 주체사상과 동일한 사상적 원천에서 출발하는 인간중심철학을 비판의 준거점으로 삼아, 주체사상이 이론적 토대로 삼고 있는 철학적 세계관과 원리들의 적용 및 전개과정을 추적하여 이론전개 과정에서의 논리적 비일관성과 이론적 왜곡, 이론체계의 구조적 난점 등의 문제점들을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방식으로 통찰·제기하는 비판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두 사상간의 비교 분석을 수반한 내재적 비판의 과정을 통해 적어도 우리는, 한편으로 사회 내에서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 나가면서, 다른 한편 세계와의 관계에서 ‘집단으로서의 인간(인류)’의 지위

50) 내재적 비판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 규정으로는 J.Ritter/K.Gründer(hg.),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Bd.4(Basel: Schwabe & Co Verlag, 1976), S.1292-1293 참조.

와 역할을 높여 나가는 것을 ‘철학의 사명’으로 간주하는 정치철학이, 하나는 인간중심철학으로 심화·발전되어 나왔지만, 다른 하나는 특정한 정치적 의도와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그러한 본래의 입장이 재편 왜곡되어 왔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인간중심철학의 대략적인 면모를 살펴보는 작업은 주체사상과의 비교작업을 불가피하게 끌어들이며, 이러한 비교 분석의 방식은 마침내 주체사상에 대한 ‘내재적 비판’으로 귀착된다. 동시에 이러한 내재적 비판 과정을 통해 인간중심철학은, 주체사상이 내장하고 있는 본질적인 난점과 한계에 접근하여 그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비판의 준거점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이 명확히 밝혀진다. 이 점이야말로 우리들에게 현 단계에서 인간중심철학이 갖는 중요성과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작업이 필요함을 일깨워 준다. 이는 학문적 차원 뿐 아니라 대북정책과 민족통일 과정에서의 사상적 통합 방안의 모색과 관련해서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인간중심철학에 대한 면밀한 고찰작업은, 북한주민들 대부분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주체사상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간파해 내도록 함으로써, 예고 없이 닥쳐올지도 모를 민족통합의 상황에서 시행착오 없이 사상적 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강구하는데 중요한 몫을 담당할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인간중심철학이 갖는 이론적·실천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 현상과 인식

곽 승 지(연합뉴스)

- I. 서론
- II. 김정일시대의 통치논리와 국가목표
- III. 김정일시대의 이데올로기들
- IV. 김정일시대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
- V. 결론

I. 서론

오늘날 북한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김정일과 군(軍) 그리고 강성대국이다. 지난 94년 7월 김일성의 사망에 이어 98년 9월 김정일체제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북한은 이제 명실상부하게 김정일시대¹⁾를 맞이했다. 김정일은 자신의 정치방식을 선군정치로 부르는 가운데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군을 국정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상 노동당의 지도를 강조하지만 당의 위상은 현저히 위축되고 북한군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일체제의 공식 출범과 동시에 강성대국 건설을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북한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로서 김정일과 군 그리고 강성대국은 또한 김정일시대의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 중심축이기도 하다. 김정일의 사상과 북한군의수령에 대한 충성심 및 사업방식, 그리고 김정일체제가 지향하는 국가전략으로서 강성대국 건설이 김정일시대에 즈음해 북한이 체제를 정당화하고 나아가서 주민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치담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시대의 이데올로기는 김정일사상으로 귀결된다. 김정일시대에 즈음하여 북한에서는 시차를 두고 붉은기사상과 군중시사상, 강제정신 그리고 과학중시사상 등 새로운 이데올로기들이 잇달아 제시됐는데²⁾ 이들이 모두 김정일사상³⁾으

로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김정일사상을 강조하는 것은 김일성 생존시에도 있어왔다는 점에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김일성 사망이후 북한은 김정일체제의 통치기반이 김일성에게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김정일의 독자성을 강화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이데올로기부문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주의국가에서 이데올로기가 체제를 정당화하고 나아가서 주민들을 동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북한에서 이데올로기의 강조는 당연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김정일시대의 이데올로기들이 시대상황의 변화과정에서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통치논리와 함께 순차적으로 체계화됐다는 점이다. 즉, 김정일시대의 이데올로기가 체제정당화 및 주민동원을 위해 북한당국의 의지에 따라 단계적으로 변화되어 왔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6월 남북정상회담에 응하면서 대남정책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미 99년부터 대외부문에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취해왔던 것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전략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을 낳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북한의 변화를 보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대체로 전략적 변화로 보려는 시각과 여전히 전술적 변화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적어도 북한의 대남 및 대외정책은 과거와는 명백히 다른 것이 분명하다. 최근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김정일의 특사자격으로 미국을 방문,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평양방문을 이끌어낸 것은 북한의 국가목표에 변화가 있음을 웅변한다. 최근 사상보다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며 과학중시사상을 제시한 것은 북한에서의 변화가 이데올로기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일성 사후 북한은 그들이 처한 엄혹한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데올로기들을 양산했다. 따라서 김정일시대의 이데올로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김정일시대의 이데올로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김정일시대의 이데올로기는 김정일사상과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 △김정일시대의 시대상황, 통치논리 및 국가목표는 이데올로기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김정일시대의 이데올로기는 주체사상의 변용인가, 아니면 새로운 이데올로기인가 △최근 북한의 변화를 북한의 이데올로기구조 속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등이다.

이러한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필자는 우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의

북한적 현상, 특히 이데올로기가 중시되는 북한체제의 특성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헤아려 볼 것이다. 북한적 현상과 관련해서는 김정일시대가 처한 시대상황에 대해 북한 스스로 어떻게 인식해 왔으며 아울러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논리를 내세워 왔는지를 일별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전체주의국가에서 이데올로기는 목표문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국가목표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즉 김정일시대에 제시된 다양한 이데올로기들이 북한의 상황인식 및 통치논리 그리고 국가목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북한적 현상 속에서 나타난 이데올로기들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려고 한다 먼저 김정일시대의 이데올로기를 인식함에 있어서 북한의 이데올로기구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북한의 주장을 근거로 하여 협의의 의미의 주체사상을 순수이데올로기(pure ideology)로 하고 김정일시대의 이데올로기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이데올로기(practical ideology)로 기능한다는 점을 검증할 것이다. 이는 프란츠 슈만(Franz Schurmann)이 중국에 적용했던 이데올로기 계서구조가 북한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⁴⁾ 그리고 김정일시대의 이데올로기들이 어떤 이념적 정향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특히 김정일시대에 들어 통치논리와 이데올로기의 변화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이 논문은 최근 북한에서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이러한 변화가 북한의 이데올로기구조 속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됐다. 즉 북한의 변화를 인정할 경우 그러한 변화가 이데올로기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북한의 변화를 전략적인 것으로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 논문은 김정일시대가 출범한 이후 제시된 이데올로기들은 물론 주체사상을 포함한 북한의 다양한 이데올로기들을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 북한적 현상을 이해하는데 유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는 여전히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북한사회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내재적 관점에서 문헌분석(textual analysis) 방법을 통해 북한의 현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논문은 앞으로의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한 자료제공과 문제제기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었다.

II. 김정일시대의 통치논리와 국가목표

1. 시대상황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9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야기된 주민들의 사상적 동요와 외교적 고립으로 말미암아 체제위기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우리식 사회주의론을 체계화하여 주민들에게 체제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주입시켜 왔다. 체제적 측면에서 동구 사회주의국가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함으로써 주민들의 동요를 불식시키려 한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이 무렵부터 군 중심의 비상체제를 구축⁵⁾하는 한편 폐쇄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도전에 대비했다. 92년부터 핵문제를 빌미로 이른바 벵골협외교(brinkman-ship diplomacy)를 통한 강경노선을 취한 것은 군사외교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도전에 맞서려는 북한당국의 의지의 표현이었다. 94년 6월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카터 전 미국대통령의 주선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에 응함으로써 북한은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그러나 7월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은 북한의 그러한 노력마저 일거에 앗아갔다. 49년 동안 북한을 유일적으로 지배해온 최고지도자의 사망으로 구심점을 잃게 됨으로써 이제 새로운 시련이 시작된 것이다.

김일성의 사망으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사회로 나아가려던 북한의 계획은 원점으로 되돌려졌으며 대내적으로는 그 동안 김일성의 절대적 권위에 늘려있던 정치적 불만이 표출⁶⁾되는 등 사회 전반적인 일탈현상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94년 우박피해로부터 시작된 잇따른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난으로 말미암아 식량배급마저 불가능해졌다. 북한당국의 식량배급을 통한 통제기능이 무력해졌을 뿐 아니라 사회전체가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져 사회적 공동화현상마저 일어났다. 이에 따라 북한은 당시의 상황을 30년대 말 김일성과 그 일행이 일본군에 쫓겨 100여일 동안 행군하던 것에 견주어 고난의 행군⁷⁾으로 묘사했다. 즉 당시 북한의 처지가 70여년 전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당시의 상황을 고난의 행군으로 표현한 것은 대략 95년 초부터이다 이후 북한은 96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사회주의 3대진지를 튼튼히 다지며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살며 싸워 나가야 한다"며 전주민들이 고난의 행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북한은 98년부터는 고난의 행군 대신 주로 사회주의 강행군으로 상황을 묘

사했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을 감안할 때 고난의 행군은 사실상 94년 7월 김일성 사망이후부터 시작되어 최근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90년대 이후 북한이 겪은 제반 어려움이 김일성사망과 함께 촉발됐으며⁸⁾ 최근까지 북한 언론매체에서 여전히 고난의 행군이 언급⁹⁾되고 있는데서 그러한 추론이 가능하다. 북한이 말하는 고난의 행군은 경제난으로 인한 물질적 부족과 함께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사상적 동요가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낸 극한적인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붉은기사상을 통해 두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원 등으로 극한적인 상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된 98년부터는 사회주의 강행군에 대해 주로 언급하며 이를 위해 구보행군이라는 보조 담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실어 낙원의 행군이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했다. 즉 전체주민에게 고난의 행군을 극복하고 나아가서 사회주의 강행군을 낙원의 행군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구보로 행군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체제정비를 도모하고자 했다.

2. 통치논리

북한은 김일성 사망직후 당면한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인고와 내핍을 강요하면서 그 논리를 사회주의 3대진지론에서 구했다. 96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붉은기사상과 함께 언급된 이 논리는 정치사상진지, 경제진지, 군사진지를 확고히 구축함으로써 북한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¹⁰⁾ 사회주의 3대진지론은 일견 그람시(Antonio Gramsci)의 진지전을 연상시키지만 해결해야 할 당면한 과제들을 분야별로 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은 사회주의 3대진지론을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붉은기사상을 제시했는데 이후 제시된 강계정신과도 연계시켜 왔다. 즉 북한은 "강계정신으로 살며 싸우는 것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정치사상진지를 철벽으로 다지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고 주장¹¹⁾ 강계정신이 사회주의 3대진지론의 정치사상진지를 강화하는데 기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주의 3대진지론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엄혹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통치논리인 셈이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 마무리되고 김정일체제를 공식 출범시킨 98년에 이르러 사회주의 3대진지론 대신 새로이 강성대국론을 제시했다. 강성대국론은 97년부

터 그 아이디어가 북한의 언론매체에서 소개되다가 김정일체제의 공식출범을 앞둔 98년 8월 22일 『로동신문』 정론을 통해 체계화됐다.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을 의미하는 강성대국 건설론은 김정일체제가 지향할 국가전략으로 제시된 것이다. 사회주의 3대진지론이 당면한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혁명과 건설을 추진해야 할 중점부문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면 강성대국 건설론은 김정일체제의 공식출범에 즈음해 이 체제가 지향할 목표로 제시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고난의 행군을 통해 내핍과 인고의 세월을 견디어 온 주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희망을 주고자 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강성대국론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접근했다. 즉 사회주의 3대진지론에서는 내핍과 인고를 통해 당면한 최악의 어려움을 극복하자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강성대국론에서는 강성대국이라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주민들에게 이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즉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정치사상강국과 군사강국 그리고 경제강국을 건설해야 하는데 이미 정치사상강국과 군사강국은 실현되었거나 실현단계에 있기 때문에 경제강국 건설에 나서야 한다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2000년부터 강성대국 건설의 3대기동론이 새롭게 제시되면서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사상, 총대, 과학기술을 의미하는 강성대국 건설의 3대기동론에서 과학기술이 특별히 강조되면서 과학중시사상이 제시된 것이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2000년 10월 7일에는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김정일의 당총비서 추대 3주년을 기념하는 중앙보고대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새삼 경제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¹²⁾ 이는 북한이 군부를 포함해 국가적차원에서 경제건설에 매달리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김정일시대에 즈음해 제시한 통치논리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사회주의 3대진지론과 강성대국론 그리고 강성대국 건설의 3대기동론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시됐을 뿐 아니라 공히 사상, 군사, 경제부문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통치논리의 제시과정은 북한이 김정일시대가 시작된 이후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상황변화에 따라 치밀하게 대응해 왔음을 의미한다. 3대진지론은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논리였다면 강성대국론은 고난을 들고 나와 김정일체제를 공식 출범시킴에 따라 김정일체제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됐다. 그리고 강성대국 건설 3대기동론은 경제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위한 개혁개방의 불가피성을 인식한 변화의 몸짓으로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논리들은 새로운 논리가

제시됐다고 해서 그 생명이 다 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강조점이 달라졌을 뿐 각각의 논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강계정신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사회주의 3대진지론의 정치사상진지와 연관시키는 것이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3대기동론이 강조되는 가운데 여전히 강성대국 건설론이 북한의 국가전략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¹³⁾

3. 국가목표

1) 김정일시대 이전의 경우

사회주의국가의 경우 국가목표는 대체로 2단계로 나누어 설정된다. 유토피아인 공산사회(무산계급사회)를 목표문화로 제시함으로써 그것을 위한 중간목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주의국가는 일반적으로 최종목표로 무계급사회인 공산사회를, 중간목표로 전인민의 노동계급화와 공업화를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있다.¹⁴⁾ 노동계급화는 인간의 총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며 공업화는 사물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인데 레닌이후 이들은 "혁명과 건설"로 불리어왔다.¹⁵⁾ 여기서 말하는 혁명이란 구시대의 잔재를 척결하고 전체 주민의 사상을 개조하여 이른바 공산주의적 인간을 주조함으로써 공산사회 건설을 위한 사상적 토대를 만드는 것을 말하며, 건설이란 공업화 또는 경제발전 등과 같이 공산사회 건설에 적합한 물질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북한 역시 이와 같이 2단계로 나누어 국가목표를 제시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국가목표는 북한의 특수성-주체사상의 순수이데올로기화와 민족통일 지향-을 반영해 여타 공산주의국가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왔다. 북한은 국가의 최종목표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제시한다. 이에 대해서는 김일성의 다음과 같은 글에 잘 나타나 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것은 공화국정부의 최종 목표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들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를 점령하여야 합니다."¹⁶⁾ "주체위업을 실현하는 데서 우리당의 최종적인 혁명임무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사회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건설될 수 있습니다."¹⁷⁾

북한에 있어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사회와 모든 성원들이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되고 △사회와 자연이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된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사회는 북한의 과도기론에서 설정하고 있는 공산주의건설과정, 즉 역사발전과정의 사회주의 중국적 승리단계로서 공산사회를 말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중국적 승리단계에 이르면 과도기가 끝나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차이와 물질생활수준에서의 차이가 없게 되어 외부로부터의 자본주의 복구의 위험까지도 완전히 해소된다고 말한다.¹⁸⁾

북한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사회를 동일시하고 있으나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의 국가목표와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즉 공산사회가 생산관계에 초점을 맞춘 유평피아를 의미한다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인간의 의식에 초점을 맞춘, 즉 인간의 도덕 윤리문제를 중시하는 일종의 도덕적 윤리적 공동체¹⁹⁾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김일성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투쟁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임을 강조하는 가운데 혁명과 건설을 주체사상에 입각해 "우리의 념원에 맞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더 잘 건설할 수 있다"²⁰⁾고 말한다.

북한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라는 최종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사회주의 완전승리 단계라는 중간목표를 설정해 왔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주의 완전승리 단계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및 노동계급과 농민의 차이가 없는 "온 사회가 로동계급화 되어 전체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평등한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 완성된 사회주의 사회²¹⁾"로서 내부로부터의 자본주의 복구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사회주의 완전승리 단계가 남북통일과 직접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즉 내부로부터의 자본주의 복구위험이 사라진 상태란 북한에 의해 통일이 되어 남한 또는 미국으로부터의 위험이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중간목표로서 사회주의 완전승리 단계가 남조선혁명이 완수된 시점과 일치되어 있는 것이다.²²⁾

2) 김정일시대의 경우

김정일시대가 시작된 이후에도 규범적인 면에서는 북한의 국가목표가 변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김정일시대의 시대상황과 최근 북한의 대남 및 대외정책 등 현실적용 형태를 보면 북한의 국가목표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야 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²³⁾ 김정일시대 이전의 경우 북한은 국가의 최종목표로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중간목표로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추구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간목표가 남북분단이라는 북한이 처한 특수성을 반영해 남한의 공산화 전략과 직결되어 있음을 보았다. 여기서는 일단 최종목표의 변화 여부는 차치하고 중간목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북한이 사회주의의 이념을 포기하지 않는 한 최종목표가 갖는 상징성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국가목표 중 중간목표의 변화 여부는, 규범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조선혁명전략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그러한 입장을 뒷받침할 상황적 여건의 변화를 파악하는 간접방법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남조선혁명전략을 추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른바 3대혁명역량 강화 방침을 제시하고 그동안 이에 주력해 왔다. 즉 북한의 남조선혁명전략은 3대혁명역량의 강화를 토대로 하며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80년대 말과 90년대 초 소련 및 동구사회주의국가들의 민주화 도미노현상을 통해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세계적으로 탈이데올로기 현상이 확산됨에 따라 이제 북한이 추구했던 3대혁명역량 강화 노력은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다. 경제난과 북한주민들의 사회적 이탈현상의 심화로 북한내부의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어려워졌으며 남한사회의 민주화로 남한내 친북세력을 부식하기도 힘들게 됐다. 그리고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를 지향하는 세계화 경향속에서 북한의 혁명전략이 국제사회에서 지지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도 지난한 일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3대혁명역량을 강화하여 남조선혁명을 추진하려는 전략은 이제 그 의미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도 이러한 상황변화를 인식하고 스스로 이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취해왔다. 91년 줄기차게 유지해온 '하나의 조선' 정책을 접고 남한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으며²⁴⁾ 일본 및 미국과 관계개선을 추구해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적극적인 다변화 외교를 통해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코자 하는 가운데 남북정상회담과 미국과의 적극적인 관계개선 노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김정일시대에 즈음해 북한이 추구하는 국가목표가 달라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북한의 국가목표가 달라진 것으로 보아야 할 징후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꼽아볼 수 있을 것이다. 즉, ①남한의 실체에 대한 인정, ②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유연한 태도, ③로동당 규약의 남조선혁명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 가능성 시사, ④대외개방정책에 대한 의지, ⑤외교적 고립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다변화 외교. 그리고 ⑥시대상황의 변화와 그에 대한 북한의 인식 등이다.

그러면 북한의 새로운 국가목표는 무엇일까. 필자는 북한의 중간목표, 즉 당면 목표를 김정일체제의 유지와 경제건설로 설정하고자 한다.²⁵⁾ 이러한 입장은 두 가지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나는 북한이 90년대 중반 이후 무단히 체제유지를 위한 생존전략을 추구해 왔다는 현실에 근거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김정일체제의 출범과 함께 국가전략으로 제시된 강성대국론에 담겨있는 의미와 관련된다. 라카토스(Imre Lakatos)의 논리²⁶⁾를 강성대국론에 적용하면 강성대국의 세가지 구성부분 중에서 정치사상강국이 핵심(hardcore)이고 군사강국 및 경제강국은 정치사상강국 건설을 도모하기 위한 보호대(protective belt)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²⁷⁾ 여기서 정치사상강국은 결국 주체사상 및 김정일사상으로 일색화된 김정일체제를 말한다. 그리고 정치사상강국 건설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보호대로서 경제강국건설은 말그대로 경제건설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III. 김정일시대의 이데올로기들

1. 붉은기사상²⁸⁾

북한에서 붉은기사상이라는 표현이 구체화된 것은 96년 1월 신년공동사설에서부터 이다. 95년 중반부터 붉은기에 대한 상징성을 차용하여 이데올로기화가 시도되는 가운데 붉은기철학, 붉은기정신 등이 어우러져 사용²⁹⁾되었으나 이때에 이르러서야 붉은기사상이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붉은기사상의 체계화도 96년 신년공동사설과 같은 해 1월 9일자 『로동신문』 논설에서 보다 정치하게 다듬어졌다. 96년 신년공동사설에는 붉은기사상과 함께 고난의 행군에 대한 필요성과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논리로서 사회주의 3대진지론이 함께 강조됐다. 이는 붉은기사상이 고난의 행군 및 사회주의 3대진지론과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 분명하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붉은기사상은 이론적인 면에서 주체의 혁명철학, 일심단결의 혁명철학, 그리고 신념의 철학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³⁰⁾ 주체의 혁명철학이란 붉은기사상이 주체사상을 대체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주체사상을 이념적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붉은기사상이 "주체사

상의 요구대로 오직 자기 힘을 믿고 자기식대로 살아나가며 자기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참조의 철학³¹⁾이라고 언급, 붉은기사상과 주체사상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일심단결의 혁명철학은 붉은기사상이 지향하는 행동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혁명은 단결로부터 시작되고 단결의 위력에 의해 전진해 나가기 때문에 "단결은 천하지 대본"이며 "단결보다 더 강력한 혁명무기는 없다"는 주장³²⁾에서 그러한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심단결이 지향하는 목표는 수령을 중심으로 한 당·군·인민간에 혼연일체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북한은 붉은기사상을 통한 단결과 통일을 강조하는 가운데 "붉은기사상은 령도자와 전사, 령도자와 인민이 사상과 지향도 하나, 리상과 포부도 하나, 감정과 정서도 하나인 혼연일체를 실현하게 한다"³³⁾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신념의 철학은 붉은기가 혁명에 대한 신념을 상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혁명하는 사람이 견지하여야 할 규범과 관련된 것으로서 체제고수를 위한 논리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붉은기를 든다는 것은 한번 다진 신념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혁명가는 투쟁의 첫걸음도 붉은기 앞에서 다진 맹세로부터 시작하며 인생의 전행로에서 그 맹세를 지켜 싸우게 되며 한생의 총화도 붉은기 앞에서 짓게 된다"³⁴⁾고 말한다.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신념은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한다는 논리인 셈이다.

붉은기사상의 이러한 이념적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북한은 고난의 행군 정신, 수령결사옹위정신, 혁명적 군인정신을 하위개념으로 제시한다. 고난의 행군정신은 당시의 시대상황을 고난의 행군으로 불렀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과거 혁명선대들의 정신을 따라 배워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령결사옹위정신과 혁명적 군인정신은 일심단결의 철학과 신념의 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북한의 주장에 의해 뒷받침된다. "붉은기사상은 본질에 있어서 혁명의 영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이며 영도자와 생사운명을 끝까지 같이하려는 수령결사옹위정신이다."³⁵⁾ "혁명적 군인정신을 체득하고 투쟁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당의 붉은기사상의 제일 체현자이며 우리 혁명이 요구하는 전위 투사이다."³⁶⁾

이상에서 보듯이 붉은기사상은 주민들의 사상무장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논리를 담고 있다. 이는 당시의 상황을 헤쳐나가는 힘이 사상에 있다는 전제하에 "사상의식을 최대한 높여 사상의 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붉은기사상은 수령중심사상이며 붉은기사상의 의미와 내용은 혁명적 수령관에 귀착된다"고 규정³⁷⁾하고 있는 데서도 뒷받침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붉은기사상이 혁명적 수령관으로 귀착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이다. 이것은 붉은기사상

이 내용면에서 김정일체제의 고수를 위해 김정일에 대한 절대충성을 도모하는 것이며 구조면에서 주체사상의 논리를 토대로 하고 있는 하위개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2. 군중시사상

북한에서 군의 중요성은 항시 강조되어 왔지만 이러한 강조가 이데올로기화된 것은 김정일시대에 들어와서, 보다 구체적으론는 북한이 체제를 정비해 나가기 시작했던 98년 무렵부터이다 이 시기는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이 강성대국 건설의 기치를 높이 들 때이다. 98년4월 군창건일에 즈음해 군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군중시사상이 언급³⁸⁾되고 이어 선군혁명영도, 선군정치(98.10.20), 선군후로의 정치방식(99.4) 등의 표현이 등장했다. 그리고 99년 6월 16일 김정일의 당사업 35주년을 앞두고 『로동신문』과 『근로자』 공동논설 형식을 통해 선군정치가 김정일의 통치방식으로 공표됐다.³⁹⁾ 오늘날 북한은 선군정치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군중시사상이란 표현도 사용하고 있다. 이데올로기의 영역을 광의로 해석할 경우 그 범주는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선군정치 역시 군중시사상의 범주에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⁴⁰⁾

북한이 선군정치를 강조하고 있는 배경은 두가지 점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고난의 행군이라는 엄혹한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대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군대의 중요성은 단순히 체제안보의 보루로서 군의 역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에서 군은 경제건설의 핵심적인 추동력일 뿐 아니라 사상전선의 보루이다. 즉 군대의 일사분란한 지휘체계와 철저한 사업방식이 당면한 경제건설에 있어서 유용할 뿐 아니라 수령에 대한 충성심 또한 주민들의 본보기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군에 대한 김정일의 신뢰로부터 비롯된다. 북한군에 대한 김정일의 신뢰는 이미 김일성 사망 직후부터 공개적으로 언급됐다. 김정일은 94년 12월 당간부들과 행한 한 담화에서 "인민군대 간부들은 나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며 내가 명령만 내리면 결사전을 벌이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나는 군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제일 좋아한다"고 말한 바 있다.⁴¹⁾ 또한 그는 96년 12월 김일성대학에서 행한 한 연설에서 당간부들을 질책하면서 군을 본받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⁴²⁾ 다른 하나는 북한의 통치행태를 정당화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는 점이다. 북한은 선군정치 방식을 김정일의 기본적인 정치방식으로 강조하면서 사회주의국가들이 지난 시기 사회주의 본성에 맞는 완성된 정치방식을 모색해 왔으나 그것이 북한에 의해 "빛나게 해결됐다"고 주장⁴³⁾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98년 9월 헌법개정을 통해 국가 주석직을 김일성에게 부여해 상징화하는 대신 국방위원장을 실질적인 최고 통치자로 하는 통치체제를 확립했다. 이러한 북한의 통치기제는 북한의 군사국가화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김정일은 98년 1월 자강도 현지지도에 나서기 전까지 군부대만을 시찰하는 등 군에 대한 편향된 관심을 보여왔었다. 따라서 북한이 선군정치를 강조하는 것은 북한의 통치기제 및 김정일의 통치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국방위원장을 최고통치자로 하는 현재의 국가체제가 선군정치에 따른 것임을 숨기지 않는다. 현재의 통치체제를 "군사중시의 국가기구체계"로 부르는 가운데 이 체계를 "가장 우월한 우리식의 정치체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⁴⁴⁾

북한은 선군정치를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영도방식"⁴⁵⁾으로 설명한다. 즉 군의 혁명정신과 조직력을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 적극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의 구성원을 군과 인민으로 나누어 이들을 양대축으로 하는 사회로 인식한다. 즉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 사회를 만드는 주춧돌이고 사회주의를 지키는 2대역량"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선군정치가 결코 군대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을 중심에 놓고 구사하는 가장 인민적인 정치"라고 말한다. 이러한 논리에 대해 북한은 군대와 주민간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⁴⁶⁾

북한에서 선군정치의 강조는 강성대국 건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첫째 정치사상강국 건설과 직결되는 군의 투철한 사상의식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관련된다. 수령에 대한 군의 충실성은 군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주민들이 따라 배워야 할 모범으로 발전된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국제정치구도를 제국주의와의 대립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여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상적 신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제국주의와의 첨예한 대결에서 승리하자면 "혁명성이 강하고 사상적 신념이 투철한 전위부대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 담당자가 바로 군대라고 주장한다.⁴⁷⁾ 따라서 군대를 먼저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으로 키우고 그에 기초하여 전체주민을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킬 때 "사상진지가 금성철벽으로 다져질 수 있⁴⁸⁾고 말한다. 둘째, 군사강국 건설을 위한 안보의 보루로서 군의 역할이다. 즉 선군정치를 통해 군을 강화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북한

의 힘을 과시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체제안보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정치에서 군사문제를 근시안적으로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요소"라고 지적하며 "정세가 긴장하면 군사를 강화하다가도 정세가 완화되면 군사를 약화시키며 사회경제적 과업이 전면에 나서면 국방을 쫓겨버리는 일이 사회주의정치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고 말한다.⁴⁹⁾ 즉 "경제는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추스릴 수 있지만 군사가 주저앉으면 나라의 백년대계의 기틀이 허물어지게 된다"⁵⁰⁾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군의 사업태도 및 방식과 관련된다. 북한은 선군정치가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전에서만 유력한 것이 아님을 역설하면서 이것이 나라의 전반적인 국력을 최상의 높이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선군정치가 혁명과 건설의 어떤 어려운 과제도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의 정치"일 뿐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 나가는 원동력"이라는 것이다.⁵¹⁾

북한은 선군정치가 추구하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당 국가활동,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군중시사상을 철저히 구현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가운데 전체 주민들이 군대내에서 창조되고 있는 혁명적 군인정신, 수령결사옹위정신, 그리고 자력갱생의 정신을 철저히 구현할 것을 강조한다. 특히 북한은 군대가 지니고 있는 이러한 정신이 사회에 일반화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군민 혼연일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한다.⁵²⁾ "군민의 혼연일체야말로 우리 사회의 기초이고 사회발전의 끊임없이 추동하는 활력소"⁵³⁾라는 것이다

3. 강계정신⁵⁴⁾

강계정신은 98년 1월 김정일이 김일성 사망이후 처음으로 강계지역의 경제부문에 대한 현지지도를 한 것에서 연유한 것으로 그 해 2월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강계사람들이 고난의 행군에서 보여준 모범적 사례를 따라 배우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곧이어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시대정신 등으로 강조되면서 이데올로기화됐다. 특히 2000년 4월 『로동신문』과 『근로자』가 강계정신으로 역세계 싸워나가자, "제하의 공동 논설을 통해 강계정신을 "주체조선을 대표하는 시대정신"로 규정하고 전체주민들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이 정신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김정일시대의 중심 이데올로기의 하나로 자리잡게 됐다.

강계정신이 이데올로기 차원으로 격상된 것은 북한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실제적 사실을 통한 주민동원의 필요성이 절실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고난의 행군을 마무리하고 낙원을 향한 구보행군에 나서기 위해서는 전체 주민들을 일사분란하게 같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시대정신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특히 99년부터 이른바 제2의 천리마대진군으로 불리는 새로운 사회주의총진군운동을 시작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을 결속하고 동원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기준이 필요했다.

이러한 점에서 강계정신은 50년대 말 제2차 고난의 행군을 마무리한 후 시작된 천리마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천리마정신'과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강계정신은 실제적 사실을 통치에 활용하기 위해 이데올로기화 했다는 점에서 여타 이데올로기와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북한은 강계정신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특성을 심분 활용, 주민설득 및 동원에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자강도사람들이 고난의 행군기간에 풀뿌리와 나무껍질, 강냉이대와 벼뿌리를 먹으면서도 자기 혁명초소(생산초소)를 지키며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했다는 등 극한적 어려움 속에서도 맡은 바 책임을 다했음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강계정신의 핵심적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 정치사상진지를 굳건히 고수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정신을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⁵⁵⁾

북한은 강계정신에 대해 "죽음도 두려워 않는 결사관철의 정신. 자력갱생의 정신, 혁명적 낙관주의정신이 맥박치고 있다" 언급, 강계정신이 경제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실천이데올로기로 기능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있다. 따라서 북한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강계정신으로 싸운다면 점령 못할 요새가 없고 극복 못할 난관이 없다는 것을 심장 깊이 체득하였다"면서 "지금 우리에게 절박하게 요구되는 것은 그 어떤 요행수가 아니라 강의한 난관 극복의 정신, 강계정신"이라고 강조한다. 강계정신이 "하면 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로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강계정신이 사상진지를 강화하는 것과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강계정신에 "열화와 같은 수령 승배, 수령결사용위정신"이 관통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선군정치에 의해 창조된 "불패의 혁명정신"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강계정신은 김정일의 '선군정치의 결실로서 "혁명적 군인정신이 사회에 구현되어 창조된 정신"이라는 주장이다.⁵⁶⁾

4. 과학중시사상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불과 20여일도 채 되지 않은 7월 4일 북한은 로동신문과 근로자 공동논설을 통해 과학중시사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⁵⁷⁾ 이 공동논설은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적 실리를 앞세워 적극적으로 실사구시적 정책을 펼 것이라는 기대를 낳게 했다. 김정일은 김일성 생전에도 자주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제기했었다. 북한의 이러한 관심은 99년 들어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2000년 신년공동사설에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3대 기둥론을 제시하는 등 과학기술을 강성대국 건설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형태로 구체화됐다. 과학중시사상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3대기둥론에 입각해 과학기술 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북한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북한이 과학중시사상을 제시한 것은 당면한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난의 행군과 사회주의강행군을 통해 경제난을 해소하는데 주력해 왔지만 현실적으로 과학기술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난의 해소가 지난한 일임을 인식한 것이다. 즉 강성대국의 마지막 관문인 경제강국 건설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자각이 과학중시사상을 제시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90년대 이후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외화난으로 인해 선진문물의 도입이 사실상 단절됐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과학중시사상이 당창건 55주년에 즈음해 고난의 행군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전환을 이루려는 시점에서 제기됐다는 점도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북한의 절박한 심정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관심을 끄는 것은 과학중시사상이 체제고수 및 강화를 위한 이념이 아니라 개방을 통한 실리추구에 초점을 맞춘 전혀 새로운 이데올로기라는 점이다. 붉은기 사상이나 군사중시사상은 기본적으로 체제를 보위하기 위해 사상무장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이데올로기의 지형상 좌(左) 편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중시사상은 이념 대신 실리를 강조하면서 북한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右) 편향적이다. 즉 과학중시사상은 체제에 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했다는 점에서 앞서 제시했던 이데올로기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전향적인 조치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사실은 7월 4일자 공동논설에서

보다 분명해 진다. 공동논설은 노동당을 "과학에 의거하여 혁명하는 당"으로 규정하고 과학중시사상을 노동당이 "현시기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부강조국 건설의 전략적 노선"이라고 강조했다.⁵⁸⁾ 이 논설은 이어 "과학을 홀시하는 것은 혁명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면서 "세계 여러나라에서 이룩된 과학기술성공과를 적극 배우고 그것을 대담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⁵⁹⁾ 북한은 또한 공동논설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데서 혁명성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혁명성 하나만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던 때는 지나갔다"고 언급,⁶⁰⁾ 과학중시사상을 제시한 것이 시대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남북정상회담과 비공식 중국방문시 김정일이 보여준 언행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김정일은 중국방문시 중국측지도자들에게 "등소평이 옳았다"면서 중국에서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였다. 그리고 중국의 실리콘벨리로 불리는 중관촌을 방문, 현대 첨단 과학기술을 현장에서 목격했다.⁶¹⁾

과학중시사상은 내용상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가장 취약하다. 어쩌면 단지 과학입국을 선언하는 정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굳이 사상으로 표현한 것은 획기적인 정책 전환에 대한 정당화가 필요했기 때문일 게다.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정책 전환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를 김정일과 당의 의지 그리고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의 절박함에서 구한다. 예컨대 "과학기술을 가까운 앞날에 세계선진수준에 올려 세우려는 것은 우리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김정일이 언급했음을 강조하거나 "현시대에서 과학기술은 민족의 흥망성쇠의 분수령이 된다"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과학중시사상을 "그 어떤 시련속에서도 과학기술을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는 철저한 과학선행사상"으로 주장하며 이 노선에는 "붉은기를 끝까지 고수하려는 혁명철학이 있고…… 비상이 빠른 속도로 전진하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이 담겨져 있다"고 말함으로써⁶²⁾ 이것이 단순한 구호 이상의 무엇임을 강조하고 있다.

IV. 김정일시대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

1. 북한의 이데올로기 구조

사회주의국가에서 이데올로기는 궁극적으로 "행위의 지침"(guide to action)으로서 관제이데올로기(official ideology)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국가들은 당과 국가에 의해 채택된 이데올로기를 전체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사회주의국가의 전체주의적 속성 때문이다. 전체주의체제는 일반적으로 사회전체가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도록 하기 위한 신념체계로서 공식적인 이데올로기를 제시하게 되고 이 이데올로기는 당과 국가의 행위를 정당화하는데 이용된다.

따라서 사회주의국가에서는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에 의거하면서도 각 국가의 특수한 실정에 맞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게 된다. 이와 같이 맑스-레닌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주의이데올로기가 다양하게 변화됨에 따라 이데올로기간에도 필연적으로 위계구조가 형성되게 된다. 이 같은 이데올로기의 위계적 구조와 관련해 Franz Schurmann은 순수이데올로기(pure ideology)와 실천이데올로기(practical ideology)로 구분, 중국의 경우에 적용했다.⁶³⁾ 그는 중국에서의 이데올로기의 위계구조에 대해 맑스-레닌주의를 상위개념인 순수이데올로기로, 모택동사상을 하위개념인 실천이데올로기로 설정하여 설명한다. 즉 맑스-레닌주의가 사회주의공산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목표문화인 순수이데올로기라면 모택동사상은 중국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과 건설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전이문화인 실천이데올로기로 기능한다는

것이다.⁶⁴⁾ 실제로 사회주의국가들은 자국의 실정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을 도모하기 위해 혁명과 건설의 구체적 방안으로서 실천이데올로기를 다양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위계구조론은 북한에도 적용된다. 그 동안에는 중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맑스-레닌주의가 순수이데올로기이고 주체사상이 실천이데올로기로 기능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에서의 이데올로기 위계구조를 이와 같은 일반론과는 다르게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한이 1980년

10월 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서 맑스-레닌주의를 주체사상으로 대체한데 이어 1998년 9월 김일성헌법을 제정하면서 헌법에서마저 주체사상을 공산주의건설을 위한 지도이념으로 규정함으로써 적어도 규범적으로는 북한에서 맑스-레닌주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⁶⁵⁾ 둘째, 북한이 여전히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고 있지만 북한체제를 탈스탈린식 사회주의로 인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다.⁶⁶⁾ 즉 북한체제를 사회주의체제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체제라고 한다면 그 체제의 순수이데올로기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주체사상을 북한의 순수이데올로기로 한다면 실천이데올로기는 무엇일까.⁶⁷⁾ 필자는 주체사상을 순수이데올로기로 이해한다면 북한의 이데올로기 구조를 슈만의 입장에 따라 계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주체사상을 순수이데올로기로 하면서도 북한의 이데올로기를 모두 주체사상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면 순수이데올로기를 실천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의 기능이 제한적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주체사상을 광의의 주체사상과 협의의 주체사상으로 나누어 이해하면서 주체의 사상을 의미하는 협의의 의미의 주체사상을 순수이데올로기로 하고 그 외의 주체사상 즉, 주체의 이론과 방법 그리고 80년대 중반이후 새로이 제시된 이데올로기들(사회정치적생명체론, 조선민족제일주의론, 김정일시대의 이데올로기들)을 주체의 사상을 실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이해하고자 한다.⁶⁸⁾

2. 김정일시대 이데올로기의 실천이데올로기적 성격

북한의 이데올로기구조를 순수이데올로기와 실천이데올로기로 구분하는 것은 주체사상의 이론체제를 사상과 이론 그리고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는 북한의 주장과도 일치된다. 북한은 김일성의 혁명사상, 즉 주체사상이 사상, 이론, 방법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언급하는 가운데 방법에 특별히 주목한다. "령도방법은 혁명투쟁에서 지도사상, 지도리론이 대신할 수 없는 독특한 역할을 한다"면서 "혁명의 지도사상, 지도리론이 혁명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 지침과 그 앞길을 밝혀준다면 령도방법은 인민대중을 혁명투쟁으로 조직동원하는 방법"이라고 말한다.⁶⁹⁾ 그리고 "사상 리론을 인민대중의 혁명투쟁과 결합시켜 현실에 구현하는 것은 령도방법에 달려있다"며 영도방법이 "혁명투쟁에서 리론적으로나 실천

적으로 독자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주장한다.⁷⁰⁾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현실적으로 북한이 처한 상황이 변할 경우 이에 적합한 새로운 영도방법이 제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김정일시대에 제시된 새로운 이데올로기들이 당시의 상황에서 주체의 사상 및 이론을 주민들과 결합시키기 위해 제시된 실천적 영도방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주체사상을 광의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보다 협의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북한의 이데올로기구조를 이해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이 “붉은기사상에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 원칙이 투철하게 구현되어 있다”면서 “붉은기사상의 의미와 내용은 혁명적 수령관에 귀착된다”고 말한 것⁷¹⁾ 역시 붉은기사상을 주체사상의 변용이라기 보다는 체제위기의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영도방법의 차원에서 제시된 실천이데올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본다. 북한이 ‘붉은기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사업’을 “전체인민들을 사회주의에 대한 필승의 신념과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일대사상전,” 패배주의, 비판주의, 개인리기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를 불사르고 온 나라에 혁명적 열정과 불굴의 기상 이차 넘치게 하기 위한 혁명적 공세”⁷²⁾라고 주장한 것도 결국은 주민들에게 그들이 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붉은기사상을 행동준칙으로 삼아 투쟁해 나갈 것을 강조한 것에 다름 아니다.⁷³⁾

붉은기사상을 주체사상의 변용이 아니라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이데올로기로 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붉은기사상의 내용이 주민들의 행동 준칙을 제시하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고난의 행군정신, 수령결사옹위정신, 혁명적 군인정신 등은 모두 북한주민들에게 당시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실천적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붉은기사상 이후에 제시된 이데올로기들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군중시사상이나 강계정신도 수령결사옹위정신과 혁명적 군인정신을 행동지침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이데올로기 계서구조를 주목할 때 김정일시대에 제시된 이데올로기들은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이데올로기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는 순수이데올로기 없이는 실천이데올로기가 정당화될 수 없고 실천이데올로기 없이는 순수이데올로기의 이념적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행위를 유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당하다.⁷⁴⁾ 즉 순수이데올로기를 인간에게 통일되고 의식적인 세계관을 부여하기 위하여 계획된 신념체계로,

실천이데올로기를 현실적으로 행동에 필요한 합리적 도구를 제공하는 관념체계로 인식할 때 주체의 사상은 북한주민들의 세계관이며 김정일시대에 제시된 이데올로기들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행동강령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3. 김정일시대의 이념적 정향

김정일시대는 북한 스스로 '고난의 행군' 시기로 표현하듯 내우외환의 최악의 상황에서 시작됐다. 그러한 시대상황은 필연적으로 북한의 모든 통치행위에 영향을 주었다. 김정일시대에 제시된 통치논리나 이데올로기 그리고 국가목표도 예외는 아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김일성 사망직후 당시의 상황을 30년대 말 김일성이 행한 고난의 행군 시절에 견주면서 그러한 상황인식에 맞게 통치논리와 이데올로기를 제시했다. 사회주의 3대진지론과 붉은기사상이 그러한 상황속에서 나온 것이다. 98년 무렵 고난의 행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는 판단에 따라 북한은 당면한 어려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려는 의지를 담아 고난의 행군 대신 사회주의 강행군을 강조하고 구보행군을 주장하는 가운데 강성대국론과 군중지사상을 제시했다. 그리고 2000년에 들어서는 당창건 55주년을 즈음해 고난의 행군에서 시작된 사회주의 강행군을 낙원의 행군으로 전환시키려는 의지를 내보이며 과학중지사상을 제시했다. 과학중지사상은 경제적 실리에 초점을 맞춘 실사구시적 입장에서 강성대국 건설 3대기동론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김정일시대가 시작된 이후 북한의 통치논리와 이데올로기는 철저하게 시대상황의 변화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는 북한의 통치행위가 상황적 여건에 종속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상황이 그러한 상황에 맞는 통치논리와 이데올로기를 내오게 하는 동인이 됐다는 것이다. 예컨대 붉은기사상을 비롯한 새로운 이데올로기들이 주체사상보다 더 강조된 것이나, 국방위원회를 최고통치기구로 내세우며 선군정치를 김정일의 정치방식으로 주장한 것, 그리고 강성대국론을 통해 새로운 국가목표를 제시한 것 등은 그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따라서 김정일시대의 북한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통치논리나 이데올로기 그리고 국가목표를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상호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이 2000년에 들어 보이고 있는 변화의 모습도 일시적이고 전술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시대상황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북한의 국가목표의

변화 등이 결합되어 가져온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북한은 김일성 사후 제시된 새로운 이데올로기들이 모두 김정일에 의해 제시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80년대 말 김정일주의가 공공연하게 언급됐던 것에 비추어보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김일성이 없는 김정일시대에 즈음한 북한의 이러한 행태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특히 최근에는 "온 사회를 김정일사상으로 일색화하자"는 구호마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북한이 김일성의 영생을 주장하는 가운데 김정일체제의 통치기반이 김일성에 있음을 언급하면서도 그 무게중심이 점점 김정일에게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을 직시할 때 이러한 현상의 정치적 함의를 헤아리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 우선 생각하여야 할 것은 김정일사상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점을 헤아리는 것이다. 필자는 북한이 주장하는 김정일사상이 김정일시대의 이데올로기를 포함해 80년대 중반이후 김정일의 영향하에서 제시된 이데올로기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붉은기사상의 기원이 김일성에 있음을 언급하면서도 이를 김정일사상으로 부르고 있고,⁷⁵⁾ 선군정치를 김정일에 의해 확립된 획기적인 정치방식으로 주장하고 있으며,⁷⁶⁾ 과학중시사상의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김정일의 의지에서 취하고 있는 것⁷⁷⁾ 등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김정일사상의 성격을 헤아리는 것이다. 필자는 김정일사상이 김일성사상과는 달리 실천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북한이 김정일사상을 "새로운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독창적인 해답을 준 창조적 사상리론"⁷⁸⁾으로 정의하거나 김정일사상의 내용을 실천적 내용에서 구하고 있는 것에서 뒷받침된다.⁷⁹⁾ 이렇게 볼 때 최근 북한이 "온 사회의 김정일사상화"를 주장하는 것은 97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온 사회의 붉은기사상화"를 제시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온 사회의 김정일사상화"를 북한의 최종목표인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구별하여 이를 실천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론은, 주체사상 해석을 프란츠 슈만의 이데올로기 위계구조론에 따를 경우, 협의의 의미로서 주체의 사상은 불변의 진리이지만 주체의 이론과 방법(영도방법), 다시 말해서 실천이데올로기는 시대상황에 따라 새로이 변화될 수 있다는 주장과도 부합된다.

김정일시대의 이데올로기를 실천이데올로기인 동시에 김정일사상으로 이해할 경우 과학중시사상이 기존의 이데올로기 패턴과는 다른 변화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 동안 북한에 의해 제시된 이데올로기들은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사상(紅: ideology)중심의 것들이었다. 따라서 북한의 이데올로기 해석 역시 교조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과학중시사상은 기술(專:expert)에 초점을 두고 북한사회에 변화의 기운을 북돋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북한이 규범적으로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어 아직 불확실하지만 김정일시대의 이데올로기가 시대상황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국가목표의 변화 등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국가에서 이데올로기가 체제변화 및 혁신을 도모하는 기능⁸⁰⁾을 한다는 사실과도 부합된다. 또한 중국에서의 변화과정이 이러한 북한적 현상을 이해하는 구체적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경우 덩 샤오핑(鄧小平)이 개혁 개방을 추진하면서 4개노선의 견지⁸¹⁾를 통해 핵심이데올로기를 고수하는 가운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이를 북한에 적용한다면 북한에서의 이데올로기가 지향하는 방향이 바뀐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협의의 의미의 주체사상을 순수이데올로기로 하고 주체의 이론과 방법 그리고 최근 새롭게 제시된 이데올로기들을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이데올로기로 이해한다면 주체사상이 북한에서의 변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협의의 의미의 주체사상이 추상적이고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얼마든지 변화를 수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최근 상황변화에 따라 새로운 실천이데올로기를 생산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수용한다면 북한에서 김정일사상의 강조는 북한의 이데올로기구조하에서 김정일의 통치자적 지위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과학중시사상의 제시는 이데올로기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구체적 사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정일시대는 이데올로기의 시대였다. 세계사적인 탈이데올로기시대에 북한이 이처럼 이데올로기를 양산한 것은 그들이 처한 엄혹한 시대상황에 기인한다. 이데올로기가 대체로 위기 및 긴장의 시기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북한으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들은 시대상황에 따라 바뀌어온 통치논리를 뒷받침하는 형태로 제시됐다. 이 또한 이데올로기가 특정한 역사적 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김정일시대의 이데올로기는 체제를 정당화하고 나아가서 주민들을 통합하는 기능뿐 아니라 북한체제를 건설하고 변화를 추구하는데도 일정하게 기여했

다. 그러한 점에서 최근 북한체제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은 발빠르게 새로운 통치논리와 이를 뒷받침할 이데올로기를 제시해온 결과일지도 모른다.

김정일시대의 이데올로기가 이와 같이 상황변화에 적응하며 주민통합 및 체제 안정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이를 주체사상의 변용담론으로 보기보다는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이데올로기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을 살펴보았다. 즉 프란츠 슈만의 이데올로기 계서구조를 원용해 협의의 의미의 주체사상을 목표문화로서의 순수이데올로기로 하고 김정일시대에 제시된 이데올로기를 전이문화인 실천이데올로기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체사상의 영도방법이 시대상황에 따라 변할 뿐 아니라 독자성을 지니고 있음을 언급한 북한의 주장에 의해서도 뒷받침됐다. 그리고 김정일시대의 이데올로기가 김정일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도 확인했다.

주목되는 것은 김정일사상을 실천이데올로기로 인식할 경우 향후 북한의 이데올로기가 추구하는 내용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최근 과학중시사상이 제시된 것은 앞으로 북한의 이데올로기에도 북한에서의 변화가 반영될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최근의 북한에서의 정책변화를 감안할 때 그러한 변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제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새로운 이데올로기는 북한이 추구하는 정책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주석 1) 김정일시대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우선 김정일이 당정군에 공식직위를 갖고 전반적으로 북한을 통치하기 시작한 90년대 초부터를 지칭할 수 있을 것이며, 보다 소급하면 80년대 초 후계자로 공식화된 후 김일성과 함께 통치 일선에 나선 때부터를 말할 수도 있다. 김일성은 80년대 중반부터 김정일시대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조선중앙방송, 2000.7.1, 정론). 이 글에서는 김일성 사망 이후부터를 김정일시대로 지칭하고자 한다.

주석 2) 김정일시대에 즈음해 북한에서는 주체사상보다 새로이 제시된 이데올로기들이 강조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예컨대 97년 신년공동사설은 종래의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자"는 구호를 "온 사회를 붉은기사상으로 일색화하자"로 바꾸어 표현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붉은기사상이 주체사상을 대체하는 것으로 파악하기도 했다.

주석 3) 북한은 99년도 신년공동사설에서 온 사회를 김정일사상으로 일색화할

것을 요구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로 김정일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공동사설,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1999.1.1.

주석 4) 이데올로기를 계서화 한 프란츠 슈만 (Franz Schurmann)의 논리가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필자가 프란츠 슈만의 논리를 차용한 것은, 그러한 이론적인 문제는 접어두고, 슈만이 중국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이데올로기를 계서화했던 시도가 북한에서도 원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석 5) 이항구 등 일부 북한전문가들은 북한이 91년 12월 초헌법적 조치로 김정일을 최고사령관에 추대한 것을 군사국가체제로의 전환으로 인식한다. Vantage Point August 1990 Yonhap News Agency, pp 8-10 참조.

주석 6) 1997년 2월 황장엽의 망명은 북한 권부내의 이념적 갈등을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이다.

주석 7)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90년대 중만의 고난의 행군은 북한에서 세 번째로 행해진 것이다. 첫 번째는 김일성과 그 일행이 38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중국 몽강현 남패자로부터 장백현 북대정자까지 일본군을 피해 행군한 것이고 두 번째는 56년 8월 종파사건을 전후한 시기의 어려움을 일컫는다.

주석 8) 붉은기사상이 처음으로 제기된 95년 8월 28일자 『로동신문』 정론 "붉은기를 높이들자"를 통해 북한은 세계정치사나 공산주의운동사에서도 모들 변화와 우여곡절이 수령의 서거로부터 기인했음을 지적, 북한 역시 김일성 사망으로 어려움이 시작됐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주석 9) 『로동신문』은 당창건 55주년을 "위대한 김정일동지 따라 역사의 유례 없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이겨낸 승리자들의 긍지높은 축전"으로 표현했다. 사설, "조선로동당의 앞길은 끝없이 휘황찬란하다." 『로동신문』, 2000.10.10.

주석 10) 공동사설, "붉은기를 높이 들고 새해의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자," 『로동신문』, 1996.1.1.

주석 11) 공동논설, "제국주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배격하자," 『로동신문』, 1999.6.1.

주석 12) 조선중앙방송, 2000.10.7.

주석 13)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미 70년대에 제시된 3대혁명에 대한 주장도 사상, 문화, 기술을 그 영역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90년대 중반에 제시된 통

치논리와 유사하다는 점이다. 결국 북한이 제시한 통치논리들은 시대상황에 따라 강조점이 다를 뿐 본질적으로는 유사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주석 14) 찰머스 존슨(Chalmers Johnson)은 공산주의국가에서 목표문화(순수이데올로기)를 달성하기 위한 전이문화(실천이데올로기)의 목표(중간목표)는 지도자들이 전인민의 노동계급화와 같은 목표문화의 필수물(requirements)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공업화와 같은 사회체제의 유지를 위한 필수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간의 미묘한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한다. Chalmers Johnson, "Comparing Communist Nations," in Chalmers Johnson (ea),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p. 8.

주석 15)이명남, "정치이데올로기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85년, pp. 69-70.

주석 16) 김일성,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주체사상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 91.

주석 17) 김일성, "조선로동당 건설의 역사적 교훈," 『주체사상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1), p 408

주석 18)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353.

주석 19) 김광용, "북한 '수령제' 정치체제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 49.

주석 20) 김일성, "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행한 사업총화보고," 『조선로동당 건설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0), p. 155

주석 21) 김일성,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하여," 『주체사상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1), p. 501.

주석 22) 김정일도 사회주의완전승리단계와 조국통일 실현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목표임을 밝히고 있다. 김정일,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 『근로자』 1985년 제11호, p. 9.

주석 23) 이 문제는 최근 북한의 변화를 전략적 변화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전술적 변화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필자는 북한의 최근의 변화를 전략적 변화로 이해하고자 한다. 다만 북한의 변화가 전략적 변화임을 뒷받침할만한 규범적 근거가 분명치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이 지니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김정일시대의 국가목표가 변했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객관적

정황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북한에서의 국가목표를 도출하고자 한다.

주석 24) 북한은 유엔에 남북한 동시가입에 응하면서 이것이 하나의 조선정책의 포기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남한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실상 하나의 조선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주석 25) 통일연구원의 홍용표 연구위원은 탈냉전이후 대외정책에서 북한의 최우선 국가목표를 체제의 생존으로 보고 이를 대내외적 안보위기의 탈피를 위한 안보문제와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제문제로 설정하고 있다. 홍용표,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 『북한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2000년 8월 28일 개최된 통일연구원 주최의 제38차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집, p 3.

주석 26) 라카토스(Imre Lakatos)는 모든 논리 속에는 핵심부문과 주변부문이 존재하며 핵심부문은 이론의 기본개념을 형성하고 주변부문은 핵심부문을 보호하는 보호대로 기능한다고 말한다. Imre Lakatos, 'Falsification and the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s,' in Imre Lakatos and A. Musgtave (eds), *Criticism and the Growth of Knowled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오명호, 『현대정치학이론』 (서울:박영사, 1994), pp. 58-62 참조

주석 27)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곽승지, "김정일체제의 21세기 국가전략: 강성대국 건설을 중심으로" 『통일연구』 제4권, 서경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1999년, pp. 55-62 참조

주석 28) 붉은기사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발표되어 있다. 곽승지, "북한의 붉은기사상과 그 실천이데올로기적 성격," 『통일경제』 1997년 5월, 현대경제사회연구원, pp. 50-65; 김근식, "1990년대 북한의 체제정당화 담론: '우리식사회주의'와 '붉은기철학'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안』 제8월2호(1999년), 통일연구원, pp. 37-59; 정성장, "김정일체제의 지도이념과 권력체계 '붉은기사상'과 당·정·군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1999년도 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 발표논문.

주석 29) 붉은기사상을 내오기 위해 이 무렵 붉은기의 상징성을 강조한 것으로는 『로동신문』의 95년 8월 28일자에 실린 정론과 9월 30일자 1면 상단에 실린 혁명가요 "높이들자 붉은기"의 악보와 가사 등을 들 수 있다.

주석 30) "붉은기는 조선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로동신문』, 1995년 1

월 9일.

주석 31) 위의 신문.

주석 32) 위의 신문.

주석 33) 위의 신문.

주석 34) 위의 신문.

주석 35) 공동사설,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내나라 내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건설해 나가자," 『로동신문』, 1997.1.1.

주석 36) "모두 다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자," 『로동신문』, 1996.10.18

주석 37) 김덕유, "붉은기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강행군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 『철학연구』 (199f.1), pp 15-16.

주석 38) 『로동신문』, 199a4.25.

주석 39) 『로동신문』, 1999.6.16

주석 40) 그람시(Antonio Gramsci)는 인간이 '유기적 이데올로기(세계관)를 통해 모든 형태의 의식을 획득한다면서 이러한 유기적 이데올로기가 특정사회 블록의 세계관이라면 이는 또한 모든 형태의 의식이 반드시 정치적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에 따라 그는 이데올로기와 정치를 동일시한다. 원유철 편, 그람시의 마르크스주의와 헤게모니(서울: 한울,1991), pp. 102-105.

주석 41) 김정일,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내나라 내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자," 평양방송, 2000.2.13 연합뉴스, 2000.2.21.

주석 42) 월간 『조선』, 1998년 4월호 참조

주석 43) 공동논설, "우리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 " 『로동신문』, 1999.6.16.

주석 44) 이와 관련해 북한은 심지어 "나라의 모든 정치, 군사, 경제적 역량을 통솔 지휘할 수 있게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권능이 강화된 것은 조국의 밝은 전도를 담보하는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었다"고 말한다. 위의 신문.

주석 45) 공동논설, "우리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 " 『로동신문』, 1999.6.16.

주석 46) 위의 신문.

주석 47) 위의 신문.

주석 48) 위의 신문.

주석 49) 위의 신문.

주석 50) 위의 신문.

주석 51) 위의 신문.

주석 52) 북한은 혼연일체가 궁극적으로는 영도자와 인민간의 혼연일체여야 한다면서 "영도자는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고 인민은 영도자를 결사옹위하는 영원한 운명공동체"라고 말함으로써 혼연일체가 결국 체제보위 논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로동신문』, 1999.2.16.

주석 53) 공동논설, "우리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1999.6.16.

주석 54) 강계정신을 김정일시대의 이데올로기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은 이것이 갖는 의미를여타의 다른 '정신'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즉 수령결사옹위정신 혁명적 군인정신 등 정신으로 표현된 여러 가지 하위담론들과는 달리 강계정신은 그 자체로 주민동원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동일한 용어를 다른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는 흔히 발견된다. 즉 주체사상과 붉은 기사상도 사상이라는 용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한 예이다.

주석 55) 공동논설, "강계정신으로 역세계 싸워나가자," 『로동신문』, 2000.4.22.

주석 56) 위의 신문.

주석 57) 공동논설 "과학중시사상을 틀어쥐고 강성대국을 건설하자," 『로동신문』, 2000.7.4.

주석 58) 위의 신문.

주석 59) 위의 신문.

주석 60) 위의 신문.

주석 61) 7월 4일 공동논설의 의미를 등소평의 초기 개혁개방정책과 비교한 글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Kwak Seung-ji, "Apparent Signs of Economic Policy Turn", Vantage Point, September 200, Seoul, Yonhap News Agency, pp. 2-7

주석 62) 위의 신문.

주석 63) Franz Schurmann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0) 참조J

주석 64) Ibid., pp. 21-22

주석 65) 그러나 규범적인 면과는 달리 실제로는 북한사회에 맑스-레닌주의가 아직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김정일은 1986년 7월 15일 발표한 자신의 논문 "주체사상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주체사상이 무엇 때문에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버리겠습니까"라고 언급, 북한이 맑스-레닌주의를 버리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주석 66) 일부 북한전문가들은 북한체제를 신정체제로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대표적인학자로는 이상우 전현준을 들 수 있다.

주석 67) 최근 국내학계에서는 주체사상을 순수이데올로기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다. 그러나 실천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장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주석 68) 80년대 중반이후에 제시된 이데올로기들도 기실 주체의 이론과 방법, 특히 방법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석 69) 한석진, "령도방법을 독자적인 구성부분으로 체계화한 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 혁명사상의 중요한 공적," 『철학연구』 1998년 4호(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8), p. 9.

주석 70) 위의 책.

주석 71) 김덕유, "붉은기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것은 사회주의강행군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 『철학연구』 1997년 1호 (평양: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7), p.15-13

주석 72) 공동사설, '지대한 당의 영도 따라 내나라 내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건설해 나가자,' 『로동신문』, 1997.1.1.

주석 73) 따라서 "온 사회를 붉은기사상으로 일색화 하자"는 구호는 기존의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 하자"는 구호와 그 성격과 내용이 다른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즉 후자는 이른바 북한사회를 공산주의사회로 건설하자는 것이며 전자는 공산주의사회의 건설, 예컨대 주체사상화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모든 주민들이 붉은기사상이라는 행동강령으로 무장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석 74) Franz Schurmann op.cit., pp. 21-22.

주석 75) 김덕유, "붉은기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것은 사회주의강행군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 『철학연구』 1997년 1호, p. IS.

주석 76) 고상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에의 근본특징," 『철학연구』 1999년 1호, pp. 17-20.

주석 77) 『로동신문』, 2000.7.4; 리창근, "과학기술중시로선을 틀어쥐고 나가는 것은 강성대국건설의 중요한 담보" 『경제연구』 2000년 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0), pp. 9-11

주석 78) 장경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는 곧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 『철학연구』 1995년 1호, p 3.

주석 79)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김정일사상의 핵심 내용으로 "선군정치사상, 사회주의고수사상, 자력갱생사상이 핵을 이룬다"고 적고 있다. 『조선신보』, 1999.1.8.

주석 80) 이명남, 앞의 논문, pp 85-86.

주석 81) 등 샤오핑(鄧小平)은 79년 3월 '4개 현대화를 실현하는 기본적인 조건'으로 이른바 '4개기본원칙의 견지'를 제시, 중국에서의 경제개혁이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님을 밝혔다. '4개 기본원칙의 견지'는 ①사회주의 견지 ② 프롤레타리아독재 견지 ③공산당지도의 견지 ④맑스-레닌주의 및 모택동사상의 견지이다. 백병훈, 『중국식사회주의론』 (서울:동방도서, 1991), pp. 256-260 참조

사회주의국가의 경제행위에 대한 이론정립을 위한 시론: 북한의 경제정책 결정메카니즘을 중심으로

이영훈(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I. 머리말
II. 이론적 전제: Kalecki 자본주의경제 및 사회주의경제이론
III. 북한의 경제정책 결정
IV. 맺음말

I. 머리말

기존 북한경제연구들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연구방법론의 부재일 것이다. 그 결과 북한경제연구는 북한경제의 실상 및 급변하는 남북관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¹⁾ 사실 북한의 자료제약은 북한경제분석의 진입장벽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방법론의 모색을 자극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자극에도 불구하고 연구방법론의 부재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북한경제를 분석할 수 있는 정형화된 이론(formal theory)이 없음에서 온다. 사회주의경제이론가로서 랑게(O. Lange), 칼레츠키(M.

1) 일례로 공신력을 인정받는 한국은행의 1990년대 북한경제성장률 추정은 1990년대 중·후반의 극도로 곤란했던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한국은행의 성장률 추정에 대한 문제제기는 그 기간을 보냈던 북한주민들의 증언과 같은 기간 북한의 재정수입과 지출 추이 비교에 근거한다. 1990년대 북한의 재정수입과 지출증가율은 한국은행이 추정한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감소폭이 크며, 1998년 북한의 세출은 1981년 수준에 불과하다. 이로 볼 때, 한국은행은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과대 추정했을 가능성이 크다.

Kalecki), 부르스(W. Brus), 노브(A. Nove), 셀루츠키(R. Selucky), 식크(O. Sik), 코르나이(J. Kornai) 등이 알려져 있으나, 이들 중 신고전학파나 케인즈 학파의 이론처럼 체계적이고 정형화된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이는 없다. 그만큼 사회주의 경제이론의 발전은 정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체는 사회주의경제의 이론화가 쉽지 않음을 반영한다. 그것은 사회주의 경제는 정치에 의해 지배된다는 기존의 통념과 무관하지 않다. 단적으로 1938년 소련의 몰로토프(Molotov)가 “(사회주의)가격이란 경제학이 아니라 정치학에 관한 것”이라는 경고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이것은 국가계획에 의해 운영되는 경제체제인 만큼 정치적 요인이 강하게 지배했고, 그에 따라 일관된 경제이론으로 추상화하기 어려웠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글은 일차적으로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정책 결정메카니즘을 칼레츠키의 자본주의·사회주의경제이론을 분석방법론으로 적용하여 설명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주의 경제이론의 정립가능성을 열어 보고자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행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이자, 사회주의경제의 거시분석이 된다. 사회주의에서는 정부가 계획을 통해 전반적인 자원배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정부행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은 곧 거시경제분석으로 직결되게 되며²⁾, 이런 측면에서 사회주의국가의 경제행위분석은 사회주의 경제이론의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주요 경제정책으로서 성장, 투자, 가격결정, 소득분배정책 등이 무엇에 의해 규정되며,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 틀로서 칼레츠키의 사회주의경제이론 외에 자본주의경제이론 - 적대적 경쟁하의 자본가의 자본축적과 소득분배이론 - 을 적용하는 이유는, 사회주의경제에 적용하기에는 체제와 경제주체의 차이에 따른 한계는 있지만, 그들이 처한 적대적 경쟁에서의 생존이란 제1의 과제와 생산수단소유에 따른 지배관계 면에서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주의국가를 지배관료와 노동자로 구성된 거대독점기업으로 대체해 볼 수 있다면, 자본주의기업들이나 사회주의 국가들이 처한 경쟁의 성격은 ‘적대적’이며, 이러한 적대적 경쟁 하에서 ‘생존’은 그들의 의사결정을 우선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또한 자본주의의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는 사회주의에서는 지배관료와 노동자의 관계와 많은 유사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국가를 거대독점기업으로 대체해 볼 수 있다면, 자본주의 기업의 경제행위에 대한 이론은

2) 이런 점에서 자본주의경제의 미·거시 분석의 구별과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사회주의국가의 경제행위를 고찰하는 데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II. 이론적 전제: Kalecki 자본주의경제 및 사회주의 경제이론

칼레츠키(1899-1970)는 20세기 가장 뛰어난 경제학자들 중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The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는 칼레츠키를 케인즈(Keynes), 맑스(Marx)와 함께 현실 경제 및 사회문제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 지대한 기여를 한 지적 전통의 세 가지 원천으로서 평가하고 있다. 칼레츠키는 케인즈의 아이디어로 알려져 있는 유효수요이론을 케인즈에 3년 앞서 발표하였고, J. Robinson, Eichner, Kregel 등은 post-Keynesian의 전통에 케인즈보다 칼레츠키가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³⁾ 이러한 그의 학문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Harcourt가 칼레츠키를 “현대 위대한 경제학자들 중에 가장 무시된” 학자로 묘사하고 있을 정도로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는 않다.

칼레츠키는 폴란드에서 태어나, 1936-55년까지 서구와 미국에서 자본주의경제를 연구하였고, 매카시즘으로 폴란드로 귀국하게 된 1955년 이후 죽을 때까지 고국에서 정책개발에 직접 참가하면서 자본주의 및 사회주의경제문제를 연구하였다. 한때 전망계획위원회(the Commission of Perspective Planning)의 의장을 역임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책개발에 참여하였으나, 중공업우선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적 입장은 그를 곤경에 빠뜨렸고 그의 추종자들이 숙청되거나 출국당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그의 이론은 대부분이 자본주의경제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가격결정, 투자 및 경기변동, 소득분배이론, 화폐이론 등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사회주의경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은 성장이론에 국한되고 있다. 여기서는 칼레츠키의 자본주의경제이론 중에서 사회주의경제분석에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을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그것은 사회주의국가의 경제행위분석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서, 성장 및 투자결정, 이를 위한 재원조달 방식과 관련된 가격결정 및 소득분배정책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들을 정리해보려는 것이

3) M. C. Sawyer, *The Economics of Michal Kalecki*, pp. 1-3.

다.

우선, 칼레츠키의 사회주의경제성장이론을 살펴보자.⁴⁾ 이는 사회주의 계획작성의 순서상 가장 먼저 결정되는 것이 적정성장률 및 투자율이기 때문이다. 칼레츠키는 단기소비 희생을 당연시하고 성장을 최고의 선으로 간주하는 당시의 성장방식을 비판하였다. 그것은 사회주의의 궁극적 목적이 성장이 아니라 소비에 있기 때문이며, 이는 당시 동구에서 발생했던 주민들의 저항을 반영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그는 정책당국이 개인들의 현재 소비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것이 아니라, 단기소비희생과 장기소비이득을 비교하여 적정성장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존 성장방식의 근거인 펠드만 성장이론이 간과했던 문제들을 검토했다. 즉 현실적으로 성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노동력부족, 투입물의 수입수요증가, 특정 부문의 병목현상(bottleneck) 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①자원 및 특정 부문의 병목현상과 ②성장률제고에 따르는 소비제약의 정치·사회적 비용의 문제 등은 사회주의성장의 제약요인으로서 Kalecki 성장이론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게 된다. 요컨대 그의 사회주의성장이론은 이러한 두 가지 제약 하의 적정투자율 및 성장률결정이론이라 요약할 수 있겠다. 그의 사회주의성장이론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r_{t+1} = \frac{i_t}{m_{t+1}} + u_{t+1} - a_{t+1} \quad 5)$$

r_{t+1} : t+1기의 성장률, i_t : $\frac{I_t}{Y_t}$, m_{t+1} : 자본산출계수(1단위 생산에 필요한 투자),

u_{t+1} : 기술적·조직적 제약의 해결, a_{t+1} : 감가상각률

m , a 와 u 가 일정하다면, i 가 a 만큼 증가할 때, 성장률은 $\frac{a}{m}$ 만큼 증가하며, 그에 따라 단기의 소비는 감소한다. 그는 여기서 투자증가에 따른 이득과

4) 자세한 내용은 이영훈, 『북한의 경제성장과 축적체제에 관한 연구(1956-64년): Kaleckian CGE모델분석』을 참조하라.

5) 단순화를 위해, $Y = I + S + C$ 를 $Y = I + C$ 로 변형하면(재고투자 S를 투자 I에

합치시키면), $r = \frac{i}{k} - \frac{m}{k}(a - u)$ 은 $\mu = 0$ 가 되므로, $k = m$ 이 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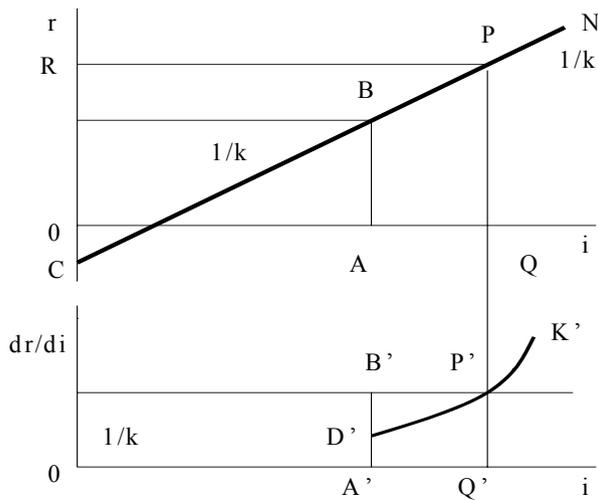
$r = \frac{i}{m} - a + u$ 이 된다.

손실을 감안하여 적정투자율과 적정성장률을 결정하는 정부결정곡선 (government decision curve)을 도입하였다. 투자비율 i 증가, 즉 소비비율 $(1-i)$ 감소에 따른 근로자들의 저항 $w(i)$, $w' > 0$ 이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i 증가에 따른 순이득을 $\Delta r - w(i) * \frac{\Delta i}{(1-i)}$ 으로 규정하였다. 정부는 손실과 이득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는 수준, 즉 순이득이 0가 되는 수준에서 i 를 결정하는 정부결정곡선을 제시하였다: $\frac{\Delta r}{\Delta i} = \frac{w(i)}{(1-i)}$.

이때, 적정투자율은 <그림 2-1>에서 $E'N'=DK$ 인 점 i_1 이 된다.

$E'N'$ 는 위 성장식에서 i 와 r 간의 기술적 관계를 표현한다. 즉 OE' 는 $\frac{1}{m}$ 이 되며, 투자와 산출간의 CRS(constant return to scale)를 나타낸다. DK 는 $\frac{w(i)}{(1-i)}$ 이며, 정부결정곡선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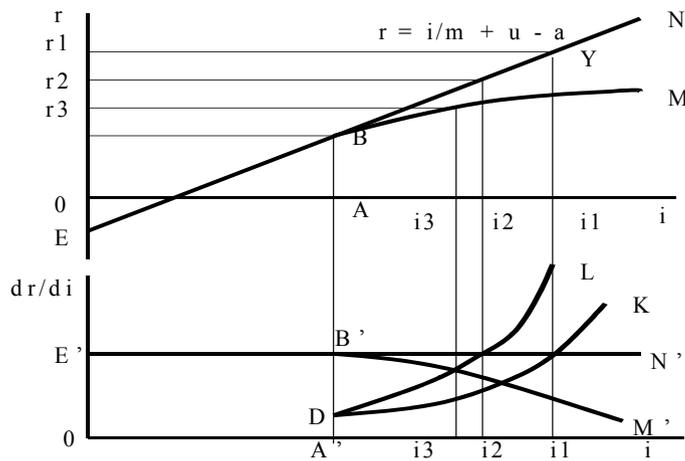
<그림 2-1> 적정성장률과 적정투자율의 결정



위 성장식에서 m , a 와 u 가 일정하다면, 투자지출이 소득보다 빨리 증가할

경우(i 가 증가한다면), 가속성장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앞에 제시된 성장의 제약요인들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 <그림 2-2>을 통해 성장률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기로 하자.

<그림 2-2> 성장제약요인과 적정성장률 결정



① 현재 노동력제한이 없으나, 향후 고속성장으로 노동력제약에 직면할 것이 예견된다. 이때 정부가 성장률을 기존의 자연성장률 r_0 에서 Δr 만큼 올리려 할 때, $f(r-r_0)$ 는 그들 제약요인으로 인해 지금까지의 성장률 제고보다는 작을 것이다: $0 < \frac{\Delta f(r-r_0)}{\Delta r} < 1$, for $\Delta r > 0$. 정부는 이 점을 정부결정곡선에 고려하게 되며, 적정 투자율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frac{\Delta r}{\Delta i} = \frac{w(i)}{(1-i) \frac{\Delta f(r-r_0)}{\Delta r}}$$

그에 따라 정부 결정곡선은 DK에서 DL로 이동하게 되며, 그 결과 노동력 제약이 없을 때보다 낮은 적정투자율 i_2 이 채택되며, 그 결과 성장률은 낮게 책

정된다. 한편 노동력부족 외에도 수입수요증가, 특정부문의 bottleneck 등 다른 외적 제약이 가해지는 경우에도 정부결정곡선은 DK에서 DL로 이동하게 되고, 투자율과 성장률은 각각 i_2 , r_2 로 낮아지게 된다.

② 고속성장의 진행으로 투입물의 수입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무역수지의 균형을 위해 수출을 늘여야 한다. 그러나 수출을 곤란케 하는 기술·조직적 제약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수출증가는 투자를 더욱 증가시켜야만 가능하게 된다. 이는 자본산출계수 m 의 증가를 의미하고, 그 결과 직선 EBN은 곡선 EBM으로, 직선 E'B'N'은 곡선 E'B'M'으로 대체된다. 따라서 적정투자율은 처음보다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 성장률도 전보다 하락하게 된다. 더욱이 이것은 노동력 부족의 경우처럼 정부 결정곡선을 왼쪽으로 이동하게 만들어 적정 투자율과 적정성장률은 각각 i_3 , r_3 로 더욱 낮아지게 한다.

③ 특정 산업부문에서의 병목현상은 경제 전체의 발전을 제약한다. 이때 수입을 늘이거나 수출을 줄여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역수지의 균형을 깬다. 물론 다른 부문에서의 생산증가를 통해 수입을 줄이거나 수출을 늘임으로써 무역수지 균형을 꾀할 수도 있으나, 기술적·조직적 제약으로 인한 수입에의 절대적 의존 또는 취약한 수출경쟁력 때문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특정 부문에서의 bottleneck이 발생하면, ②에서와 같은 이유로 m 을 증가시키게 된다. 더욱이 병목현상은 일정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요컨대 칼레츠키는 정부결정곡선이란 개념을 통해 제약조건 하에서 사회주의국가가 어떻게 적정성장률 및 투자율을 결정하는지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성장이론은 현실사회주의성장을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한 분석방법론을 제공한다.⁶⁾

다음으로 사회주의국가의 투자, 가격 및 소득분배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칼레츠키의 자본주의경제이론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는 사회주의국가가 지배관료들과 노동자들로 구성된 독점기업이라고 가정할 수 있으며, 칼레츠키의 자본주의 분석의 특징이 독점적 성격을 강조하고 완전경쟁의 측면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그의 가격이론과 소득분배이론에 국한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6) 그의 이론을 분석방법론으로 북한의 경제성장을 분석한 논문으로 이영훈, 「북한의 성장전략과 위기의 기원: 1956-64년」, 1999 가 있다.

우선, 그의 가격결정이론을 보면, 가격은 평균가변비용에 마크업비율을 곱해 주는 mark-up pricing으로 결정되며($p = (1 + m)AVC$) 이때의 마크업비율 m 은 독점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고 있다. 참고로 란지로티(Lanzillotti)는 target-return pricing⁷⁾을 제시하였는데, 그 이론에 따르면 profit margin이 투자를 고려하여 정한 이윤율(target rate on investment)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즉, 가격은 full-cost pricing으로 결정되며($p = (1 + m)UC$, ($UC = AVC + AFC$)), 기업이 목표로 하는 이윤량은

$$r^*pK = r^*p(vq^*/u^*) = m(UC)q^*$$

이 된다. 따라서 마크업은 $m = \frac{r^*v}{u^* - r^*v}$ 으

로 결정된다(r^* : 기업이 목표로 하는 이윤율, $v = \frac{K}{q^e}$: 자본산출비율, q^e : 이론

적 생산능력, $u^* = \frac{q^*}{q^e}$: 정상가동률). 란지로티의 target-return pricing은 마크업비율이 독점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Kalecki에 비해, 대부분의 생산수단이 국가독점이고 국가가 가격과 이윤율을 정하는 사회주의경제현실에 훨씬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격은 생산비용의 변화에 의해 결정되는 비용결정가격(cost-determined prices)과 수요 측의 변화에 의해 결정되는 수요결정가격(demand-determined prices)을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주로 최종재의 가격에 적용되는데, 최종재의 공급은 유희설비로 인해 가격의 변화없이 수요의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최종재산업은 대체로 과점의 형태를 띠는데, 그 결과 mark-up pricing을 하며, 생산비용이 변하면 가격이 변하게 되고 경직적이다. 반면 후자는 원료, 농산물 등에 적용되는데, 이들의 경우 공급은 비탄력적이고 그 결과 수요가 변하면 가격이 변하게 되며, 완전경쟁의 경우처럼 탄력적이다. 그런데 칼레츠키는 최종재의 독과점부분에 분석의 초점을 두었다.

그의 소득분배이론에 따르면, 첫째, 자본주의 사회에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계급과 그렇지 못한 노동자계급이 존재하며, 그들은 각각 재산소득(property income)과 노동소득(labor income)을 생산의 대가로 수취한다. 둘째,

7)

이들은 각기 다른 저축성향을 보이게 되는데, 자본가들은 높은 저축성향을 보이는 반면 노동자들은 낮은, 거의 0에 가까운 저축성향을 보인다. 저축에 대한 이러한 칼레츠키의 가정은 Ricardian-Marxian 전통을 따르는 것으로서, 노동자들의 임금은 단순히 노동력의 재생산비에 불과하다는 데서 출발한다. 셋째, 자본주의체제는 적대적 경쟁체제이며 그 체제의 목적은 소비가 아니라 이윤추구에 있다.

이것의 함의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노동자의 노동소득은 거의 전부가 소비로 지출된다. 반면, 자본가의 소득은 이윤, 지대, 이자 등으로 분배되며, 이들은 투자와 소비로 지출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국민소득 항등식이 성립하게 된다.

$$\begin{aligned} Y &= \pi + W \\ &= I + C_C + C_W \end{aligned} \quad (1)$$

(π : gross profit, W : wage and salaries, I : 총투자, C_C : 자본가소비, C_W : 노동자소비)

$$\pi = I + C_C \quad (2)^8$$

둘째, 식(2)에서 이윤이 먼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자본가들의 투자와 소비지출은 별도로 결정되고 그 결과 이윤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칼레츠키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자본가들이 과거보다 많은 소비와 투자를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더 많은 이윤을 결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투자와 소비결정이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지 그 역은 아니다.”⁹⁾ 는 자본가들의 결정방식에 근거

8) 만약 정부와 해외부문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Y &= \pi + W + T \\ &= I + (C_C + C_W) + G + (X - M) \\ &= \pi + (W - C_W) + (T - G) + (X - M) \end{aligned}$$

여기서 $T - G = 0$, $X - M = 0$ 그리고 칼레츠키의 가정대로 $W - C_C = 0$ 라면, $\pi = I + C_C$ 이 된다.

하고 있다.¹⁰⁾ 이것은 마치 케인즈의 국민소득 결정에서 $Y = C + I$ 에서 C 와 I 가 별도로 결정되며, 그 결과 Y 가 결정되는 방식과 같은 맥락이다. 이는 기업의 성장극대화, 불확실성, 재원조달의 제약 등을 가정하고 있는데, 이윤극대화, 확실성, 재원조달의 무제약을 가정하는 신고전학파의 인과관계와는 반대가 된다.¹¹⁾

셋째, 투자와 저축간의 관계를 보면, 과거의 투자결정은 현재의 투자지출을 결정하며, 저축은 그러한 투자지출에 적응하게 된다. 이것은 신고전학파의 저축과 투자간의 인과관계와는 반대가 되는 논리로서, 칼레츠키는 투자결정이 저축에 의해 결정된다기보다 자율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의 논리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만약 기업의 투자가 저축을 초과한다면 ($S_{t-1} < I_t$), 기업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이는 투자재산업의 생산증가 ==> 고용증가 ==> 소득증가를 낳으며, 이는 다시 소비재산업의 생산 증가 ==> 고용 증가를 낳는다. 이 과정에서 이윤증가는 저축증가를 낳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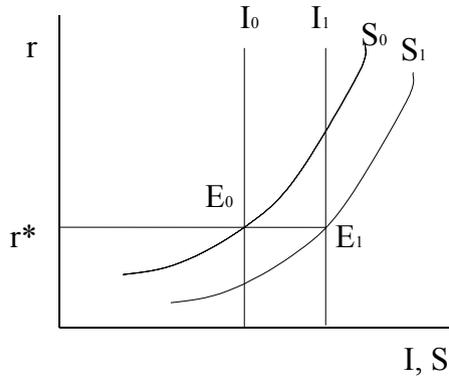
이를 함수 및 곡선으로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투자는 이자율과 거의 무관하며, 저축은 이자율과 소득의 함수 ($S = f(r, Y)$)이다. E_0 에서 $I_0 = S_0$ 인데, 투자가 I_1 으로 증가한다면, 이자율은 변동하지 않고 소득증가(자본가의 이윤증가)에 의해 저축은 S_1 으로 증가하여 E_1 에서 $I_1 = S_1$ 이 된다.

9) M. Kalecki, *Selected Essays on the Dynamics of the Capitalist Ec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pp. 78-79.

10) 이러한 투자와 소비 그리고 이윤결정에서의 인과관계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충족시키기 위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윤을 조정한다(Wood, 1975; Eichner, 1973)는 관점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11) A. Wood, *The Theory of Profi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pp. 3-9.

<그림 2-3> 투자=저축



요컨대 칼레츠키는 현대자본주의를 독과점, 불완전경쟁으로 특징짓고 있다. 그러한 적대적 경쟁 하에서 기업은 경쟁에서의 생존을 우선시하며 따라서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성장극대화(growth maximization)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가능한 투자(자본축적)를 확대하려 하며, 그 결과 얻어지는 것이 이윤이라는 논리 전개를 보이고 있다. 이를 란지로티(Lanzillotti)의 target-return pricing을 수용하여 투자량, 이윤, 그리고 가격간의 관계를 정리하면, 투자량이 결정되면 그에 맞는 마크업비율을 정하고 이를 full-cost pricing으로 통해 가격에 반영한다는 것이다.¹²⁾

III. 북한의 경제정책 결정

1. 북한의 성장 및 투자정책

소련의 중공업우선의 성장정책은 고도성장을 위한 발전노선으로서, 단기간에 선진제국주의국가들을 따라잡지(catch up) 않으면 혁명이 와해될 위기상황에서

12) A. Wood(1975)와 A. S. Eichner(1973)는 투자가 이윤을 결정하고, 이윤확보를 위해 가격결정(markup)한다고 보고 있다.

비롯되었다. 이러한 위기상황은 저발전국에서 사회주의혁명이 발생했을 경우 그 혁명은 시장의 힘에 의해 곧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Marx의 목시론적 언급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인간이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될 그런 힘으로 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은 모두 생산력의 고도의 발전수준을 다시 그 전제로 한다.…… 생산력의 발전 없이는 단지 궁핍만이 일반화 될 뿐이고, 따라서 궁핍과 함께 필수품을 둘러싼 투쟁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 수 없어, 온갖 해묵은 더러운 일들이 다시 발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 위의 것들 없이는 공산주의는 단지 하나의 지역적인 현상으로만 존재하며, …… 미신에 둘러싸인 우물안 개구리 신세를 벗어나지 못한다. 교류의 확장은 지역적 공산주의를 없애버릴 것이다.”¹³⁾

그러나 현실 사회주의는 맑스의 예견과 달리 후진국에서 그것도 전쟁과 전쟁 위기 속에서 시작되었고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취약한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 및 체제 우월성의 시현으로서 고속성장은 신성불가침의 가치로 인정되었다.

북한 또한 한국전쟁과 그로 인해 첨예화된 체제경쟁은 대내외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중공업우선주의를 빠르게 수용할 수 있게 하였다.¹⁴⁾ 북한에서의 중공업우선주의는 “속도(성장)와 균형”의 관계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 김일성은 속도를 사회주의경제의 합법칙성으로, 균형을 그것의 전제로 양자간의 관계를 사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속도는 목적이고 균형은 그를 위한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전속도를 늦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계획성과 균형성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속도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¹⁵⁾

13) Marx & Engels, *Die Deutsche Ideology*, 1846, 박재희 역, 『독일이데올로기 I』, 서울: 청년사, 1988, p. 66.

14) 북한의 중공업우선주의 성장정책에 대해서는 이영훈, 『북한의 성장전략과 위기의 기원: 1956-64년』, 한국사회경제학회, 『신자본주의와 국가의 제도전(사회경제평론13호)』, 1999, 서울: 풀빛을 참조하라.

15)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 당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김일성 저작집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1, p. 201.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추격발전을 추구하던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처럼¹⁶⁾ 북한의 경우도 자원배분의 균형 이전에 성장이 우선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이 기업들이 이윤극대화가 아니라 성장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칼레츠키의 자본주의기업의 투자 및 가격결정이론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

축적 우선의 사회주의 경제정책은 그들의 자원배분을 일차적으로 규정하는 계획작성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칼레츠키에 따르면, 국가가 계획작성을 할 때 제일 먼저 성장률을 결정하고, 다음 이를 달성할 투자율을 결정한다.¹⁷⁾ 즉

$Y = C + I$ 라 할 때, $i = \frac{I}{Y}$ 를 결정하게 되면, $1 - i = \frac{C}{Y}$ 가 자동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의 우선 결정은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김일성의 연설에서 입증된다.

“노임수준을 너무 높게 정하여도 안되고 너무 낮게 정하여도 안됩니다. 노임수준을 정하는 것은 해마다 국민소득을 어떻게 분배하고 이용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필요한 축적을 먼저 내놓고 인민들의 소비몫을 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¹⁸⁾

물론 (신)고전학파의 입장처럼, 사회주의국가에서 투자는 저축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국가에서 전년도의 세입보다 금년도의 세출이 대부분 크게 나타남($S_{t-1} < I_t$)을 볼 때, 금년도의 투

16) 1931년 스탈린은 “우리는 서구의 발전된 사회에 비해 150년이나 뒤쳐져 있다. 우리는 이 간격을 10년 내에 좁혀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쳐부술 것”이라고 하였다. 중국의 대약진 시기의 구호도 “15년 내에 영국을 앞지르고 미국을 따라잡자”였다. 김일성도 1958년에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세 차례의 5개년계획으로 이룩한 수준을 우리는 두 차례의 계획으로 이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차문석,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정책』(성균관대학교대학원 정치외교학 박사학위논문), 1999, p. 29.

17) M. Kalecki, “On the Method of Constructing a Perspective Plan”, 1957, *Collected Works of Michal Kalecki III*, Oxford: Clarendon Press, 1992.

18) 김일성, 『사회주의건설에서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데 대하여』(재정부 문일군협의회에서 한 담화,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p. 360-361.

자는 전년도의 세입(저축)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그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의 목표성장률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기업의 투자를 결정하는 것도 저축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인 것처럼, 사회주의에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성장인 것이다. “축적하라 축적하라! 이것이 모세이며 예언자이다!”(가장 중요한 계율이다) 고전파경제학이 ‘브르즈와 계급의 역사적 사명’을 표현한 축적을 위한 축적, 생산을 위한 생산은¹⁹⁾ 사회주의국가들에서 ‘국가의 역사적 사명’으로 다시 한번 부활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칼레츠키의 자본주의 투자결정이론을 사회주의 국가에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북한의 가격결정 및 소득분배

사회주의에서 축적을 위한 주된 수단은 국민소득의 약 2/3 정도를 차지할 만큼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정이다. 그리고 가격에는 조세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접세 성격의 ‘거래수입금’(turnover tax)과 법인세 성격의 ‘국가기업이익금’(deductions from enterprise profits)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사회주의의 가격은 조세수입의 주된 통로가 되고, 조세수입은 계획된 성장을 위한 축적의 원천이 된다.

물론 간접세는 자본주의에서도 존재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간접세의 비중은 훨씬 적은 것이며, 사회주의의 간접세는 주된 이유는 생산과 소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²⁰⁾²¹⁾

19) K. Marx, *Capital I*, 1887, 김수행 역, 『자본론 I』, 서울: 비봉출판사, 1990, p. 753.

20) 월친스키는 사회주의가격제도의 중요한 특성으로 이중가격제(the two-tier price system)-생산자(기업이나 국가)가 지불하는 생산자가격(producers' price or factory price)과 소비자가 지불하는 소매가격(wholesale price)-의 존재를 지적하고 있다. J. Wilczynski, *The Economics of Socialism*(4th ed.),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2, p. 133. 이는 간접세의 기능과 비중을 강조한 것으로서, 두 종류의 가격이 상이한 주된 이유는 생산과 소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Ibid.*, p. 139.

21) 박진은 북한의 거래세의 역할을 균형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계획된 공급량과 수요량이 일치하도록 가격수준을 정함으로써 미시적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다. 둘째, 소비자의 구매력을 조절함으로써 소비자의 소득과 소비재생산과의 격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inflationary

반면 직접세(소득세)는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북한의 경우 주민들의 소득세는 1975년에 폐지되어 “세금없는 나라”임을 과시해 왔다. 즉 사회주의의 축적의 재원은 조세에서 구하고 있으며, 조세는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 결국 주민들의 소득에서 출연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간접세의 크기는 무엇에 의해 규정되는가? 윌친스키(Wilczynski)에 따르면, 거래세의 부과율이 여러 생산물의 수요탄력성과 중앙당국의 사회 전체적인 선호를 반영하여 결정된다²²⁾고 하고 있다. 한편 돕(M. Dobb)의 경우는 이 보다 구체적으로 투자와 간접세 및 가격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논리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²³⁾ 폐쇄경제 하에서 소득은 노동소득만으로 이루어지고, 그 소득은 모두 소비재 구입에 사용되며 신규투자가 없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총임금 wx (임금수준 w , 노동자총수 x)는 재화의 총비용 그리고 소매시장에서의 주민의 총지출과 같아야 한다: 소득=생산비=지출= wx . 그러나 만일 순투자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노동력의 일정 비율 I/y 가 새로운 공장 설비, 반제품이나 생산수단의 비축 확대에 사용된다면, 소비재의 공급과 국민지출 사이의 위키 식은 더 이상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즉 소비재생산비는 주민총지출보다 $wx \cdot I/y$ 만큼 작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소매시장에서 주민의 총지출은 여전히 wx 이나 그 기간 동안 소비재생산비는 $wx \cdot (y-I)/y$ 일 뿐이며, 결과적으로 주민지출-소비재생산비용 = $wx - wx \cdot (y-I)/y = wx \cdot I/y$ 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총소비 지출과 비용가격으로 평가된 소비재 공급 사이의 차이는 수행된 투자지출(소비재의 임금비용과 관련된)의 양에 비례할 것이다. 투자지출에 적용되는 것은 다른 지출, 예컨대 군비지출에도 적용될 것이다. 이때 소비지출과 소비재공급 사이의 괴리는 소비재 소매가격을 $wx \cdot I/y$ 만큼 그 비용 이상으로 인상시킴으로써 조정된다. 그 인상폭이 거래세의 크기가 된다.

비록 단순한 논리지만 이를 통해 사회주의에서의 소비재 공급과 수요, 간접세징수, 그리고 투자지출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돕의 논리를 그림으로 재구성해 보면, <그림 3-1>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생산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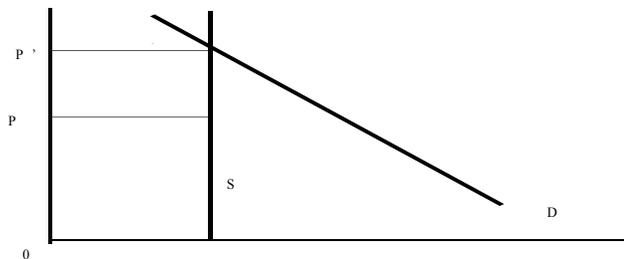
gap)을 제거하는 거시적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다. 박진, 『북한재정의 현황과 추이』, 한국개발연구원, 1994, p. 64. 이러한 평가는 미·거시 수준에서 공급부족에 따른 소비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소비억제를 위한 수단인 측면보다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측면을 강조하고자 한다.

22) Wilczynski(1982: 135).

23) M. Dobb, *Soviet Economic Development Since 1917*, London: Routledge & Kegan, 1972, 임휘철 역, 『소련경제사』, 서울: 형성사, 1989, pp. 446-447.

$OP(wx*(y-I)/y)$ 이고 최종균형가격이 $OP'(wx)$ 이면, 거래세는 $PP'(wx*I/y)$ 가 될 것이다. 따라서 투자지출이나 군비지출이 증가하면, I/y 가 증가하게 되므로 거래세는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²⁴⁾

<그림 3-1> 거래세액의 결정



이러한 사회주의의 거래세액의 결정논리는 자본주의 독점기업이 투자의 규모에 따라 이윤의 크기를 결정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란지로티(Lanzillotti)의 target-return pricing과 그 논리가 매우 흡사하다. 이를 좀더 확대하면, 거래세 뿐만 아니라 국가기업이익금이나 협동단체이익금 또한 가격에 반영되어 징수되는 조세이며 국가의 투자재원인 만큼 그 크기는 일차적으로 투자규모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에서 거래수입금은 “국영기업소, 생산협동조합에서 생산된 소비품의 가격에 들어 있는 사회순소득의 한 부분”으로서, 국가예산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²⁵⁾ 국가기업이익금은 거래수입금과 함께 사회주의기업소, 기관들에서 이루어진 사회순소득의 분배형태로서 국가예산수입의 기본부분을 이룬다.²⁶⁾ 『사회순소득』은 잉여

24) 소련에서 1차5개년계획(1928-32년) 기간중 투자수요와 국방비 지출의 급증을 1930년 조세개정을 통해 과거의 공업인가세를 계승한 거래세의 신설로 충당하였다는 사실에서 입증된다. 1930년대 초에는 이 거래세 때문에 세입이 증가하였고 40년대에는 무려 연방예산 세입의 70%까지 차지하였다. 이 10년 동안 투자지출과 국방지출의 상승곡선과 거래세에 의한 세입의 증가사이에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찾아볼 수 있다. Ibid., pp. 293~448.

25) 『경제사전』(1985), pp. 68-69.

26) 국가기업이익금은 사회순소득의 분배형태라는 의미에서는 거래수입금과 공통

생산물의 가치부분을 표현하지만, 잉여가치로 되지 않는다. 그것은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당면한 물질생활의 향상과 전망적 소비를 위한 축적에 이용되기 때문이다. 사회순소득은 「중앙집권적순소득」과 「기업소순소득」으로 구분되고, 국가의 중앙집권적순소득은 「거래수입금」의 형태로 국가예산에 동원되고, 기업소순소득의 많은 부분은 「국가기업이익금」과 「협동단체이익금」의 형태로 국가예산에 동원된다.²⁷⁾ 기업소순소득의 다른 일부는 기업소기금, 상금기금, 그리고 공동축적기금, 문화후생기금을 비롯한 기업소 자체의 수요에 분배이용된다.²⁸⁾ 이를 그림으로 요약해보면 다음 <그림 3-2>와 같다.

<그림 3-2> 북한의 부가가치 구성

V	S		
임금	사회순소득		
	중앙집권적순소득	기업소순소득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협동단체이익금	기업소 자체기금 (사내유보이윤)

사회주의의 부가가치를 칼레츠키의 국민소득 균형식과 비교하면서, 그 성격

성을 지니지만 그 내용에서 일련의 차이가 있다. 거래수입금은 생산물의 가격 속에 일정한 크기로 고착되어 있으면서 생산물이 실현되는 즉시로 국가예산에 납부된다. 그러나 국가기업이익금은 그 크기가 가변적이며 기업소에 조성되는 이윤의 규모와 자체충당몫에 의존한다. 거래수입금이 국영기업소 및 생산협동조합을 부과단위로 한다면 국가기업이익금은 오직 독립채산제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국영기업소들만을 부과대상으로 한다. 기업소 순소득인 이윤에서 극히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기본부분을 국가기업이익금의 형태로 예산에 동원하는 것은 기업소들에서 필요 이상의 자금을 남겨두지 않도록 하여 순소득을 국가에 최대한으로 집중시켜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함이다. 『재정금융사전』(1995), p. 130; 『경제사전』(1985), p. 201.

27) 기업소순소득의 구성은 소유형태에 따라 그 구성에서 차이가 난다. 기업소 자체 기금(사내유보이윤에 해당)의 비중은 국가기업소의 경우 그 비중이 매우 제한된 반면, 협동단체기업의 경우는 매우 크며, 협동농장의 경우는 그 전부를 차지한다. 『경제사전』(1985), pp. 305-306.

28) 『경제사전』(1985), p. 678; 『재정금융사전』(1995), p.660.

을 분석해보자. 자본주의에서 식(1) $Y = \pi + W = I + C_C + C_W$ 이라 하면, 북한에서는 $Y = \text{사회순소득} + \text{임금} = \text{국가의 투자지출} + \text{국가의 소비지출} + \text{노동자의 소비지출}$ 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본주의에서 π (gross profits)는 사회주의에서 사회순소득에 해당하며, 사회순소득에서 국가가 수취하는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 및 협동단체이익금은 자본가가 수취하는 이윤 및 재산소득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이제 거래세(거래수입금)가 구체적으로 북한의 가격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거래세가 부과되는 소비재 가격체계를 살펴보자.²⁹⁾

<그림 3-3> 북한의 가격체계

원가(C+V)		총이윤(S)		
고정자본(C)	임금(V)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사내유보이윤

북한의 가격제도는 사회주의 일반적인 가격제도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북한이 밝히고 있는 가격의 종류를 보면, 국가기업소 사이에 거래되는 생산수단에 대해 책정되는 도매가격, 소비자가 소비재를 구입할 때 지불하는 소매가격, 농업생산물에 대한 수매가격,³⁰⁾ 서비스에 대한 운임 및 요금³¹⁾ 등이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매가격은 첫째, 국영기업소 사이에 거래되는 생산수단에 한하여 제정되며,

29) 분석의 편의를 위해 도소매상의 수입인 상업부가금은 생략하였다.

30) 수매가격은 국가가 협동농장이나 주민들로부터 농업생산물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가격이다. 농산물의 수매가격에는 국가계획수매가격과 자유수매품종의 수매가격이 있다. 알곡, 공예작물, 축산물 등은 전자에 속하고, 남새, 과일을 비롯한 자유수매식료농산물과 농토산물은 후자에 속한다. 또한 수매가격에는 농산물외에 낡은 자재의 수매가격도 있다. 이것은 국가가 주민들로부터 파철, 파지 등 낡은 자재를 사들일 때 적용하는 가격이다.

31) 운임은 수송봉사에 대한 가격이고, 요금은 여러 가지 봉사나 봉사적 설비 및 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지불하는 가격이다. 요금은 일반적으로 대상에 지출된 사회적 필요노동의 크기에 따라 제정한다. 요금은 제정하는 대상의 내용에 따라 봉사요금과 사용료로 나뉜다. 봉사요금은 봉사활동에 대한 가격이며, 사용료는 봉사적 성격을 띤 설비 및 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지불하는 가격이다.

계획원가에 일정한 이윤율이 부가된 액수이다. 둘째, 도매가격은 단지 회계상 목적에서 제정되며, 생산수단의 결제방식은 ‘은행돈자리잔고’를 통한 ‘무현금결제’로 이루어진다. 셋째, 도매가격은 생산수단의 유통에 적용되는 가격이므로 일반적으로 거래수입금이 부과되지 않는다.³²⁾

소매가격은 첫째, 원칙적으로 상품인 소비품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그것은 국정소매가격과 농민시장가격의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나 이중 압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국정소매가격이다. 둘째, 소비재의 거래는 ‘현금결제’로 이루어지며, 소매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그러나 일부 대중소비품과 사치품에 대해서는 균형가격보다 낮게 혹은 높게 가격을 결정한다. 셋째, 소매가격은 원가에 기업소순소득, 거래수입금 및 상업부가금을 더하여 결정된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가격결정의 원칙을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매가격 결정에는 분명히 계획원가에 일정한 이윤이 부가된다고 밝히고 있듯이 독점기업의 mark-up pricing(또는 full-cost pricing)을 하고 있다. 소매가격은 수요공급을 일치시키는 도구로 사용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결정하게 된다. 또한 투자수요 및 바람직한 소비수요 등의 사회적 선호를 고려하여 간접세율을 부과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 소매가격 또한 mark-up pricing으로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결과 이렇게 결정된 가격들은 시장가격만큼 탄력적이지 않으며 매우 경직적일 것이다. 이러한 사회주의 가격의 경직성은 칼레츠키가 자본주의가격은 경직적인 반면 사회주의가격은 탄력적이라³³⁾는 논리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의 자본주의 독점가격 결정논리를 적용해야 타당할 것이다.

둘째, 그들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소비재가격은 도매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32) 그러나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으나 생산원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자재의 경우 거래수입금을 포함하는 산업도매가격을 적용하여 타기업과의 원자재에 대한 수요를 조절한다. 현재 산업도매가격이 적용되는 품목은 통나무에 국한되어 있다.

33) M. Kalecki, "Central Price Determination as Essential Feature of a Socialist Economy", 1958, *Collected Works of Michal Kalecki III: Socialism: Functioning and Long-Run Planning*, Oxford: Clarendon Press, 1992, pp. 113-119.

탄력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면³⁴⁾, 소비재부분의 물가변동은 억압된 인플레이션(repressed inflation)의 형태로 잠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를 칼레츠키의 가격이론 - 유휴설비가 존재하는 최종재산업(주로 독과점산업)의 경우 가격이 변동하지 않고 산출이 증가할 수 있는 반면, 공급이 비탄력적인 농산물, 원료생산의 경우 완전경쟁의 경우처럼 가격이 변한다 - 의 관점에서 해석해보면, 북한의 경우 자원제약 하에 중공업우선의 정책을 추구했으므로, 소비재산업인 경공업이나 농업은 자원배분의 순서에서 부차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산업의 경우는 항상 소비재부족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처럼 공급제약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 결과 생산재산업보다는 소비재산업의 가격은 탄력적으로 변동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경우, 계획경제의 편의에 따른 가격경직성으로 인하여 가격탄력성은 억압된 인플레이션으로 잠재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북한 주민소득은 필요한 축적을 결정하고 난 다음, 그 나머지로 결정된다. 앞에서 제시된 김일성의 언급 -“노임수준을 정하는 것은 해마다 국민소득을 어떻게 분배하고 이용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필요한 축적을 먼저 내놓고 인민들의 소비몫을 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은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성장을 최고선으로 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소득은 노동력 재생산비에 불과할 것이며, 이는 칼레츠키의 가정 - 노동자의 노동소득은 전부 소비된다 - 은 북한에서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주민저축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칼레츠키의 국민소득 결정식 $Y = \pi + W = I + C_C + C_W$ 이, 북한에서는 $Y = \text{사회순소득} + \text{임금} = \text{국가의 투자지출} + \text{국가의 소비지출} + \text{노동자의 소비지출}$ 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축적재원을 저축으로 조달하는 자본주의와 달리, 사회주의에서는 축적의 재원을 조세, 특히 거래수입금에서 조달한다. 그것은 낮은 소득수준에 따른 낮은 저축성향과 직접세 부과에 따른 생산활동 위축 가능성 때문이다. 즉, 사회주의처럼 소득수준이 낮고, 빈부격차가 크지 않은 나라에서는 증가된 소득의 대부분이 소비로 돌려지기 쉽고 증가된 소득의 일부분만이 저축된다. 또한 소득이 노동소득으로 구성된 사회에서는 높은 세율의 직접세(소득세)는 생산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³⁵⁾ 따라서 사회주의에서는 국가주도에 의

34) 그들의 도매물가와 소매물가를 비교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다.

해 조세 특히 간접세 중심으로 축적체계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사회주의국가의 경제행위를 이론화하기 위한 시론으로서, 북한의 주요 경제정책들의 결정 메카니즘을 칼레츠키의 경제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사회주의국가를 지배관료와 노동자로 구성된 거대 독점기업으로 대체해 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칼레츠키의 사회주의경제성장이론, 독점자본주의의 가격결정이론과 소득분배이론을 도입한 것이다.

분석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주의국가의 제1의 과제는 적대적 경쟁에서의 생존이며, 이는 성장제일주의의 경제정책과 자원배분으로 나타난다. 사회주의국가의 계획작성에서 보면, 먼저 목표 성장률이 결정되면, 이어 이에 필요한 투자율을 결정하게 되고,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세를 통해 확보한다. 즉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잉여가치 중 거래세와 국가기업이익금의 형태로 국가가 수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주의국가의 성장 및 투자, 그리고 가격결정의 논리는 칼레츠키의 사회주의경제성장이론 및 독점기업의 투자 및 가격결정 논리를 결합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이들은 적대적 경쟁 하에서 이윤극대화가 아니라 성장극대화를 추구하며, 이를 위해 끊임없는 자본축적의 확대를 도모하면서 투자량을 결정하게 된다. 더욱이 이들 조세는 직접세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세의 형태로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마치 독점기업이 투자량을 고려하여 목표이윤율을 결정하고 이를 가격에 반영한다는 란지로티의 target-return pricing 논리와 동일하다.

또한 사회주의국가에서 조세를 통해 축적재원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칼레츠키의 소득분배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해본다면, 사회주의국가의 노동자들의 임금소득이 노동력 재생산비에 불과하며, 그 결과 그들의 소득은 전부가 소비

35) M. Dobb, *Soviet Economic Development Since 1917*, London: Routledge & Kegan. 1972, 임휘철 역, 『소련경제사』, 서울: 형성사, 1989, p. 450 참조.

로 지출되며 저축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처럼 저축성향은 0에 가깝고,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국가의 경우는 저축보다는 조세를 통해 축적재원을 동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적대적 경쟁 하의 자본주의 기업의 투자와 가격결정, 소득분배논리는 사회주의국가들이 처한 체제경쟁에서 생존을 위한 성장정책과 그에 따른 투자 및 가격결정, 그리고 소득분배정책과 유사성이 있다. 이러한 유사성은 칼레츠키의 이론이 다른 이론들에 비해 향후 북한경제를 포함한 사회주의경제 연구방법론의 개발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그의 수학을 이용한 논리전개는 북한경제모델의 개발에도 풍부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이라 본다.

북한의 여성교육과 여성상: 「교과서」와 「조선녀성」에 나타난 여성상을 중심으로

김병로(통일연구원), 장인숙·황애리(이화여자대학교)

- I. 서론: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 II. 북한의 여성정책과 여성상의 변화
- III. 북한 여성의 학교교육
- IV. 북한 여성의 사회교육
- V. 결론 및 남북여성교류에의 시사점

I. 서론: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결실을 맺었으며, 남북공동선언의 첫 이행의 단계인 남북한 이산가족의 상봉이 두 차례나 성사되었다. 이제 남북한 관계는 적대와 대립의 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협력적인 평화관계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전환점에 서있다. 이러한 남북한관계의 전환기적 상황 속에서 통일논의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남북한이 공동선언에서 합의했듯이 통일논의는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제4항) 나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그 동안의 통일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 군사적인 부분에 주로 집중되어 왔다. 예컨대, 1945년부터 1986년 말까지 40년간 국내에서 나온 북한 및 남북한 및 통일관련 연구 가운데 사회·문화교육 관련 연구는 전체 7천9백59편 중 4백95편으로 5.6% 정도에 불과하다.¹⁾ 이러한 연구 경향은 지금까지의 남북관계가 남북한 사이의 공존을 위한 모색보다는 이념적인 우월성의 강조나 군사적 위협에 대비

한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강했음을 드러낸다. 남북한 관계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남북한간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바람직한 통일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상호 문화의 차이에 대한 이해일 것이다. 이는 인간의 삶이 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남북한 사회구성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에 대한 관심은 통일 논의에서 거의 제외되었다. 북한여성을 주제로 한 연구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북한여성 연구물은 논문 105편, 단행본 27편, 학위논문 16편으로 총 148편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1945년부터 1994년까지 나온 전체 북한관련 연구물 총 14,899편 중 1%에 불과한 실정이다.²⁾ 다행히 최근 들어서는 남북한 여성교류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그러나 주된 연구 분야는 북한가족연구, 북한 여성의 경제적 지위연구, 북한 여성의 정책 및 법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북한 여성의 교육이나 여성상을 다룬 연구는 특히 다른 분야에 비하여 연구가 저조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북한의 여성상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숙자는 "북한의 사회교육을 통해 본 여성상"에서 교과서에서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여성상을 '첫째, 노동하는 어린이상, 둘째, 주체적 어린이상, 셋째, 집단주의적 어린이상, 넷째, 혁명적 낙관주의적 어린이상'으로 분석하였다.³⁾ 또한 김인영의 "북한여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북한 여성 교육의 강조점으로 '첫째, 노동하는 여성, 둘째, 주체사상적 여성, 셋째, 집단주의적 여성, 넷째, 전통적 여성'으로 분석하였다.⁴⁾ 김귀옥의 "동화와 교과서 속의 여성상" 등 여성에 관한 연구는 북한의 아동교육과 학교교육에서 지배적인 여성상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시도도 있었다.⁵⁾ 초기의 연구는 여러 문헌에 나타난 여성상을 분석한 것이라기보다는 북한에서 사회주의 교육 테제에서 밝히고 있는 북한 교육이 추구하는 '상'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점차 북한문헌에 반영되어 있는 여성상의 현실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조선녀성」에 나타난 여성상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황은주는 '조선민주녀성동맹'과 「조선녀성」을 중심으로한 "북한 성인여성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에서 북한 여성의 생활을 경제생활과 가정생활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⁶⁾ 경제생활 영역은 공장, 협동농장, 가내작업반, 전문직, 서비스직, 가두지원대로 분리하여 살펴보고 있으며, 가정생활 영역은 어머니, 며느리, 아내의 역할 사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경하는 "「로동신문」, 「조선녀성」에 나타난 북한의 여성상"에서, 크게 사회적 영역에

서의 북한의 여성상과 가족 내에서의 성역할과 여성상으로 분류하였다.⁷⁾ 사회적 영역에서의 여성상을 다시 노동의 주체로서의 여성, 혁명의 역군으로서의 여성, 사회주의 생활문화와 여성상으로 보았고, 가족 내에서의 성역할과 여성상은 혁명적 어머니상, 가족관계와 동지적 부부관계로 나누었다.

이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 북한 여성상에 관한 연구의 문제점은 첫째, 다른 분야에 비해 연구가 저조한 실정이며, 진행된 연구마저 차별성을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기존의 연구에서 강조하는 북한여성교육은 '여성' 교육의 특징이기보다는 북한이 추구하는 교육의 일반적 특징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부족함이 보인다. 셋째, 북한 여성상에 대한 연구를 남녀 차별적인 관점으로 단순화된 연구가 많다. 예컨대, 「조선녀성」에 나타난 여성상의 연구는 구분 방식에 있어서 천편일률적으로 여성을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구분방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북한 여성에 관한 연구는 1차 자료의 내용상 부족과 이로 인한 2차 연구의 부재로 북한여성에 대해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성과를 찾기 어렵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북한이 교육을 통해 추구하고 있는 여성상을 분석하였다. 교육이란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 대하여 갖는 관심과 기대의 표현이며, 교육 속에는 한 사회가 추구하는 문화체제의 지향이념과 가치가 매우 깊게 용해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한 방편으로서 북한여성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북한여성교육이 어떠한 여성상을 구현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문화란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고 변화하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는 교육의 요소가 필연적으로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을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으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수단이 되는 「교과서」와 「조선녀성」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학교교육은 교과과정에서 여성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교육은 무엇인지 또한 교과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여성의 이미지가 어떤지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러한 여성상을 실현하기 위해 여학생만을 교육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과 과정인 '녀학생 실습'도 살펴보았다. 한편, 북한이 사회교육에서 추구하는 여성상은 「조선녀성」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조선녀성」은 북한내에서 여성들만을 위해 공식적으로 발생하는 유일한 잡지이고, 각 직장이나 여맹에서 여성들에 대한 교육용

으로 활용되는 매체이기도 하다.⁸⁾ 따라서 이 잡지를 분석함으로써 북한사회가 북한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여성상은 어떤 것인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북한여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통일 논의에서 소외되기 쉬운 남북한 여성들이 통일의 주체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작업은 중요하다. 이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소외됨 없이 살 수 있는 완전한 통일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통일의 과정에 여성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교과서」와 「조선녀성」에 나타난 여성상의 분석을 통해 북한여성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남북여성교류에 시사하는 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1990년대 개정된 「교과서」와 가장 최근에 발행된 「조선녀성」에 한정시켜 살펴볼 것이다. 즉 본 논문은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가속화된 1990년대에 북한이 어떤 여성상을 강조했는가를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같이 연구시기를 한정시키는 것은 북한 정권의 최대 위기상황인 1990년대 이후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여성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II. 북한의 여성정책과 여성상의 변화

북한은 사회주의건설이래 일련의 국가정책들을 실행해왔다. 북한의 여성정책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국가정책의 하위부문으로 사회주의 건설초기에는 노동력 동원의 일환이었으며, 북한 체제 안정기에는 가정과 사회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북한은 다른 공산주의 국가에서와 같이 사회주의 혁명 초기인 1946년 봉건적인 가부장제를 타파하는 가족구조의 개혁을 추진했다. 즉 「북조선 임시위원회 20개조 정강」, 「북조선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자 법령」, 「북조선의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등을 제정하여, 여성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였다. 1947년 6월 13일 인민보건국 명령 5호 '탁아소규칙', 1958년 7월 19일 내각결정 84호 "인민경제 각부분에 녀성들을 더욱 인입시킬데 대하여"와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하여"와 같은 일련의 남녀평등에 관련한 법령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북한여성들은 투쟁 없이 법적 제도적 남녀평등권을 획득하였다.⁹⁾ 특히 1946년 7월 30일자로 발표된 "북조선의 남녀평

등권에 대한 법령"에서는 남녀평등권, 선거권, 동일임금, 자유이혼소송권, 처첩 금지, 공사창 금지, 재산 및 토지상속권, 이혼시 재산분할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¹⁰⁾ 북한 여성은 전후 복구시기에 여성들의 노동력 동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사회주의적 평등사상에 기초한 법률적 규정이 제시되어 지위향상을 이룰 수 있었다. 특히 1950년대 말까지 북한여성들은 사회주의를 건설에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어 졌고, 이 시기에 제시된 여성상은 능동적으로 사회적 생산에 참여하는 혁명적 인간이었다.¹¹⁾

그러나 전후복구가 마무리되고 놀랄만한 경제적 성과를 토대로 하여 김일성의 유일지배체제가 완료되는 1960대 시기 여성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흐름을 보인다.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의 공업화를 위해 '여성'을 계속 생산현장에 동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조했던 것이다.¹²⁾ 1961년 말 개최된 '전국 어머니대회'에서 김일성은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라는 제하의 연설을 통해 여성들에게 후대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육성하는 임무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¹³⁾ 따라서 이 시기에 북한여성들은 사회주의 혁명의 기수이자,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로서의 이중적 여성관을 요구받았다.

이러한 여성관은 1970년대에 다시 한번 변화한다. 1970년대 이후는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주체사상으로 전환되는 시기로서, 김일성이 독재를 확립한 이후 김정일의 세습체계를 시도했던 시기였다. 김일성 유일우상화와 맞물려 가장 이상적인 여성으로 강반석과 김정숙이 제시되었으며, 여성들에게 이들은 본받도록 촉구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당시 여맹에서는 강반석 따라 배우기, 어머니학교, 어린이보육교양사업, 원호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¹⁴⁾ 이러한 분야는 전통적으로 여성들에게 적합한 것으로 인식되어 온 가정적, 보조적 사업으로써, 여성의 능동적 역사추진 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 즉, 북한정권의 건설 초기에는 투쟁적, 능동적, 사회적 혁명가로서의 여성을 지향했으나 김일성의 권력강화와 더불어 수동적, 가정적, 보조적 어머니로서의 여성상을 강조하는 변화를 보인다. 또한 1978년에 제정된 '사회주의 로동법'을 통해 남녀평등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법제적 남녀평등이 실제적으로 현실 생활에서 구현되지 못하였다.

탈냉전기에 접어든 1990년 북한은 산발적으로 존재한 가족관련 규정을 「가족법」으로 제정(90.10.24)하여 공포하였다 1990년 「가족법」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전통적 가족제도의 유산을 대거 회복하고 있다는 점이다.¹⁵⁾ 「가족법」

제6조는 어린이 양육과 교양을 어머니의 우선적 역할로 제시함으로써 모성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전여성의 노동계급화라는 사회주의 가족원리에 위배되는 반사회주의적이고 반여성해방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⁶⁾ 또한 친족부양의 범위를 부모자식은 물론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까지 확대(제35-36조)함으로써 경로효친적 유교사상을 부활시키고 있다. 이는 가족부양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가정을 통해 사회복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추측된다. 경제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여성의 권리신장이나 해방과는 무관한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구조 하의 여성상을 부활시키는 듯 보인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북한여성에게 사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까지 '여성성'을 가진 여성상을 요구함으로써 여성들의 역할을 더욱더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에서 제시되는 여성상은 사회주의 국가 건설 과정에 따라 변화해 왔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해 남녀평등정책으로 여성을 사회주의 건설에 동원하였으며 평등한 법령을 규정한 후 법령의 뒤에 숨어있는 차별의 가능성을 활용하여 여성노동력을 착취하였다. 부자세습체제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가부장적 질서가 강조되었고 그에 따라 여성에게는 가정에서의 역할이 중시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북한 여성들은 강화되는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가정에서의 역할과 사회적 노동을 동시에 요구받는 이중적 부담을 지고 있다. 북한 여성들은 표면적으로 남성과 동등한 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제도적 평등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적 교육은 학교 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남녀 차별적 사회진출과 연결되어 남녀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다.

III. 북한 여성의 학교교육

1. 학교교육

북한은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가 발표된 1977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주체사상과 유일사상이 결부되면서 주체사상교육을 통한 김일성주의를 확립하였다. '사회주의 교육테제'에서 제시한 교육목표는 모든 인민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여 공산주의화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는 데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과 정책노선으로서 첫째, 교육에서의 당성과 노동계급성의 구현, 둘째, 교육에서의 주체의 확립, 셋째, 교육과 혁명실천의 결합, 그리고 국가의 교육사업에 대한 조직진행의 책임 등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교육목적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공산주의적 새인간' 혹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의 형성에 있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의 의미를 김일성은 「사회주의 교육학에 대하여」에서 첫째, 공산주의는 놀고먹는 사회가 아니므로 노동을 사랑하고 즐기며 이에 자각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둘째, 개인주의·남은 사상·자본주의 사상은 철저히 뿌리뽑고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무장된 사람, 셋째, 자기 개인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오직 전체사회를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 넷째, 공산주의의 승리를 확신하고 어떠한 역경에서도 혁명적 낙관주의를 갖는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¹⁷⁾

이러한 기본적인 이념을 담고있는 교과서에서 보여지는 여성상은 북한 여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사회의 지배적 이념이 요구하는 지향점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속에서 살펴보는 여성상은 북한 여성의 현실이기보다는 이념형적 형상의 여성상이라고 보는 것이 좀더 타당할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여성상이 교과서 내용 속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정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북한여성에게 요구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2. 「교과서」에 나타난 여성상 사례분석

북한의 학교 내 교육에 관련된 연구자료가 부족하여 선행 연구물들이나 이차문헌보다는 북한에서 최근에 출간된 교과서를 중심으로 북한이 추구하는 여성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간 배정에서 비중이 큰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국어」 교과서와 사상교양서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 혁명활동」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¹⁸⁾

서술방법에 있어서도 연구자의 평가나 해설을 중시하는 해석적인 방법보다는 예문을 풍부히 제시하고 그 속에서 일관되게 보여지는 여성상을 찾고자 하였다. 그러나 교과서에서 여성에 관해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 매우 드물며, 학년이 높

아질수록 더욱 여성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은 희박해진다. 저학년 교과서에서 간간이 등장하던 여성 관련 내용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김일성 김정일의 사상과 공산주의 혁명건설에 대한 내용에 묻혀 버리기 때문이다. 그나마 여성에 관련된 글은 강반석과 김정숙에 대한 내용뿐인데 그 등장 횟수도 매우 적으며, 그 내용 또한 여성과 관련된 정보를 유추하기 어렵다.

1) 여성성 강조

여성을 꽃에 비유하거나 꽃과 동일시하는 내용이 많이 발견된다. '꽃' 하면 남정보다는 여성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진다. 이는 일반적으로 여성은 아름답고, 상냥하고, 착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여성을 꽃에 비유하기도 하는 직접, 간접적인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북한도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예외는 아니다. 북한 교과서에서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매우 적는데 <사례 1>과 <사례 2>에서처럼 꽃밭을 돌보는 예문에는 반드시 여성이 주인공으로 하여 등장한다. 이는 여성이 꽃밭을 돌보듯이 주변을 돌보고 어른을 공경하며 착해야 여성답다는 고정적 성역할을 표현이다.

<사례 1>

꽃니는 인사를 잘하는 학생입니다. 꽃니는 선생님이나 웃사람을 만나면 깍듯이 인사를 합니다.¹⁹⁾

<사례 2>

꽃밭에 다달은 선희의 동그스름한 얼굴에는 방긋이 웃음이 피어오릅니다...파릇파릇 새싹이 움트는 이른봄에 가졌던 분단모임이며 집집의 좋은 꽃들을 저마다 골라 오던 일.....그리고 퇴약별이 내려쪼일때면 종이 고깔을 해 씌우고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세차면 꼭꼭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던 일....²⁰⁾

또한 교과서에서 여성이 반드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예문은 바로 집안 가사일과 관련된 내용이다.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옷을 다리는 것은 모두 여성의 역할로서 표현되어 있다. <사례 5>에서 보여지듯이 여성의 역할은 어린 여

자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성은 연령에 상관없이 살림을 하고 형제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영숙이의 모습에서 북한이 여학생 교육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전통적인 '여성상'을 엿볼 수 있다.

<사례 3>

이윽고 부엌에서 식사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공부하던 누나가 일어나 밥상을 조용히 갖다 놓고는 말끔히 행주를 쳤습니다. 그리고 수저들과 음식 그릇들을 받아 차근차근 상에 놓았습니다……그리고 어머니를 도와 누나와 함께 밥상과 방안을 깨끗이 거두었습니다 이어 정남이는 옷차림과 몸 단장을 하고 책가방을 들었습니다.²¹⁾

<사례 4>

옷을 다 다리고 동생의 바지를 다릴 때에는 다리미에서 전기를 뺐다. 나는 동생에게 다리미가 아직 달았으니 바지를 얼마든지 다릴 수 있다고 타이르고는 바지주름을 칼날같이 세워주었다…저녁상을 다 차리고 어머니가 부엌에서 돌아오셨는데도 불은 그냥 켜 있었다. 나는 밥을 먹다 말고 부엌에 나가 불을 껐다.²²⁾

<사례 5>

아버지원수님께서 머리 숙인 저의 손을 꼭 잡으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언제, 어떻게 돌아가셨는가고 물으시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때 미제놈들의 폭격에 희생되고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어요…<네가 영숙이구나…동생들 데리고 살림을 하면서 학교에 다니느라고……힘들었지?!……이거 손이 좀 텅구나…….²³⁾

2) 강반석 여사 따라 배우기

북한의 교과서에는 여성상과 여성역할의 표본으로 강반석 여사가 제시되고 있다. 여성들의 전형인 '강반석·김정숙 여사'는 '시부모를 공경하는 며느리, 혁명을 내조하는 헌신적인 아내, 자녀양육에 심혈을 기울이는 혁명가의 어머니, 이웃과 화목한 여성'으로 그려졌다. 사회적으로는 혁명의 주체이나, 사적으로는

혁명의 주요 조력자로 그려진다. 또한 사회에서 요구되는 혁명적 주체의 성격 또한 가정에서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여성은 가정에서 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아내로서 내조의 기본내용은 가정생활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여성들은 강반석, 김정숙의 모범을 본받아 사회와 가정에서 헌신적으로 그 '현모양처'의 역할을 다할 것을 교육받는다.²⁴⁾

<사례 6>

어느 해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어머님께서는 나무가지를 치마자락에 꼭싸서 꺾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앓고 계신다더니 아마 손이 아파서 그러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할아버지는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할아버지를 보시자……할아버지에게 가까이 다가서시며 나직이 말씀하시었습니다. <성주가 저녁 늦게까지 집에 오지 않기에 찾아나왔더니 저렇게 찬 온돌방에서 정신없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공부를 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조용히 불을 때주고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어머님께서 왜 나무가지를 치마자락에 싸서 꺾으시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강반석 어머님은 정말 훌륭하신 어머님이시구나!) 할아버지는 강반석 어머님을 우러르며 오래오래 서 있었습니다.²⁵⁾

<사례 7>

……어머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언제 어디서나 경애하는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었으며 수령님을 옹호 보위하는데서 성세가 되고 방패가 되시었다. 그리고 소년 선봉대 사업과 공청사업, 아동단지도사업과 적구공장 등 어려운 혁명임무를 수령님의 의도대로 수행하시었다.²⁶⁾

<사례 8>

열렬한 혁명투사 강반석어머님이시었습니다.……쌍가매의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도 강반석어머님께서는 웃으시는 눈길로 쌍가매를 어루만져 주시며 핀 보자기를 펼치시었습니다. 보자기에는 어머님의 정성이 깃든 솜옷 한 벌과 고운 버선 그리고 자그마한 녀자 고무신이 놓여 있었습니다.……우리 귀한 아들딸들을 참되게 길러서 나라에 바치자고 그제 조선 사람된 도리고 어머니된 도리

라네.²⁷⁾

<사례 9>

지하공작 바쁘신 그 길에서도
바구니에 산나물 채워주시더니
이 밤에 피곤도 다 잊으시고
가난한 집 아이들 그네 태워주시네……중략.²⁸⁾

3) 전통적 어머니상 강조

북한의 교과서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여성상은 아마도 전통적 어머니 상이 아닐까 싶다. 여성은 아이들과 주변사람들을 자식처럼 돌보고, 공산주의적 혁명가로 키우는 어머니 역할을 나이와 장소에 상관없이 요구받고 있다. 이와 같은 교과서 내용은 다음 예문에 잘 드러난다.

<사례 10>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의 사랑속에서 금순이가 마촌아동단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날 마촌아동단에 아동국장이 찾아왔습니다. <애들아, 우리들은 장군님의 사랑을 받기만하고 보답하지 못하고 있구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아동국장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금순이가 냉큼 일어났습니다. (좋은 옷을 해드리자요. 장군님께서는 글썄 추운 겨울에도 홑옷을 입고 계신다지 않아요) 아동국장은 빙그레 웃으며 아동단원들에게 물었습니다……²⁹⁾

<사례 11>

영순이는 맑은 물을 떠다 교실을 깨끗이 청소하고 있었습니다……한창 마루를 닦아나가던 영순이는 문득 일손을 멈추었습니다. 단추 한 알이 책상 밑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누구의 단추일가)……영순이는 그 동무를 찾아 단추를 꼭 달아주리라 마음 먹었습니다……영순이는 동무들의 옷차림을 한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들어서는 정남이의 옷에 단추가 떨어져 있었습니

다...영순이는 바늘과 실을 가져다 정남이의 옷에 단추를 단단히 달아주었습니다.³⁰⁾

<사례 12>

우리 마을에 영예군인 할머니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전쟁 때 미군놈들과 용감히 싸우다 부상을 당해 영예군인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참 좋은 분입니다. 마을에서 누가 앓으면 꼭 찾아가 돌봐줍니다.

또 우리들이 놀다가 옷을 더럽히면 깨끗이 빨아줍니다. 그래서 모두들 (우리 할머니)라고 부릅니다.³¹⁾

<사례 13>

동무들의 잠자리를 보아주고 사령부로 간 금순누라...<소년중대원들이 어떤 애들이요? 우리는 지금 그 애들이 부모들을 대신해서 돌봐 주고 있소...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저 그들이 하자는 대로 놔두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혁명가로, 훌륭한 공산주의자로 자라도록 가르치며 아끼는데 있소>.³²⁾

위의 사례에서 김일성 수령님의 옷을 걱정하여 옷을 지어주자는 금순이, 교실에 떨어진 단추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임자를 찾아 달아주는 세심한 영순이, 자신의 몸이 불편한데도 이웃을 돌보는 영예군인 할머니, 집단생활에서 소년단원들을 자식처럼 돌봐주는 금순누나의 모습에서 여성의 어머니상이 가족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한 어머니의 역할은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전 여성에게 확대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3. 교과서에서 제시된 여성상 교육을 위한 교과과정

북한의 교육과정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수업 주 수는 감소하고 대신에 실습, 노동, 조직활동에 투입되는 수업 시간이 점차 증가한다.³³⁾ 실습 과목 중에서 여성에게만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녀학생실습'이다.³⁴⁾ 이 '녀학생실습'은 고등학교 6년 동안 총 185시간(2.9%)이라는 적지않은 시간이 할애되어 있다.³⁵⁾ 북한의 '녀학생실습'에서 교육하는 내용은 다음 예문에 잘 드러난다.

<사례 14>

우리 위연여자고등중학교 녀학생실습실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갖가지 수놓이, 뜨개, 재봉 실습품들이 들어있는 진렬장 안을 들여다보며 그것들을 만들어낸 학생들의 훌륭한 솜씨에 대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이 학교녀학생실습 소조원들의 집체작으로 된 우아하고 아름다운 화폭의 수예품들이 또한 눈길을 끈다. 우리 학교 녀학생실습교육의 자랑스러운 열매는 또한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는 학생들의 올바른 레의도덕과 단정한 옷차림, 온 학교안에 차넘치는 알뜰하고 문화적인 생활기풍의 이모저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마련하여주신 녀학생실습과목 교육의 거대한 생활력이 활짝 꽃피가고 있는 우리 학교의 훌륭한 교육현실을 놓고 볼 때마다 녀학생들을 주체시대의 문명하나 녀성혁명가로 키우는데서 이 학교과목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가에 대하여 다시금 느끼게 되며 항상 녀학생실습과목을 담당하나 교원으로서의 높은 책임감이 앞서군한다.³⁶⁾

위의 <사례 14>는 북한의 여학생 실습 교사의 소감을 담고 있는 북한의 신문 기사내용이다. 이 내용을 통해 북한의 여학생 실습이 과거 남한에서 행해졌던 「가사」나 「가정」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³⁷⁾ 이 교과 과정은 앞서 교과서에서 여성을 반드시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며 강조하였던 여성상인 현모양처형, 전통적 어머니형 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여학생들에게 바느질과 뜨개질, 수놓기 등을 가르친다. 이는 집안 일에 대한 여성의 성역할이 학교에서 학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³⁸⁾ 북한이 사회주의혁명 완수를 위해 여성의 사회진출을 적극 장려하는 한편, 탁아소나 밥공장 등으로 여성의 집안 일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혁신적인 정책을 취하였지만 결국 학교에서 여학생에게 바느질과 뜨개질과 같은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학습시킴으로서 가정에서의 일이 여전히 여성만의 일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예이다

IV. 북한 여성의 사회교육

1. 사회교육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 의하면 사회주의 교육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평생동안 교육하는 전면적이며 지속적인 교육이어야 함을 명시해 놓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모든 주민들은 연령, 남녀, 직업에 따라 각종 조직을 통해 체계적으로 교육 받고있다. 여성 역시 사회교육에의 참여는 의무적이다. 북한 사회교육의 목적은 첫째, 주체사상을 교육하는 정치이념 강화와 둘째,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을 촉진하고 일반적 교양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³⁹⁾ 김일성의 교육원리에 입각한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 인간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사회교육은 일단 정치적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그 내용도 김일성의 주체사상, 당정책, 김일성교시 등에 대한 학습이 대부분이다.⁴⁰⁾

북한의 성인을 위한 사회교육은 사회주의 건설에 참가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근로자들의 혁명적 세계관을 공고히 발전시키고 그들의 일반지식 수준과 기술 및 문화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오늘날 북한사회의 교육체제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전체 인민을 대상으로 하는 병행적 교육체제로 발전되어, 그 유형은 근로자 고등중학교와 공장 고등전문학교, 공장대학, 통신 및 야간 교육망, 간부들과 근로자를 위한 정규 학습 체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성인들은 직업동맹이나 여성동맹 등의 각종 모임과 조직에 편성되어 사상교육 강화를 위한 사회교육을 받고 있다.⁴¹⁾ 즉, 북한의사회단체는 정치학습과 분리될 수 없는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간주된다.

여성에 대한 사회교육을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유일한 여성단체인 '조선민주여성동맹'(이하 여맹)이다. 여맹은 1945년 11월 18일 '북조선민주여성동맹'으로 창립되어 1951년 1월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된 노동당의 외곽단체로서 만 31세부터 55세까지의 전업주부(가두녀성)를 가맹 대상으로 하며, 현재 박순희가 여맹위원장을 맡고 있다.⁴²⁾ 여맹은 연중 상하반기 각각 1회정도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당면한 현안을 토의하고 각 지부별로 실천을 촉구하고 있으며, 지난 98년 10월말 추산된 여맹원수는 약 20여만 명으로 추산된다. 여맹은 그 성격이 단순한 문화계몽을 위한 여성단체가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 여성들의 특성에 맞는 사상교양 사업의 강화에 치중하는 정치적 단체이다. 여맹의 중요한 기능은 정치학습을 통하여 사회주의 교양사업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여성들을 김일성 유일체제 확립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정권으로부터 일반여성으로까지의 하부전달식 과정에 있어서 여맹이 하나의 중요한 수단·방법이었음을 의미한다.

「조선녀성」은 여맹의 기관지로써 1년 6회 발간되는 여성잡지이다. 여맹의 정치단체로서의 성격 때문에 그 기관지인 「조선녀성」 또한 여성을 상대로 한 정치교육지, 계몽지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조선녀성」은 북한 내에서 여성들만을 위해 공식적으로 발생하는 유일한 잡지이고, 각 직장이나 여맹에서 여성들에 대한 교육용으로 활용되는 매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잡지를 분석함으로써 북한 여성들에게 북한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상은 어떤 것인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2. 「조선녀성」에 나타난 여성상 사례분석

1) '여성성(性)' 강조

「조선녀성」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의 성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여성을 '여성성'에 적합하다고 규정짓는 일부의 영역에 배치함으로써 어머니로서의 모성애, 딸로서의 효심, 여성으로서의 미 등의 역할만을 기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유교적 문화권의 전통적인 여성상과 일치한다. 이와 같은 사례는 자주 등장한다.

<사례 15>

무산의 세자매인 강정숙, 강인숙, 강삼숙 녀성들, 생김새도 성격도 어슷비슷한 이 세자매들은 부모없는 아이들 101명을 훌륭하게 키우고 있는 공산주의적 소행의 주인공들이다.⁴³⁾

<사례 16>

원산과 함흥, 사리원과 강계 등에서 자식이 없는 늙은이들을 데려다 자기 친부모를 모시는 친딸의 심정으로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다.⁴⁴⁾

<사례 17>

정서가 풍부한 조선녀성들의 우수성은 감정이 많은데서 표현된다. 조선녀성들은 흔히 감정을 눈물에 담아 표현한다. 녀성이 꽃이라면 웃음은 그 꽃의 자랑스러

은 모습이며....⁴⁵⁾

또한 다음 사례에서는 북한 여성들이 사회영역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알 수 있다. 여성들은 간호업무라든가 남성으로 상징되는 군인들을 옆에서 돕는 일, 음식접대와 같은 후방사업, 바느질이나 꽃밭조성 등의 보조적인 노동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여성들은 남성들의 보조자적, 후원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들을 여성의 역할로 당연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 18>

이곳 녀맹원들이기에 그들은 사회적으로 인민군대원호사업과 로병, 영예군인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일에서도 훌륭한 모범을 보여.... 녀맹원들은.. 통군정주변에 해마다 여러 가지 꽃나무도 심고 꽃밭도 조성하였다.⁴⁶⁾

<사례 19>

한편 녀맹원들은 건설자들의 힘을내여 일하도록 후방사업도 계획적으로 벌리었다 . . . 떡이며 밥, 국수를 건설자들에게 대접하며 공사에 일을 앞당겨달라고 고무하는 녀맹원들, 혼자서 몇백켤레의 장갑이며 어깨받치개를 마련해 건설자들에게 지원한 녀맹원⁴⁷⁾

2) '김정숙형 안해' 따라 배우기

「조선녀성」에는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를 따라 배우자"라는 소제목으로 매호마다 김정숙에 대한 일화를 실고 있다. 주목할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과서」에서는 "강반석 따라배우기"에 대한 내용이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반면, 「조선녀성」에는 김정숙이 등장한다. 이는 「조선녀성」의 구독대상 연령이 일화 속의 김정숙 연령과 어느 정도 일치하여 북한여성과 김정숙이 공유하는 관심 영역과 행동을 제시할 때 공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⁴⁸⁾ 그렇다면 '김정숙 따라배우기'에서 북한여성들이 따라 배울 것은 무엇인가? 다음 예문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사례 20>

"김정숙동무는 나에 대한 충실성이 매우 지극한 동무였습니다"

김정숙 동지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부터 빛나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불굴의 혁명정신과 숭고한 자각, 높은 혁명적 경각성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 안전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시었으며 끝없는 충정과 지극한 정성으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보장해드리신 호위장군, 친위전사, 참다운 충신이었다.⁴⁹⁾

<사례 21>

“어머니는 혁명가들의 시중을 들면서 자신도 혁명을 하였다”

어머님은 위대한 혁명가의 안해로만이 아니라 가장 믿음직한 혁명동지로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이 혁명활동을 끝없는 헌신성과 지성을 다해 도우시었으며……⁵⁰⁾

<사례 22>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 명령지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그 실현을 위하여서는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 각오로 온갖 반혁명과 투쟁에서 언제나 기수가 되시었다.⁵¹⁾

위의 기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여성상으로 김정숙을 표본화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숙에 대한 기사 내용은 주로 김일성의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김정일 어머니로서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다. 수령인 남편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시모부인 김형직에 대해서도 헌신과 정성을 다했음을 소개하고 있다. 「조선녀성」을 읽는 북한 여성들은 김정숙 일화를 통하여 뒤에서 남편을 보위하는 아내로서의 역할과 부모를 정성껏 모시는 며느리의 역할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3) 전통적인 어머니상 강조

「조선녀성」에서도 「교과서」에서와 같이 특히 어머니의 모범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은 생리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역사적, 사회적으로 어머니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여성에게 어머니성(性)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선녀성」에는 모성을 부각시키고 있다.⁵²⁾

「조선녀성」에서 어머니성을 강조하는 사례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사례 23>

국가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장려하고 아이 많은 여성들은 영웅으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53\)](#)

<사례 24>

김정일동지께서는 개성시 장풍군 덕적리에 살고 있는 김정희녀성이 세쌍둥이를 낳고 사경에 처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 치료대

책을 제때에 세워주시었으며... 이 세쌍둥이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더 해만갔다.[54\)](#)

<사례 25>)

어머니라고 하여 자신을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쉽게 부르지 말라. 이 땅 천만 어머니들의 참된 삶을 지켜주고 보살펴주시고 빛내어 주시는 아버지장군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어머니가 되기전에는…[55\)](#)

<사례 26>

저도 생각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어머니의 올바른 교양과 모범이 얼마나 중요할지를 새삼스레 깨닫게 되었습니다.[56\)](#)

<사례 27>

어머니들은 아이를 낳아 키우는 무겁고도 중요한 임무를 지니고있다…… 우리 어머니들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특성과 위생지식을 잘 알고 어린이들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전한…[57\)](#)

위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기사의 한 부분은 아예 어린아이를 키우는 법을 기사로 매호 지정해서 싣고 있으며, 출산 장려 정책도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어머니들의 교양 및 상식의 습득은 어린이를 교양하고, 보육하기 위한 과학적 상식의 습득인 것이다. "특히 어머니들이 선진적인 아동교양 및 보육상식과 과학적인 가정관리 상식을 습득하도록 하여야"한다고 강조한다.[58\)](#) '어머니학교'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자녀양육과 관련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기사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여성의 사회적 상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조선녀성」에 나타난 북한여성상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여성상'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는 대부분 '남성성'과 대별되어 표현되는 '여성성' 논의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은 정권수립 초기부터 남녀평등적인 법과 제도를 제정하여, 여성의 법적지위와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였다.⁵⁹⁾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북한이 편파적 '여성성' 역할의 한계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담아낸 것이었다는 가정 하에 본 연구는 출발했다. 그러나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성'에서 벗어난 남녀 평등적인 법과 제도는 문서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북한의 여성상은 다음의 사례에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사례 28>

녀성은 가정의 주부이며 온 가정에 건전하고 화목한 분위기가 차 넘치게 하는 꽃이다. 늙은 부모들이 여생을 값있게 보내도록 잘 돌봐주는 것도 녀성들이며 남편이 혁명사업을 잘하도록 적극 도와주고 받들어주는 것도 안해이며 혁명동지인 녀성들이다 아들딸들을 낳아 키우는 것도 녀성들이며 그들을 혁명위업의 미더운 계승자로 준비시키는 첫째가는 교양자도 녀성들이다.⁶⁰⁾

위 예문은 부모의 남은 여생을 모시는 딸로서, 남편의 후원자 보조자인 아내로서, 자녀교육을 담당하는 어머니로서의 여성만이 제시되어 있다. 결국 북한에서 가장 바람직한 여성의 삶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딸로서의 삶이 가장 큰 행복이며 꿈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일터에서조차 남성 일군의 보조자·후원자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 여성은 사적인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공적인 사회에서까지 '여성성'에 한정된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전통적인 어머니상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북한사회에 남아있는가부장적 전통에 기인한다. 북한사회에서 일반여성에 대한 여성성이 요구되고 있다든가 특히 어머니에게 강조되는 모성 등은 북한사회에 흐르고 있는 가부장적 전통의 요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⁶¹⁾ 북한은 '사회주의 대가정' 원리에 입각하여 전통가족 내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담당하고 실천하도록 독려하며 특히 모성을 숭고한 사명이자 매우 영예로운 일로

강조한다. 이러한 대가정의 원리를 전체사회로 확대하여 자식을 돌보아 주는 아버지로서의 수령, 어머니로서의 당, 자식으로서의 인민이 사회정치적 혈연관계에 의해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다는 사회주의 대가정론을 발전시켰다. 다음의 사

례는 '사회주의 대가정' 이론이 어머니들의 전통적인 역할을 어떻게 강조하는지 잘 보여준다.

<사례 29>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어머니 품을 귀중히 여기고 있기에 그 품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리워하며 그 품속에 안기면 행복해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당에 대하여 인민들은 어머니 당이라고 부르며 따르고 있는데·····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서는 어머니들이 자기 자신들에 대하여 하루 생활을 놓고도 밥을 제대로 먹는가 잠을 제대로 자는가, 밖에 나가 잘못된 것은 없는가 하고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며 오만가지 시름속에서 자식들을 키운다고 하시었습니다.⁶²⁾

이러한 여성상의 교육은 조선시대 강조했던 여성 덕목과 매우 유사하다. 유교 전통 속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던 역할을 살펴보면 '딸로서는 효를, 며느리로서는 집안의 화목을 도모하고, 아내로서는 남편에 대한 순종을, 어머니로서는 자녀 교육을 주요한 임무로 하고 있으며, 여성들에게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보좌역을 담당하여 그늘에서 순종과 희생으로 가정의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 요구되었다. 뿐만 아니라 가사를 관장하기 위해서 가사기술과 근검절약의 생활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꼽히고 있다.⁶³⁾

이렇게 볼 때 북한 사회에서의 여성은 이념적·제도적 측면에서 남녀평등이 실현되고 있는 듯 보이나 가정에서의 가부장제 문화전통이 여전히 온전해 있으며 남존여비의식과 현모양처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어 심한 가사노동에 시달리고 있다.⁶⁴⁾ 결국 북한 여성은 가부장제문화의 전통적 역할과 고정관념의 성역할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녀성」은 북한여성들의 유일한 여성 사회교육 잡지임을 자처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등의 혁명일화를 통한 정치학습과, 자녀교육, 모범적인 여성들의 사례 소개, 요리 등에 관한 것뿐이다. 과학교양 관련 기사 역시 자녀를 돌볼 때 필요한 지식만 실려 있을 뿐이며, 사회과학적인 정보가 부족하다. 이와 같이 북한 여성의 사회교육지임을 자처하는 「조선녀성」이 위에서 살펴본 내용만을 강조하는 한 여성의 성역할은 재생산 될 수밖에 없다.

3. 「조선녀성」에 나타난 '여성상'의 제시와 학습방법

1) 「조선녀성」에 나타난 여성상의 제시방법

앞서 살펴본 「조선녀성」에 나타난 여성상이 북한여성들에게 바람직한 여성상으로 공감을 얻고 이를 따르게 유도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하는 여성상을 실현한 여성에게 상을 수여하는 것이다. 북한에는 많은 포상제도가 있다. 「조선녀성」에 나타나 있는 포상제도의 형태는 대회를 통하여 상을 주거나, 제도화하거나, 혹은 '칭호'를 주는 것 등이 있다. 이 같은 포상제도를 통해 모범을 창출하여 모두가 따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북한이 추구하는 여성상을 전 사회적으로 장려한다. 이러한 내용은 「조선녀성」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순옥동무의 위훈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내여 주시기 위하여 그에게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⁶⁵⁾

그는 3차에 걸치는 김정일화전시회에 참가하여 특등과 1등의 높은 평가를 받았고 올해 4월에 진행된 제1차 김일성화전시회에서 좋은 평가와 표창을 받았다. 경애하는 박문월동무를 숨은 공로자로 내세워주시고 전국영웅대회, 전국공사주의미풍선구자대회, 제2차 전국어머니대회 등 여러 대회에 불려지시고... 국가훈장 제1급, 로력훈장을 비롯한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안겨주시었다.⁶⁶⁾

둘째, 북한이 추구하는 여성상을 담고 있는 김정숙의 일화 게재하여 북한 여성들이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의도에서 「조선녀성」은 매호마다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를 따라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이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어온 김일성 가계의 우상화작업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이처럼 「조선녀성」에서 강반석이 아니라 김정숙이 등장하는 이유는 「조선녀성」의 구독대상의 연령층이 일화 속에서의 김정숙의 연령과 비슷하기 때문이다.⁶⁷⁾

셋째, 일반 여성들의 모범사례를 찾아내어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가 모범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숨은 영웅 찾기'도 여기에 포함시켰다. 예컨대. "박옥련동무도 오늘의 숨은영웅. 숨은 공로자 대오에 서있는 우리당이 바라는 그런 녀성일꾼이 아니겠는가"⁶⁸⁾라고 표현한다든가, "이 나날에 제일먼저 충성의 2중모범초급단체의 영예를

지니고 원군사업에서도 앞장선 3초급단체연맹원들은 김기숙동무의 모범을 따라 학습에서도 남다른 열성과 성과를 거두고 있다⁶⁹⁾라는 식으로 숨은 영웅을 찾아 모범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알려지지 않은 일화를 소개함으로써 드러나지 않는 곳곳에서의 노력과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한다.

2) 「조선녀성」에 나타난 학습방법

a. 문헌학습⁷⁰⁾

북한은 어려서부터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문헌을 통한 학습을 해왔다.

「조선녀성」에서도 많은 문헌들이 소개되며 이를 통한 학습 실행 방법이 가장 모범으로 제시된다. 특히 최근 들어 여성들의 책읽기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김기숙 동무는 …… 정치리론수준과 기술실무수준을 더 높여갈 때만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모든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책 읽는 일을 계획적으로 꾸준히 진행하기 시작하였다.⁷¹⁾

그는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마을 늙은이들에게서 경험도 듣고 기술서적도 보면서 관리방법을 하나하나 익히면서 염소를 길렀다.⁷²⁾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고있는 이 좋은 기풍은 자기를 부단히 수양해나가려는 우리 녀성들의 고결한 품모이고, 정서를 즐기는 생활기풍으로 된다.⁷³⁾

우선 우리는 「김일성저작집」,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김정일선집」 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로작들을 학습하면서…⁷⁴⁾

b. 예술활동을 통한 학습

북한에서는 예술 활동을 통한 선전, 선동도 중요한 사상교육의 한 부분이다. 즉,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전 분야는 북한주민을 정치 사회화시키는 매체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왔다. 따라서 「조선녀성」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예술활동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조선녀성」의 구독자가 주로 여맹에 가입한 가두녀성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예술활동 특히 혁명가요보급과 연극, 재담, 노래공연 등을 통해 감동은 주고 교양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한다. 또한 「조선녀성」 자체로도 역시 북한 여성들이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장으로 제공하고 있다.⁷⁵⁾

지난해 8월에 노래를 통한 계급교양을 통이 크게 벌리기 위해 500여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을 조직하였습니다.⁷⁶⁾

초급단체에서는 또한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빛나는 생애를 담고 혁명영화들과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 중에서 「진달래」, 「설령의 붉은기」에 대한...⁷⁷⁾

휴식시간에는 흥겨운 춤판을 벌이며 시기를 복돋아주었다. 그리고 단오명절과 같은 계기들에는 녀맹원들의 음식품평회도 하고 노래와 춤 《경연》도 조직하였다.⁷⁸⁾

조선녀성들은 음악과 함께 무용도 끝없이 사랑하고 즐기었으며 유희와 오락도 매우 즐겨하고 많이 하였다.⁷⁹⁾

c. 모임을 통한 학습

북한은 조직을 통한 생활을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성인들은 직업동맹이나 여성동맹 등의 각종 모임과 조직에 편성되어 사상교육 강화를 위한 사회교육을 받고 있다.⁸⁰⁾ 모임과 조직은 학습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해 왔다. 여맹 역시 여성 사회조직의 하나이고 여맹의 기관지인 「조선녀성」에서도 조직생활 강조와 모임을 통한 학습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우리는 초급단체들에서 학습회, 강연회, 생활총화 등 여러 계기들에 계급교양자료들의 실속있게 활용하도록 하는 동시에 계급교양과 관련한 명제해설, 강연 해설담화, 직관선전, 예술영화감상발표모임, 체험자들과의 이야기모임, 복수결의 모임 등 계급교양을 여러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게 하였습니다.⁸¹⁾

도서들에 대한 연구학습과제도 주고 그 대한 실효발표모임도 실정에 맞게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벽동군 룡평리초급녀맹위원회 1초급단체에서는 녀맹원들 속에서 ...학습을 실속있게 잘하고 있다.⁸²⁾

동맹원 모두가 깊이 체득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학습을 조직 진행하였다.⁸³⁾

이와 같이 북한 여성상은 학습과 강연, 생활총화, 실효투쟁 등의 방법을 통해 일반주민들에게 전달된다. 구성원들을 연령과 직업에 따라 여러 조직으로 구분하고 직업과 생활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은 교육의 효과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초급단체와 같은 소규모 단위로 학습을 실시하고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학습과 강연, 학습한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실천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여성은 여성성과 아내, 어머니로서의 상을 굳혀가고 있다.

V. 결론 및 남북여성교류에의 시사점

이 글에서는 북한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북한이 이상형으로 추구하는 여성상이 무엇인지를 「교과서」와 「조선녀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 글의 서론에서 지적하였던 북한 원전자료 접근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2차 연구자료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분석이 어려웠지만 북한이 교육을 통해 지향하는 여성상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북한 여성의 삶의 단면을 엿볼 수 있었다.

북한에서 여성에게 요구하는 교육은 여성성, 즉 여성다움을 강조한다. 꽃을 가꾸는 여성스러운 일에 봉사하고, 어머니 대신 살림을 맡아하며, 그리고 집단생활에서도 소년단원들을 자식처럼 돌보고, 아픈 사람을 돌보고, 즉, 여성은 부모의 남을 여생을 모시는 딸로서, 남편의 후원자, 보조자의 역할을 하는 아내로서, 아들딸을 잘 낳아 기르는 것이 혁명임무인 어머니로서 존재할 뿐이다. 결국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딸로서의 설이 가장 큰 행복이며 꿈이라고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가정의 사적인 영역에 뿐만 아니라 공적인 사회에서도 남성 일군의 보조자·후원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이상적인 여성상은 유교적 전통에서의 어머니상과 매우 유사하다. 북한사회는 특히 '모성'에 대해 숭고한 사명이며 영예로운 일이라며 강조한다. 특히 '강반석녀사'는 북한여성들의 이상적 어머니상으로 칭송되고 있으며, 「교과서」와 「조선녀성」을 통해 교양과 홍보로써 현실 여성의 모습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여성상의 교육은 대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순종과 희생으로 가정의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던 조선시대의 여성 덕목과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내용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교과서」와 「조선녀성」에 그려진 북한 여성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북한 교육내용에 담겨져 있는 여성의 모습은 북한이 교육의 목표로 제시했던 주체적이고 혁명적인 인간이 되기 위한 교육이기보다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희생적인 어머니 역할을 담당할 전통적인 여인

상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상'은 사물의 그대로를 나타내는 '실상'이라는 의미와 사물의 모습을 왜곡되게 비추는 '허상'으로서의 개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여성상' 역시 한 사회의 여성들의 현실적 삶과는 거리가 있는 이상적인 허상의 담고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교과서」와 「조선여성」에서 제시하는 여성상은 북한 여성들의 현실적 삶에 대한 전체적 그림이 아니라 대개의 경우 왜곡되거나 혹은 이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허상에 가깝다.

이러한 가부장적인 전통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어 '아버지=수령, 어머니=당'으로 인식한다. 이는 사회를 '대가정'으로 보고 대가정의 가장인 아버지 수령에 대한 충성을 여성교육에 그대로 관철시킨다. 따라서 북한여성은 근본적으로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가정적·모성적 원칙에 지배되고 있다 이는 북한 사회가 공식적으로 남녀평등의 원칙을 천명하여, 여성을 가사노동의 부담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노력해 왔으며, 북한의 여성들이 사회적 노동을 통해 남성과 동등하게 혁명적 주체로 설 것을 요구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이다.

북한에서 교육되고 있는 여성상이 북한사회가 공식적으로 내세워왔던 남녀평등과 달리 괴리되어 왔다는 사실은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많은 준비가 필요함을 깨닫게 한다 북한을 연구하는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는 통일에 대비하여 55년 분단이 남북한에 가져다준 이질감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동질성 회복에 대해 논의할 때 회복해야할 동질성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는 통일이 단순히 분단 이전의 상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이 하나의 발전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창조적인 작업이기 때문이다. 남북한은 모두 높은 교육열과 근면한 노동정신과 같은 장점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남북한의 역사와 현실에서 중요한 공통점은 긍정적인 요소에서보다는 부정적인 요소에서 더 쉽게 동질성을 찾을 수 있다. 남북한의 유교문화의 전통적 여성상이 그 좋은 예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동질성은 남북한이 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한 동질성으로 회복되어서는 안 된다. 통일사회 형성을 위해서는 남북한 동질적인 측면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지향은 피해야 하며 오히려 분단 이래 키워져온 이질화된 문화일지라도 장점이 부각되는 측면은 문화의 다양성으로 받아들여 공존의식을 형성해 나가며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여성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복하고자 하는 전통성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이들 전통성이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여성의 삶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등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따라야 한다. 앞서 살펴본 북한의 여성상은 유교문화적 전통상으

로써 남한의 여성상과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러나 남북한 여성상에 동질적으로 나타나는 보조적이며, 수동적인 여성상으로 21세기 통일에 대비할 수 없다.

반세기가 넘는 분단의 시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통일된 국가를 만들어가는 데는 한반도 인구의 만을 자치하는 여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반쪽이 아닌 완전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성은 통일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성에게 유용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통일한국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형상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위에서 분석한 북한의 여성상이 통일후 우리 사회에 계속 지배적이라면 그 동안 남한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쌓아 놓은 성과마저 위협받을 것이다. 따라서 남한 여성만의 노력이 아니라 북한여성과 함께 하여 통일국가에서 소외되거나 희생되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과정 속에서 남북한의 상호 여성간의 노력 중의 하나로 남북한 여성교류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남북한 여성교류는 남북한 상호 교류 중의 하위 정책으로써 정치·군사·외교 등의 상황변화에 심대한 영향을 받아왔다. 그러므로 주도적이면서 능동적인 남북한 여성교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상호 정치적 합의에 의한 하위정책에서 탈피하여 남북한 여성간의 심도 깊은 이해와 공감의 필요하며 일회성이나 행사성으로 그치기보다는 지속적인 교류를 형성해 가야 한다. 또한 이러한 남북한 여성 교류를 통해 남북한 여성들은 상호 단점은 버리고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교류를 진행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남한은 북한이 상대적으로 발전시킨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는 반면, 북한은 남한에 비해 낙후된 여성에 대한 의식의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미래의 통일 한국상은 남녀 모두의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다. 남북한 여성은 통일이후 남녀평등에 기초한 통일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과정에서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의 역할을 제고시키는 일은 정부차원의 노력과 민간 차원의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일이다. 우선 정부에서는 여성들이 통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하여야 한다. 즉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할당제를 통해 보장하여 통일에 관련된 여성정책을 여성들의 경험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⁸⁴⁾

뿐만 아니라 남북한 여성교류의 장을 더욱 확대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남북한 여성교류가 정치적인 영향에 좌우되고 있는데 이러한 남북한 여성교류를 다양한 방식의 접근을 개발하여 남북한 여성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장치로 활용하여야 한다. 정치적·군사적 영향을 덜 받는 여성들만의 영역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여성들만의 확고한 지위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부와 민간 차원의 노력을 통해 통일에 바람직한 여성상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분이, "가부장제 문화와 남북한 여성문제," 『우리문화동질성연구회』, 제1집, (1997)
- 곽삼근, 『여성과 교육』 (서울: 박영사, 1998)
- 국무총리 정무장관 제2실, 『북한여성의 실태』 (서울: 정책자료 90-4, 1990)
- 김귀옥, "북한사회 연구의 동향과 쟁점안," 『인터넷 검색』, (1998)
- 김귀옥 외, 『북한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서울: 대동, 1997)
- 김동규, 『북한학총론』 (서울: 교육과학사, 1999)
- 김영수, "북한의 계급정책과 '녀성,'" 『통일논총』, 숙명여자대학교 제11집, (1994)
- 김인영, "북한여성교육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1997)
- 김인전, "북한 인민학교 교과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1997)
- 김현숙, "북한문학에 나타난 여성인물 형상화의 의미," 『여성학 논집』, 제 11집, (1992)
- 명지대학교 북한연구소, 『북한연구』 (서울: 명지대학교, 1998)
- 박미란, "북한의 여성정책에 대한 분석적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3)
- 박현선, "북한의 여성조직 '조선민주여성동맹,'" 『북한연구 창간호』, (1990)
- 박현선, "여성과 통일," 『여성과 한국사』, 사회문화연구소, (1993)
- 박현선, "현대북한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1999)
- 손봉숙 외, 『북한의 여성생활』 (서울: 나남, 1992)
- 윤미량, 『북한의 여성정책』 (서울: 한울, 1991) 『연합뉴스』, 1998년 12월 26일자.
- 이경하, "로동신문, '조선녀성'에 나타난 북한의 여성상," 『충남대학교』, (1993)
- 이배용, "유교문화의 전통과 변형속의 여성," 『이화여자대학교』, (1995)
- 이태영, 『북한여성』 (서울: 실천문화사, 1998)
-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술세미나 자료집, 『북한문화와 여성생활』 (서울: 이
-

- 화여대, 1994)
- 인천교육대학교 통일대비 국어과 교육과정 연구위원회, "남북한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연구," (1996. 12)
- 장인숙·황애리, "여성의 사회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증적 방안," 『통일문제연구』, 제12권1호, 평화문제연구소, (2000)
- 조경석, "북한의 고등중학교 국어교과서 분석," 『강원대학교』, (1996)
- 조정환, "북한교육의 체제적 성격," 『통일논총』, 숙명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1987)
- 최운실, "북한의 청소년의 과외활동과 사회교육," 『북한』, (1990)
- 통일교육학회, "북한교육의 이론과 실제," (1999. 10)
- 통일연구원, 『북한동향』 (1999)
- 통일원 교육홍보국, 『통일에 대비한 여성의 역할』, (서울: 통일원, 1995)
- 합인회, "북한여성연구의 현황과 과제," 『북한연구』창간특집호, 이화여자대 학원 북한연구협동과정실, (1998)
- 황은주, "북한 성인여성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1994)

〈북한문헌〉

- 『국어』, 인민학교 1학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5)
- 『국어』, 인민학교 2학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6)
- 『국어』, 인민학교 3학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6)
- 『국어』, 인민학교 4학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7)
- 김일성, 『사회주의 교육학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2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리경혜, 『여성문제해결 경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 『조선녀성』, 제1호 ~제5호, (평양: 근로단체출판사, 1999)

『전국어머니대회 문헌집』, (평양: 평양출판부, 1962)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 혁명활동』, 고등중학교 4학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5)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 혁명활동』, 고등중학교 6학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5)

- 주석 1) 김귀옥, "북한사회 연구의 동향과 쟁점안" 참조
- 주석 2) 함인희, "북한여성연구의 현황과 과제", 『북한연구』 창간특집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북한연구협동과정실, 1998. 5. p.36.
- 주석 3) 전숙자, 『여성학 논집』 제11집. 1994.
- 주석 4) 김인영,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7.
- 주석 5) 김귀옥 외, 『북한여성들은 어떻게 살고있을까』, 대동,1997. pp 183-214.
- 주석 6) 황은주. "북한 성인여성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조선민주녀성동맹과 「조선녀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주석 7) 이경하, " 『로동신문』, 『조선녀성』 에 나타난 북한의 여성상 -1985년부터 1992년까지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3
- 주석 8) 북한은 여성해방이념이 대부분 신문, 계간지와 같은 매체를 통해 제시되어 사회성원을 교육하거나 조직화한다.
- 주석 9) 김일성,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하여" (1971년 10월 7일 조선민주녀성동맹 제4차대회에서 한 연설), 『김일성 저작집 2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p. 377-402.
- 주석 10) 김일성,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김일성 저작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p. 327-328.
- 주석 11) 이러한 능동적인 여성상이 다소 과장되게 인식된 결과 1959년 안강망어업과 저인망어업에까지 '녀성호'선단이 조직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여성 착압수, 여성 트랙터 운전수, 여성 선반공 등 중노동 현장에까지 여성이 투입되었다.
- 주석 12) 김영수, "북한의 계급정책과 녀성'," 『통일논총』 11 (숙명여자대학교, 1994.12), p. 40.
- 주석 13) 전국의 여맹간부와 모범어머니 2,100명이 참석한 기 어머니대회에서 이후 여맹은 어머니학교를 전국에 설치하였다. 김일성,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 『김일성 저작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1981), pp. 326-353.
- 주석 14) 윤미량, 『북한의 여성정책』 (서울: 한울, 1991), pp. 138-140.
- 주석 15) 전상인, 『북한 가족정책의 변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 64.

- 주석 16) 조형, "북한 사회체제와 가부장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주최 통일문제학술세미나 발표논문, 1992.11.30), p. 20.
- 주석 17) 김일성, 『사회주의 교육학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7), p. 27.
- 주석 18) 북한의 인민학교 교과과정에서 『국어』 과목이 차지하고 있는 시간 수는 31.7%에 이른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책 참조 김동규, 『북한학총론』 (서울: 교육과학사, 1999), p. 261.
- 주석 19) "꽃니의 인사," 인민학교 2학년 『국어』 제2과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5), p. 30.
- 주석 20) 『국어』 인민학교 4학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0). pp. 41-42.
- 주석 21) "밥 먹을 때에도," 인민학교 3학년 『공산주의도덕』 .
- 주석 22) "금옥이의 전기절약수첩," 인민학교 4학년 『공산주의 도덕』
- 주석 23) 인민학교 4학년 『국어』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0). pp. 106-107.
- 주석 24) 박현선, "현대북한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1999. p. 101.
- 주석 25) "어머님의 정성," 인민학교 2학년 『국어』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5), 제 18과, p. 44
- 주석 26) "위대한 원수님께서 탄생--혁명적 가정,"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 혁명활동』 (고등중학교 4학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1995). p.5
- 주석 27) 『국어』 고등중학교 3학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0), pp. 56~59.
- 주석 28) 『국어』 고등중학교 1학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1), pp. 131-132.
- 주석 29) "금순이의 마음," 인민학교 2학년 『국어』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5), 제31과 p. 77.
- 주석 30) "단추," 인민학교 2학년 『국어』 (평양: 교육도서출판사,1995), 제43과, p. 108
- 주석 31) "우리할머니," 인민학교 2학년 『국어』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5), 제70과, p. 170.
- 주석 32) 고등중학교 1학년 『국어』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1), pp. 8~9.

- 주석 33) 최영표, "북한 중등교육 체제의 분석", 『북한의 교육의 이론과 실제』, 통일교육학회, 1999. 10. p. 57.
- 주석 34) 남학생의 경우는 '공작실습'을 교육받는다.
- 주석 35) 김동규, 『북한학총론』, 교육과학사, 1999. p. 261
- 주석 36) 교원신문사, (1979), p. 252; 『북한여성의 실태』, 정책자료 90-4, 정부 장관(제2)실, p. 158에서 재인용
- 주석 37) '남한에서는 1995년 1학기부터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가정』과 『기술·산업』 과목이 남녀 공통과목으로 적용되고 있다.' 김귀옥 외, 「북한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대동, 1997, p.204
- 주석 38) 김귀옥 외, "북한에서도 성 역할의 차이가 구조화되어 있고, 이는 또한 여자 어린이를 재사회화하는 하나의 교육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북한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대동, 1997, p. 189.
- 주석 39) 박미란, "북한의 여성정책에 대한 분석적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3, p. 74.
- 주석 40) 최운실, "북한의 청소년의 과외활동과 사회교육" 『북한』 (서울:1990), pp. 47-49.
- 주석 41) 조정환 "북한교육의 체제적 성격", 『통일논총』, (서울:숙명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1987)
- 주석 42) 여맹위원장은 2000년 10월 3일 중앙위 제5기 34차 전원회의에서 천연옥을 해임하고 박순희를 새로 임명했다. 여맹위원장은 1971년 이래 김일성 주석 후처 김성애가 맡아 오다98년 4월 이후 2년 6개월 동안 천연옥이 맡아왔다.
- 주석 43) "세 자매 대표" 『조선녀성』 (1999년 제1호), p. 34.
- 주석 44) "친딸이 되어" 『조선녀성』 (1999년 제2호), p. 30.
- 주석 45) 강은옥, "정성가 풍부한 조선녀성들", 『조선녀성』 (1999년 제5호), p. 35.
- 주석 46) 김희백, 『조선녀성』, "충효의 꽃, 미풍의 꽃 활짝 피우며", (평양: 평양출판부, 1999년 제2호), p. 24.
- 주석 47) 김명규, 『조선녀성』, "발전소건제를 떠받든 충성의 고임돌들", (평양: 평양출판부, 1999년 제5호), p. 26-27.

주석 48) 윤미량씨는 저서에서 "80년대의 중반부터는 강반석보다 김정일의 생모 김정숙을 따라 배우자는 운동이 더 활발하다는 차이만 있다. 1980년대 『조선여성』에는 강반석의 업적은 단편적으로만 보도되고, 김정숙이 매회 영원한 귀감으로 회상되고 있다."고 저술하였으나, 저자의 생각으로는 이는 시기적인 변화이기 보다는 교과서와 『조선여성』의 성격 차이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교과서에는 1990년대 이후에도 김정숙보다는 강반석에 대한 일화를 더 많이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미량, 앞의 책, 1991, p. 140

주석 49) 안봉근, "김정숙형의 인간" 『조선여성』 (1999년 제1호), pp. 18-19.

주석 50) "헌신과 지성으로 빛나는 한생" 「조선여성」 (1999년 제2호), p 23.

주석 51) "불세출의 녀장군" 『조선여성』 (1999년 제5호), p.20.

주석 52) 북한에서 여성에 대한 모성의 강조는 김귀옥, 「북한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서울: 대동 1997), p. 9: 이배용 외, 위의 글. p 95 참조

주석 53) "모성영웅에 대한 생각" 『조선여성』 (1999년 제1호), p.31.

주석 54) "삼태자-세 초병의 어머니" 『조선여성』 (1999년 제2호), p. 29.)

주석 55) 로만호, "어머니" 『조선여성』 (1999년 제1호), p 33.

주석 56) 김명희, "공중도덕과 어머니" 『조선여성』 (1999년 제4호), p 31.

주석 57) "어린이 생리적특성과 생활" 『조선여성』 (1999년 제5호), p. 40.

주석 58) 『전국어머니대회 문헌집』, (평양: 평양출판부, 1962)

주석 59) 박미란, "북한의 여성정책에 대한 분석적 연구", (서울: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3), pp. 77-78

주석 60) 박영숙, "가정의 혁명화와 여성들의 책임" 『조선여성』 (1999년 제3호), p. 15.

주석 61) 박현선, "여성과 통일", 『여성과 한국사』,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1993), p 462

주석 62)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 혁명활동』, 고등중학교 4학년 교육도서출판사, 1995. pp. 6-7 .

주석 63) 유교문화의 전통적 여성상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 이배용 외, 『유교문화의 전통과 변형속의 여성』,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편], 1995). p 19.

- 주석 64) 광분이, "가부장제 문화와 남북한 여성문제," 『우리문화동질성연구회』 제1집 (1997.12), pp. 172-173.
- 주석 65) "육탄영웅 조순옥," 『조선여성』 (1999년 제3호), p. 28.
- 주석 66) "실천으로 대답해야 한다," 『조선여성』 (1999년 제4호), pp. 34-35.
- 주석 67) '김정숙우상화' 기사 제목은 다음과 같다. 1999년 제1호 "결사옹위의 위대한 영웅", "김정숙형의 인간", 1999년 제2호 "결사관철의 숭고한 품모", 1999년 제3호 "대홍단의 메아리", 1999년 제4호 "백학산의 새 전설", 1999년 제5호 "불세출의 여장군".
- 주석 68) "김정숙형의 인간," 『조선여성』 (1999년 제1호), p. 18
- 주석 69) 리상진, "책읽기를 정상화하여," 『조선여성』 (1999년 제2호), p. 26.
- 주석 70) 황은주씨는 『조선여성』에 나타난 문헌학습 방법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 김일성, 김정일의 저서 학습이다. 둘째, 혁명역사 및 덕성실기 학습이다. 셋째, 강반석의 혁명적 업적 학습이다. 넷째, 문예서적을 통한 학습이 있다. 황은주. 앞의 글, 1994
- 주석 71) 리상진, "책읽기를 정상화하여," 『조선여성』 (1999년 제2호), p. 26.
- 주석 72) "모범축산가정," 『조선여성』 (1999년 제2호), p. 26.
- 주석 73) "언제나 책읽는 기풍을 세워," 『조선여성』 (1999년 제4호), p. 12.
- 주석 74) 황금녀, "계급교양사업을 이렇게 짜고들었다." 『조선여성』 (1999년 제4호), p. 29
- 주석 75) 우리 여성들은 전문 작가, 기자로만이 아니라 사회주의건설의 벽찬 현실속에서 자신이 체험한 것을 가지고 문학작품을 쓰고 있다…… 특히 『조선여성』, 『사회주의 생활문화』, 『인민교원』, 『청년생활』, 『대학생』 등 잡지들에 많은 글은 써냄으로써 문필가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리경혜, 『여성문제해결 경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p. 113-114.
- 주석 76) "예술선동을 통한 계급교양강화," 『조선여성』 (1999년 제2호), p. 33
- 주석 77) 리룡진, "충고한 충성심을 따라 배워," 『조선여성』 (1999년 제3호), p. 27
- 주석 78) "내밀성이 강한 일군," 『조선여성』 (1999년 제5호), p. 58

주석 79) 강은옥, "정서가 풍부한 조선여성들," 『조선여성』 (1999년 제5호), p. 35

주석 80) 북한연구소(편), 『북한총람』, 1983.

주석 81) 황금녀, "계급교양사업을 이렇게 짜고들었다." 『조선여성』 (1999년 제4호), p. 29

주석 82) 리룡진, "충고한 충성심을 따라 배워," 『조선여성』 (1999년 제3호), p 27

주석 83) "효녀의 마음," 『조선여성』 (1999년 제5호), p.27

주석 84) 여성의 통일에 주체적 참여를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에 관해서는 장인숙·황애리, "여성의 사회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증적 방안", 『통일문제연구』, 제12권1호(통권 제33호, 2000년) 참조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중관계

김승채 (고려대 평화연구소)

- I. 서론
- II.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과정인가, 상태인가?
- III.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 IV.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한중관계 제언

I. 서론

본 연구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의 성격을 규명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국의 대한반도 입장을 분석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바람직한 한중관계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지난 6월의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 포용정책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간에는 당국자 차원에서 3차례에 걸친 장관급회담, 국방장관회담, 그리고 2차례의 남북경협 실무협회가 개최되었고, 민간차원에서는 2차례의 적십자회담, 이산가족의 상봉, 경제협력의 추진, 언론사 사장단의 방북, 그리고 백두산 관광 등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접촉과 대화를 가졌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볼 때 남북관계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전향적인 관계가 열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

1) 이 과정에서 남북한 사이에 화해의 징후가 포착되고 있고, 또 협력의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단계를 남북협력시대라고 표현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김영수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고체상태’에서 ‘액체상태’로 액상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지적

그러나 최근 남북한 관계를 남북 화해협력시대의 시작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각론적 차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내적인 차원에서는 최근의 남북관계가 ‘국민의 정부’의 일방적 양보에 따른 북한의 전술적 변화를 기초로 한 ‘북한중심의 남북관계’라는 주장과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보안법 철폐, 연방제 실시 요구를 철회하고, 남북관계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남북 화해협력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미국과 일본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남북관계가 과거와 다른 화해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차원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문제가 분명하게 해결되지 않았고, 또 북한의 진정한 의도가 분명하게 표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에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²⁾ 반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경우는 남북관계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기 위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남북회담 이후의 남북협력시대에 대해 북한은 ‘통일과정에서 중대한 사변’으로 규정한 지난 6월의 남북정상회담과³⁾ 6·15남북공동선언으로⁴⁾ 시작된 새로운 남북관계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첫

은 의미있는 것이다(김영수, “남북협력시대의 대북전략,” 한국국제정치학회, 안보정책연구소 공동주최 학술회의 자료(2000. 10.6-10.7), p.2).

2) Chuck Downs, *Washington Post*, 2000. 10. 13

3) 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일과정에서 중대한 사변’으로 평가하였다. 북한의 언론은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기간 동안 6월 13일 오후 5시 중앙방송과 평양 방송을 통한 첫 보도 이후 3일동안 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을 통해 총 49회를 보도 하였다. 통일부 정보분석국, 『북한동향』 제491호(2000.6.10-6.16), p.24.

4) 남북공동선언에 대해 북한은 특히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을 “나라의 통일 문제를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민족의 주체적 힘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7천만겨레의 지향과 의지가 반영된 ‘역사적인 사변’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하면서,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상무위원, <조국통일상> 수상자 최태규는 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된 것은 민족분렬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을 이룩하고 부강조국을 건설하려는 겨레의 념원과 의지를 반영한 역사적인 사변이며 조선민족의 대경사이며 행운이라고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2000. 6. 16(중앙통신의 인용은 <http://www.kcna.co.jp>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하의 중앙통신인용은 이 웹사

걸음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대한 남북한과 주변국가들의 반응은 이와 같이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총론적 차원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중국이 한반도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지정학적, 역사적, 그리고 정치경제적인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중국은 한국전쟁의 참가자이면서,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국과는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1999년말 현재 223억 5,200만 달러의 교역을 보이고 있다.⁵⁾ 최근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은 과거 한국전쟁 시기와는 다른 입장에서 평가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북한과는 정치, 군사적, 경제적 측면, 그리고 한국과는 정치, 외교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의 문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4자회담의 참여자로서의 문제,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문제라는 차원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분석은 상당히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본 논문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본질을 규명하고, 중국의 역할을 분석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바람직한 한중관계를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트를 통해서 작성됨).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2000년 11월호, <http://www.kiep.go.kr>

II. 남북정상회담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과정인가, 상태인가

1. 지역통합에 대한 기존의 이론

사회집단이나 국가들이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나의 공동체로 결합되어 가는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이론으로서 지역통합이론 논의는 1950-60년대에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통합이론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면서 유럽통합을 염두에 두고 통합을 강조했던 하스(Ernst Haas)는⁶⁾ 통합이론이 갖는 여러 가지 한계로⁷⁾ 인하여 통합이론의 적실성에 회의를 가지게 되었고, 더욱이 1970년대 상호의존론(특히 국제제도의 역할을 무시한)의 증가로 통합이론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국가간 쌍무적인 상호의존성의 증가와 사회주의권의 체제변화에 따른 냉전체제의 와해는 '경제의 세계화'와 '지역주의'를 격화시켰고, 그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통합의 과정을 촉진시켰다. 다시 말하면 지역통합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과정에서 상호의존의 증가가 지역통합이론의 명분을 빼앗아갔지만,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상호의존의 증가 때문에 통합이론의 적실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통합이론은 통합의 성격(상태 혹은 과정), 통합의 달성방법(정치적 혹은 비정치적), 그리고 도이취의 분석대로 통합을 상태로 보더라도 그것의 내용(다원적 안보공동체 혹은 융합적 안보공동체)에 따라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 여기서는 먼저 연방주의, 다원주의, 기능주의, 그리고 신기능주의를⁸⁾ 분석하려고 한

6) Ernst Haas, *The Uniting of Europe*(Standford, CA: Standford University,1958)

7) 하스는 지역통합이 적실성을 잃고 있다는 근거로, 첫째 초기 통합의 기저에 깔려있던 행위자들의 동기, 인식, 그리고 목표의 변화, 둘째 지역통합체 내의 문제, 예를들면 인플레이나 실업의 문제를 내부에서 보다는 지역공동체 이외의 국제기구 혹은 개별적인 국가간 쌍무관계를 통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이론이 예상했던 초국가적 제도가 실질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Ernst Haas, *The Obsolescence of Integration Theory*, Research Series, No.25 (Berkel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1975)

다.

먼저 연방주의(Federalism)는 공식적인 헌법적 조치를 통하여 전통적인 정치적 접근에 의한 통합을 의미한다. 연방주의는 통합에 있어 정치적 접근을 강조하지만 다원주의에서 정치적 엘리트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과는 다르게 법적, 제도적 방법을 통하여 통합을 이룩하려는 것이다. 연방주의에서는 통합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국가의 제도를 해체하고, 공통의 군사, 경찰 및 사법제도를 포함하는 연방기구와 같은 초국가적 제도의 창설, 성문헌법과 양원제를 구성하며,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력배분을 유지하는 특성을 지닌다.⁹⁾ 따라서 연방주의에서는 통합을 지향하는 정치 지도자의 의지, 능력 및 결단력을 중시하며, 비정치적 영역에서부터 달성되는 점진적 통합보다는 급격한 정치적 타결을 강조한다.

연방주의 이론가들은 미국, 스위스, 캐나다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연방은 선진산업국에서, 그리고 엘리트 단위의 수가 적은 경우에 성립의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러나 엘리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연방주의는 연방국가의 수립은 사실상 권위주의 국가에서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¹⁰⁾

한편 연방주의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연방주의는 자율성과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개별국가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지나치게 정치엘리트의 의지와 중요성에 집착함으로써 통합의 과정에서 비정치적인 영역을 무시하였으며, 연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한 동태적인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두번째 다원주의(Pluralism)는 통합을 “일정한 영역 내에서 한 집단의 사람들이 역내 문제에 관하여 평화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신뢰성을 띤 기대를 오래 동안 충분히 확산시키는 공동체 의식과 관행을 달성하는 상태”로¹¹⁾ 보고 있다.

8) 통합이론을 이와 같이 네가지로 분류하는 것은 펜트랜드(Charles Pentland, *International Theory and European Integration*, London: Faber and Faber Ltd., 1973)가 통합에 대한 가치, 가설, 통합과정, 통합목표 등을 기준으로 주장하는 것이지만, 그 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통합이론의 유형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

9) Seymour Martin Lipset ed., *The Encyclopedia of Democracy* (London: Routledge, 1995), Vol. 1, pp.474-482.

10) Charles Pentland, *op. cit.*, pp.167-168.

11) Karl W. Deutsch, et al.,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rea: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the Light of Historical Experi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p.5.

특히 도이취는 구성원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거래(transaction)의 증대를 통합의 필수요건으로 본다. 따라서 그는 국경을 넘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커뮤니케이션과 거래를 통한 인적 접촉의 증대는 사회, 심리적 과정을 거쳐 통합의 길로 진전된다고 본다. 그는 통합된 사람들의 집단을 안보공동체(security community)라고 정의하고 정책결정기구가 하나인가 혹은 둘 이상인가에 따라 융합적 안보공동체(amalgamated security community)와 다원적 안보공동체(pluralistic security community)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는 두 개 이상의 독립적 조직들이 결합하여 공동정부를 가진 하나의 단위로 된 것을 의미하며, 후자는 개별국가들이 독립과 자율성을 가지면서 평화적인 분쟁해결의 과정을 갖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통합된 국가가 존재하지 않고, 개별국가의 주권이 소멸되지 않더라도 국가간 분쟁이나 전쟁이 소멸된 상태를 통합으로 인정하고 있다. 도이취의 다원주의는 기능적인 연계가 있어 거래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동화가 일어나서 공동체가 형성되고(통합의 선행) 궁극적으로 정치적인 융합으로 발전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원주의가 신기능주의와 같이 정치적인 통일에 있어 국제제도의 역할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주장하는 점, 그리고 신기능주의와 반대로 제도적 융합보다 통합이 선행한다는 점에서 신기능주의와 다르다.

그러나 다원주의는 제도적이고 정치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경시했고, 특히 통합의 동기에 관한 동태적인 설명, 의사결정, 조직의 형태, 연합행위 등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었다. 또 다원주의는 커뮤니케이션의 증대, 교역량의 증대 등을 통합의 지표로 상정하고, 이것의 증대가 곧바로 통합으로 진행된다는 낙관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양적 팽창이 곧바로 질적 통합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원주의의 가정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기능주의(Functionalism)는 인간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면 정치적 행위는 불필요하다는 이상주의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이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미트라니(David Mitrany)는 이상주의의 제도들은 ‘작동하지 않는 평화체제’라고 비판하면서 현실주의에 입각한 ‘작동하는 평화체제(a working peace system)’를¹²⁾ 주장하였으나, 그의 주장도 내용적으로는 낙관적인 이상주의적 사고에 바탕하고 있다.

그는 현대사회는 복잡성이 증대한 기술적, 기능적 사회이며 이러한 사회에서

12) David Mitrany, *A Working Peace System* (Chicago: Quadrangle Books, 1966).

는 국가안보가 아니라 국민복지가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상호의존이 증대함에 따라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국가간의 협력이 국익에 부합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기능주의는 기술적, 경제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은 분리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국가간의 기술,경제적 분야에서의 교류확대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 권위적인 국제기구의 등장을 초래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다른 분야, 즉 정치적 분야의 교류와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보건, 통신, 수송 등의 영역에서의 협력이 다른 기능적 영역의 협력을 촉진시키게 되고, 궁극적으로 정치영역의 협력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능주의는 통합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을 간과한 점, 정치와 비정치적 분야의 상관성 간과한 점, 비정치적인 영역에서의 협력이 정치적인 영역의 통합을 가져오지 않은 점, 그리고 국가지도자의 역할 경시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는 기능적인 통합행위를 통하여 점진적인 통합을 추구하며, 한 분야에서의 협력의 습관이 다른 분야로 파급(spill-over)되는 학습과정을 강조한 기능주의와 유사하다. 그러나 신기능주의는 기능주의에서 설명하는 기술,경제결정론을 반대하고 정치와 비정치적인 분야는 명확하게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또 기능주의에서는 파급효과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데 반하여 신기능주의는 정치적인 의지(political will)를 통하여 파급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신기능주의는 기술, 경제적 통합과 정치적 통합사이에 이를 매개해 주는 매개체, 즉 정당, 정부기관, 압력단체, 국제조직과 같은 조직들이 중요하고, 이것이 반드시 작동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통합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신기능주의는 관(官)과 민(民)이 결합하여 명분이 아닌 실리에 기초한 의도적인 정치적 선택이 통합의 과정에서 중요하며, 이들 행위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논의하는 소위 정치화 과정(politicization process)을 강조한다.

결국 신기능주의는 정치와 기술이나 경제, 권력과 복지를 분리할 수 없고, 통합을 위한 정치적 엘리트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들 엘리트들은 통합을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정부가 통합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의도적으로 국제기구를 창설하고, 이를 통한 통합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신기능주의는 경제적 통합이 정치적 통합으로 곧바로 전환되지 못하는 점, 내부적 변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고, 외생적 변수를 간과하고 있으며, 지역내의 특수성을 배제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상의 통합이론은 비교적 동질의 국가들이 평화적 방법에 의해서 하나로 결합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발된 이론으로, 이념, 체제를 달리하는 분

단국의 통합문제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분단국 통일을 설명하는 적절한 이론적 틀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존의 통합이론의 원용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의 논의는 기존을 변형한 대안적 모델에 근거할 것이다.

2. 평화체제에 대한 대안적 모델: ‘전략적 통합’ 모델

1) 대안적 모델의 필요성

정치적인 차원에서 21세기의 우리는 이제 과거와 다른 시간적 공간적 장에서 생활하고 있다. 근대성을 확보하려는 근대의 시기를 넘어 탈근대의 시기에 생활하고 있고, 단일국가라는 영토적 제약을 넘어 지역, 세계,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무한히 큰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유독 분단 현실을 극복하려는 통일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단일국가 수립을 통한 통일을 강조하는 대단히 역설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가능성이 희박하면서도 의미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실천가능성 있는 통합의 방법을 추구하여야 하는데, 그 필요성을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모호한 통합의 개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서는 남북협력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정착에 따른 남북한 통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남북한 당국간에는 물론이고 학자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직도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는다. 남북공동선언에서 말하고 있는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기초한 통일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통일은 먼 훗날의 이야기라는 전제로 남북협력시대의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를 통합으로 인식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먼저 6·15남북공동선언에서 말하는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보자. 우리는 ‘국민의 정부’ 등장 이후 남한의 통일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혼란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은¹³⁾

13)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태평화재단,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서울: 아태평화출판사, 1995) 참조.

공식적인 논의과정 없이 논리적으로 남한의 공식적인 통일정책은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¹⁴⁾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3단계 통일방안’의 첫 단계인 남북국가연합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3단계통일방안’이 정부의 입장으로 비쳐지고 있다.

그러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3단계통일방안’ 모두 중간단계로서 (남북 혹은 국가)연합을 상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남북연합은 남북한 화해협력 이후 경제와 정치적 협력을 동시에 이룩하는 것이고 ‘3단계통일론’에서 국가연합은 정치적 결정으로 국가연합이 결정되고 이후 경제, 사회문화, 군사적 협력을 추구하는 단계다.

한편 북한은 6·15남북공동선언에 명기된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는 “정치, 군사, 외교권 등 현존하는 남북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안”이며 이것은 1991년 김일성 주석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방안이라고 말하고 있다.¹⁵⁾

결국 연합제에 대한 남한내에서의 차이점은 물론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의 차이점은 통일방안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합의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공동선언에서 언급되고 있는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표현되고 있는 통일방안은 남북 화해협력시대의 통합의 개념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통일은 먼 훗날의 이야기라는 전제로 남북협력시대의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를 통합으로 주장하는 입장을 보자. 이런 입장은 기본적으로 ‘한반

14) 이것에 대해서는 민족통일연구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체계와 실천방향』 (민족통일연구원, 1994) 참조.

15)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경호 서기국장은 김주석의 ‘고려 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돌을 맞아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열린 평양시 보고회에서 “우리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의 원칙에 기초하되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개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 등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갖게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 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북남관계를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김주석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내놓았으나 남한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91년 신년사에서 ‘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해 잠정적으로 연방공화국의 지역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 장차 중앙정부 기능을 더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방안’ 을 천명했다면서 ‘이 방안은 결국 낮은 형태의 연방제안’이라고 해석했다. 조선중앙방송, 2000. 10. 6.

도 평화체제'를 하나의 상태, 즉 통일과는 다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통일과는 다른 또 하나의 상태)의 하나라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평화와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는 지금까지 한반도에서의 평화는 곧 통일을 의미한다는 생각에 집착해 온 같다. 그러나 평화로 대변되는 평화체제는 이제 더 이상 통일과 동일시해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먼저, 시대적 변화를 들 수 있다. 최근 국제질서는 단일의 국민 국가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과거 단일 국가에서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던 국가가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다. 이제 세계는 티리(Charles Tilly)가 말하는 지배권력의 양식이 '강제중심적'(현존 사회주의국가) 또는 '온건한 강제와 온건한 자본의 결합'(자본주의 국가)으로부터 '자본중심적'으로 이행중이라고 볼 수 있다.¹⁶⁾ 이것은 국가의 역할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고, 세계화시대의 가치가 국가이성(raison d'état) 보다는 경제이성(raison d'économie)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는¹⁷⁾ 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대적 조류에서 민족국가의 건설과 민족국가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상의 목표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통합이론의 두 번째 필요성은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통합이다. 최근의 국제적 조류는 '세계화'라는 말로 축약될 수 있다. 세계화시대에 단일 주권 국가의 지위 및 기능의 변화는 국가보다는 정부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정치체계를 모색하게 해준다. 이런 변화는 일정한 영토 내에서 조직적 독점폭력을 정당하게 행사해 온 국가의 역할을 비폭력 강제¹⁸⁾ 역할로 변화시키게 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세계화 시대의 민족통일은 단일국가의 형성을 전제로 한 좁은 의미의 통일을 지양하고, 분단현실과 세계화라는 국민국가에 대한 도전간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룩해야 한다. 특히 가까운 시일내에 '평화적 방법을 통한 단일국가의 형성의 가능성이 희박한 남북한 간에는 더욱 그럴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셋째, 실현가능한 통합방안이 요구된다. 기존의 통일방안은 결국 중앙집권적 단일국가의 형성을 전제로 한 통일이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남북한의 단일국가의 형성은 남북한 협상(합의)에 의한 통일, 흡수통일, 그리고 남북한이 동

16) Charles Tilly,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 AD 990-199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p.127-160.

17) 함택영, "남북한 통합과정과 모델 비교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16권 1호(2000 봄/여름), pp.163-164.

18) John Hoffman, *Beyond the State: An Introductory Critique* (Cambridge: Polity Press, 1995).

시에 붕괴되어(내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새로운 국가를 구성하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합의 통일은 상호간의 통일의 방안, 철학, 주체 등에서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무력에 의한 방법은 남북한 모두 가장 원하지 않는 방안이다. 남한의 시민사회가 상당한 역동성을 가지고 있지만 체제 안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고, 북한 김정일체제도 정권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양국이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동시에 붕괴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렇다면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방안은 이와는 다른 실현가능한 새로운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경제원칙에 충실한 통합방안이 필요하다. 이 방안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도출해 내는 경제원칙에 충실한 방법이다. 이것은 통일은 통합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즉 통일은 반드시 단일민족국가로의 통일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통일의 목표를 민족 공존과 공영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민족경제공동체 내지 국가연합 정도(반드시 민족경제공동체나 국가연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를 수립하는 것으로 축소시켜야 한다. 즉 남북한이 별 문제없이 합의할 수 있는 ‘공통이익가능영역’(joint interest possibility)을 만들어 내는 것을 통일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¹⁹⁾

이런 점에서 본다면 “바람직한 통일은 남북한 체제를 빨리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독립적인 두 국가체제를 상호 인정하고 각 체제가 더 자주적이고 강한 생존력을 갖도록 발전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은²⁰⁾ 상당히 의미있는 것이다. 예를들면 EU, NAFTA, ASEAN의 사례들은 단일민족국가의 중요성 보다는 단일국가를 뛰어넘어 (인근)지역이라는 거대한 공간적 개념 속에서 ‘비영토적 통합’을 통해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사례들은 경제원칙에 충실한 통합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볼 때 남북협력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과거와 같은 단일(민족)국가를 통한 통합에 집착하기 보다는 영토적 개념을 벗어난 ‘비영토적 차원’에서 통합의 달성을 통한 효과 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의 개념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아래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전략적 통

19) 최완규, “세계화의 압력과 새로운 통일논의,” 『한국과 국제정치』, 16권 1호(2000 봄/여름), p.5.

20) 최장집, “한국의 통일: 통일의 조건과 전망,” 『열린지성』, 1997년 여름호, p.157.

합' 모델에 입각한 남북협력시대의 '한반도 평화체제'라고 할 수 있다.

2) 평화체제에 대한 대안적 모델: '전략적 통합'모델

지역통합을 설명하는 모델들은 남북한과 같은 분단국의 통합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하나의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것은 다원주의에서 말하는 다원적 안보공동체와 신기능주의에서 설명하는 정치적 역할을 혼용한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원적 안보공동체는 통합된 사람들의 집단인 안보공동체(security community)의 정책결정기구가 둘 이상을 의미하며, 개별국가들이 독립과 자율성을 가지면서 평화적인 분쟁해결의 과정을 갖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통합된 국가가 존재하지 않고, 개별국가의 주권이 소멸되지 않더라도 국가간 분쟁이나 전쟁이 소멸된 상태를 통합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휴전협정에 대한 확대해석과 유사한 것이다. 즉 과거에는 휴전협정을 교전당사자 간의 전쟁행위의 임시적 중단을 위하여 체결되는 군사협정이라고 보았는데, 2차대전 이후에 전쟁행위를 통하여 전쟁의 원인을 해결하기 어렵게 되었고, 교전 당사국들이 오랜 전쟁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전쟁을 포기하고 합의하게 된 것, 다시 말하면 전쟁행위의 임시적 중단이 아니라 궁극적 포기라고 해석하는 것과²¹⁾ 동일한 논리라고 할 수 있다.²²⁾

남북공동선언에서 나타나고 있는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다원적 안보공동체에서 주장되고 있는 정부형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대안적 모델이 다원적 안보공동체에 의존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모델이 통합의 과정에서 정치엘리트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치적 통일의 측면을 강조하지만, 국제제도와 같은 제도의 창립을 통한 통합에는 반대한다는 점이다. 만약 이것이 제도를 통한 통합을 의미한다면 신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의 분단국가에서는 달성하기 쉬운 방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남북한도 그와 같은 제도

21) 이런 해석은 국제법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으로 Julius Stone, *Legal Controls of International Conflict*, New York and London, 1973, 참조.

22) 그러나 현대적 휴전협정은 평화협정을 대체한다는 의미는 아닌데, 그것은 휴전협정이 전쟁의 원인 자체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원인을 해결하는 평화협정과는 구별된다.

의 형성을 통한 통합에는 동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다원적 안보공동체를 원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모델이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일민족’이라는 용어로 대치한다면 쉽게 허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원적 안보공동체가 구성원간의 communication과 거래(transaction)의 증대가 통합의 필수조건으로 제시하는 것도 의미있는 것이다. 고착된 사고를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양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거래가 있을 때 가능하고, 그것은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편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대안적 모델이 신기능주의를 채택하는 이유는 신기능주의에서 주장하는 몇 가지 요구들이 실질적인 통합을 가속화하기 때문인데, 그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가 그냥 정치적 분야로 파급되는 것이 아니라 분단국 정치지도자의 정치적 의지를 통해서 파급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능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실질적으로 통합을 성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유익한 것이다.

또한 신기능주의에서 말하는 관(官)과 민(民)이 결합하여 명분이 아닌 실리에 기초한 의도적인 정치적 선택이 통합의 과정에서 중요하다는 것과 이들 행위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논의하는 소위 정치화 과정(politicization process)을 강조하는 측면이 통합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과정에서 의미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전략적 통합’은 통합의 과정에서 정치엘리트의 역할이 중요하며, 관과 민이 실리에 기초하여 구성원 간의 communication과 거래의 증대가 필수적이며, 우리(민족)라는 공동체의식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전략적 통합 모델은 분단국가의 통합은 달성하려는 정치지도자의 의지와 국제적 변수(분단국을 둘러싼 상황변화와 주변국의 지지)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양자의 변증법적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즉 통합은 어떻게 대치, 분단상태에서 양 국가가 최적의 해결에 도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국제적 상황변화와 국가의 생존에 직면하여 정권담당자에게는 체제유지라는 비용을 부담시키고, 국민들에게는 생존이라는 절박한 위기국면을 제공하여 차선적 해결책으로 전쟁이나 극단적인 대치를 극복하고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것은 최고 정책결정자에게는 최적이지 않지만 국가 혹은 국민에게는 최적인 타협전략을 선택하는 것이다. 즉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최고 정책결정자는 정권과 체제유지라는 절박한 상황하에서 국제적 변화에 순응하고, 생존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분단국의 최고 정책결정

자들의 정치적 결단과 주변국의 지지를 통하여 정권과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분단국가의 주권이나 독립성에는 훼손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협력시대 우리가 주장하는 하나의 상태로서의 ‘한반도 평화체제’는 이와 같은 ‘전략적 통합’에 입각하여 만들어지는 체제고, 그것이 남북협력시대의 한반도 평화정착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전략적 통합에 입각한 ‘한반도 평화체제’: 개념, 성격, 조건

남북협력시대에 남북한이 공존공영할 수 있는 방법은 목표 수정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다. 즉 최대목표인 통일을 최소목표로 전환하고, 최소목표였던 평화정착을 최대목표로 전환하여 남북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나 통일의 실현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통합은 ‘일정한 영역안에서 분단된 영역의 구성원들이 분단은 평화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믿음하에서, 공동체의식과 공존의 관행을 확산시킨 상태’이며 이것이 바로 전략적 통합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체제’다. 따라서 이것은 단일(민족)국가로 전제로 한 통일과는 다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통일도 하나의 상태고, 평화체제도 하나의 상태로 규정할 수 있다. 기존의 평화체제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평화체제를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한 반면, 전략적 통합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화체제는 과정이 아닌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남북협력시대의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일시 할 수 있으며, 그것은 남북한협력시대의 한반도 평화정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남북협력시대에 상태로서의 ‘한반도 평화체제’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먼저 전략적 통합 모델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체제’는 과정이 아니고 상태다.

둘째,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3단계 통일방안’에서 국가연합이 경제, 사회교류를 중심으로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장치가 상당히 미약한 수준에서 교류협력의 확대라는 다분히 기능주의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략적 통합에서 말하는 평화체제는 경제·사회적 교류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공존과 군사적인 신뢰구축 조치, 예를들면 상호상멸이 불가능할 정도

의 군축과 군비통제를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3단계통일방안’의 2단계인 연방의 수준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남북연합을 넘어 완전통일국가 바로 직전의 단계까지를 상정한 것이다. 따라서 전략적 통합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체제’에서는 남북한의 비대칭적 군비경쟁은 군비통제 및 군축이라는 정치적 해결이 전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별 국가의 이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전략적 통합’은 상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남북한이 각자 자신의 입장에 맞는 이념-자유주의, 사회주의, 주체사상-을 추구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렇게 규정된 ‘한반도 평화체제’가 달성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먼저 남북한의 협력, 즉 남한의 대북온건정책(경제지원 및 군비통제)과 북한의 개혁개방과 더불어 대남 온건정책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것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communication과 거래를 증대시키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장기적인 시간을 요구한다. 남북한이 신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남한측이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끈기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그 이유는 북한은 체제성격상 급격한 개혁개방을 단행할 여력이 없고, 대(시민)사회에 대하여 정책의 급진적 전환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셋째, 남한이 북한에 대해 개방이나 민주화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북한은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급격한 개방이나 민주화를 단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변화를 강조해서는 안되고 북한 체제 스스로 변화의 이점을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방이나 정권의 성격을 변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넷째, 남북한은 상대를 공격하기에는 불충분할 정도, 그리고 방어하기에는 충분한 정도의 수준으로 군사력을(방어적 충분성)²³⁾ 유지해야 하며, 그것은 현재의 남북한의 비대칭적 군비경쟁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주변국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강대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연관된 지역이고, 특히 냉전적 사고를 통한 분단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의 지지는 절대로 필요하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지지는 충분조건으로 작동할 수 있다.

23) 방어적 충분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방어적 충분성’(NOD)이론과 한반도 안보전략,” 국가전략, 1권, 제2호(1995 가을/겨울), pp. 31-52 참조.

마지막으로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북한은 휴전협정의 조인자와 당사자 문제로 인하여 평화협정체결에서 남한을 배제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중심이 된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 그것만이 상태로서의 평화체제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선결조건이 성숙되면 남북한은 경제교류와 신뢰구축을 동시에 이루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한의 각자의 주권을 보장하는 단계를 통하여 평화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전략적 통합 모델이 기능주의에서 말하는 과정모델과 다른 점은 이 모델에서는 비정치적 교류협력 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 안보분야의 교류협력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것이 신기능주의와 다른 것은 통합의 수단으로 제도를 통한 통합이 아닌, 분단국의 정치 지도자의 정책결정에 의한 합의의 통합(통일)이라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평화체제의 주체세력은 일차적으로 남북한에서 각자 제도적인 합법성을 가지고 있는 정치지도자와 이를 실천적 차원에서 보장할 수 있는 민간차원의 집단이 담당해야 한다. 이것은 북한이 반대해 온 통일헌법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의 한계를 극복하고, 남한이 반대해 온 정당, 사회단체 등을 통한 연석회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형성된 평화체제는 단일민족국가의 역할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제한된 역할이 전제되지만 남북한 각자 합법적인 지도자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진정한 평화적 상태로 전환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략적 통합’에 기초한 평화정착이고, 한반도 평화체제라고 할 수 있다.

Ⅲ.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1. 한중수교 이후 중국의 남북한 관계²⁴⁾

중국은 1991년 UN에 남북한이 동시가입한 이후에도 북한을 일방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였으나, 적어도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24) 한중수교 이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는 줄고, “강택민 등장 이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전망,” 전남대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소,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제2권 1호(1999. 8), pp.49-65 참조.

을 표명하고 있다.²⁵⁾ 즉 중국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대한반도 정책목표로 한반도에서 평화적인 안보환경을 정착시키고,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에 대한 전통적 지정학적 이익의 확보, 그리고 한중경제 교류를 통한 이익의 극대화로 상징하고, 이에 부합되는 실리적인 차원으로 외교정책을 전환하였다. 이런 점에서 보면,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평가에서 한중수교가 결정적인 전환점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한국의 외교 다변화와 대북 채널을 제공하였고, 특히 중국위협론의 대두로 인하여 이를 희석시키기 위하여 한국과 최고위급 정치, 군사교류를 단행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1988년에 32억 달러 정도에 달하던 양국의 무역규모를 1992년에는 63억 7천만 달러,²⁶⁾ 1999년말에는 223억 5,200만 달러에 이르게 하였다. 사회문화적으로도 상당한 교류를 단행하여, 이제 양국관계는 ‘단순수교관계’에서 ‘전면적 협력관계’로 격상되어 발전하고 있다.

한편 한중수교는 북한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중국은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한중수교 이후에도 북한과의 선린우호관계는 지속될 것이며, 북한과 맺은 상호원조조약 등 이미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²⁷⁾ 강조하였다. 그러나 한중수교는 혈맹관계, 순치(脣齒)관계에 있었던 북한의 입장을 무시한 것이었고, 이에 대한 북한의 섭섭한 반응은 1993년 1월부터 3월 사이 중국-북한 국경지대에서 42회에 걸친 북한군의 발포 사건²⁸⁾, 그리고 북경발 평양행 중국민항기의 취항중단과 조선항공 북한 사무소의 기구 축소²⁹⁾ 등으로 나타났다. 이후 양국 관계는 가깝지만 먼 나라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지속적으로 대북경제 지원은 물론 정치외교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구소련 붕괴 이후 대북 교역을 꾸준히 증대시켜 1999년말 현재 3억 7천만달러³⁰⁾ 정도로 북한의 대외교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동아시아의 신질서와 중국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중국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고 북한과 긴밀한 접촉을 하고 있다. 이것은 미·일의 압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측면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일의

25) 중한관계의 발전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劉金質, 張敏秋, 張小明, 『當代中韓關係』(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8) 참조.

26)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 각년호 참조.

27) 『人民日報』, 1992. 8. 24.

28) 이 과정에서는 31명이 부상당했다. 『鏡報』, 1993년 5월호.

29) 『明報』, 1993. 5. 15.

30) 대한무역진흥공사(<http://www.kotra.or.kr>) 북한 자료실.

공동안보를 통해 나타나는 자본주의 진영에 의한 포위를 우려하여 북한과 사회주의적 연대를 강화하고, 그 과정에서 미·일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도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북중관계는 한중수교 이후 전통적으로 북한에 대해 갖고 있던 혈맹관계를 변화시켜 다소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최근에는 양국관계가 서로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개선됨으로써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 속에서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2. 중국의 대한반도 이중정책: 연속성과 변화의 역동성

한반도정책에 관한 중국의 본심은 무엇인가?

중국은 한반도 상황에 대하여 공식적으로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갈망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와 같은 언술은 중국의 지도부로부터 인민들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나오는 말이다.

그러나 최근 본 연구자는 중국측의 대한반도 담당 전문가와의 면담을³¹⁾ 통하여 중국이 한반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이 최고 지도부의 결정은 아니지만, 적어도 최고 정책결정자에게 정책결정을 위한 보고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중국은 남한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제시하였다. 즉 선이후난(先易後難), 선경후정(先經後政), 선민후관(先民後官), 선급후득(先給後得),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거후래(先去後來) 등이다.

선이후난은 남북관계에 있어 쉬운 것을 먼저하고 어려운 것은 나중에 토론한다는 것이다. 선경후정은 먼저 경제적인 것으로 남북관계를 개선·유지하고, 나중에 정치적인 문제를 접근한다는 것이다. 선민후관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하여 민간인 접촉을 우선하고 나중에 관료나 정치인들의 접촉을 통하여 양국관계를 해결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선급후득은 먼저 북한에게 남한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고, 나중에 북한으로부터 받는 것이 양국관계를 위하여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거후래의 경우는 북한에게 먼저 보

31) 이것은 본 연구자가 1999년 3월말부터 4월 초까지 중국에서 익명을 요구한 대한반도 전문가들과의 면담과정에서 발견한 사실임.

내거나, 가고, 나중에 북한의 물자나 인사, 그리고 정책적 변화를 받으라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관계에 대한 중국이 남한에게 주는 조언은 남한의 절대적인 양보와 장기적 접근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언의 진의는 파악할 수 없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차원에서는 상당히 의미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에 있어 중국이 북한에게 주는 조언은 차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남한에게 주는 조언과 달리 북한에게는 분단을 고착시키고, 현재와 같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정책결정, 그리고 ‘예측불가능한 정책집행’을 지속하라는 의미가 담긴 조언을 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에게는 전즉전패(戰則戰敗), 화즉화패(和則和敗), 부전불화(不戰不和), 그리고 불승불패(不勝不敗)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전즉전패란 남한과 전쟁(물리적인 전쟁을 포함한 다양한 의미의 갈등을 의미)을 하면 곧 패하게 된다. 화즉화패는 남한과 어떠한 협력이나 화해의 과정도 실패하게 되어있음을 말한다. 부전불화는 앞의 이유로 인하여 싸움도 하지 말고, 어떤 화해나 협상도 하지 말아야 승리도 패배도 아닌 최소한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불패를 제시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제언은 적어도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는 차원 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북한에게 가장 유리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중국에게 유리한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중국은 이와 같은 대한반도 이중정책을 통하여,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 하면서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대한반도 이중정책은 적어도 개혁·개방 이후 줄곧 유지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어떤 점에서 본다면 중국이 과거 이념 중심적 정책에서 탈피하여 실리를 확보하는 전략으로 전환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분단을 이용하여 중국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고,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려는 정책은 등소평 정권 등장 이후 지속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에서 본다면 중국은 외형적으로 와는 다르게 한반도 통일에 대해 적극적이지도 않고, 지극히 소극적이며, 오히려 분단의 지속을 원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것 또한 중국의 정책적 일관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한중수교 이후 대한반도 관계에서 중국 대외관계의 주변적 요인인 중국위협론, 중화경제권의 부상, 그리고 동아시아 신질서 구축 과정에서

중국의 위상을 증대시키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한국과 과거와 다른 현실주의적 관계를 우선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국 대외정책의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북중관계의 변화를 가져왔다. 단지 어떠한 부분이 과거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모택동주의적 외교라는 이념에 바탕한 외교가 현실주의 외교로 전환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양국관계가 탈냉전을 거치는 지난 몇 년 동안에 전자에서 후자로 전환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비록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 기인한 것만은 아니지만,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소분쟁의 경험은 북한이 철저하게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차원에서 중국과 소련을 잘 이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던 점을 상기시킨다. 탈냉전 이후 중미간의 갈등이 자주 나타나고, 북한과 미국의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북한의 외교적 자율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중미간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중국은 북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중관계는 현실주의적 입장에서만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실리와 이념이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중국은 등소평 정권의 등장 이후, 특히 강택민 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대한반도 정책에서 과거와 같은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외교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현실주의적인 외교정책으로 전환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변화와 연속성이라는 두 변수를 역동적으로 운영하면서 대외정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국의 정책성향이 그대로 현실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중국이 비록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은 이중적인 대한반도 정책을 수행한다고 해서 중국과 한국,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중국의 의도한 대로 움직여진다고 볼 수 없다. 그것은 삼국간의 쌍무관계가 제국주의와 식민지 관계도 아니고, 각국의 국내적 고려사항들, 그리고 양국간의 관계를 외부적으로 규정해 주는 국제적인 변수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한중관계는 물론이고 북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양국간 촉진요인과 제한 요인이 존재하고 이들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일본 등 국제적인 여건이 있다.

한중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촉진하는 요인으로는 중국에게는 한국과의 경제교류, 한반도의 안정, 중국의 대외관계(중국위협론)가, 그리고 한국에게도 경제성장,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채널, 한반도 안정에의 기여자라는 측면이 있

다. 그러나 한중관계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중국에게는 북한변수가 있고 남한에게는 미국변수와 대북 강경론, 그리고 경쟁적 관계에 있는 경제부분의 반대 등이다.

한편 북중관계의 촉진요인으로 중국에게는 북한의 군사·안보적인 전략적 가치, 경제성장 우선정책, 중국 대외관계(특히, 대미관계) 고려사항, 그리고 북한에게는 경제난, 대미, 남한 관계, 중국의 군사적 필요성 등이다. 양국관계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중국에게는 미국, 러시아, 한국변수와 지속적 경제성장, 강택민 후계체제 공고화, 중앙과 지방의 분권화 등이며, 북한에게는 북한의 외교적 자율성 신장, 북한의 대미,일관계 호전, 북한의 정치엘리트들 사이의 권력 투쟁 가능성 등이다.

결국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한중 양국간 협력적 동반자 관계, 북중 양국간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라는 추상적인 외교관계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국가이익에 집착하는 현실주의적 외교를 병행하는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3.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입장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³²⁾ 그 근거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정상회담 직전에 김정일이 비공식으로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중국이 정상회담에 모종의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남북채널의 개설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주도권이 상대적으로 손상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와 공조 하에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었으나 한반도문제에 대한 북미일변도의 채널에 남북채널이 추가됨에 따라 한반도문제 해결의 채널이 다원화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관계의 전반적 개선으로 인해 미군의 한국주둔 명분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변화에 입각해서 중국은 남북한과의 지리적 근접성, 역사적 관계, 남

32)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의 대한반도 영향력이 증대되었다는 주장은 *Washington Post*, July 28, 2000, "U.S. Hustling to a New Beat in Asia"; Scott Snyder, "Beijing at Center Stage or Upstaged by the Two Kims?," *Comparative Connections* (An E-Journal by Pacific Forum CSIS), 2nd Quarter 2000; 박두복, "남북정상회담 이후 중국·북한관계 전망," 『국제문제』 2000년 9월호, pp. 14-23; 김영화,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중관계 전망과 한국의 중국정책," 아태평화재단 정책연구시리즈 00-01 (2000년 9월), p. 14.

북한 교차승인 등의 조건에 힘입어 남북정상회담을 대한반도 영향력 증대를 도모하는 계기로 삼으려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구소련의 붕괴로 인해 러시아의 동북아지역 영향력 약화가 첫째, 미국 영향력 극대화에 의한 동북아질서재편, 둘째, 일본이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 미·일동맹이나 미국의 원격조정을 통한 세력확대, 셋째,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의 평화문제에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을 놓고 고민과 더불어 전략적 차원의 정책과 진로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중국의 한반도정책은 대동북아전략, 특히 대미일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이익을 취하려는 고전적 현실주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이 남북정상회담을 고무하고 지지한 것도 미일세력의 확대를 견제하고 남북간에 중재자 역할과 한반도에서의 지배적 세력행사를 위한 면이 강하다.³³⁾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지난 6월 15일 신화통신(新華通信)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예상을 벗어난 장시간의 회담을 통해 남북한 화해와 자주적 평화통일, 긴장완화, 이산가족 상봉, 교류확대 등에 합의했다고 전하고,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무드가 조성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일차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온 것으로 이에 대해 중국은 환영하고, 과거와 같이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확보되길 바란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런 입장을 남북정상회담 이후 현재까지 줄곧 강조하고 있다. 특히 브루나이에서 열린 제8차 APEC회의의 비공식 수뇌회담에서 중국의 강택민 주석은 최근 한반도에서 긍정적인 변화는 한민족에게 기본적으로 이익을 주고 있으며,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그는 이 회담에서 그는 한반도에서 중국의 입장은 불변이고, 중국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쪽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할 것이며, 한반도에서 평화가 유지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지한다고³⁴⁾ 표명하였다.

중국은 장관급회담,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국방장관회담에 대해서도 유사한 논평을 내고 있고, 특히 국방장관 회담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이후 가장 중요한 접촉이었다고³⁵⁾ 평가하고 있다. 결국 중국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려는 자신의 노력이 실현되었음을

33) 안병준, “중국의 동서 및 한반도시각,” 『남북한정상회담 이후의 동북아정세와 한국의 대응전략』, 아태정책연구원, 2000. 7, p. 17.

34) 『人民日報』, 2000. 11.16.

35) 『人民日報』, 2000. 9. 25.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가장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지난 5월말에 중국이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인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북경에 초청하여 남북화해를 강하게 종용한 뒤 중국은 남북간에 중재자 역할을 추구하면서 최대한의 영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³⁶⁾

결국 중국은 한편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 한반도에서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기존의 현상유지 정책을 견지하면서, 다른 한편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남북관계개선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중국의 입장을 외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한반도의 평화정착화 문제를 남북당사자 역할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며,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에 대한 견제정책의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남북정상회담을 자신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과거와 같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회로 포착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본다면 중국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IV. 한반도 평화체제에 형성을 위한 한중관계 제언

앞에서 필자는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평화체제’를 통일의 한 과정이 아닌 통일과 같이 하나의 상태(목표)로 상정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는 전략적 통합에 입각하여 정책결정기구가 둘 이상으로, 개별국가들이 독립과 자율성을 가지면서 평화적인 분쟁해결의 과정을 갖는, 다시 말하면 통합된 국가가 존재하지 않고, 개별국가의 주권이 소멸되지 않더라도 국가간 분쟁이나 전쟁이 소멸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체제가 형성되기 위한 조건으로 몇 가지를 상정했는데, 남북한 당사자의 노력을 제외하면 주변국의 지지 확보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의 문제를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지적하였다.

36) 안병준, “한반도 평화과정과 4강외교,” 『계간 사상』, 2000 가을호, p.23.

따라서 여기서는 주변국의 지지 확보와 평화협정 체결문제와 연관된 중국의 역할과 더불어, 이를 위한 몇 가지 정책 제안을 제시할 것이다.

첫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주변국의 지지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중국이 북중관계에서 대북 영향력을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한중관계를 평가하면서 중국의 정경분리 정책이나 대한반도 이중정책을 비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필자도 어떤 측면에서는 이 점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좀더 엄격하게 이 문제에 접근하면, 우리는 중국의 이런 정책에 대해 일정한 수준에서 허용할 필요도 있다. 그 이유는 만약 중국이 이런 정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제한된 대북채널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북한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의 이와 같은 정책성향은 남한의 대중국정책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일종의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대북문제 해결의 또 다른 채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우리의 대중 영향력이 중국의 대외정책을 변화시킬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북중관계가 현재보다 악화되거나 더욱 긴밀하게 발전되지 않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은 필요하다.

다음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중국과는 제한적인 외교적 다원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동안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외교적 역량으로 인하여 미국에 의존적인 정책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미공조 체제를 기본으로 하지만, 미국과 심각한 마찰을 겪지 않는 수준에서 제한적인 외교적 다원화를 통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예를들면 정치적 차원에서는 중국과 북한변수로 인하여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에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지만 아래에서 논의될 군사적 차원에서 인적 교류의 증대와 대규모 군사훈련의 통보 및 참관을 통한 양국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주변국 지지를 위한 세 번째 방안으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형성과 발전을 들 수 있다.

‘국민의 정부’는 김영삼 정부가 주장한 정통 현실주의, 보수주의적 안보전략이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탈냉전과 세계화 시대에 ‘화해와 협력의 세계’ 논리가 동북아와 한반도에 적용될 수 있으며, 또 적용해야 한다는 평화주의적 접근 시각과 화해와 협력적 안보 정세관에³⁷⁾ 기초하여 안보정책을

37) 이러한 정세관과 위협평가 방법의 수정은 국민의 정부가 대북한 자신감과

변화시키고 있다. 그것의 구체적 표현이 6자회담이고, 이것은 한반도에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동맹이나 제휴의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국은 중요한 행위자의 하나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³⁸⁾ 예를들면 대규모 군사훈련의 사전 통보 및 참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고위급 군인사의 교류와 동시에 하급자들의 인적 교류 확대, 안보관련 민관합동 회의체 구성을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에의 기여, 동아시아 긴장완화를 위하여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국가들의 군축 논의 등이 있다. 이런 일련의 정책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앞당길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주변국 지지획득의 마지막 방안으로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통한 협조체제 강화를 모색할 수 있다. 1999년말 현재 중국과 한국, 일본, 북한의 무역액 888억 8,900만 달러로³⁹⁾ 중국의 대아시아 무역의 86.6%, 그리고 중국의 전체 무역액의 45.6%를 차지하고 있고, 남북한, 일본, 중국 등 4개국의 전체교역액은 1292억 600만 달러로 4개국이 경제공동체를 형성했을 경우 단순하게 4개국의 교역 규모를 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차원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북아 경제공동체가 형성된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익의 근거는 동북아에서 안정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고, 그 경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형성과 발전도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위하여 상당히 중요한 주변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⁴⁰⁾

한국 안보정책의 미래지향성을 강조하는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38) 중국도 동북아에서 미국의 역량강화, 일본의 군비증강, 그에 따른 남북한의 군비경쟁의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동북아지역의 군사적 균형문제에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어(李宗, “對世界格局多極化的幾種豫測”, 林利民, “未來十年周邊安全環境的變化,” 『瞭望』, 第21期(2000.5.22), pp.14-16, pp.17-18.) 동북아 다자간안보협력체제의 중국의 유인은 가능성이 높다.

39) 중국과 일본의 교역액은 중국대외경제무역합작부 통계 <http://www.moftec.gov.cn>), 중국과 한국, 남북한 교역은 한국무역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일본과 한국의 교역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or.kr>) 참조.

40) 중국도 한중 양국간의 경제협력이 양국의 발전은 물론 동아시아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高浩榮, “推動中韓關係進一步發展,” 『瞭望』, 第42期(2000.10.16), p.55.

한편 전략적 통합 모델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체제’와 연관지어 중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야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평화협정의 문제는 남북한 양측이 최근에 와서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있으나,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 문제, 평화협정 체결의 시기의 문제, 평화협정과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⁴¹⁾ 등 세 사항이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문제는 북한의 의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평화협정에 대한 우리의 대안은 어떤 것이 있으며, 현 시점에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실현 가능성이 큰 것인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라는 입장에서 남북한 당사자 간의 체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반대를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적 보장 및 합의를 결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실현가능한 것으로는 남북한 및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평화협정의 체결, 남북한 및 미국의 3자간의 평화협정 체결, 미국이 북한에게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남북한 사이에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 등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바람직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은 첫번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대안은 한국전의 모든 교전국과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 북한이 고집하고 있는 미국의 참여보장, 그리고 북한의 혈맹이라고 하는 중국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한과 미국, 중국을 포함하는 4자간의 평화협정 체결이 가장 실현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수단으로 4자회담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4자회담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진행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이 때 중국을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남북한이 주체적 지위에 있다는 전제하에서 주변국, 특히 중국의 지지는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에 기여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4자회담은 각국의 입장만을 개진하는 의미없는 회담이었다. 남한의 적극적인 자세 이외에 북한이나 미국, 중국은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임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의 4자회담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

41)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줄고, “한반도 휴전협정의 본질과 문제점,” 고려대 평화연구소, 『평화연구』, 제5호(1996), pp.134-141.

에서 진정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즉, 한반도에서 이루어지는 4자회담은 각국의 입장을 표출하는 독창(獨唱)의 무대가 아니라 4개국이 협연하는 조화로운 4중주로 변화되어야 한다.

미국은 4자회담을 통해 한국과 어느 정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도 미온적인 입장만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이나 지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하여야 한다.

예를들면 4자회담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중국이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주변적 상황을 마련한다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또 4자회담에 대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임할 경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지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야 한다. 또한 4자회담에서 중국이 한국의 입장에 동의할 경우, 향후 동아시아 신질서를 둘러싼 국제적인 문제에서 한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야 한다. 결국 중국과 정치·외교적인 노력과 더불어 군사적인 협력과 경제교류와 협력의 확대를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몇가지 정책수행은 4자회담의 활성화는 물론 4자회담을 통한 한중관계의 긍정적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필자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는 기존의 논의들과 달리 이것을 하나의 상태로 규정하고, 그 과정에서 주변국의 지지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중국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한이 중심이 되는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에 기초해야 하지만,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라는 요인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중국과 다각적인 관계를 통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